

1998-2018

서울, 노숙인 지원사업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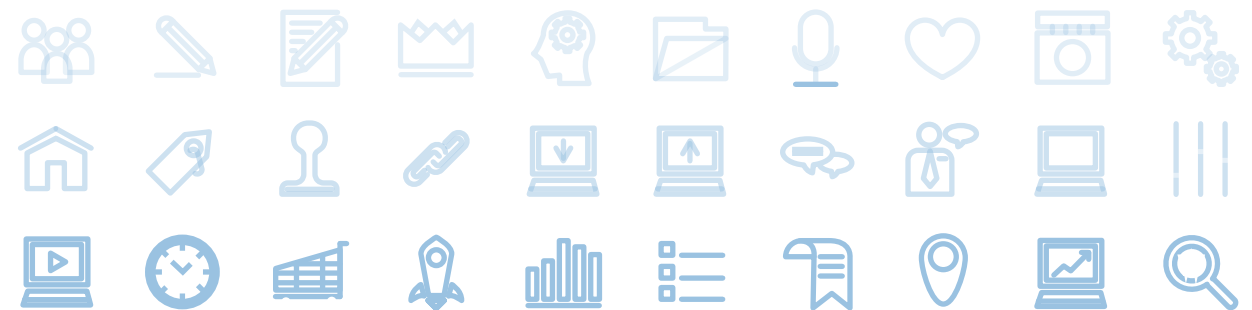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SEOUL ASSOCIATION OF INSTITUTES FOR THE HOMELESS



1998-2018

서울, 노숙인 지원사업 20년



“

노숙인과 함께 살아온
20년의 기록을 발간했다.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배명희**

20년 전, 여러 이유로 거리에 내몰려 차가운 하늘을 이불 삼아 잘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청년 등 수많은 우리이웃들의 가슴 아픈 모습을 간직한 서울역의 모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날 정도로 눈에 선합니다

세월의 변화가 빠른 지금, 20년의 세월 동안 노숙인의 삶의 자리였던 거리와 시설, 쪽방 등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 노숙인 당사자들의 치열한 노력과 노숙인 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 서울시 등 정부의 정책개발과 행정노력이 있었으며, 20년의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그 20여년의 치열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20년을 딛고 더 나은 노숙인복지를 만들어가고자 20년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담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해 주신 전·현직 관계자,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본 20년의 기록물이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김진미 디딤센터 소장님,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님,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님, 오기철 비전트레이닝센터 팀장님, 김남영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과장님,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꿈꾸지 않는 자에게 내일은 없다 하였습니다.
노숙인과 함께 살아온 20년의 기록을 발간하는 오늘,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미래를 꿈꾸어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이 자료집은 2019년 서울복지재단의 사업 위탁에 따라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서 수행한 '서울시 노숙인정책 20년 기록물 조사용역' 활동 시 수집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의 노숙인 지원사업 20년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일러두기

1998-2018

서울, 노숙인 지원사업 20년

○편집위원

정책자료 수집·정리

김진미(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장, 디딤센터 시설장)
김남영(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과장)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시설장,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거복지위원장)
오기철(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팀장)
이수범(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노숙인시설 자료 수집·정리

이은상(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장)

○전문위원

해외 자료 수집·정리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데이터 자료 정리

김종대(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

이 책을 엮기까지

꽤 많은 분들의 노력과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시작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을 맞아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 백서' 발간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즈음 서울시복지재단은 백서의 기초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 기록물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그 백서가 20여년간 지지치 않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며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현장의 역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사용역을 수탁받아,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현장 종사자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기록물 조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발굴된 자료는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하는 백서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크고작은 고민을 오롯이 담아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서울시에서 진행된 노숙인 복지 사업 20여년의 역사를 좀더 촘촘하게 엮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 기록물 조사' 과정에서 발굴한 자료들과 생산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전산자료를 통해 20년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했습니다. 쪽수는 짧지만 그래프의 꺾임이 보여주는 지표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주요 영역별로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생산된 노숙인복지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자료, 보고서, 언론자료, 연구물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였습니다.

3장은 노숙인복지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당사자가 말하는 노숙인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우선 노숙인 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제안을 해 주셨던 학계 전문가, 노숙인복지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의미있는 활동을 해 주셨던 전현직 실무자, 민간 활동가, 서울특별시 노숙인 주무부서의 전현직 담당 공무원, 노숙을 경험한 당사자 분들과 개별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집단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 노숙인복지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것들을 추려 담았습니다. 개별 인터뷰에 응해주



셨던 총 22명의 관련자분들의 A4지 250쪽이 넘는 소중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두 실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4장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가감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노숙인복지의 굵직한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므로 이후의 변화를 모색할 때 기초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5장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우리가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들을 추려 담았습니다.

부록에서는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42개소와 서울노숙인시설협회의 소개자료, 10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들이 남기고픈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기타, 지면으로 엮기에 역부족인 각 시설의 주요 연혁과 연간 사업보고서, 사진 자료 등 약 10GB에 이르는 자료들은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번 책자에 담긴 내용은 지난 2019년 12월에 정리되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 협회의 여러 분주한 일 때문에 올해를 마감하며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조사용역 연구활동과 편집에 참여한 위원들과 인터뷰에 응했던 참여자분들의 소속, 각 시설의 정보들에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숙인 지원사업 20년, 1998-2018>은 자료를 수집한 2019년 당시의 정보를 그대로 담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담긴 지난 20년간의 이야기가 서울시 노숙인 정책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내일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노숙상황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분투하는 당사자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 2020년 12월, 편집위원 일동

발간사	5
일러두기	9
1장.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전산자료로 보는 20년의 흐름	15
2장. 주요 영역별 정책 추진, 20년의 흐름과 변화	25
1. 서울시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정책과 사업	26
2. 서울시 노숙인 건강 지원사업	40
3.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정책	51
4. 서울시 노숙인 재활·자활 프로그램	62
5.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과 사업	70
6.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과 사업	79
7. 서울시 쪽방 정책과 민간의 지원활동	90
8. 서울시 노숙인 인권보장 정책	102
3장. 관련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가 말하는 노숙인 정책	113
1.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 20년의 성과를 말하다.	116
2.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 발전방향을 생각하다.	128



4장. 서울시 노숙인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제별 집담회의(FGI) 기록 163

1. 거리 분과	164
2. 시설 분과	203
3. 일자리 분과	237
4. 주거·지역사회 분과	268

5장.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노숙인 정책과 사업 301

부 록 315

1. 내 기억 속의 노숙인 지원 활동- 노숙인시설 실무자의 이야기	316
2. 서울시 노숙인시설 현황	323

1장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전산자료로 보는 20년의 흐름



장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전산자료로 보는 20년의 흐름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데이터 분석: 20년 추이

- 서울시는 1999년부터 노숙인서비스에 대한 전산기록화를 추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숙인을 등록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기록, 노숙인시설 입·퇴소 기록 등을 남겨 왔음.
- 이 데이터는 2000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노숙인 다사서기종합지원센터가 관리하였으며, 2018년 11월 이후 '서울시법인·시설시스템' 내로 편입되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의 시스템에 있는 노숙인 데이터는 연간 노숙인서비스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노숙인구의 규모, 서비스 이용 규모, 노숙인시설 입·퇴소 경향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함.
-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록물 정리를 위해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있는 20여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노숙인구의 변화추이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1998년 ~ 2019년 데이터 활용¹⁾

- 입소 데이터 : 1998년 ~ 2018년 (135,243건)
- 상담 데이터 : 1999년 ~ 2018년 (534,671건)
- 서비스 데이터 : 2003년 ~ 2018년 (518,458건)
- 진료의뢰 데이터 : 2000년 ~ 2018년 (243,263건)
- 신규등록 데이터 : 1998년 ~ 2018년 (61,115건)

• 이용인수 (중복이용자 제외 수)

- 총 이용인수 : 1998년 ~ 2018년 (56,399명 (남 50,108명, 여 6,291명))
- 쉼터 이용인수 : 1998년 ~ 2018년 (35,780명 (남 31,836명, 여 3,944명))
- 상담 이용인수 : 1999년 ~ 2018년 (41,047명 (남 36,966명, 여 4,081명))
- 서비스 이용인수 : 2003년 ~ 2018년 (29,601명 (남 26,785명, 여 2,816명))
- 진료의뢰 이용인수 : 2000년 ~ 2018년 (18,374명 (남 16,849명, 여 1,525명))

1) 19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의 데이터는 노숙인다사서기지원센터가 Access로 관리하였으며, 이를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을 개통하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음.

1) 연도별 노숙인 규모

- 일일 집계된 노숙인 수(평균인원)

<표1. 일일평균 노숙인 현황 :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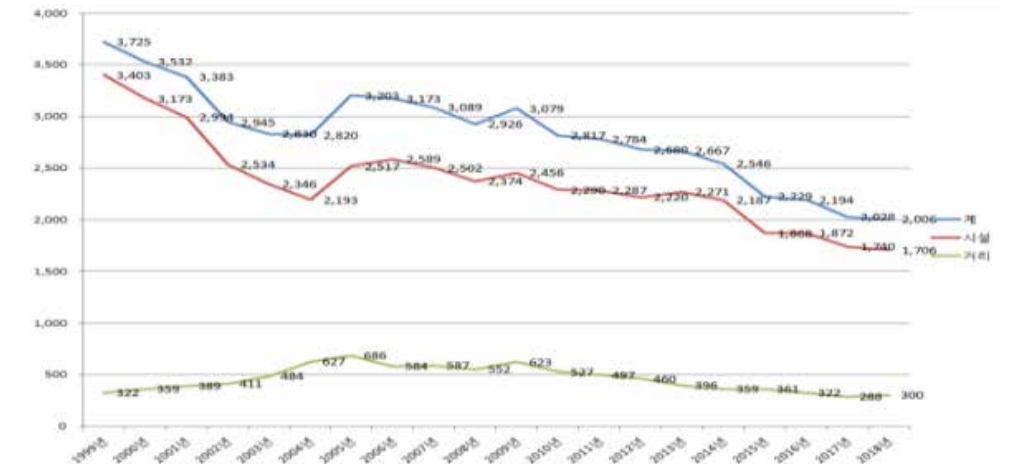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725	3,532	3,383	2,945	2,830	2,820	3,203	3,173	3,089	2,926	3,079	2,817	2,784	2,680	2,667	2,546	2,229	2,194	2,028	2,006
시설	3,403	3,173	2,994	2,534	2,346	2,193	2,517	2,589	2,502	2,374	2,456	2,290	2,287	2,220	2,271	2,187	1,868	1,872	1,740	1,706
거리	322	359	389	411	484	627	686	584	587	552	623	527	497	460	396	359	361	322	288	300

※ 일일평균 현황: 1999년~2012년 서울시 통계(서울시가 노숙인시설 입소자 수와 주요노숙지역에서 집계된 거리노숙인 수에 대해 '일일보고'를 받아 취합) 활용, 2013년~2018년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데이터 활용

- 2005년부터 시설 수치에 일시보호시설(구 상담보호센터²⁾) 인원 포함
- 2013년부터 시설 수치에 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³⁾) 인원 포함
- 요양시설인 시립은평의마을(정원 1,170명), 서울여성보호센터(정원 180명), 영보자애원(정원 400명), 늘푸른자활의집(정원 60명)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그래프1. 일일평균 노숙인 현황 : 연도별 추이>



2) 만나샘, 시립다사서기종합지원센터,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시립영등포기초해결센터, 웅달샘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2005년 1월부터 입력), 디딤센터(2016년 1월부터 추가), 소중han사람들(2013년 8월부터 추가, 2015년 3월 폐쇄)
3) 재활시설(목동의집 2014년 11월부터 추가), 요양시설(다일작은천국, 임마누엘의집 2014년 8월부터 추가)

2) 연도별 노숙인서비스 이용인 추이

※ 노숙인서비스: 노숙인시설 입·퇴소, 상담, 물품제공, 의료서비스 등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

• 노숙인서비스 이용인 수(1998년 ~ 2018년 12월말)

- 총 56,399명 (남성 50,108명, 여성 6,291명)

<표2. 연도별 노숙인서비스 이용인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인수	3,025	8,389	8,033	7,391	6,526	6,676	6,595	6,344	6,588	8,342	8,822	9,459	8,720	9,748	9,235	11,196	11,312	10,657	10,474	10,238	10,091
남	2,957	8,135	7,706	7,006	6,186	6,270	6,121	5,778	5,933	7,580	8,111	8,798	8,063	9,049	8,558	10,251	10,315	9,793	9,596	9,391	9,246
여	68	254	327	385	340	406	474	566	655	762	711	661	657	699	677	945	994	864	878	847	845

※ 연도별 노숙인서비스 이용인 수에서 중복을 제거한 수임.

<그래프2. 연도별 노숙인서비스 이용인 수 현황>



- 1998년부터 2018년 말까지 총 56,399명(남성 50,108명, 여성 6,291명)이 노숙인서비스를 이용하였음.
- 2018년 기준으로 이용자 56,399명 중 46,308명(남성 40,862명, 여성 5,446명)은 노숙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고, 10,091명(남성 9,246명, 여성 845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노숙인서비스 이용은 노숙인시설-쉼터(희망의집) 이용인 수가 주를 이루었음. 그러나 2005년부터 노숙인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희망의집 통폐합·축소, 이용시설 4개소(서울역 2개소, 영등포 2개소) 운영 등으로 쉼터(희망의집) 이용인은 점차 감소하였고, 시설입소 외의 서비스 이용인은 증가함. 특히 2006년도부터는 <표5>와 같이 노숙인시설(쉼터) 이용인의 지속적인 감소에 비해 노숙인서비스 이용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IMF 외환위기 당시 서비스를 이용한 노숙인의 이후 서비스 이용 추이

- IMF 외환위기 직후 급증한 서비스 이용 노숙인(1998년~2000년 이용인 기준) : 총 11,999명 (남성 11,533명, 여성 466명)
- 1998년~2000년에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서비스 이용 상황은?
2001년 41.4% 이용 => 2010년 9.5% 이용 => 2018년 6.0% 이용

- 1998년 9월 10일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의 소위 'IMF 외환위기' 시절, 노숙인 대책에 의해 노숙인시설-쉼터(희망의집, 자유의집)를 이용한 인원은 11,999명(남성 11,533명, 여성 466명)으로 나타남. 다음의 <표4>에서 볼 수 있듯, 3년간 13,728명(1998년 4,395명, 1999년 6,258명, 2000년 3,075명)의 신규노숙인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11,999명이 노숙인시설-쉼터(희망의집)를 이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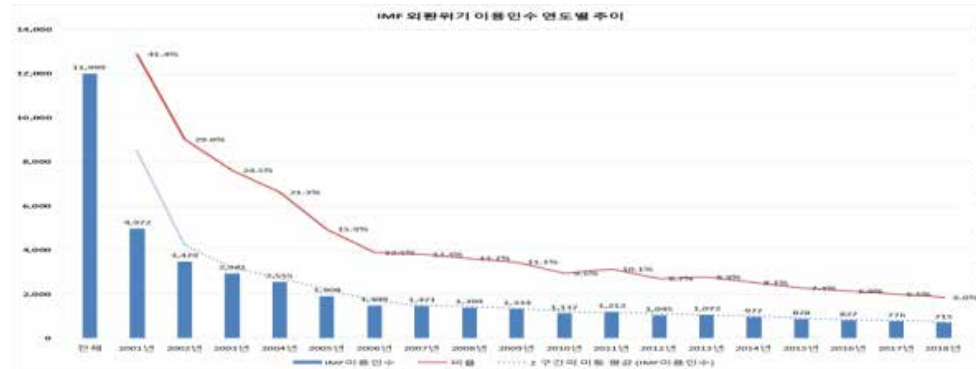
- IMF 외환위기 시절(1999년~2000년) 노숙인 서비스를 이용한 노숙인이 이후에도 노숙인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해 2001년에는 4,972명(41.4%)이 계속 이용하고 있었으며, 2002년 3,479명(29.0%), 2003년 2,941명(24.5%)으로 매년 이용인이 점점 감소하여 2018년에는 715명(6.0%)만 노숙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 IMF 외환위기 당시 서비스이용 노숙인의 이후 연도별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인수 (1999년~2000년) 계	11,999	4,972	3,479	2,941	2,555	1,908	1,499	1,471	1,399	1,334	1,137	1,212	1,045	1,072	977	878	827	776	715
남	11,533	4,820	3,424	2,897	2,519	1,882	1,486	1,461	1,388	1,328	1,131	1,205	1,038	1,065	969	871	820	768	706
여	466	152	55	44	36	26	13	10	11	6	6	7	7	7	8	7	7	8	9
이용비율	100%	41.40%	29.00%	24.50%	21.30%	15.90%	12.50%	12.30%	11.70%	11.10%	9.50%	10.10%	8.70%	8.90%	8.10%	7.30%	6.90%	6.50%	6.00%

- 이용 감소추세를 보면 2006년까지는 매년 감소폭이 컸으나, 2007년부터는 감소비율이 낮아짐.

<그래프3. IMF 외환위기 당시 서비스이용 노숙인의 이후 연도별 이용 추이>



IMF 외환위기 당시에 발생하여 서울의 노숙인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노숙인의 94%는 서울시 노숙인서비스를 떠났고, 6% 가량이 2018년 현재까지 노숙인 서비스 이용자로 남아있음.

- IMF 외환위기 시절(1999년~2000년) 서비스이용 당시의 노숙인의 나이를 보면, 평균연령은 38.82세임. 서비스 이용 노숙인 중 모자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최소연령은 19세, 최고연령 69세임. 연령대별로는 10대 2명(0.3%), 20대 63명(8.8%), 30대 327명(45.7%), 40대 274명(38.3%), 50대 40명(5.6%), 60대 9명(1.3%)로 나타남.
- 2018년까지 노숙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715명의 연령대를 보면, 2019년 기준 한국나이로 평균연령 59.0세이고, 최소연령은 40세, 최고연령은 88세임. 연령대별로는 40대 64명(9.0%), 50대 314명(43.9%), 60대 288명(40.3%), 70대 40명(5.6%), 80대 9명(1.3%)로 나타남.

3) 연도별 신규 노숙인 발생 추이

※ 신규 노숙인: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처음 등록된 노숙인

• 신규 노숙인 수(1998년 ~ 2018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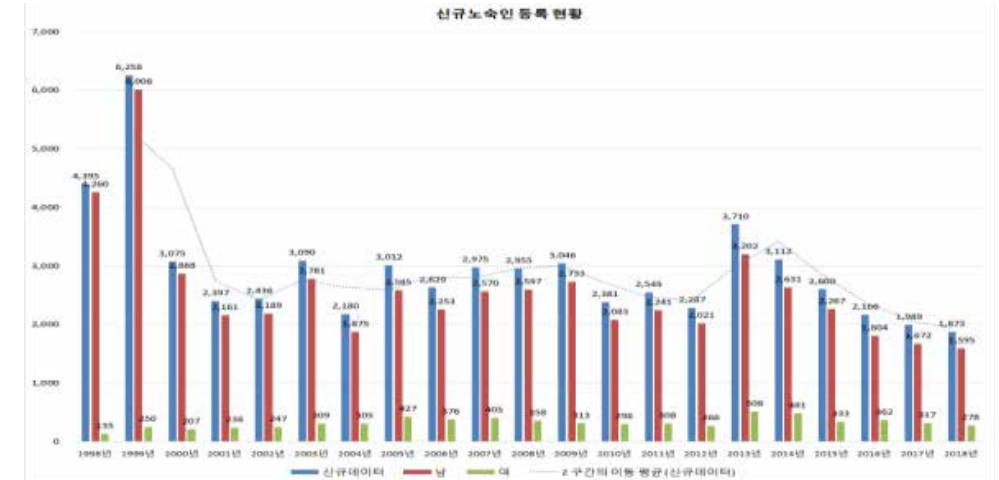
- 총 61,115명 (남성 54,396명, 여성 6,719명)

<표4. 신규 노숙인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 등록 자	4,395	6,258	3,075	2,397	2,436	3,090	2,180	3,012	2,629	2,975	2,955	3,046	2,381	2,549	2,287	3,710	3,112	2,600	2,166	1,989	1,873
남	4,260	6,008	2,868	2,161	2,189	2,781	1,875	2,585	2,253	2,570	2,597	2,733	2,083	2,241	2,021	3,202	2,631	2,267	1,804	1,672	1,595
여	135	250	207	236	247	309	305	427	376	405	358	313	298	308	266	508	481	333	362	317	278

<그래프4. 신규 노숙인 연도별 추이>



- 신규 노숙인은 IMF 외환위기 초기에 가장 많이 등록되었는데, 1998년 4,395명, 1999년 6,258명으로 전체 신규 노숙인의 17.4%가 이 당시에 등록됨.
- 신규 노숙인 등록 데이터를 보면 20여년간 일관된 추세를 파악하기는 힘들. 대체로는 해당 연도 경기침체 및 노숙인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등록인원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수년간 신규등록 인원의 추이를 보면, 2013년 서울역희망자원센터 응급대피소 및 위기대응콜센터 접수인원 반영에 따른 증가가 보이고,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

4) 노숙인시설 실인원수

※ 노숙인시설: 서울시의 노숙인생활시설 외에도 입·퇴소를 진행하는 일시보호시설(영등포기초해결센터, 디딤센터) 데이터를 포함함.

• 노숙인시설 실인원수(1998년 ~ 2018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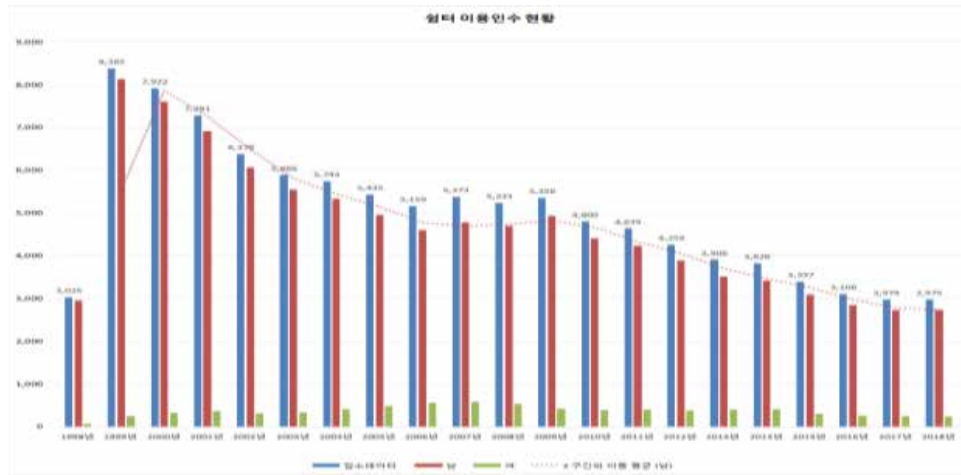
- 총 35,780명 (남성 31,836명, 여성 3,944명)

<표5. 연도별 노숙인시설의 실인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설 입소 인원	3,025	8,385	7,922	7,281	6,378	5,888	5,743	5,435	5,159	5,373	5,233	5,356	4,800	4,639	4,259	3,906	3,826	3,397	3,106	2,979	2,975
남	2,957	8,131	7,601	6,911	6,061	5,553	5,328	4,951	4,603	4,787	4,698	4,939	4,410	4,236	3,885	3,511	3,411	3,097	2,842	2,730	2,738
여	68	254	321	370	317	335	415	484	556	586	535	417	390	403	374	395	415	300	264	249	237

<그래프5. 연도별 노숙인시설의 실인원수 추이>



- 1998년 9월 10일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의해 노숙인시설-쉼터(희망의집) 113개소가 처음 설치되어 운영된 뒤, 2000년 106개소, 2002년 74개소, 2005년 58개소, 2008년 43개소, 2012년 37개소, 2019년 33개소로 노숙인시설은 매년 통폐합 및 축소됨. 노숙인시설 축소와 함께 시설 이용인수도 매년 감소하여, 1999년 8,385명(남성 8,131명, 여성 254명)에서 2018년 2,975명(남성 2,738명, 여성 237명)으로 5,410명(64.5%)이 줄어듦.

5) 노숙인 진료서비스 이용 규모

· 진료서비스 이용인수(1999년 ~ 2018년 12월말 기준)

- 총 18,374명 (남 16,849명, 여 1,525명)

<표6. 진료서비스 이용인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진료 이용 계	37	208	411	171	210	219	333	1,382	2,868	3,188	3,475	2,844	2,833	2,659	3,221	3,758	3,508	3,500	3,499	3,442
남	36	205	346	139	191	202	307	1,290	2,697	3,054	3,327	2,732	2,732	2,602	3,059	3,505	3,282	3,192	3,210	3,127
여	1	3	65	32	19	17	26	92	171	134	148	112	101	57	162	253	226	308	289	315

※ 연도별 진료서비스를 이용한 노숙인 실인원 수입.

※ 노숙인은 1인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서비스 이용건수는 훨씬 많음.

☞ 1999년의 경우 노숙인 대책 초기로 진료서비스에 대한 전산기록의 누락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임.

<그래프6. 진료서비스 이용인수 연도별 추이>



- 2004년 서울역 현장진료소에 공중보건(내과 전문의) 배치, 2005년 공중보건(정신과 전문의) 배치로 진료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한 이후, 2006년부터 진료서비스 이용인원이 크게 증가함.
- 진료서비스 이용인원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5년부터는 큰 변화가 없음.
- 2012년에는 '노숙인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된 해로, 이후 전국단위의 '노숙인의료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진료서비스 이용인 수가 약간 감소됨.

2장

주요 영역별 정책 추진, 20년의 흐름과 변화

1. 서울시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정책과 사업
2. 서울시 노숙인 건강 지원사업
3.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정책
4. 서울시 노숙인 재활·자활 프로그램
5.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과 사업
6.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과 사업
7. 서울시 쪽방 정책과 민간의 지원활동
8. 서울시 노숙인 인권보장 정책



2장

주요 영역별 정책 추진, 20년의 흐름과 변화

1 서울시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정책과 사업

▪ 거리노숙인 정책의 흐름과 변화

· 응급구호기(1998년~1999년) : “거리에서 시설로”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구)부랑인과는 다른 실직한 노숙인들이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정부는 서울시 ‘노숙자 보호 및 관리 대책’(1998.4.6. 시장방침 제446호)과 ‘서민생계 안정대책’(1998.4.17.)을 발표하며 노숙인보호사업을 시작했다. 1998년 7월 고건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부랑인 수용 중심의 노숙인 정책은 새로운 노숙인(소위 실직노숙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전환되었다.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100여개의 소규모 쉼터(희망의집)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등으로 노숙인의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해 9월에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 15일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담소 운영, 노숙인 전담 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숙인 개인별 신상정보 전산관리 등을 하였고, 거리노숙인 전원 입소보호를 위한 동절기 노숙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 상담소 상담, 심야상담, 현지상담, 여성노숙인 집중상담 등 상담사업을 확대하고,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자유의집을 개소하였다. 자유의집에서는 거리에서 입소한 음주문제가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 1998년 서울시 노숙자대책협의회 구성

- 근거 : 1998. 7.10 서울특별시 노숙자대책협의회구성(시장방침 제833호)
- 내용 : 외환위기와 노숙인 급증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1998년 당시, 고건 시장 취임을 계기로 관주도로 노숙인 정리하는 성격의 일방적 대책을 지양하고, 민간·관·학계 협동으로 노숙인 발생원인 분석, 상담, 취업, 치료, 재활에 이르는 종합처방 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함. 서울시 ‘노숙자대책협의회’는 숙소시설 관리 대표자,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학계, 전문가, 종교인, 시민단체대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음. 1998년 7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 호선으로 이재정 위원장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함.

· 자활사업 추진기(2000년~2005년) : “현장보호 사업 시작”

2000년 들어 입소중심에서 사례관리 상담활동으로 전환하여 거리노숙인 지원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심야상담 아웃리치활동이 주1회에서 주3회로 확대되어 거리노숙인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2002년 상담보호센터(2002년 햇살보금자리, 구세군드롭인센터) 설치로 일일 잠자리 제공, 목욕과

세탁서비스 등 낮시간 편의를 제공하는 현장보호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다시서기지원센터의 무료진료소 설치, 물물교환 나눔가게 설치운영, 목욕서비스 지원, 거리신문 발행 등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3년 7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령의 2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숙인 조항을 삽입하게 되어 노숙인이 법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2005년 1월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되면서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이 제도화되었다. 이로써 상담보호센터의 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 제도화 추진기(2005년~2011년) : “서울시의 거리 서비스 확대와 다양화”

2005년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노숙인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노숙인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거리노숙인에게 거리 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구현되기 시작했다. 2005년, 다시서기, 만나샘, 웅달샘 등 상담보호센터가 추가 설치되었고, 거리노숙인 아웃리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현장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아웃리치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2005년부터 거리노숙인에게 특별자활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수입을 쪽방, 고시원 등의 월세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시작되었고, 민간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통해 거리노숙인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7월 서울역대합실 퇴거조치의 후속대책으로 11월 서울역과출소 지하도에 응급대피소가 개설되어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체계가 갖추어졌고 그해 주간상담소가 서울역희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확장 개소되었다. 2011년 노숙인 결핵환자 요양쉼터(미소꿈터)가 개소되어 거리노숙인 결핵치료 완치의 길이 열렸다.

2011년에는 한국 사회에 노숙인 문제가 본격화된 지 십수년만에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노숙인 정책은 독립법안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12년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써(제5조, 제8조) 매년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제도의 발전기(2012년 이후) : “위기대응 체계 강화”

노숙인복지법 시행으로 상담보호센터는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로 전환되었으며, 노숙인쉼터는 요양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법에 주거지원서비스, 임시주거서비스가 주요 서비스로 포함되었다. 이로써 거리노숙인의 노숙 탈피를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거리->시설->주거의 경로로 체계화되었다. 2013년 일시집계조사 방식(PIT)으로 서울전역의 거리 및 시설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여성노숙인 대책의 필요가 제기되면서 여성 전용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쉼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노숙인 보호체계를 갖추었다.

한편, 노숙인들의 주거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 전달체계의 경로 외에도 거리노숙을 탈피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민간이 운영하던 월세지원사업이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정규화 되어 2011년 200명 지원에서 2019년 현재 900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들 중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이 거리노숙인을 직접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활동을 강화하여 300여명의 거리노숙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고, 서울시는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를 파견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주거 유지를 돕고 있다. 2016년에는 정신질환 여성 및 알코올중독 남성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운영되어 거리의 만성적 노숙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18년 서울시의 지원주택 관련 조례 제정으로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새로 취임한 서울시장이 강조한 ‘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는 모토에 따라 서울시의 거리노숙인 대책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011년 겨울부터 노숙지역 지하도에 마련된 응급대피소 운영, 2012년 정신건강팀 신설과 활동, 2012년 동절기에 시작된 ‘위기대응콜’ 사업, 24시간 아웃리치활동을 위한 상담원 추가배치, 경찰·소방서·병원 등과의 보호체계 구축, 2017년 서울역희망지원센터 확장개소 등 위기대응을 보다 체계화하고 거리노숙인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 주요 사업

1)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 추진 목표 : 거리노숙인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연계하고, 일시 생활편의 서비스 (숙식 등)를 제공하여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추진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시설 현황 : 2개소 종합지원센터, 4개소 일시보호시설
- 운영 내용 :
 - 운영시간 : 월~금 24시간 운영, 토 일 공휴일 19:00~07:00
 - 서비스 내용 : 상담 및 시설인계, 응급숙소 제공(월 20일 이내), 무료급식(1일 1식) 지원, 이·미용, 세탁, 목욕 등 위생서비스 제공, 기초의약품 제공, 병원진료 의뢰, 119이송 등,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주민등록 복원, 신용회복 등 기타 서비스 지원, 건강관리·건강상담 등
- 추진 사항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운영(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기능보강비 지원)

구분	서울역	시청·을지로 부근	영등포역	여성전용
종합지원센터 2개(시립시설)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2012년)*	브릿지종합지원센터(2012년)**	-	-
일시보호시설 4개(법인시설)	만나샘(2005년)	-	햇살보금자리(2003년) 옹달샘(2004년)	디딤센터 (2016년)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2005년 설치된 상담보호센터가 전환함.

** 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2003년 설치된 상담보호센터가 전환함.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종합)



브릿지종합지원센터(종합)



옹달샘(일시)



만나샘(일시)



햇살보금자리(일시)



디딤센터(일시)

- ▶ 거리노숙인 대상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공동작업장, 특별자활근로(코레일 사업단의 휠체어 도우미), 일자리갯기(병원동행) 참여 모습(사진 순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거리의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우리옷방, 세탁건조실 모습과 거리 이동목욕 서비스 활동



2) 거리노숙인 상담 및 위기지원 활동

○ 추진 목표 : 노숙인 거리상담 및 밀집지역 희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입소 및 주거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겨울철 및 폭염기 등 취약시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여 노숙인의 안전보호

○ 희망지원센터 및 응급대피소 보호사업

상담소명	운영시간	운영기관	운영인력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상담원13, 간호사1, 특별자활근로8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09:00~18:00	옹달샘·햇살보금자리 공동 운영	계약직 상담원2, 특별자활근로2

- 운영 내용 : 상담, 일시보호, 쉼터입소의뢰, 병원진료, 임시주거지원, 수급지원, 우리옷방 및 샤워시설 운영, 공동작업장/코레일청소사업단/특별자활근로/일자리갯기 등 일자리사업 운영 등

▶ 희망지원센터 및 응급대피소 야간잠자리, 주간휴게공간 이용 모습



▶ 상담 및 시설연계, 상담 및 동행입소 활동



○ 거리상담반 구성 운영 및 동·하절기 특별보호

- 노숙인 특성별(주취자, 질환자, 일반) 응급잠자리, 병원, 쉼터 안내
- 주취자는 응급구호방·쪽방으로, 질환 노숙인은 병원, 그 외에는 시설로 안내·이송

▶ 거리아웃리치 활동 - 동절기 외부아웃리치, 하절기 생수 나누기, 119이송 등



▶ 동·하절기 특별보호대책 - 침낭 나누기, 따뜻한 차 나누기 등의 현장활동



○ 위기대응콜센터 사업(1600-9582)

- 운영 기관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서울역희망지원센터 내 설치)
- 운영 인력 : 전문상담원 2명, 특별자활근로 8명 / 24시간 운영
- 운영 내용 : 노숙인 상담, 정보제공, 현장출동 등
- 운영 실적 : 2018년 기준(1일평균 13건)

■ 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안내/문의	현장출동	시설보호	기타	계
2018년	2,198	1,737	853	0	4,788

■ 신고자별 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112	119	병원	일반시민	노숙인 노숙위기	자치구	지하철	기타	계
2018년	1,390	51	214	1308	518	573	642	92	4,788

① 위기대응콜에 따라 출동하여 활동하는 모습과 위기대응콜센터 포스터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

- 운영 기관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운영 인력 : 8명(정신과전문의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 사회복지사 3명)
- 운영 내용 : 정신과 상담, 시설입소 안내, 사례관리, 응급쪽방 연계, 응급입원 지원 등
- 운영 실적 : 2018년 기준

구분	상담 건수				조치 건수				
	정신상담	알코올 상담	기타	합계	자의입원	응급입원	시설입소	주거지원	합계
2018년	3,413	1,688	96	5,197	237	46	152	55	490

3)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특정한 시점에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일관된 방법으로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연간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노숙문제에 대응하고 노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함.
- 추진 근거 : 서울시 조례 제5조 및 제8조
- 조사 횟수 : 연 4회 진행
- 조사 지역 : 서울전역의 주요노숙지역 및 산개지역
- 조사 방법 : 00시~03시 노숙시설종사자와 공무원이 공동조사 진행

②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 주요역사, 공원, 한강변 등의 노숙인 수를 집계하는 활동 모습



■ 2019년 7월 제2차 실태조사 지역

자치구	세부조사지역	담당시설 및 단체
강남구(24)	-강남역, 역삼역, 논현역을 포함한 24개 조사 지역	강남구청, 여성보호센터, 달팽이소원
강동구(4)	-광진교, 천호역을 포함한 4개 조사 지역	강동구청, 강동희망의집
강북구(15)	-미아사거리, 수유역, 우이교를 포함한 15개 조사 지역	강북구청, 겨자씨들의 동지
강서구(4)	-김포공항, 염창역, 화곡역을 포함한 4개 조사 지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악구(11)	-도림천, 봉천역, 신림역을 포함한 11개 조사 지역	서울시청, 관악구청, 대한성공회살림터
광진구(19)	-건대입구역, 뚝섬, 강변역을 포함한 19개 조사 지역	비전트레이닝센터
구로구(12)	-구로역, 신도림역, 도림천을 포함한 12개 조사 지역	구로구청, 길가온혜명

금천구(5)	-시흥IC, 폭포공원, 금빛공원을 포함한 5개 조사 지역	청담광명외집
노원구(11)	-노원역, 상계역, 성계역을 포함한 11개 조사 지역	노원구청,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도봉구(4)	-쌍문역, 쌍한교, 창동역을 포함한 4개 조사 지역	도봉구청, 다시서기
동대문구(32)	-마장교, 신설동역, 용두역을 포함한 32개 조사 지역	동대문구청, 가나안쉼터, 비전
동작구(7)	-사당역, 신대방역, 이수역을 포함한 7개 조사 지역	영등포보현외집
마포구(18)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합정역, 신촌역을 포함한 18개 조사 지역	마포구청, 다시서기, 구세군가재울쉼터, 서대문사랑방
서대문구(12)	-서대문, 충정로, 독립문을 포함한 12개 조사 지역	구세군가재울쉼터, 디딤센터, 열린여성센터, 희망원룸
서초구(23)	-한강시민공원 반포·잠원지구, 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을 포함한 23개 조사 지역	서초구청, 서울노숙인시설협회, 거리의천사들
성동구(14)	-서울숲, 송정동, 왕십리를 포함한 14개 조사 지역	성동구청, 비전트레이닝센터
성북구(22)	-장위동, 정릉천, 월곡역을 포함한 22개 조사 지역	24시간게스트하우스, 십자가쉼터, 아가페외집, 아침을여는집
송파구(22)	-잠실역, 올림픽공원, 풍납동, 가락시장 포함 22개 조사 지역	송파구청, 다시서기터, 강동희망외집
양천구(10)	-목동역, 신정역, 오목교역을 포함한 10개 조사 지역	양천구청, 햇살보금자리
영등포구(47)	-영등포역, 여의도공원, 영등포시장을 포함한 47개 조사 지역	광야홀리스센터, 영등포구청, 영등포보현외집, 영등포쪽방상담소, 웅달샘드롭인센터,
용산구(34)	-서울역, 숙대입구역, 용산역을 포함한 34개 조사 지역	서울시청, 용산구청, 다시서기, 만나샘
은평구(11)	-구산역, 불광역, 연신내역을 포함한 11개 조사 지역	수송보현외집, 은평의마을, 은평구청, 천애원희망외집, 희망나무
종로구(33)	-낙원상가, 동대문역, 광화문, 종각역을 포함한 33개 조사 지역	구세군브릿지, 다시서기, 종로구청
중구(66)	-을지로 명동, 창계천, 남대문, 서울역, 충무로를 포함한 66개 조사 지역	구세군브릿지, 다시서기, 서울시청, 만나샘, 소중한사람들, 중구청, 화엄동산
중랑구(38)	-목동, 면목동, 중랑역을 포함한 38개 조사 지역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중랑구청

4) 노숙인 진료소 운영

○ 추진 목표 : 질병에 취약한 노숙인 등에게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 복귀를 위한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

○ 사업 근거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지원 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자,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 운영 내용 : 서울역진료소, 영등포진료소 운영

서울역진료소 운영

- 근무인력 : 7명(공중보건조사/일반의 2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 사업내용 : 진료 및 투약, 2차병원 진료의뢰, 결핵환자관리, 건강검진 연계, 치과진료, 안경지원사업 등

- 설립시기 : 2002년

- 연간이용인원 및 처방 유형(1일 평균 이용인원 65명) (단위: 건)

연도	계	진료인원	병원의뢰	119 호송
2018	16,976	8,124	8,783	69

- 진료결과 질병유형 (단위: %)

연도	계	호흡기 내과	순환기 (고혈압 등)	정형 외과	소화기 내과	정신장애 등 신경계	내분비 내과	피부과	기타
2018	100	16	30.3	7.7	7.6	1	12.5	9.1	15.8

영등포진료소 운영

- 근무인력 : 5명(전문의 1명, 공중보건조사/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 사업내용 : 진료 및 투약, 2차병원 진료의뢰, 무료결핵환자관리, 건강검진 연계, 무료틀니 지원사업 등

- 설립시기 : 2004년

- 연간이용인원 및 처방 유형(1일 평균 이용인원 30명) (단위: 건)

연도	계	진료인원	병원의뢰	119 호송
2018	5,590	4,899	686	5

- 진료결과 질병유형 (단위: %)

연도	계	호흡기 내과	순환기 (고혈압 등)	정형 외과	소화기	정신장애 등 신경계	당뇨병	기생충 등 감염성	기타
2018	100	15.6	18.7	18.4	10.1	3	5.1	0	29.1

5) 서울역 실내급식장 운영

- 추진목표 : 서울역 노숙인 실내 무료급식장 운영을 통해 거리 급식단체들이 실내에서 급식을 하도록 유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노숙인 이미지 개선 및 자아 존중감 향상 도모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2호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 명 칭 :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 위 치 : 용산구 한강대로 377 (동자동 43-9, 서울역지하도 13번출구 앞)
- 설 치 일 : 2009년
- 운영인력 : 3명 (노숙인일자리 사업 23명 배치)
- 급식현황 : 2019년 10월 기준 18개 단체, 주당 18회 급식(1일 평균 800명 이용)

구분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조식	8:00 10:00	-	-	경제회복센터	사랑의교회	지정기부급식 1주 시나브로 3주 이데일리	대체급식 (따스한채움터)	-
중식	12:00 14:00	상동교회	대체급식 (따스한채움터)	대체급식 (따스한채움터)	지정기부급식 KT&G/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사)나눔미	3주 나눔과 봉사단
석식	17:00 19:00	지정기부급식/ 3주 일진산업	대체급식 (따스한채움터)	원봉교회	(사)나눔미	사랑실천 공동체	새사랑교회	서울꽃동네



6)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 추진목표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 계층에게 단기적으로 고시원 등을 지원하고,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거리노숙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업내용 : 노숙인 및 노숙 위기계층에 월세 지원 및 사례관리
 - 월세 25만원 최장 6개월, 생활용품비 1회 10만원 지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11명) 지원을 통해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기초수급자 선정, 일자리 지원
- 수행기관 : 6개소(거리의 천사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디딤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웅달샘, 햇살 보금자리)
- 지원실적: (2018년 기준)

- 임시주거 지원 인원

추진단체	지원인원	주거유지 인원	주거유지율
6개시설	862명	724명	84.00%

- 지원 대상자의 일자리 및 기초수급 신청현황

(단위: 명)

계	일자리 지원			기초수급 신청·긴급지원			
	소계	공공	민간	소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긴급지원
491	214	94	120	277	139	70	68

- 서비스 지원현황

(단위: 명)

계	방문상담	생활용품 지원	주민등록 복원	장애등록	파산, 면책, 신용회복지원	병원진료 등 의료지원
5,849	4,951	679	110	2	2	105

2 서울시 노숙인 건강 지원사업

■ 노숙인 의료 정책의 흐름과 변화

• 노숙인 응급구호를 시작으로 의료정책 출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들의 의료 대책은 1998년 4월 '서민생계 안정대책'의 '대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 내용에서 확인된다. 대책 초기 서울시는 의사 3명, 간호사 4명, 구급차 2대로 구성된 순회진료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의 정기방역소독, 환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등 긴급의료 활동에 치중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주요 노숙지역인 서울역광장에 의료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해 9월 서울시의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따라 노숙인 ID카드를 발급관리하여 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1999년 응급보호사업이 정착되면서 의료서비스는 각 희망의집 및 자유의집 입소자, 상담소 방문자에게 제공되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서울지역 25개 지역보건소로 확대되었다. 1999년 1월 자유의집에 의료상담실이 설치되어 주간에 공중보건의 1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파견 간호사 2인이 상주하였고, 매주 통합진료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2000.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 1998-2000> 참조)

▶ 1998년 노숙인 진료를 위한 진료카드 발급



• 노숙인 무료진료 지원 정책과 현장진료소 운영으로 거리, 시설 노숙인 진료체계 구축

서울시는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노숙인의 진료를 위한 노숙인의료구호비를 편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무료진료를 연계함으로써 노숙인 건강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시스템을 만들었다. 보건소 및 시립병원의 진료비 전액을 '노숙인의료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대책의 특징이다.

또한 2001년부터 거리노숙인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역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에는 영등포보현의집 내에도 현장진료소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노숙인시설에 입소한 사람들과 노숙인 진료소에서 거리노숙 상황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노숙인의료서비스 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소, 시립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감염성 질환 대책으로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 시행

2000년에는 시장방침(시장방침 제500호-2000.5.10.)에 따라 <노숙자 결핵실태 조사 및 진료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쉼터 입소자에 대한 결핵 1차 검진, 노숙밀집지역 노숙인에 대한 결핵정기 검진 및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이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감염성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의 일환으로 결핵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숙인 결핵환자가 주거와 식사 걱정없이 결핵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결핵질환이 있는 노숙인이 무료로 거주할 쉼방 및 도시락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⁴⁾

2011년, 노숙인 결핵관리 시설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결핵협회, 서울시 보건정책과가 참여하는 결핵노숙인 결핵치료를 위한 '미소꿈터'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미소꿈터는 결핵전문병원인 서북병원과 치료체계를 연동하여 노숙인결핵환자의 치료완치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다.⁵⁾ 이로써 결핵질환을 갖고 거리생활을 하며 재발이 잦았던 거리노숙인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결핵완치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

• 2011년, 노숙인 복지법 제정 후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과 서울시의 비급여 항목 지원

2011년 '노숙인 복지법' 제정에 따라 정책대상이 '노숙인 등'으로 확대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지침(2012.6.8. 시행)'에 의해 '노숙인 의료급여'가 시행되면서 노숙인 의료지원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노숙인들이 노숙기간과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을 확인하여 조건을 충족하면 '노숙인 의료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지침 ('12. 6. 8. 시행)

I 근거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수급권자의 구분) 및 별표 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료급여의 절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6.8시행)

한편, 노숙인의료급여는 비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식대, 응급상황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⁶⁾

4)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2013). <2013년 다시서기사업보고서>

5) 미소꿈터(2012). <2012년 미소꿈터 사업보고서>

6) 서울특별시(2013), "노숙인 의료보호사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지침" 시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안내"(자활지원과-8066호(2013.6.3.))



· 2017년, 노숙인 현장진료소의 의료기관 등록 개원으로 의료의 질 향상 도모

2002년부터 운영되던 노숙인 진료소(서울역진료소, 영등포진료소)는 노숙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17년 4월 서울시 부속의원으로 정식 개원하였다. 이에 따라 진료소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말소자의 신분 복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⁷⁾ 또 DUR 시스템(의약품 중복처방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노숙인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였다. 2018년에는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지원 지침에 따라 전문의 채용이 가능해졌으며, 영등포진료소의 경우 전문의를 채용하여 상시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했다. 이로써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 주요 사업

○ 1998.4.6. 순회진료반 운영

- 서울시 '노숙자 보호 및 관리 대책'(시장방침 제446호)

- 긴급 의료활동 진행 : 외환위기로 거리노숙인이 급증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의 건강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는 의사 3명, 간호사 4명, 구급차 2대로 구성된 순회진료반을 편성함. 순회진료반은 주1회 이상의 정기적 방역소독, 환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등을 진행함. 후송병원으로는 국립병원인 국립의료원과 시립병원인 동부병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이 지정되었고 병원별로 각 30개의 병상이 운영되었으며 정신질환자는 은평병원, 전염성 및 결핵환자는 서대문병원이 지정되어 운영됨.

7) 서울시(2017). "노숙인 의료지원 운영계획"

○ 거리노숙인을 위한 진료소 운영



▶ 2002년 서부역쪽으로 이전한 노숙인 진료소(왼쪽)와 2009년 6월 12일, 서울역 13번 출구쪽으로 이전하여 개소한 '서울역진료소' 모습



- 2001.4. 노숙인 진료소(서울역진료소) 개소·운영 : 서울역파출소 맞은편 옛 동부아동상담소 자리에 개소하여 자원봉사단체 중심의 야간진료 진행함.
- 2002. 노숙인 진료소(서울역진료소)에 공중보건과의 파견함.
- 2004. 영등포보현의집 기초해결센터 내 영등포진료소 설치함.
- 2017.4. 노숙인 진료소(서울역진료소, 영등포진료소)의 정식 의원 개설: 진료소를 정식 의원으로 개설한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 2018년 노숙인 의료지원 운영계획'에 따라 거리노숙인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의를 채용계획을 세움. 영등포진료소는 전문의(외과)를 채용하여 상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갖추.

구분	서울역 무료진료소(02.4.19 개원)	영등포 무료진료소(04.15 개원)
의료기관 명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	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소재지	용산구 한강대로 379-2(동자동)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1층(영등포동 2가)
진료과목	내과, 가정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개설신고일자	2017. 3.16	2017. 3.16
증명서 발급일	2017. 3.29	2017. 3.27
개설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개설일	2017. 4. 1	2017. 4. 1
운영법인(시설)	대한성공회유지재단(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영등포보현의집)

<서울시 2017년 노숙인 의료지원 운영계획>

■ 2017년 의료지원 개선방향

○ 무보험자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확대 추진(계속)

- 무보험자 : 2013년(530명)→2014년(336명)→2015년(295명)→2016년(287명)
- 2017년 무보험자 의료비 지원 : 237명(2016년 대비 50명 감소, 17.4%↓)

○ 무료진료소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부속의원) 개설 및 전문의 채용(영등포)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및 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개설)
- 정밀진료를 위한 진단 의뢰기기 설치(초음파기)
 - ※ 2018년: x-ray 기기 도입(서울역 무료진료소→영등포 무료진료소 순차적 도입)
- 민간의료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 2014.3.7. 서울역진료소 치과진료 시작, 열린치과봉사회와의 협약식



○ 노숙인시설 내 건강관리실 운영

- 1999.1. 자유의집 의료상담실 설치운영 : 공중보건의 1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파견 간호사 2인이 주간에 상주하였고, 매주 화요일 통합진료를 실시하였음.
- 2002년 거리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센터 신설·운영에 따라 건강관리실 운영 : 서울지역에 2개소 개소하면서 상담보호센터 이용자를 위한 건강관리실을 상담보호센터 내에 신설·운영함. 거리노숙인의 경우 중복진료나 약물남용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2002년 4월 서울역 앞의 소규모 공간을 진료실로 개조하여 거리진료소를 상설화하고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거리노숙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함.

○ 노숙인 결핵 관리

- 2000.5.10. 노숙자 결핵실태 조사 및 진료대책 시행(시장방침 제500호 2000.5.10.) : 2000년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쉼터 입소자에 대한 결핵 1차 검진과 노숙밀집지역 노숙인에 대한 결핵정기검진 및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이 실시됨. 이와 함께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광장에 매주 금요일 보건소 차량을 배치하고, 결핵검진 희망자를 관내 보건소로 이송하여 검진함.
- 2003. 결핵노숙인 쪽방 및 도시락 지원 사업 시행함.
- 2011.11.18. 결핵노숙인 결핵치료를 위한 미소꿈터를 설치·운영⁸⁾ : 서울시시장방침(방침 제500호 '노숙자 결핵실태 조사 및 진료대책'(2000.5.10.))의 노숙인결핵관리시설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결핵협회, 서울시 보건정책과가 참여하는 결핵노숙인 결핵치료를 위한 미소꿈터를 설치운영함.

▶ 2000년 5월 10일, 노숙인 결핵실태 조사 및 진료대책 시행에 따른 쉼터 입소자와 거리노숙인에 대한 결핵검진



2011년 서울역 결핵검진



2011년 영등포 결핵검진

▶ 2011.11.18. 결핵노숙인 결핵치료를 위한 '미소꿈터'를 개소함.



8) 질병관리본부 2010년 8월 3일자 보도자료

▪ 노숙인 정신건강 지원사업

• 노숙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 중 일부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몇 년씩 장기간 거리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다.¹⁰⁾ 그동안 현장과 학계에서는 거리노숙인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알코올문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 경제적 활동을 연계하는 보호시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특히 노숙인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숙인 복지서비스 체계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에 추가적인 전문적 자원의 투입의 필요하다는 것이다(신원우 2004, 남기철 2007).¹⁰⁾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거리에 머무르면서 만성화되고 있는 노숙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거리노숙인 알코올 문제와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 사례관리의 필요성은 그만큼 중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숙인 응급구호기 자유의집과 이후 비전트레이닝센터의 노숙인 정신건강프로그램 지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되었으나 시설입소를 꺼리는 노숙인을 포괄하기 힘들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서울정신보건센터 모바일팀이 거리노숙인의 정신건강 사례관리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범적 사업으로 2년만에 중단되었고 이후부터 거리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 노숙인 정신건강팀 태동 배경

거리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정책적 관심으로 다시 떠오른 것은 2011년 7월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이후였다.¹¹⁾ 서울역 거리노숙인이 이슈화되면서 현장으로부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로 거리노숙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 치료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8월 22일 교회협 홀리스대책위원회와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홀리스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정책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민간기관이 자원 봉사 3개월간 'ACT팀'을 시범운영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면서, 거리노숙인 지원대책 중의 하나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였다.¹²⁾ 때마침 2011년도 6월에 '노숙인들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도 거리노숙인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이 정책화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종합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을 기초로 서울시는 정신과의사 촉탁의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정신건강팀을 만들게 됐다. 민간에서 먼저 노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과를 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홀리스대책위원회(2012),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팀 활동보고서>
10) 신원우(2004), "노숙 후 음주문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17권, 남기철(2007), "노숙인정신건강서비스 현황과 쟁점", 사회복지연구 37권

☞ <서울시 정신건강팀 태동 전 민간의 자발적 활동-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ACT)>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기 전 민간에서는 노숙인 상담의 경력이 많은 중견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현장대책팀과 정신보건의료전문가와 내과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ACT팀을 구성해 2011년 동절기 동안 자발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알코올이 있는 노숙인들을 정신과의사가 직접 설득을 했고, 너무 심각한 정신질환 노숙인들은 정신과의사 두 명이 진단을 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성과를 냈다. (서정화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요약)

▶ 2011년 민간의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ACT)은 시범사업 진행하며 거리아웃리치활동과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 노숙인 정신건강팀의 구성과 운영

2012년 12월 서울시 자활지원과 산하에 정신건강팀을 신설하였다가 2013년 인원을 확대하였다. 2015년부터는 2개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식을 1개 종합지원센터로 통일하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정신건강팀을 전담하면서 7명으로 확장하여 서울 전역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시청과 을지로 지역의 노숙인은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노숙영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설과 병원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노숙인 정신과 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서울시립정신병원 3개소(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신건강팀의 주요활동은 알코올 및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위기개입, 병원진료, 사례관리,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이다.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2018.5.30시행)되면서 노숙인시설의 장기입소생활이나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본인이 원치 않는 비자 의입원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노숙인 정신건강팀은 이 과정에서 거리노숙에 처하는 노숙인들에 대해 주거서비스 연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연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1) 코레일 서울역은 2011년 7월 20일, 8월 1일부터 대합실 내 노숙인을 퇴거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2) 홀리스대책위원회(2012) <2012년 위기관리팀 활동보고서>

■ 주요 사업

○ 거리노숙인 정신건강 사례관리 모바일팀 구성 운영(2006년~2009년)¹³⁾

- 목적 : 노숙인 정신질환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도권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 거리아웃리치, 정기상담, 위기개입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 민간단체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 시범사업 진행(2011년~2012년)

- 목적 : 서울역 인근의 만성적인 저인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개입을 통하여 만성적인 거리노숙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고자 함
- 내용 : 2011년 7월 20일, 코레일(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코레일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노정균정신과의원, 서대문정신건강센터, 열린여성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민간단체 실무자들이 결합하여 거리현장의 주취자 및 정신질환 만성노숙인에 대한 심층적 개입을 시도함.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3회 정기적인 팀접근 아웃리치 활동을 함.
- 구성 : 정신과 의료인(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개입 방안논의)
정신보건전문요원(아웃리치하며 노숙인의 정신문제 상담)
사회복지사(아웃리치하며 노숙인의 정신문제 상담)
일반 의료진(의료차량에서 내과, 치과 등 진료)
홈리스대책위원회(아웃리치 상담 동행 및 물품제공, 교계 자원봉사팀 운영)
- 성과 : 총 상담건수 514건, 입소 45건, 입원 20건, 주거지원 6건

○ 서울시 정신건강팀 운영(2012년~현재)

- 과정 : 2012년 3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 5명으로 확대하였고 2개 시설 운영방식을 1개 시설로 통일하여 7명으로 운영함. 노숙영역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2013년부터 진행함. 노숙인 정신과 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립정신병원 3개소와 업무협약식 체결
- 내용 : 알코올·정신질환 노숙인 조기 발견과 위기개입, 병원진료와 사례관리, 지역사회 정착 지원

13)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2007), <노숙인 정신건강관리 지침서> 참조

<표7. 정신건강팀 연도별 사업(2013년~2018년)>

구분	상담				조치				
	정신 상담	알코올 상담	기타*	합계	자의 입원	응급 입원	시설 입소	주거 지원	합계
2013년	1,705	409	339	2,453	195	70	129	48	442
2014년	2,357	735	136	3,228	355	75	139	67	636
2015년	2,975	1,055	180	4,210	391	66	97	94	648
2016년	4,248	1,746	19	6,013	277	60	148	94	579
2017년	3,452	1,749	96	5,297	255	59	147	85	546
2018년	3,413	1,688	96	5,197	237	46	152	55	490

* 외부기관, 지자체, 위기대응콜 전화문의 등 응대했지만 주요 상담실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임.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정신건강팀 활동 모습



노숙인에 대한 전문팀 접근을 위한 업무회의



정신건강 아웃리치활동

☞ <거리의 노숙인 진료 사례>

가장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어저께도 왔고 병원에 오셨는데 이분이 정말 정신질환으로 환청과 망상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당연히 못할 뿐더러 자기 개인위생까지 챙기지 못하는 50대 중반의 여자환자였어요. 이분이 노숙하면서 머리를 몇 년을 감지 않은 거예요, 머리를. 여자분인데 몇 년을 머리를 감지 않아서 머리가 떡처럼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정말 꾸불꾸불해 가지고 완전히 굳었는데..., 노숙사업을 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그 머리를 하나하나 풀고 감겨주고 원래 머리로 재생시키는데 반나절인가 한나절인가 걸렸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얘기죠. 그 이후로 치료에 들어가서 열심히 개인위생 챙기고 약도 잘 먹고 지금은 독립해서, 탈노숙되면서 혼자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정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인터뷰 중)

○ 알코올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 운영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38호 시범사업으로 공급하였고¹⁴⁾, 이 성과를 근거로 2018년 5월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되어 지원주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최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¹⁵⁾

- 2016년 지원주택 시범운영(열린여성센터 18호, 비전트레이닝센터 20호)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5.3.)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4.8.)
- 2019년 조례(“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노숙인 알코올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 사업 추진 시작

3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정책

■ 노숙인시설을 통한 노숙인 보호와 지원 정책의 흐름¹⁶⁾

1) 부랑인 보호대책기(1990년대 초중반까지)

1990년대말 외환위기로 노숙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소위 ‘부랑인’으로 불렸던 노숙인의 보호 정책은 대체로 통제적 개입이 중심이었다. 1970년대까지 ‘부랑인’에 대해서는 사회통제와 질서유지를 위해 격리하고 단속하는 것이 주된 양상이었다. 1980년대에는 부랑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복지부 소관으로 이전되고 복지서비스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규모로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단속과 수용 보호 위주의 부랑인 정책은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 가운데, 단속이나 선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수용 및 보호에 관해서는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으로, 그리고 정부지원에 관하여는 부랑인 보호 국고보조 사업지침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상의 부랑인 복지서비스 관련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었다.

2) 노숙인 응급구호기(1998년~1999년)

1990년대 말에 IMF 외환위기로 기업파산, 대량실직이 발생하자 거리 숙박자들이 급증하면서 ‘노숙자’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국가적 위기로 발생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정부차원의 응급구호적 대책을 본격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거리로 쫓겨 나온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에서 1999년 초 사이에 많은 노숙인쉼터를 설치하였다.(‘희망의집’ 113개소, ‘자유의집’ 1개소). 그리고 정부는 쉼터에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직 노숙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 긴급하게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종교시민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민간기관과 종교단체는 1998년 3월초 전국실직노숙자 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시 사회복지관마다 노숙인쉼터를 만드는 식으로 대량의 ‘희망의집’ 확보를 추진하였다. 한편, 희망의집 정원이 넘치고,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 노숙인이 적지 않게 존재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자유의집을 개소하였다. 자유의집은 쉼터와는 달리 생활상의 제약이 거의 없었는데, 알코올문제 치료와 같은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노숙인쉼터 입소 정책을 통해 많은 거리의 노숙인이 쉼터 생활인이 되면서 노숙인 응급보호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14) 서울특별시(2019),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사업설명회 자료집>, 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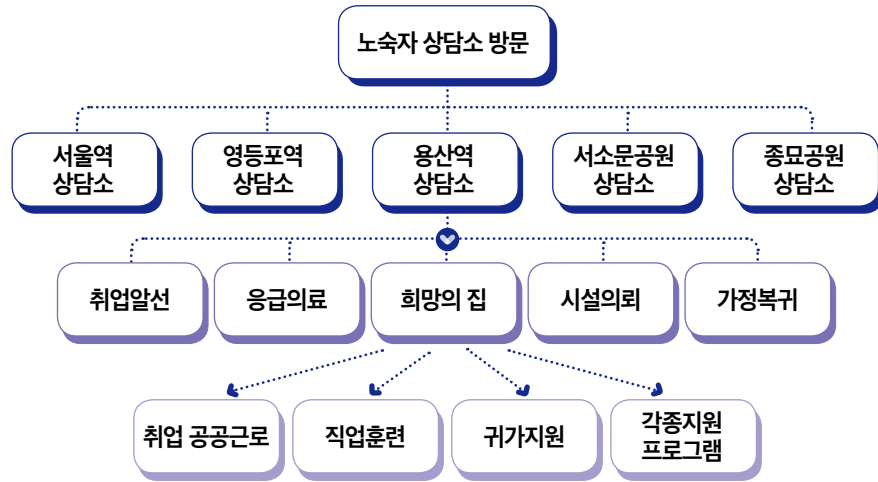
15) 서울주택도시공사(2018),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참조

16) 참고자료: ①동덕여대-보건복지부(2013),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②신원우(2018), “서울시 노숙인복지 20년 돌아보기”, <서울시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자료집>.

하지만, 이 시기의 노숙인쉼터 지원체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이용시설인 복지관에 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임시시설로 예정하였던 희망의집은 사실상 생활시설이 되고, 자유의집 역시 응급쉼터가 아니라 상시적인 단기보호시설로 운영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보호체계의 정비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표8. 지원 서비스 흐름도>



* 출처: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2000)

3) 자활사업 추진기(2000년~2005년)

자활·재활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해간 시기로 볼 수 있다. 응급구호기를 지나면서 노숙인시설을 유형화하여 보다 전문적인 보호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큰 전환을 이루기 어려웠다. 이 시기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노숙인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노숙인시설(희망의집) 축소 및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또 쉼터라는 거주시설 중심의 체계만으로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상담보호센터와 거리진료체계,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보호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노숙인 지원은 독자적인 근거 법령이 없이 임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노숙인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 ‘쉼터’ 관리를 통한 재활, 자활 지원

2000년 2월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노숙자 자활 지원사업 계획’의 자활사업 개요에는 ①재활프로그램(자활 여건 조성을 위한 심신치료), ②정신교육(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성취감 고취), ③직업교육(일할 의사는 있으나 기술과 능력이 없는 경우), ④취업알선(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⑤자활공동체 사업(노숙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 ⑥자활의집 제공(자활기반이 조성된 노숙자에게 전세금 지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1차 공모에는 주로 노숙인들의 심리적 손상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교육, 분노조절 훈련, 알코올 금주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으나 이후에는 심리치유 프로그램, 위기상담 프로그램뿐 아니라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건축물 개보수, 직업훈련 등 다양화되었다. 이 밖에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전세금을 지원하는 자활의집 사업에 1999년 22가구 4억 7,700만원이, 2000년 15가구 3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다.

이 시기에는 희망의집을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등의 전용 쉼터, 직업훈련 쉼터, 취업알선 쉼터, 치료보호 쉼터, 자활공동체 쉼터 등으로 유형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형화를 위한 별다른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큰 전환을 이루어낼 수 없었다.

그 외, 자유의집 입소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많은 노숙인이 쪽방 거주와 노숙을 반복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2000년 2월, 서울시는 「쪽방 거주자 지원 대책」을 통해 쪽방 지역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적으로 개소하고, 취업정보은행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 지원하도록 하고, 생활보호사업, 치료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3년 1월에는 거리노숙인의 보호와 사정, 쉼터연계 기능을 하던 자유의집이 폐쇄되고 정원을 대폭 축소하여, 알코올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시설로서 「비전트레이닝센터」가 만들어졌다.

○ 현장지원 체계 구축

2001년 이후 쉼터 입소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노숙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적절한 사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거리노숙인 대책에 진전이 있었다. 2002년 11월, 서울시는 현장과 밀접하게 위치하여 쉼터 입소 요청자를 전문 상담하는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두 곳의 개소를 추진하였다. 햇살보금자리 상담보호센터, 서울시립 브릿지 상담보호센터는 상담기능 외에 거리생활자나 쪽방거주자들이 반드시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거주 공간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세탁과 목욕과 같은 편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1월에는 영등포보현의집 내에 「기초문제해결센터」라는 사정센터가 설치되었고, 2004년 2월에 웅달샘 상담보호센터, 2005년 3월에 서울시립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2006년 8월에는 만나샘 상담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9. 2002년~2006년 상담보호센터 설치와 확대 현황>

구분	서울역 주변			영등포역 주변	
	서울시립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서울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	만나샘 상담보호센터	햇살보금자리 상담보호센터	웅달샘 상담보호센터
설치 장소	용산구 갈월동	용산구 동자동	서대문구 합동	영등포2가	문래동1가
개소일	2005.3.1	2006.8.18	2005.9.1(이전) 2002.11.20개소	2002.11.20	2005.3.1(이전) 2004.2.1.개소
면적	1,300㎡(393평) 지하1층,지상5층	402.13㎡(121평) 지하1층,지상3층	498㎡(151평) 지하1층,지상3층	240㎡(73평) 2·3층	500㎡(151평) 2층
정원	300명	150명	25명	70명	150명
1일 이용 인원	500여명 (숙박200여명)	130여명 (숙박25여명)	300여명 (숙박70여명)	150여명 (숙박80여명)	300여명 (숙박15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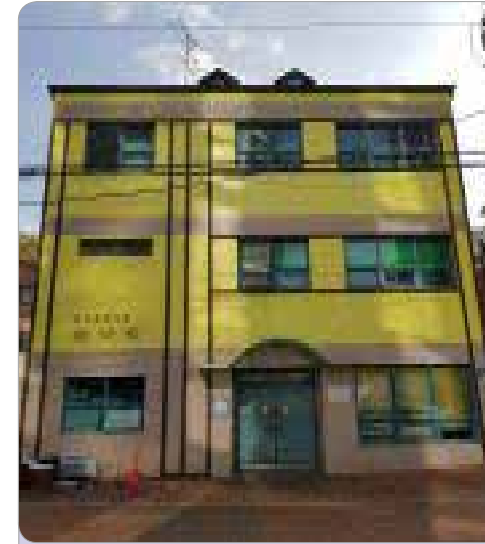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2.16.) 재구성



서울시립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現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전신임.)



서울시립 브릿지 상담보호센터
(現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전신임.)



만나샘 상담보호센터
(現 만나샘 일시보호시설의 전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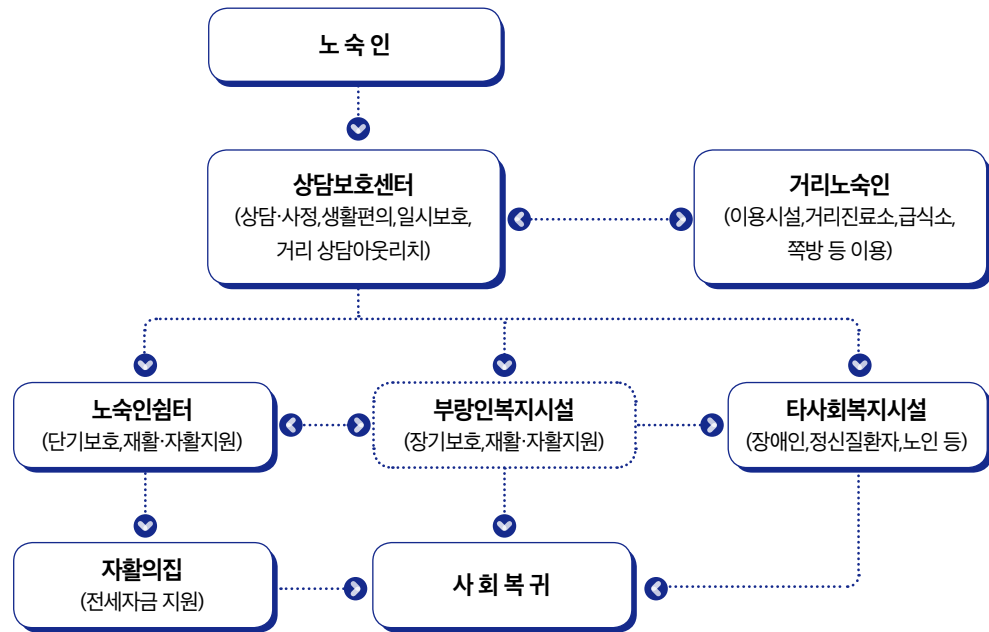


햇살보금자리 상담보호센터
(現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의 전신임.)



웅달샘 상담보호센터
(現 웅달샘 일시보호시설의 전신임.)

<그림1. 노숙인 복지법 제정 이전 노숙인 지원서비스 체계도>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2003.8.), <노숙자 보호사업 업무편람> 재구성

4) 제도화 추진기(2005년~2011년)

2005년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노숙인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화의 단초가 형성되었다.

한편, 2005년 노숙인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노숙인 시설 희망의집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다. 동시에 '부랑인'으로 불렸던 전통적인 노숙인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랑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사실상 동일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해 정책 프로그램이 이원화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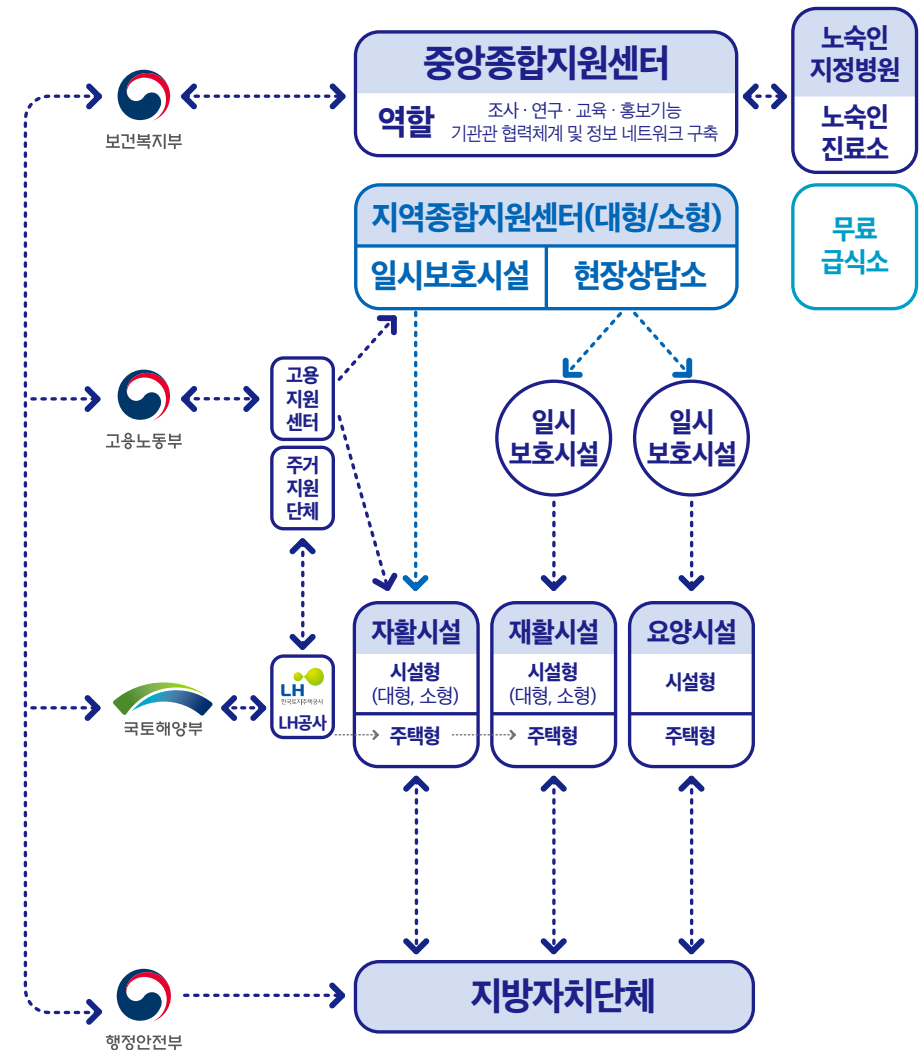
독립적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노숙인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보건복지부에 의한 '노숙인복지 5개년 계획을 위한 TF' 구성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TF의 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노숙인 지원을 위한 독립법안 제정의 노력이 본격화되었고, 2011년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시기 들어서 노숙인시설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으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정부가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300호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보강이 두드러졌다.

5) 제도의 발전기(2012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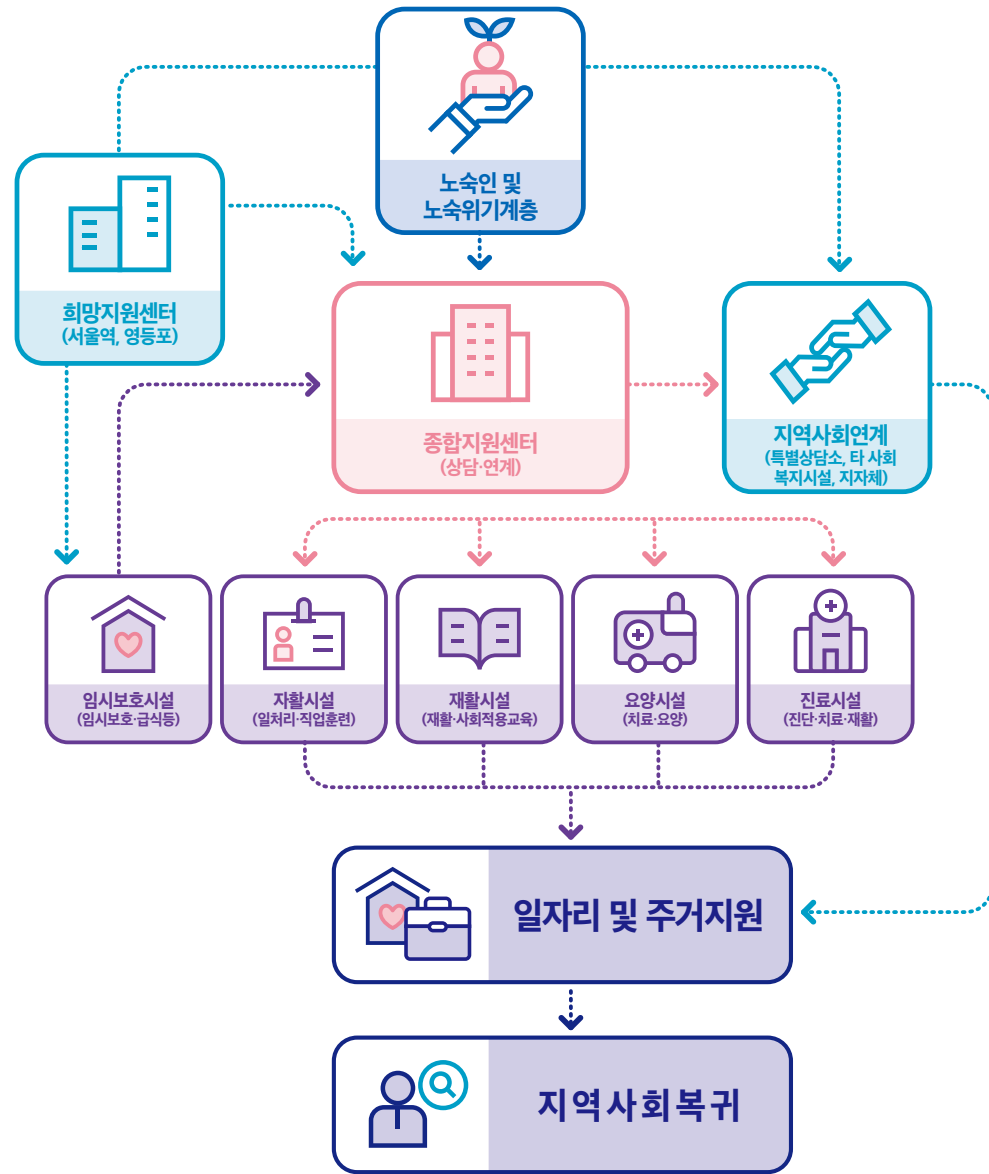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노숙인복지법의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다. 노숙인에 대한 종합적인 단일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시설 유형화와 체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숙인 복지법의 시행을 통해 과거 분리되었던 부랑인-노숙인 복지체계는 '노숙인 등'이라는 개념 속에서 통합되었다. 노숙인시설은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요양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로 구분하여 역할을 유형화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자활과 직업, 의료, 급식 및 현장지원 등 노숙인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법제화되었다.

<그림2.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 노숙인 지원체계의 변화 모형>



* 출처: 남기철 외(2011), <부랑인·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그림3.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 서울지역 노숙인 지원체계>



▪ 법률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설의 변화¹⁷⁾

시기	법률 및 정책	보호시설의 변화	비고
1998.4.6.	노숙자보호 및 관리대책 (시장방침 제446호)	-부랑인 보호시설 수용 -근로자 합숙소 설치(영등포)	
1998.4.17.	근로자 합숙소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498호)	-근로자 합숙소 운영계획	
1998.5.4.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시행계획 (시장방침 제570호)	-쉼터설치 지원	
1998.5.23.	노숙자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시장방침 제676호)	-노숙자쉼터 입소계획 (부랑인시설, 합숙소 입소)	
1998.9.10.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082호)	-희망의 집 : 113개소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은평의마을 등 입소조치 -서울 자유의집 설치(1.4)	
1999.8.27.	게스트하우스, 구세군사랑방 이전대책 (시장방침 제820호)	-구세군 사랑방(대방동에서 충정로로 이전) -게스트하우스(마포에서 성동구로 이전)	
1999.12.7.	노숙자 자활요양쉼터 설치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1137호)	-자활요양쉼터 설치(영등포한마음쉼터)	
2000.3.2.	노숙자쉼터 유형화 및 관리개선계획 (시장방침 제227호)	-영등포지역 노숙자 유형화, 타지역으로 분산 전원조치 -양평쉼터 확대이전, 롯데교회 취업자 중심 쉼터 설치 -106개 희망의집 대상 단계별 유형화 추진 시도	-영등포 한마음쉼터 입소인 -> 자유의집 C동으로 전원
2000.5.31.	노숙자쉼터 확보계획 (시장방침 제558호)	-자유의집 계약 만료에 따른 노숙자 쉼터 확보 계획 -경기도 파주 자활센터(늘푸른자활의집) 건립 -양평쉼터 확대 이전 -예수사랑선교회 50명 쉼터 신설 -도봉산역 부근 200명 취업자 전용쉼터 설치계획수립	

17) 참고자료: ①서울시장방침(각 년도), ②신권철(2014), “부랑과 노숙의 법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③이태진 외(2003),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향”,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④정원오 등(2011), <노숙인 등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방안>,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⑤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업무계획(2004년~2009년, 2011년~2013년, 2015년).

시기	법률 및 정책	보호시설의 변화	비고
2000.8.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165호)		-부랑인 정의: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
2002.12.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29호)	-희망의집 감소(연말 74개소)	-부랑인 정의: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자
2003.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범위에 '노숙자' 조항 삽입	-상담보호센터 시범 운영(햇살보금자리, 구세군브릿지센터)	
2004		-서울자유의집 폐쇄후, 재활전문시설 비전트레이닝센터 개소(2월) -영등포보현의집 內 기초해결센터 설치 -열린여성센터 개소 -소규모시설 통폐합 운영(연말 68개소); 서울시 업무계획(복지여성국) -쉼터 유형화(노인, 장애, 여성, 일반, 재활 등)	
2005.1.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29호)	-희망의집 통폐합/축소(62개소); 서울시 업무계획(복지건강국)	-부랑인 정의: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2005.1.5.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29호) 지방분권 특별법(2004년 제정)에 의거하여 '노숙인 사업' 지방이양 사업으로 실시		-'부랑인 및 노숙인' 정의: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시기	법률 및 정책	보호시설의 변화	비고
2005.2.5.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 근본적인 노숙인 보호체계 마련 -서울역 인근 상담보호센터 확장 이전(50명->100명) -용산역 인근 상담보호센터 신규 설치(5월, 200명) -용산구 서계동 여성전용 상담보호센터 개소(2월, 30명)	
2006		-보호시설 60개소 통폐합(희망58, 재활1, 중간1) -이용시설 4개소(서울역2, 영등포역2) -시설 개보수 10개소	-출처: 서울시 업무계획(복지건강국)
2007		-여성재활시설 아가페의집 개소 -보호시설 현황 56개소(쉼터52, 상담보호센터4)	
2008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 개정(가족부령 1호)(3월)	-보호시설 현황 48개소(쉼터43, 상담보호센터5)	-출처: 서울시 업무계획(복지국)
2009		-노숙인 증가에 대비한 쉼터(임시주거) 확충 -쉼터 현황 44개소	-출처: 서울시 업무계획(복지국)
20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6월)	-시설 유형화: 일시보호, 재활, 자활, 요양 -시설 현황 45개소(상담보호센터5, 쉼터37, 상담소2, 진료소1)	-출처: 서울시 업무계획(복지건강국)
20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6월)	-시설 현황 56개소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6, 자활34, 재활6, 요양5, 쪽방상담소5)	-출처: 서울시 업무계획(복지건강실)
2019		-시설 현황 44개소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6, 자활23, 재활8, 요양4, 쪽방상담소5)	-출처: 서울시 업무계획(복지정책실)

4 서울시 노숙인 재활·자활 프로그램

■ 노숙인 재활/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흐름¹⁸⁾

○ 외환위기 직후 응급구호 시기의 노숙인 프로그램 : 1999년~2000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희망의집 자활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1998년 외환위기 초기에는 쏟아져 나오는 거리노숙인 위기상황에 대응하느라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 없었다. 1998년 말 쉼터에 입소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노숙인들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노숙인 집단 내의 유형 구분을 통한 자활지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9년 2월 '희망의집 노숙자 종합적인 관리시행계획'이 확정되었고,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은 희망의집에 배치하고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귀향 지원, 취업알선, 직업교육, 정신교육, 숲가꾸기 공공근로 참여, 무료전세방 자활의집 제공 등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당초의 기대에 못 미쳤고, 부분적인 자활프로그램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1999년 하반기에는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10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희망의집 자활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재활프로그램 35개를 지원했다. 대인관계 기술훈련, 정신교육과 분노조절 훈련, 알코올 금주 프로그램 등 주로 노숙자들의 심리적 손상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2차 자활프로그램은 심리적 손상치리나 단주 프로그램(31건) 외에 집수리, 노점 창업, 구두수선업 등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4건), 공동체적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들(11건)이 늘어났다. 2000년 7월 3차 재활프로그램에서는 자신감 향상 및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위기상담 프로그램 30건,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참사랑마을 체인점, 건축물개보수 '그림같은집' 운영, 자활지원전문센터 직업훈련 등 14건이 운영되었다. 총 3차에 걸쳐 재활프로그램이 시행되었지만 한국적 모형을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 노숙인 복지사업 지방 이양 이전 자활지원 추진 시기의 노숙인 프로그램 : 노숙인재활쉼터 비전트레이닝 센터 개소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2003년 1월 비전트레이닝센터가 개소되어 알코올 및 정신질환자 대상의 재활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 노숙인 복지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서울시 정책 추진 시기의 노숙인 프로그램 : 신용회복프로그램 추진과 서울시 주최 인문학프로그램 지원

2005년 노숙인 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된 이후 노숙인쉼터에 대한 재활, 자활프로그램 비용 지원은 대폭 감소되었다. 이 시기부터 서울시는 일자리 지원을 통한 거리노숙인 감소와 자활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에 집중하였는데, 이의 일환으로 노숙인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상담과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없었으나 2005년부터 다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재원을 확보하여 노숙인을 위한 '성프란시스 인문학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성프란시스 인문학대학이 표방한 노숙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서울시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성과를 참고하여 노숙인의 정신적 자립을 위한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과정'을 기획하였다.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몇 개 대학이 인문학 과정을 개설하고 노숙인시설들이 이에 참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다(조선일보, 2009.3.25. "고단한 노숙인 삶에 피는 '희망의 인문학'" 참조)

○ 2012년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숙인 프로그램 : 서울시 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확대와 자산축적 프로그램의 진행, 국비매칭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추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사단법인 빅이슈와 함께 민들레문학특강을 개최하고 민들레예술문학상 공모를 통해 노숙인·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소설·글쓰기 문학특강 기회 제공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또한, 쉼터입소자를 대상으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프로그램 운영하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국비매칭 프로그램 사업과 서울시 자체예산 지원사업으로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공모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40여개의 심리재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 주요 사업들

○ 1999년~2000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희망의집 자활프로그램 -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 1999년 10월 보건복지부의 '희망의집 자활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심리재활프로그램은 2019년 현재까지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예술치료를 통한 심리재활프로그램,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강연, 대인관계 기술 훈련, 자기관리 훈련, 사회성훈련, 정신교육과 분노조절 훈련, 알코올 금주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다(노숙자대책협의회(2000). <서울시노숙자지원사업백서> 참조).

○ 1999년~2000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희망의집 자활프로그램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 서울시 직업훈련학교를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운전면허, 컴퓨터 관련 자격증, 조리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등 취업과 관련한 직업훈련 지원

18) 참고자료: ①박춘아(1999), "노숙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②김의태(2012), "노숙인 자립을 위한 인문교육의 가능성", 한국평생교육학회. ③남기철(2013),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 ④비전트레이닝센터(2019), "주요업무보고" 내부자료. ⑤다서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homelesskr.org)

“노숙인 자활 돕는 ‘빨강마차’ 1호 출발”

고소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침이 저절로 고였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렸다.

요리사 모자를 쓰고 깨끗한 흰 와이셔츠에 빨간 리본 넥타이를 맨 신사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흰 장갑을 낀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풀빵 틀을 열어젖히자 ‘금빛 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빨강마차 빵’이다.

오는 10월 11일 본격 출시를 앞두고 17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디자인 한마당’에서 빨강마차 1호점이 선을 보였다.

빨강마차는 구세군 ‘서대문사랑방’과 명품 주방기기를 만드는 한 외국계 회사가 힘을 합쳐 만들어 낸 작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사들이 빨강마차 빵의 재료와 배합비율 등 레시피를 개발했다. 노숙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 국민일보 2010.09.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128921>



<민간기금으로 운영된 노숙인 프로그램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성프란시스 인문학대학’과 ‘연·필·통’>

○ 성프란시스 인문학

‘성프란시스 인문학’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노숙인 인문학대학이다. 노숙인들에게 1년동안 글쓰기, 문학, 한국사, 예술사, 글쓰기 여섯 과목을 가르친다. 2005년 3월 1기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한 이래 2019년 2월 수료(14기)까지 232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5기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노숙이라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자연적으로 생겨”

나는 원래 학교를 못 다녔어요. 배운 게 없어서 어려서 서당 좀 다니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면서 수료증 그거 하나 딸랑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도 나고 너무 벅차더라구요. 내가 이렇게 평생에 이런 걸 받아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노숙이라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술을 먹어도 그렇게 길바닥에서 먹지도 않고. 인문학 출신들이 일자리갓기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요.

- 성프란시스 인문학대학 참여 주의식님 인터뷰 중

○ 극단 “연·필·통(연극으로 feel(必히) 통하는 모임)”

노숙인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연극단이다. 2012년 “이문동네 사람들”을 초연한 후 201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중이다.



“연극을 하면서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남 앞에 무대에 서서 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런 용기를 많이 얻었지요, 연극팀을 하면서. 공동체라는. 같이 대본을 하나 놓고 공연을 하려고 하면 똘똘 뭉쳐야 이게 되니까. 노숙 생활이야 오늘 보고 내일 안 봐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극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료애라든지 그런 게 생기고 또 서로 애뜻한 마음을 많이 갖지요, 연극을 하면서 그냥 노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조금 남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술을 한잔 먹더라도 길바닥에서 안 먹고 가게 들어가서 먹고. 연극을 함으로써 대중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뭐가 됐든 거기 참여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삶 자체가 밝아지고 항상 우울한 생활은 안하니까 큰 도움이 되지요.

- 연·필·통 단원 주의식님 인터뷰 중

○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2008년~2012년)

서울시는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정신적 빈곤 해소와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내 6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였는데, 노숙인, 쪽방촌거주민, 지역자활센터 이용자들이 참여했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은 입학한 노숙인 등에게 한 학기 동안 강의에 참여하여 경제, 역사, 글쓰기 등을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209명으로 시작한 수료자는 2009년 1,210명, 2010년 1,515명, 2011년 902명으로 총 3,836명에 이른다(<머니투데이> 2012년 1월 26일 기사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내달 1일 신입생 모집” 참조).



○ 서울시 민들레 문학특강, 민들레 예술문학상 프로그램(2012년~2014년)

민들레 문학특강과 민들레 예술문학상 공모 프로그램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시,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거복지재단이 함께하였다. 작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노숙인들의 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일깨우고, 창작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작가, 대중, 사회와 교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 목표로 기획된 것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민들레 문학특강, 민들레 창작레슨, 민들레 예술문학상 공모전,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어 노숙인·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소설·글쓰기 문학특강 기회를 제공하였다.

민들레 예술문학상은 노숙인들의 삶의 어려움과 다양한 정서들이 문학에 녹아나 노숙인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고, 시민들 역시 문학을 통해서 노숙인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수상을 한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 희망프레임 사진교육(2016년~2019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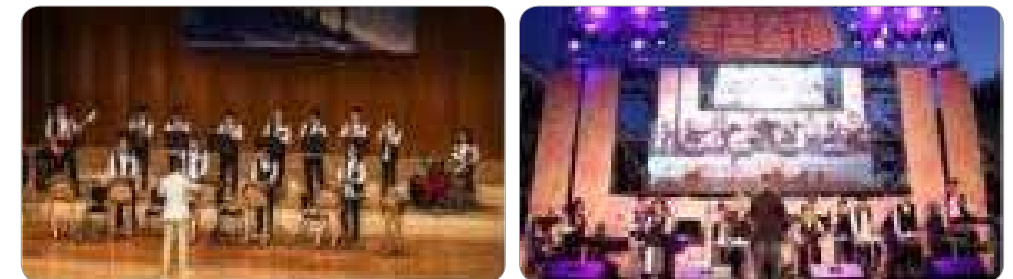
서울시와 사진작가 조세현이 함께하는 사진을 통한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이다. 노숙인에게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를 평등하고 폭넓게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복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사진전시회를 갖고 있다.



▶ “조세현의 희망프레임” 프로그램 활동

○ 보현 윈드 오케스트라(영등포보현의집 운영)

노숙인의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 음악 활동으로 사회성 회복과 성취감을 통해 자활의 가능성 증대, 자활인들의 공연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발판 마련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후 음악제 참여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영등포보현의집 운영프로그램 - '보현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 <영등포보현의집 프로그램 기획의 변 - 시설을 즐거운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어야>

이분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라. 프로그램도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축구, 자전거 뭘 하더라도 집단교육이 아니고 10명 내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면 즐거워할 거다,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갈 거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모을 거고, 돈을 모으면 그 돈을 어디엔가 쓸 건데, 요거는 집에다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계속 넣어 주면 된다. 이 공간이 즐거우면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제일 크게 방점을 찍어요. 지역사회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는 거랑, 또 하나는 시설에 계실 때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우리가 그거 만들어 주면 된다.

(임도영 영등포보현의집 원장 인터뷰 중)



▶ 영등포보현의집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참여한 '자전거 국토순례' 프로그램(2018년).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한 기금 1,000만원을 영등포구에 기부하여 지역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후원하도록 했다. 2019년에는 제주도 국토종주를 진행하였다.

○ 노숙인시설 연합 건강자활 체육대회

서울시는 2007년부터 1년에 한번씩 노숙인시설 입소자나 이용인 약 1천여명이 함께하는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체육대회에는 서울시의 노숙인시설 40여개소가 각각 선수단을 꾸리고, 축구,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명랑운동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노숙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시 노숙인 건강자활 체육대회

○ 노숙인 신용회복 RE-start 교육 프로그램

신용불량으로 인해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에 대한 신용회복에 관한 교육과 신용회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노숙인 저축 프로그램(2009년~2014년)

시설 입소 노숙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실무자로 하여금 저축관리를 하도록 하고 매년 '노숙인 저축왕 선발' 하였다. 저축왕으로 선발된 경우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매칭기금 지원을 통하여 주택임대보증금,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었다.



▶ 2014년, 제51회 저축의 날 국무총리 표창으로 수상하는 모습
출처-서울보도국 티브로드 "3년만에 3천만원 노숙인 저축왕"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업단 운영

- 목공방 '새움'(비전트레이닝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가 2016년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노숙인에게 사회적 기여의 의미와 일자리 창출가능성을 고려한 목공사업을 운영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폐목재를 활용한 목공동호회, 체험학습, 화단제작, 스칸디아모스 액자 제작 과정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과 지역아동센터 기증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목공방을 활용한 지역주민과의 연대활동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운영하는 목공방 '새움'

- 비전트레이닝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는 2014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이 장애인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과 장애인 활동지원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비전트레이닝센터 프로그램 - 장애인 활동지원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

5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과 사업

■ 노숙인 일자리 정책의 흐름

○ IMF 외환위기 직후 '실직노숙자' 대책으로 추진된 공공근로

- 1998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서민생계안정대책에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포함되었으며 노숙인 및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특별취로사업이 포함되었다.
- 1999년 2월 서울시와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는 '희망의집 노숙자 관리시행 계획'을 통해 노숙인쉼터를 통한 응급보호를 계속하면서 정신교육, 취업알선, 직업교육, 공공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일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도록 했다. 당시 노숙인은 대체로 '실직노숙자'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위기로 부도, 실직이 만연한 가운데 민간취업은 어려웠다. 정부는 노숙인에게 공공근로를 제공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 영동도 신공항 건설근로자 파견 등 대규모 공공일 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자 했다.
- 노숙인 지원사업 초기 추진된 대규모 공공일 자리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숲 가꾸기 근로자 파견사업이었다. 강원도, 경상도 산지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500명이 넘는 노숙인이 참여하여 일을 하였다. 노숙인 자활을 위해 추진된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신교육 등의 참여 실적은 저조하였지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4개 지역에 파견된 561명의 노숙인 중 149명이 10개월 가까이 산림현장에서 일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 숲가꾸기 자활 영리단 활동



○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숙인 일자리 사업 추진

- 노숙인 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전환되고,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노숙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보다 적극화되었다.
- 대표적으로는 2006년 '특별자활근로'가 시작되었다. 특별자활근로는 월 15일 내외, 4시간~6시간의 단 시간 근로로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숙인이 참여하여 주거지를 확보하고 자활을 도모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때문에 쉼터 입소자나 쪽방주민도 참여했지만 주로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거리노숙인들에게 일이 제공되었다.
- 2006년 서울시 방침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자활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 일자리 갖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과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건설 현장, 공원청소, 녹지 관리, 복지관 청소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
- 한편, 이 시기에는 노동부의 민간위탁사업으로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브릿지상담보호센터에서 고용지원센터 개소하였다. 고용지원센터는 노숙인의 취업상담, 적성검사, 심리검사, 인터넷 구인구직망 등록 등 취업에 필요한 연계와 사후관리를 맡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영등포보현 의집에서 취업센터를 개소하여 서울시에 총 3개의 취업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과 동시에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저축을 독려하여 자활 자립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2008년부터 '신용-Restart 사업'을 통하여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채무조정, 건강보험료 결손 등을 도왔다. 2008년에 2회 진행되어 605명이 접수하고 396명, 14,016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쉼터 입소 노숙인 중 "노숙인 저축왕" 선발을 격려하여 우수저축자에게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 2015년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민간일자리 연계 시도

- 2015년에 기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3개소에 설치된 고용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노숙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1:1 맞춤형 상담, 일자리 발굴, 관련 민간기업과 연계한 취업알선, 기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등을 종합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2015년 5월,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내에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고 노숙인을 지원하고 있다.
- 2016년부터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정책이 민간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민간일자리 연계의 성과를 높이고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취업부스를 설치하여 구인업체와 노숙인이 직접 취업상담을 할 수 있게 했고, 이밖에도 이력서 작성, 증명사진 촬영, 법률 상담, 신용회복상담 등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① 서울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직업교육 지원과정(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



○ ‘노숙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취지는... (기재일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中)

원래 일자리지원센터를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뭐냐면요, 그 전에 ‘새희망 고용지원센터’가 11년인가 12년도부터 있었어요. 지금 없앤다고 하고 있죠. 원래 뭘 새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구요. 그 일자리지원센터를 새희망 고용지원센터를 노동부랑 협상을 해서요, 11년도인가 1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직업상담사들이 너무 자주 이직을 하는 거예요. 초우수준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워크넷이라는 눈이 달려 있어요.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생각은 그 사람들을 안정화시키자, 그리고 전문화시키자. 어떻게? 노동부하고 얘기해서 우리랑 협약을 맺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 수준만큼 임금을 얹어주자, 그리고 실적이 나온 거를 공유하자. 이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 주요 사업

1) 노숙인 공공일자리 - 특별자활근로

서울시는 노숙인 쉼터 입소를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리노숙인들을 위해 비교적 이용이 자유로운 상담보호센터(드롭인센터) 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들이 야간에는 상담보호센터에서 잠을 자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보호센터에 등록된 노숙인 중 근로능력자에게는 특별자활사업으로 일거리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임을 지급하여 거리노숙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중략)

거리노숙인 중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 자체 예산 10억을 들여 노동 강도가 약한 공사사업 위주의 일거리를 제공하고 1일 2만원 월 30만원 이내의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서울시 보도자료(2005년 2월 25일) “서울시, 거리노숙인 보호정책 바꾼다” 중

○ 2005년 사업 추진시 서울시 방침

- 추진배경 : 노숙인쉼터 입소 등을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에 대해 시 차원의 특별 자활사업을 시행하여 거리노숙인을 점차 줄이고 노숙인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함.
- 사업방향 :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의 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에 등록된 노숙인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특별지원사업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시행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상담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신원확인이 가능한 노숙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추진방법 :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함. 근무시간·산재보험가입·주차·월차·유급휴일 등은 ‘틈새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함.
- 지원수준 : 노임단가 1일 2만원, 개인별 월 15일 이내 근로

○ 노숙인 특별자활근로 사업 현황(2019년 현재)

- 연간 참여인원 : 연인원 550명
- 참여대상 : 노숙인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쪽방주민 중 근로능력평가 결과 30점 미만이며 근로의욕 고취와 훈련이 필요한 노숙인
- 지원기관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쪽방상담소
- 근로내용 : 시설 환경정비, 급식보조 등
- 근로일수 : 일 5시간, 월 15일~19일(주·월차 포함)
- 근로기간 : 3개월(단, 65세 이상 및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설장 확인 후 3개월 연장 가능함.)
- 지원수준 :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62만원~80만원 내외의 급여 및 4대보험료 지원

2) 노숙인 공공일자리 - 일자리갯기사업

○ 2006년 사업 추진시 서울시 방침

- 추진배경 : 서울시 건설현장에 노숙인 일자리를 창출, 노숙인의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의 계기 마련함.
- 추진방향 : 서울시 건설현장에 노숙인 일자리 창출하여 노숙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 참여 노숙인 인건비 중 50%를 시비 지원하여 노숙인 근로의욕 제고와 실질적 자립 계기를 마련함. 참여 노숙인에 대하여 주거를 확보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조건을 부여함.

- 세부 추진계획 : 1단계로 2006년내 1일 600명의 일자리 마련(뉴타운사업 현장, 건설안전본부 공사현장, 지하철건설 공사현장,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현장), 2단계로 성과분석후 1일 1,200명으로 확대함.(하수도 준설 사업 등 소규모 시비 사업장에 집중 투입)
- 참여대상 : 주거확보 또는 쉼터 입소 조건으로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어 공사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숙인을 우선함. 시설장 추천에 의해 참여하도록 함.
- 근로조건 : 1일 5만원(시비 50% 2만5천원 부담), 월 20일 근로로 월 1백만원
※건설공사 일용인부 임금(1일 5만원~9만원)을 기준으로 최저 5만원으로 책정함.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의 회고(기재일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민망한 얘기지만 자아존중감 회복에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했던 피정이나 무슨 영성 프로그램이니 별 걸 다하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바꿔줄려고 했었는데, ... 근데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 13개 작업장에서 30개로 늘어나는데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다쳤는데 병원 안 가.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병원 가게 되면 그 라인들이 다 벗어 장애인들이 할 일을 못한다. ... 그 전에는 조금만 다치면 산재처리 해 달라고 누웠거든요. 그리고 뭐 술 먹고 소동 피우니까 같이 갔던 아저씨들이 그 아저씨를 들어서 내보내요. 시청에서 알면 연대책임 물으면 다 찢린다. 근데 우리는 이게 좋다. 그래서 그때 5점척도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0점씩 나왔어요. 심지어는 월급이 조금 더 많더라도 다른 데 안 가고 싶다고 했어요. 거기에 정규직으로 많이 취직했어요. 처음에 장애인시설 넣을 때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노숙인이 때릴 거잖아... 뭐 이런 질문까지 받아봤어요.”

○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사업 현황(2019년 현재)

- 연간 참여인원 : 연인원 230명
- 대상 :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쪽방주민 중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하고,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
- 지원 기관 : 서울시 산하 사업소, 동부시립병원, 희망웃방, 장애인작업장 등
※ 장애인작업장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9년 12월말 종료 예정
- 근로 내용 : 공원청소, 병원업무 보조, 재활용, 장애인작업장 도우미 등
- 근로일수 : 일 8시간, 월 27일 내외(주·월차 포함), 11개월
※ 일자리갖기 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는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 지원수준 :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180만원 내외 급여 제공, 4대보험료 지원(장애인 작업장 외)

▶ 서울시 일자리 갖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역, 청량리역 '코레일 청소사업단'(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활동



▶ 서울시 일자리 갖기와 연계하여 노숙인에게 바리스타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



영등포보현의집이 2013년 시설 입구에 창업한 카페 '내생애 에스프레소'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일자리로 카페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함.



열린여성센터가 2012년에 시설 인근에 창업한 카페 '동네 카페하하하' 여성노숙인에게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일자리로 카페에서 근무하도록 함.

▶ 前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담당 실무자의 회고 (이정훈 양평심터 실무자 인터뷰 중)

“일자리갖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요게 또 때마침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아저씨들이 급여가, 저축금 막 유도하니까 막 500~700만원 요 정도 되는 분들이 한 30~40명 막 늘어나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우리 선생님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임대주택사업이 딱 터진 거예요. 뭐냐면 요걸 관리를 해놨더니 ...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는 세팅이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되어서 임대주택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었는데. 특별자활근로도 사실은 처음엔 ‘이게 뭐지? 노숙을 장려하는 거야?’ 이랬는데 이게 단순 자립 자금이 아니라 취업자금으로는 아주 좋다는 거죠. ...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면서 이 특별자활근로라는 것을 참여하면서 일에 대한 어떤 연습을 워밍업을 좀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건강도 좀 회복하면서요 월급이 나올 때 이것을 취업자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3)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



- 목적 : 거리노숙인 지원기관 및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자활의 기초환경을 조성함.
- 경과 : 2014년 거리노숙인의 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역 지하도 응급구호방, 영등포보현의집 응급구호방 2개소에서 시범 운영됨.
- 성과 :
 - 시범운영 결과 2014년 6개월 동안 하루평균 35명(연인원 3,86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인당 하루평균 약 8천원의 소득을 올림.
 -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일참여 외에도 샤워, 세탁, 간식 제공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참여자들이 매일 일정시간 작업참여로 안정된 생활리듬 유지를 통해, 구걸과 주취를 피하고 긍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으며,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노숙인과 몸이 불편한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갖기 전 근로습관을 들이는 기회가 됨.
- 운영 현황(2019년 6월말 현재) :
 - 2015년부터 거리노숙인 대상 작업장 3개소, 기타 노숙인시설 작업장 13개소 운영으로 확대함.

주요대상	운영기관	주요 일거리	지역
거리 노숙인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쇼핑백	중구
	영등포보현의집	쇼핑백	영등포구
	디딤센터	쇼핑백	서대문구
	응달샘드롭인센터	쇼핑백	영등포구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스티커부착	서대문구

주요대상	운영기관	주요 일거리	지역
시설입소 노숙인	가나안센터	쇼핑백	동대문구
	광야홈리스센터	쇼핑백	영등포구
	수선화의집	토시, 양말 만들기, 쇼핑백	양천구
	아가페의집	쇼핑백	성북구
	길가온혜명(상록1호점)	쇼핑백,도자기	구로구
	길가온혜명(상록2호점)	쇼핑백	구로구
	은평의마을	쇼핑백	은평구
	비전트레이닝센터	장난감조립, 아이스팩 리사이클링	성동구
	24시간게스트하우스	쇼핑백	성동구
	늘푸른자활의집	쇼핑백	경기도 파주시
	양평센터	쇼핑백	경기도 양평군

4)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 목적 :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취업취약계층(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정보와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참여를 확대하며,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도록 함.
- 사업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 사업 개요 :
 - 사업 진행 :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내 일자리지원센터
 - 박람회 장소 : 서울시청 광장(서편)
 - 참여 대상 : 시설입소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 연도별 사업실적 :

2016년 5월	채용인원 103명, 면접 참여인원 460건, 일자리박람회 참여인원 1,584명,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50개업체
2017년 5월	채용인원 108명, 면접 참여인원 399건, 일자리박람회 참여인원 2,978명,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60개업체
2018년 9월	채용인원 143명, 면접 참여인원 365건, 일자리박람회 참여인원 1,703명,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60개업체
2019년 5월	채용인원 91명, 면접 참여인원 302건, 일자리박람회 참여인원 2,111명,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80개업체

▶ 2019년 일자리 박람회



6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과 사업

1) 자활의집(1999~2018)

○ 자활의집 - 노숙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셋집 제공

자활의집은 자립기반이 구축된 희망의 집 입소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1999년 노숙자관리 시행계획(시장방침 제142호)으로 시작된 자활의집의 입주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고, 생활 실태가 양호할 경우 1년간 1회 연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장 2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히 희망의 집 실무자가 월 2회 이상 입주자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퇴소 후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저축을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으로 책정하였고,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 전까지 6개월간 공공근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¹⁹⁾

○ 주요사업내용 및 경과

- 1999년 노숙자관리 시행계획(시장방침 제142호)

- : 자활의집 운영(400가구, 60억 지원)계획, 보증금-가구당 15백만원 지원
- : 입주대상-해체가족, 직장취업 및 자영업자로 쉼터 동료 1인과 공동신청, 적금 가입 권유
- : 거주기간 1년에 1년을 연장하여 2년까지 거주 가능

- 자활의집 설치·운영 추진상황보고(1999년 7월. 부시장 방침 및 보고)

- : 자활의집 운영 개선-여타 요보호자 전세주택 지원수준으로 개선, 전세금 25백만원, 가구구입 등 부대경비 1백만원, 입주대상 노숙인 2인 이상, 가족 재결합 인정 등 지원대상 확대
- : 22가구 74명 입주, 기존 가족 입주 11가구, 가족재결합 7가구, 개인 4가구(총 73명)
- : 예산 4억 7700만원 지원²⁰⁾

- 매년 거주기간 및 지원 금액 확대

- : 거주기간 2년씩 최장 6년까지 확대, 전세보증금도 25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확대
- : 2003년도 예산 3억7천만원부터 2012년도 5억7천만원까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2012년으로 신규 입주자 선정 종료(서울시 각 년도 예산서 참조)²¹⁾

19)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2000), <서울시노숙자지원사업백서>.


20)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2000), <서울시노숙자지원사업백서>.

21) 서울시 각 년도 예산서 <https://yesan.seoul.go.kr>

<표10. 연도별 자활의집 선정 현황>

연도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구수	142	22	22	23	12	4	11	13	12	11	3	9

*출처: 서울복지재단(2010), <노숙인 주거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참조

 <자활의집 이용 사례²²⁾>


-동작이수희망의집 유OO

쉼터에서는 동료들끼리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듣고 하니깐 나 역시 그랬던 것 같은데, 자활의집 나오면서 많이 좋아졌다. 가족이나 내 인생에 대해 책임감이 많아졌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감소되었다. 쉼터에서는 동료들 때문에 많이 우울했었고, 비판적이었다.

-시립대복지관 희망의집 박OO

어떻게 해서든 혼자 독립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던 차에 자활의집 얘기가 나와서 혼자 독립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신청하게 되었다. 자활의집에 선정되어 나오면서, 개인적인 독립이어서 삶의 욕구가 높아졌다. 일반인과 동등한 느낌이 들었다. 또 노숙 탈출에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감도 생겨서 생활이 편안해졌다. 심적인 안정감도 생겨 마음 놓고 일을 하게 되었다.

2)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 추진”

간신히 추위를 피해 서울역사 내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윤OO씨(51·여)는 서울시 임시주거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아 고시원에서 올 겨울을 무사히 넘기게 됐다. 윤씨는 “맘 편히 씻고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 너무 기쁘다. 안정을 취한 후 예전에 주방보조로 일한 경험을 살려 일을 다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주거 지원 사업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쪽방, 고시원 등 월세(최장 4개월, 평균 2~3개월)와 생활필수품(1회 10만원내)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지원, 기초생활 수급권 취득 지원,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대상 노숙인이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 웰페어뉴스, 2010.12.15.

22)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2004), “2003년 자활의집 이용자 현황과 자활의집 운영발전방향”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 노인 등 취약 노숙인 위기 지원을 위한 월세지원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시설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만성화되는 노숙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시작되었다. 거리노숙인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 사업으로 ‘임시주거비지원을 통한 노숙인 사회복귀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의 사업이었다. 전국의 13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수행하여 총 2,331명이 임시주거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 80%가 주거를 유지하였다²³⁾.

○서울시의 동절기 대책 사업을 계기로 공공정책화

민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던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0년 동절기 대책사업으로 200명에게 임시주거를 지원하면서 공공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사업은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꾸준히 확대되었다.

○주요사업내용 및 경과

- 동절기 대책 등 임시사업으로 추진²⁴⁾

: 2010년 10월 :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시행

: 2011년 혹한기·혹서기 임시주거지원 시행(2011년 8월)

서울역사내 노숙인 강제퇴거조치(2011.8.22)과 관련한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추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3개 기관에서 사업 수행, 계약직 1명을 채용하여 임시주거지원 사례관리자로 배치함.

- 2012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 시행(자활지원과-5819, 2012.4.30.)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12.6.8. 시행),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개선 계획(자활지원과-5819, 2012.4.30)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

: 연중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 사례관리자 1->2명으로 증원 배치,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책정. 예산 3억5천만원(490명지원)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자활지원과-4498, '17.3.30.)

: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자활지원과-9088, '18.07.13.)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초기노숙 포함) 지원 기존 600명→900명 목표, 여성의 경우 325천원까지 허용, 사례관리자 8명 배치 등. 예산 7억6천5백만원 배정²⁵⁾

23) 남기철(2011),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와 주거복지”, 주거복지컨퍼런스, pp.33-63

24) <https://yesan.seoul.go.kr/upload/89101/ce433d41-1431-464b-a16b-a3416956d236.pdf>

25) http://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96383&tr_code=sweb

“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1,045명 임시주거 지원...82.4% 노숙탈출”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등록 2018.02.06

- 시, 노숙인과 주거위기계층 대상 월세지원(최대6개월) 및 생활용품비 지원
- 공공 민간일자리 지원 239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취득 지원 276명
- 주민등록복원, 의료지원, 신용회복, 장애인등록 등으로 지역사회 편입
-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임시주거 제공자 중 82.4%는 탈노숙성과
- 시, “시설생활 적응 어려운 노숙인 주거지원, 자립 적극 유도할 것”.

3)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지역사회 다가구를 매입하여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

-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2005년 빈부격차차별시행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관리 개선방안 논의 하면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1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하고 단신노숙인 및 쪽방거주자를 위해 300호 시범사업 진행을 발표하여 노숙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되었다.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노숙인에게 임대주택 지원

: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국무총리 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마련으로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제도화(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 2012.8.20.)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자 파견으로 주거 유지 지원

: 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호 이상 운영하는 운영기관 7개소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사례관리를 하도록 지원(2012~2015)²⁶⁾

: 2015년 10월부터는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본부장 방침 자활지원과-5014)」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정책으로 시행

26)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내부자료 참조

○ 주요사업 내용 및 경과

-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300호 운영(국토해양부 주거복지과-1758(2005.8.3).

- : 빈부격차차별시행위원회의 2005년 사업계획 중,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단신노숙인 및 쪽방거주자를 위해 300호 시범사업 발표
- :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지역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입주자의 복지수요(신용회복, 고용안정 등)에 대응(운영기관은 이를 사업계획에 명시)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하도록 함.

- 단신계층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원 실적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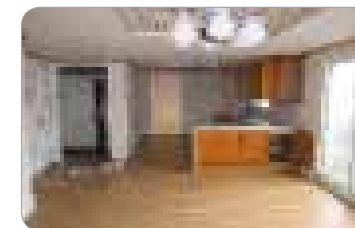
주택유형 : 60㎡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공급/입주물량 : 378호 (공급종료) / 314세대(가족포함 448명), 임대료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보증금 100~400만원 / 월임대료 3~10만원 수준)

“노숙인 저에게 내 집이 생겼어요!!”

희망드림프로젝트/노숙인희망길잡이 | 2009.09.03 21:11 | Posted by 서울행복도우미

사실 노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즉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 말을 돌리면, 그들에게 있어 주거문제 해결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뜻하는 것이다. (중략)

그런 우리 노숙인 쉼터(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 기회가 다가왔다. 2007년도 2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300호 사업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어 2007년 3월부터 서대문구 대신동의 동 계약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7) 남철관(2009), 「[심층분석5]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복지동향, 2009. 10.1. 참여연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의 초기계약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동을 계약하였으며, 2009년 8월 현재는 134명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단신 및 가족통합의 유형으로 원활한 자립을 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하 생략)

- 출처: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자] 노숙인-저에게-내-집이-생겼어요-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사업 <https://seoulwelfare.tistory.com/entry/>

-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413호 2009.8.)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됨.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종료 후, 노숙인 시설이용자는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²⁸⁾

: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1. 7. 8)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개선 방안 논의, 노숙인쉼터 거주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물량 확대 (400호→2,100호), 입주자 부담완화를 위한 보증금·임대료 감면(50%) 발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2012년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 2012.8.20.)에 의거한 임대주택 지원사업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 사업 등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된 대상임.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지원 실적

: 2018년 말 현재, 972호, 975세대, 1,299명이 입주하여 생활함(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9년 정기총회 자료)



연희동 소재



불광동 소재



북가좌동 소재

28)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http://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74243>

- 주거지원사업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

: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자활지원과-5014, 2015. 10.19)에 의거하여 10개 기관에 사례관리자를 배치함.

: 사례관리자들은 입주자 초기정착 지원프로그램 운영, 방문상담 등을 통한 일자리·저축·월세납부·건강·알콜문제 등 생활관리를 통한 입주자 자립지원 및 반사회, 입주자 회의, 자조모임 등을 통한 입주자간 갈등해소 및 상호 협력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

☞ 매입임대주택에서 새 꿈꾸는 송선생님의 이야기

찜질방에서 이틀 동안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돈 내야 되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나오면 또 그렇고, 계란 3개 갖고 먹고, 그 생활을 한 이틀 한 거 같아요.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2년간 생활하며 매입임대주택 나가는 모습 보니까 좋아 보이고, 카페 일을 이제 하면서 조금씩 모으게 되잖아요? 모으게 되는데... 임대사업(매입임대주택)을 하는 데가 있다, 접수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제가 운이 좋게 그 임대주택이 됐어요.

매입임대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햇빛이 확~ 들어오는데 옛날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

지금 이제 3년 되가는 겁니다. ... 시설이라는 건 외부인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입임대는 내 지인들이 올 수 있고 끊어졌던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저는 형성이 됐고 단절됐던 게 매입임대니까 자연스럽게 “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해서 내 가족들도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꾸려나갈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시설에 있으면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당장 살아갈려면 제가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 친구들도 오고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갇혀있는 생활이 아니니까 제가 책임과 자유가 동시에 이뤄지는 거니까.

- 2019년 10월, 노숙경험 당사자 인터뷰 중

4) 공동생활가정을 활용한 주거지원(2012년)

○ LH와 SH의 공동생활가정 용도의 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사업

- 2012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SH 또는 LH가 민간기관에 제공하는 그룹홈 용도의 주택을 활용하여, 동료 결합 또는 모자가정이 생활하는 주택으로 제공되었다. 서울시의 주거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운영기관에 약간의 사례관리비를 지원하였다. 2012년 이후 확대 운영되어 오다가 동료 결합의 경우 갈등 등으로 주택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점차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 주요사업 내용 및 경과²⁹⁾

-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복지본부장 방침, '12.6.13.)
- 입주대상 : 동료 노숙인 및 모자가정 등
- 입주조건 : 근로능력 및 안정적 수입가능자, 가구원 2인 이상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각 호당 1000만원) 및 사례관리비
- 지원실적 : 2015년 현재

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이전
90호(269명)	11호	9호	14호	56호

: 2018년말 현재 34호 91명으로 축소 운영³⁰⁾

○ 사업 성과

2012년 8월이후 자활의집 지원이 중단되면서 공동생활가정 지원으로 전환되어 주거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동료가 결합하여 공동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등 운영의 애로가 생기면서 점차 축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상황에서 시설이 아닌 주거를 공급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는 사업이었다.

5) 희망원룸³¹⁾

○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별주거 공간 제공

단체 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해 거리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인을 위하여 사생활이 보호되고, 개별 주거 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거리노숙인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입주 노숙인은 매월 8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임대료 가운데 3만원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5만원은 노숙인 퇴소시에 지급되는 보증금(60만원) 용도로 적립되었다³²⁾.

시범운영기간 5년이 종료된 후, 2017년부터는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자활지원과-12360, 2017.9.19.)에 의거하여, 월 12만원을 임대료를 징수하여 4만원은 시설운영비, 8만원은 자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퇴소시 지급하고 있다.³³⁾

○ 주요사업 내용 및 경과

- 2012년 설치 당시 서울시 계획(자활지원과-12525, 2012.9.20.) : 거리노숙인을 위한 '희망원룸' 운영
 - 고시원건물을 활용, 자립의지가 강한 노숙인에게 개별 주거공간 제공
 - 최소한의 생활규칙 적용, 월 사용료 부담 등 독신자 숙소형태로 운영

29) 서울특별시(2015), "노숙인·폭방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자활지원과-5014, 2015. 10.19),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6382857> 참조

30)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노숙인주거안정지원사업 보고", <https://opengov.seoul.go.kr/budget/17089204> 참조

31) 서울특별시(2012), "거리노숙인 희망원룸(가칭) 설치 운영계획"(자활지원과-12525, 2012.9.20.)

32) 박은철(2014), <노숙진입서 탈출까지 경로분석과 탈출까지>, 서울연구원.

33)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자활지원과-4522, 2019.11.8.)

- 주거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취업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 운영인력 : 7명(행정책임자1명, 상담원 3명, 생활지도원 3명)

구분	희망원룸 1	희망원룸 2
위치	서대문구 북아현로 2길 6-3	서대문구 서소문로 55
규모	209.9m ²	275.5m ²
입소인원	30명	25명
임대기간	5년(2012.9.1~2017.8.31.)	5년(2012.9.1~2017.8.31.)

*출처: 2014년 서울시 내부자료- 박은철(2014) 재인용

- 현황(자활지원과-4522, 2019.11.8.) : 2017년 8월 이후 1개동은 폐쇄하고, 2019년 1개동(북아현동) 27호만 운영함.

6) 지원주택 지원사업

○ 지원주택이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 지원주택은 만성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적절한 지원이 없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이다³⁴⁾.



집이 없거나 거쳐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

* 출처: 지원주택시범사업 추진계획(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15032, 2016.08.30.) 참조

- 지원주택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 4. 서울시 조례 제정)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으로 정의하여 노숙인이 지원주택의 지원 대상이 되었다.

34) 서울특별시(2016), "지원주택시범사업 추진계획"(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15032, 2016.08.30.) 참조

○ 주요사업 내용 및 경과

- 민간의 시범사업 추진

- : 2014년, 남성정신질환자를 위한 행복하우스(남성 정신질환 25호, 굿피플, 2014. 9.)
- : 2015년, 여성정신질환 노숙인을 위한 성지하우스(여성정신질환 10호, 열린복지, 2015. 7.)



성지하우스 전경



행복하우스 전경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

- : 2015. 12.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주택건축국), 매입임대주택 활용하여 지원주택 연간 100호 이상 공급계획
- : 2016. 3. 지원주택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SH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2016. 8.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행 (주택건축국 → 복지본부, SH공사)
- : 2016. 10.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 (복지본부 자활지원과-13283, 2016.10.19)
- : 2016. 11. 여성정신질환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18호 (열린여성센터), 남성알코올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20호 (비전트레이닝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입주대상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남성 알콜중독 노숙인
사업기간	2년	2년
운영호수	18호	20호
대상주택	서대문구 북가좌동 3-128	송파구 마천동 17-9
사례관리	전담 관리자 1명 배치	전담 관리자 1명 배치
운영기관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주택 전경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제도화에 따른 사업 본격화

- : 2018. 4. 지원주택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 조례 제정)
- : 2019. 7.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지원주택) - 상반기 공급 여성정신질환&알콜중독(열린여성센터, 시범사업 포함 32호), 남성정신질환&알코올 중독 (비전트레이닝센터, 시범사업 포함 44호)



7 서울시 쪽방 정책과 민간의 지원활동

■ 쪽방 현황

· 쪽방의 개념

- 쪽방은 일종의 무허가 불법불량주택인 쪽방형태의 주거공간으로, 불량한 주거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및 생활빈곤이 심한 지역이다.
- 쪽방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방을 쪼개 쓰면서 생긴 말이라거나, 작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은 있지만 그 근거 또한 정확하지 않다(최지훈·이준호(1999), "서울도심주변 쪽방지역 연구", <도시연구> 제5호 참조).

· 쪽방의 분포와 지역 현황

- 서울에서는 종로구 동자동, 창신동 지역, 중구 남대문 지역, 용산구 동자동 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의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 쪽방의 주민 규모는 2005년 8개지역 3,295명, 2006년 8개지역 3,560명 등으로 조사되어 왔다. 서울지역에 3천명 이상은 꾸준히 거주하는 셈이다.

<표11. 서울시 주요 지역별 쪽방 분포와 주민 현황> (2014년 5월 기준)

구별	밀집지역	쪽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민 등록자 (명)	기초생활 수급자 (명)	65세이상 홀몸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시	상시				
계		323	3,990	3,390	274	3,116	2,979	1,559	982	600
종로구	돈의동	86	755	635	115	520	721	258	156	108
	창신동	62	557	345	27	318	250	143	115	57
중구	남대문로5가	37	818	708	63	645	723	288	186	133
용산구	동자동	71	1,319	1,099	-	1,099	826	602	358	176
영등포구	영등포동	67	541	603	69	534	459	268	167	126

- 최근인 2019년 7월현재 서울시의 쪽방 현황을 보면, 4개구 12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종림동, 연세빌딩 뒤, 남대문경찰서 뒤), 용산구(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영등포구(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동)

<표12. 2019년 쪽방 지역 현황> (2019년 7월 기준)

쪽방 건물수(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홀몸노인	장애인
		계	남	녀			
316	3,829	2,968	2,565	403	1,835	994	391

*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보도자료(2019.8.21.), "서울시, 5개 쪽방 밀집지역 찾아가는 주거복지 집중상담 시작" 참조

■ 쪽방에 대한 정부-서울시 정책

· 쪽방 실태조사(1999년)

- 쪽방은 1998년 경제위기 하에서 급증한 노숙인의 이전 주거지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을 받게 되어 1999년 10월 본격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 정부의 쪽방거주자 지원대책 수립(2000년)

- 정부는 2000년 2월 쪽방거주자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0.1.4. 참조).

“쪽방 소외계층 지원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0-01-04)

보건복지부는 1월 3일 저소득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쪽방} 거주자에 대해 편의시설 제공, 상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 차홍봉)는 1월 3일(목)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유료숙박소인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쪽방이란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을 하루 6~7천원을 받고 제공하고 있는 숙박시설로 양동, 영등포 등을 중심으로 서울지역내 3,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쪽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30~40대의 일용노동자, 행상, 요식업 종사자 등 사회 취약 계층으로 생활형편이 보다 악화될 경우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 정부는 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쪽방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쪽방거주자의 생활편의와 최소한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간이화장실, 간이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추가 지원하고 전기검침, 방화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쪽방지역내에 상담소를 설치(2000년 3개소, 2001년 10개소)하고 상담원을 배치하여 취업정보,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상담활동을 통해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한 생활시설이나 요양기관으로 안내하고, 취식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급식단체와 연계할 예정이다.
- 향후, 정부는 쪽방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쪽방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교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인의협 등 민간단체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숙박시설설치를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은 경기회복과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시의 쪽방대책의 흐름

- 2000년 1월의 서울시장방침(제91호)에 의거하여 2000년 3월부터 돈의동과 양동지역에 각각 「사랑의 쉼터」와 「남대문지역 상담센터」가 개소되어 시범적으로 쪽방상담소가 설치 운영되었다.
- 2006년까지는 노숙 대책과는 별도로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혹은 '사회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으로 추진되었다.
- 2007년~2008년의 경우에는 복지국의 업무계획에 쪽방 관련내용이 없다.
- 2009년 업무계획에 신규노숙인 및 쪽방촌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쪽방촌 생활편의시설 개선과 자활대책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즈음 쪽방상담소 운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간호사 5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쪽방상담소 외에도 자활사업장 3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쪽방은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응급잠자리 쪽방의 확대(80명, 50실(2013년 1월 8일~)) 계획의 일환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 2015년 복지건강본부의 주요업무보고 및 자활지원과의 '2015 노숙인 지원계획'에서는 "노숙인"이 "노숙인 등"으로 변화되면서 쪽방이 노숙인 정책대상으로 확대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노숙인 및 쪽방촌 자립지원을 주요업무로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을 보여준다. 핵심내용은 쪽방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며,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안전점검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사업일정은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해빙기 안전 점검, 여름철 특별보호 대책 등이다.
- 2018년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서울시는 쪽방지원의 주요일정인 계절별 특별보호 외에도 자립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추진되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현재까지 유사하다

■ 쪽방지역 주요 지원사업과 내용

· 주거환경 개선사업

- 1999년 쪽방상담소를 설치한 이후 쪽방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공동화장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의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다.
- 초반에는 서울형 집수리(S-habitat)사업을 통해서 도배, 장판, 단열 등을 지원하였다.

■ 서울형 집수리를 통한 쪽방 개량 지원

- 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기업의 저소득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2011년까지 100만원 한도내(시민단체 및 공무원이 수리하는 경우는 90만원 이내)에서 주거에 필요한 13개 표준공정 및 기타 사항(경미한 수리)을 수리함.
- 2012년부터 민간협력형 방식을 도입하여 서울시가 예산의 35%, 민간기업이 65%를 지원하여 진행. 후원기업의 비용 공동 부담으로 1호당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며, 사업의 내용도 단열보강 등 내부적인 수리까지 확대됨.
-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850호를 수리했으며, 연간 1,000여호의 물량을 집수리 전문 사회적 기업에 배정하여 운영함.

- 2014년까지는 영등포 쪽방촌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추진되었다.

: 서울시는 영등포구 쪽방촌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95개의 방이 있는 건물 1동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동부엌 및 공동화장실 설치, 난방, 단열, 방수 등의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 또한 건축과 주도로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의 67%에 해당하는 295가구에 대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였다.

■ 쪽방 리모델링 사업

- 서울시는 영등포구 쪽방촌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건물주, 교회 등과 협력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 2013년 현재 95개의 방이 있는 건물 1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동부엌 및 공동화장실 설치, 난방, 단열, 방수 등의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함. 또한 건물의 리모델링 이후 향후 5년동안 쪽방의 임대료 상승을 막고 현행 수준의 부담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함.
-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의 67%에 해당하는 295가구에 대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함.



<영등포쪽방상담소 김형욱 소장의 영등포 쪽방지역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회고>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죠. 쪽방촌이 보면 슬레이트예요. 슬레이트 재료가 석면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거든요. 환경오염 물질이고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석면을, 온 동네가 다 슬레이트인데, 온 동네를 다 치기에는 비소먼지 날리지 않게 텐트도 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현재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위에다 샌드위치판넬을 하나 덧대는 거였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 사이에 정부 서울시 예산으로 샌드위치판넬을 했죠. 지붕개량사업 비슷한 사업을 했죠. 그런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그건 따듯해라고?) 예, 따듯해지면서, 거기 크랙이 많이 갔었어요, 슬레이트가. 그래서 빗물이 많이 떨어지고, 벽이 녹지고, 여름이면 습기가 발생해 곰팡이가 생기고, 상당히 주민들 건강에 안 좋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샌드위치판넬을 덧대고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김형욱 영등포쪽방상담소 원장 인터뷰 중)

• 쪽방상담소의 주민 지원 활동

- 보건복지부는 1999년 쪽방상담소를 설치하도록 지원했고, 2002년까지 쪽방상담소 11개소를 설치했으며, 민간 자원을 활용하거나 공적인 지원을 연결하면서 쪽방주민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 중앙정부는 쪽방상담소의 주요기능을 업무편람에 공시하였다(장민철 2009).
- 서울시는 쪽방상담소 5개소를 지원하여,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편의시설 확충, 안전점검, 계절별 특별 보호, 일상상담과 생활지원, 방문간호를 통한 돌봄, 자활사업과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 2018년 쪽방상담소는 서울시 시립시설로 전환되었다.

<표13.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

구분	세부 내용	지원 현황	
		2013년	2012년
행정지원	수급자 지정, 주민등록 복원 등	3,999명	5,372명
시설물안전점검	전기·가스·소방 시설물 등	1,785세대	1,771세대
의료지원	무료검진, 의료서비스 연계	20,890명	20,276명
기초생활지원	식품, 생필품 지원(후원연계)	87,624건	63,281건
	무료급식, 의류제공, 이·미용서비스	71,640명	54,364명
자활·자립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	226명	220명
서울형 집수리 사업 연계	보일러, 도배, 장판, 화장실 등	72세대	85세대
정서지원 및 자긍심 고취	명절 공동차례상 행사 진행	58회	43회

서울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5개 쪽방촌에 전담 간호사 1명씩 배치, 동자동은 3월부터 1명 추가 배치>

- 65세 이상 어르신, 쪽방촌 주민,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취약계층 건강 돌봄
- 서울시내 쪽방촌 전체 가구의 81%인 2,559가구가 건강관리를 받음.



<영등포쪽방상담소 김형욱 소장의 쪽방 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회고>

한계계층의 사람들이 노숙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애초의 상담소의 설립 목적이었으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살려가지고. 그 당시 쪽방촌 주민들을 보니 대부분 수급자가 얼마 안 되었었어요. 수급자가 저희 설립 당시, 상담소 개소 당시 보니까 수급자가 30%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보니까 주민등록말소, 알지만 몰랐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병원에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했어요. 진단서라든가 월세계약서들, 지금은 근로능력 평가서용 진단서인데 그 당시엔 일반진단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약간 수급자 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들어요. 말소되었으면 복원 비용, 병원 가는 비용, 또 방이 구해지면 월세 비용까지 초기 비용이 들었는데, 그게 인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상담받고, 발굴해서, 한 5년동안 주민등록 말소 복원, 수급자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어요. 지금은 쪽방주민의 70%가 수급자인데. ...

(김형욱 영등포쪽방상담소 원장 인터뷰 중)

<2005년 복지건강국의 주요업무계획 중>

- 쪽방지역에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사업 실시
- 쪽방거주자 편의시설 확충, 방역·의료서비스 제공, 결식자 급식지원, 상담센터 기능강화 등 추진

<2009년 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 중 쪽방촌 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자활지원 대책의 내용>

- 공용화장실[간이식] 확충 : 5개소
 - 건 립 : 3개소 (영등포, 용산구 동자동, 종로구 돈의동)
 - 개 보수 : 2개소 (종로구 창신동, 영등포)
- 생활지원 장비 보강 : 5개소 (3종)
 - 보강물품 : 16점 (세탁기 8, 탈수기 3, 살균기 5)
 - 보강지역 :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동자동, 영등포
- 쪽방거주자 자활·자립 지원 강화
 - 법정·행정 지원업무 강화, 자존감 회복 등 자립지원
 - ▶ 기초수급자/주민등록 복원, 문화체험, 휴먼 서울 인문학 코스 참가
 - ▶ 직업재활교육, 일자리 갖기 지원, 신용 회복 (신용-Restart)
 - 쪽방상담소 운영 기능 강화
 - ▶ 쪽방상담소 인력 보강 : 방문간호사 5명, 공공근로 10명
- 소요예산 : 1,021백만원

<2012년 복지건강실 주요업무계획 중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 쪽방상황: 5개 지역 3,209명(상시거주 2,843, 일시거주 366) - 종로구2(돈의동,창신동), 중구, 남대문,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 지원시설: 쪽방상담소 5개소, 자활사업장 3개소
- 정기 안검,수시 건강검진 의료·식서비스 제공
- 쪽방상담소: 취업알선,상담 / 자활사업장: 재활용,택배,문구용스티커

<2015년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보고 중 노숙인 및 쪽방촌 자립지원의 내용>

- 쪽방촌 편의시설 확충
 - 남대문쪽방촌 생활편의공간 확충('15. 5. 착공)
 - 위치 : 남대문로5가 618(94.2㎡, 시유 공원)
 - 조성내용 : 샤워실, 화장실, 문화공간 등(2층, 150㎡)
 - 기존 쪽방건물 중 공가를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
 - 돈의동, 창신동 쪽방촌에 지역별 1~2개소의 공가건물을 임차
 - 임차공간을 화장실, 샤워실로 리모델링



- 희망나눔센터(동자동, '14. 6.부터 운영) 타 쪽방촌 추가 설치
 - 민간기업과 협조, 돈의동, 창신동 등에 1개소 추가 설치
-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노후 불량 전기설비, 가스시설, 소방시설 등 점검(연 2회)
 - 건축물 방염처리, 소방재난본부 협업 소방시설물 확충, 소방교육 등 실시

· 쪽방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 쪽방 지원 관련 중요한 정책적 변화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2004년 정부의 서민주거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2005년 국민주택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된 매입임대지침에서는 입주 대상으로 노숙인과 쪽방거주자를 포함하여 단신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쪽방거주거구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공식화됨. 2007년에는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쪽방·비닐 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임대주택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은 2010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쪽방 거주자 외에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에 이른다.
- 쪽방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제공이 시작된 이후 쪽방상담소의 역할에서도 주거와 관련된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사업명	세부 사업명
냉·난방 지원	- 연탄나눔, 난방유 지원, 전기장판, 히터 지원 등
주거비지원 및 월세지급보증	- 월세비용지원, 전기세, 수도세, 임대보증금 등 지원 - 거리노숙인 중 수급대상자, 자활가능자 주거비보증 입주 지원(영등포, 부산진구) - 전세보증금 및 주택구입비 지원(대전)
이주지원 서비스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이주 및 이주비 지원, 이사지원(차량 및 주민봉사), 생활용품 지원 등 - 임시주거지원 입주자 초기지원(쌀, 라면, 생필품 등 초기정착을 위한 물품지원)
주거정보제공	- 지역 내 쪽방안내(저비용, 양호한 환경, 복지접근성 등 고려) - 매입임대, 일반임대, 전세임대, 임대아파트 등 정보제공 - 재개발·재건축, 뉴타운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철로변정비사업 등 정보제공
매입임대주택 운영 및 입주자 사례관리	-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운영(대전) -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운영(대전, 부산진구, 대구, 동대문, 종로, 남대문, 영등포, 인천)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입주자 자활사업(대전)
쪽방임대사업	- 지역의 쪽방매입(혹은 전세임대) 후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 영등포쪽방상담소는 쪽방지역 내에 15개의 쪽방을 전세구입 후, 저렴하게(12만원) 재임대하여 쪽방거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상황을 도모 하고 있음
긴급지원	- 월세체납, 입원(수술), 화재, 사고, 교도소 출소 등으로 긴급지원제도 안내 및 의뢰
기타	- 화재방지를 위한 설비제공 - 쪽방지역 공동화장실 설치, 개보수, 청소·방역, 소독 등 - 쪽방거주민 냉장고 지원, 무보증·부담보증 소액대출(대전)

자료: 장민철(2009)

· 저렴쪽방 임대 지원사업

- '저렴쪽방 임대 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쪽방상담소를 통해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을 개보수한 후 기존 월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쪽방촌 주민(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는 2013년 복지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저렴쪽방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쪽방을 공급하였다.
- 저렴쪽방 새꿈하우스는 서울시가 보증금,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지원했고, 디딤돌하우스는 (주)현대엔지니어링에서 비용을 후원하였다.

<표15. 저렴쪽방 임대 지원사업 현황>

연번	소재지	기본구조	방수	오픈시기	명칭
1	동자동 35-145	목조, 2층	17개	2013.7.	새꿈하우스 1호
2	동자동 9-3 2동 2층 우측	철근콘크리트 4층	7개	2013.7.	새꿈하우스 2호
	동자동 9-3 2동 3층 우측		8개	2013.7.	
3	동자동 19-69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8개	2013.10.	새꿈하우스 3호
4	동자동 9-20	철근콘크리트4층	51개	2015.11.	새꿈하우스 4호
5	창신동 436-27	벽돌조	23개	2015.12.	디딤돌하우스 1호
6	동자동 9-9	철근콘크리트3층	20개	2016.6.	디딤돌하우스 2호

· 쪽방지역 커뮤니티 & 자활사업 추진

-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쪽방촌 민관협력 자활사업 모델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는 디딤돌 하우스 오픈(주거지원), '꽃, 피우다' 등 공방형 자활작업장 설립·지원(자활지원), 사진교육, 합창반 등 문화교실 프로그램(정서지원), 쪽방상담소 리모델링(시설지원), 지역주민들과의 지속 교류(나눔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자활지원과 보도자료. "서울시-현대엔지니어링, 쪽방촌 자활사업 모델 가시화"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쪽방촌 민관협력 자활사업 모델 개발을 목표로 시작한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쪽방촌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 주거환경 개선부터 실질적인 자활까지 통합지원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 2주년
- 공용 샤워실, 세탁장 등 갖춘 '디딤돌하우스', 꽃포장, 양말인형 등 공동작업장
- 문화교실, 나들이 프로그램 등 정서 지원 및 쪽방상담소 리모델링 등 시설 지원

2014. 06. 25(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보도자료. 서울시-KT, 동자동 쪽방촌에 민관협력 '복합문화 공간'

- 지하 1층~지상 2층 300㎡ 규모 '동자희망나눔센터' 24일(화) 개관식
- 단순 물질적 지원 넘어 여가·문화·일자리 제공하는 공간 지원 전국 최초
- KT: 설치비 5억·5년 운영비, 서울시: 주민 20여명 일자리 창출 및 인건비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카페베네, 한림출판사, 매일유업, 종근당, 블랙야크 등도 참여
- 지하 1층 : 스탠드형도서관·북카페·영화감상실...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 지상 1층 : IT카페, 3~4인 욕조·파우더룸 갖춘 목욕탕 훌쩍제 운영
- 지상 2층 : 세탁실·공동작업실·IT교육 및 체험·예술 등 다목적 프로그램실
- 향후 지역주민 운영위원회 구성해 직접 참여 및 운영..타 지역 확산 계획
- 시, "문화예술통해 자존감 회복하고 세상과 소통,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대"

2013.12.05. 서울시 자활지원과 보도자료. 서울시-현대엠코, 쪽방촌 주민 다시서기 돕는 디딤돌 된다

- 박원순 시장-손효원 현대엠코 사장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 협약식' 5일(목) 체결
- 일회성 생필품 후원에서 벗어나 마을기업 설립, 주거환경개선 등 자활지원에 초점
- 서울시, 인허가 등 행정적 협조, 현대엠코, 사업추진비 10억 3년에 걸쳐 지원
- 임대지원,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편의시설 개보수 등 주거복지향상
- 일자리 창출과 쪽방촌 주민 자활 위한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 문화강좌, 나들이 행사 지원등 정서적·심리적으로도 도움 방안 마련
- 현대엠코, 난방 어려운 쪽방 주민에 실내용 보온텐트 600개 지원

·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과 쪽방상담소

▶ 남대문 인근 쪽방 밀집지역과 남대문 쪽방상담소



▶ 돈의동 쪽방 밀집지역과 돈의동 쪽방상담소



▶ 서울역 인근 쪽방 밀집지역과 서울역 쪽방상담소



▶ 영등포 쪽방 밀집지역과 영등포 쪽방상담소



▶ 창신동 밀집지역과 창신동 쪽방상담소



▶ 쪽방상담소 여름철 대책시기의 구호 활동



8 서울시 노숙인 인권보장 정책

▪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1)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의 의미

•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

-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총 16개의 권리를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를 넘어 노숙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까지 함께 규정했다.

• 노숙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태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 필요

- 노숙은 실직, 경제적 빈곤,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것이 노숙인 권리장전의 핵심 내용이다.

•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삼아

- 서울시 노숙인 정책이 응급보호에 치중해 왔다면, 이번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으로 노숙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 측면에서 노숙인 정책을 바라보고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정책방향과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2)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과정

- 서울시는 5월 11일, 25일 2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계 전문가(1명), 시설관계자(11명), 노숙인 인권증진 민간단체(2명), 노숙인 당사자(3명)가 권리장전(안) 검토³⁵⁾

- 2012년 6월 9일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공표

35) <http://www.su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2>

3)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세부 내용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노숙은 경제적 빈곤,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로, 서울특별시 노숙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노숙인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숙인 당사자와 시민, 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노력한다.

제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특별보호 대상) 청소년 노숙인·여성노숙인·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에서 벗어나거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 결정권)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착취·학대·방임 등 신체적 위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이유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8조(주거지원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설에 의한 보호, 임시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고용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교육·취업알선·일자리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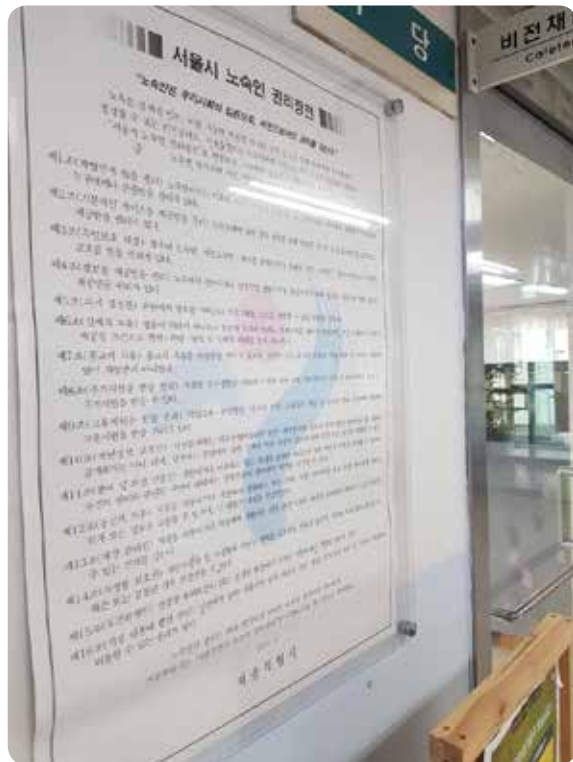
제10조(개인정보 보호권) 시설종사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의견 진술권)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통신의 자유)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는 전화·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제13조(재산 관리권)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사생활 보호권) 개인사물함 등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물건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조(보건위생권) 건강상 유해요인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제16조(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시설에서 정한 생활규칙 범위 내에서 시설 출입, 편의시설 이용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숙인의 권리는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출처: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3939>)



▪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

• 인권지킴이단 설치³⁶⁾

- 2017년 보건복지부는 취약한 노숙인에 대한 복지시설 내의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 생활 시설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했다.
-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권침해 행위의 발생 확인 시 시정 및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시설은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직원과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조직, 운영해야 하며,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의 인권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생활인에 대한 인권 옹호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시설은 생활인 인권사항 점검을 위해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 5명 ~1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 지자체별 자체 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시설별 과반수를 지정해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의 기능

- 생활인의 인권상황조사
- 시설 내·외 생활인의 인권 등에 관한 실제 자료 수집
- 생활인의 인권추구 실태 분석 및 보고
- 시설 내 생활인의 인권추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생활인의 인권추구에 관한 유권해석, 개선명령

36) 보건복지부(2017),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참조

참고문헌

■ 보고서 및 단행본

- 남기철, 2007, “노숙인 정신건강서비스 현황과 쟁점”, 사회복지연구 35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남기철·신원우·민소영·김선미·김준희·이지혜, 2013,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동덕여자대학교
- 남철관, 2009, “단신계층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원 실적”, 동향과 전망, 참여연대
- 박상필, 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시민참여행정 평가”, NGO연구 제9권 제1호, 한국NGO학회
- 박은철·이지은·김준희, 2014,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분석과 정책 과제>, 서울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 박춘아, 1999, <노숙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 보건복지부, 2017,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 서울사회복지협의회, 2006, 2006년 <서울사회복지백서>
-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 2007, <노숙인 정신건강관리 지침서>
-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2000,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1998-2000)>, 서울특별시
- 서종균·김준희·조정규·요네다 사치코·강동균, 2013,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
- 서종녀, 2010, <노숙인 주거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신권철, 2014, “부랑과 노숙의 법적 고찰”, 법제연구, 제47호
- 신원우, 2004, “노숙 후 음주문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7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김태완·정원우·주영수·민소영·신원우·송아영·정희선·김선, 20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만·최성남·정운진·최병국·김진미·김선희·박연화, 2015,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자료집>
- 이진우·기재일·이우승·나종택·최숙현, 2017, <쪽방·쪽방촌·쪽방상담소-쪽방촌 실태조사를 통한 쪽방 상담소 기능 재정립 방안>, 서울특별시
- 이태진·서동우·김미숙·남기철·김선미, 2003,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이태진·노대명·남기철·정원우·주영수·김선미·우선희, 2007,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장민철, 2009, “전국 쪽방상담소협의회 현황과 과제”,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
- 정원우·남기철·민소영·현시웅, 2011, <부랑인·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최지훈·이준호, 1999, “서울 도심주변 쪽방지역 연구”, 도시연구 제5호, 한국도시연구소
- 홍인욱·남기철·남원석·서종균·김혜승, 2011,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8,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 보도자료

- 국무총리실, 2011년 7월 8일자,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해 지원대상과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키로-총리 주재 제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2000년 1월 4일자, “쪽방 소외계층 지원대책 마련”
- 서울특별시, 2005년 2월 25일자, “서울시, 거리노숙인 보호정책 바꾼다”
- _____, 2012년 6월 8일자, “서울시, 민관협력으로 영등포구 쪽방촌 95실 리모델링(수선)”
- _____, 2012년 12월 6일자, “14년까지 영등포 쪽방촌 295가구 리모델링”
- _____, 2013년 12월 5일자, “서울시-현대엠코, 쪽방촌 주민 다시서기 돕는 디딤돌 된다”
- _____, 2013년 12월 9일자,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절반 225가구 리모델링 완료”
- _____, 2014년 6월 25일자, “서울시-KT, 동자동 쪽방촌에 민관협력 '복합문화공간'”
- _____, 2015년 12월 21일자, “서울시-현대엔지니어링, 쪽방촌 자활사업 모델 가시화”
- _____, 2016년 7월 6일자, “동자희망나눔센터 2년 만에 쪽방촌 풍경 확 바꿨다”
- _____, 2016년 9월 13일자, “추석은 고향에서...서울시, 쪽방주민 노숙인 고향방문 첫 지원”
- _____, 2016년 11월 29일자, “쪽방 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작업장 2개소 신규 개설”
- _____, 2018년 6월 11일자, “서울시, 전 소방서에 '폭염대책 119구조 구급상황실' 가동”
- _____, 2019년 8월 21일자, “서울시, 5개 쪽방 밀집지역 찾아가는 '주거복지 집중상담' 시작”
- 질병관리본부, 2010년 8월 3일자, “결핵노숙인 결핵치료를 위한 미소꿈터를 설치·운영”

■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13년 1월 21일자, “노숙자 16명이 둘러앉아 '밤 10시 이후엔 세탁기 쓰지 맙시다!’”
- 비마이너, 2011년 12월 1일자, “서울역 강제퇴거는 '빈곤의 형벌화’”
- 오마이뉴스, 2005년 4월 27일자, “임대주택 다양해진다 ☑전세·단신자 임대 등 - 정부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확정 발표”
- 웰페어뉴스, 2010년 12월 15일자,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추진”
- 한국방송뉴스, 2018년 2월 6일자, “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1,045명 임시주거 지원...82.4% 노숙탈출”
- 한국아파트신문, 2017년 8월 16일자, “지원주택의 기능과 과제”

■ 기타 자료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4, <2003년 자활의집 이용자 현황과 자활의집 운영발전방향>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3~2018년 <다시서기사업보고서>
- 미소꿈터, 2012, 2012년 <미소꿈터 사업보고서>
- 보건복지부, 1998, “서민생계 안정대책”
- _____, 2005, <2005년 노숙인 보호사업 안내>
- _____, 2006, <2006년도 노숙인 보호사업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 안내>

_____, 2019, <2019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9, <2019년 정기총회 자료>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1998.9,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1999.7, “1999년 노숙자관리 시행계획”(시장방침 제142호)
 _____, 1999.7., “자활의집 설치·운영 추진상황보고”(부시장 방침 및 보고)
 _____, 1998.4., “서울시 ‘노숙자 보호 및 관리 대책’”(시장방침 제446호)
 _____, 2000.5., “노숙자 결핵실태 조사 및 진료 대책”(시장방침 제500호)
 _____, 2005,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
 _____, 2009, <복지국 주요업무계획>
 _____, 2012a, <복지건강실 주요업무계획>
 _____, 2012b, “2012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 시행”(본부장 방침)
 _____, 2012c,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본부장 방침)
 _____, 2012d, “거리노숙인을 위한 ‘희망원룸’ 운영”(본부장 방침)
 _____, 2013, “‘노숙인 의료보호사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지침’ 시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안내”(자활 지원과-8066호)
 _____, 2015a,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보고>
 _____, 2015b, “자활지원과 2015 노숙인 자립지원 계획”
 _____, 2015c,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 계획”(자활지원과-5014)
 _____, 2016a,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계획”(자활지원과-13283)
 _____, 2016b, “지원주택시범사업 추진계획”(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15032)
 _____, 2017a,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보고”
 _____, 2017b, “서울로 7017 개장에 따른 서울역 일대 노숙인 보호·관리대책”
 _____, 2017c, “서울시 2017년 노숙인 의료지원 운영계획”(자활지원과-3454)
 _____, 2017d,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자활지원과-4498)
 _____, 2018, “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자활지원과-9088)
 _____, 2019a,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보고”
 _____, 2019b, “연중 상시 영등포희망지원센터 확대운영 계획”
 _____, 서울시 각년도 예산서
 _____, 업무계획(2004~2009, 2011~2013, 2015)
 서울특별시·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9,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사업설명회 자료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홀리스대책위원회, 2012,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한 위기 관리팀 활동보고서>

<법·제도>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지침」
 「노인복지법」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서울시 지원주택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웹사이트>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

http://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96383&tr_code=sweb

노숙인 저에게 내 집이 생겼어요!(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

<https://seoulwelfare.tistory.com/entry/노숙인-저에게-내-집이-생겼어요-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사업>

동자동 쪽방촌에 세탁서 포장까지 '무료 빨래방' 개소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73007>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는 '빈곤의 형벌화' :

<http://bemim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2883>

서울역 진료소 사진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Print.html?ID=38621>

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3939>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www.homeleskr.org

자유의집 의료상담실 사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21028/7876865/1>

한국불교 선재의료회 노숙자 무료 진료소 사진 <http://www.seonjae.com/>

<해외자료>

Y-Foundation, 2017, *A Home of Your Own*

<https://www.lecarillon.org>

<http://www.solinum.org/fin-de-lexperimentation-de-la-borne-solidaire-en-gare-de-bordeaux-saint-jean/>

<https://www.20minutes.fr/bordeaux/2285459-20180608-bordeaux-borne-orienter-sdf-vers-acteurs-solidaires-installee-gare>

<http://www.solinum.org/fin-de-lexperimentation-de-la-borne-solidaire-en-gare-de-bordeaux-saint-jean/>

https://www.lepoint.fr/high-tech-internet/a-bordeaux-une-borne-tactile-pour-renseigner-et-orienter-les-sans-abri-20-05-2018-2219873_47.php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une-borne-numerique-pour-aider-les-sans-abris-1527182331>

<http://www.aqui.fr/societes/une-borne-solidaire-pour-les-sans-abris-a-la-gare-de-bordeaux,17222.html>

<https://soliguide.fr/apropos>

<http://www.lejardindesentreprenants.org/2019/06/19/associer-les-personnes-aux-decisions-les-concernant-meme-les-sdf/>

<http://www.mainslibres.asso.fr/wordpress/>

<http://w35-associations.apps.paris.fr/searchasso/jsp/site/Portal.jsp?page=searchasso&id=52814>

<http://www.alternative-urbaine.com/nos-balades/>

<http://www.alternative-urbaine.com/>

<https://www.la-croix.com/Solidarite/Actualite/Vincent-chomeur-et-guide-touristique-a-Paris-2014-07-31-1186191>

■ 기타 참고문헌

구인화·정근식·신명호·강대중·김소영·김의태·김창엽·선소영, 2012, <한국의 노숙인 :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창엽·정근식·강대중·구인화·신명호·이상직·김소영·김의태·박지숙·유아마 아쓰시, 2014, <노숙문제의 현실과 대응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국가인권위원회, 201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김수현·하성규·최지훈, 1999, <노숙자 재활을 위한 각계의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도시연구소

김수현·하성규·서종균·이진숙·정원오, 1999,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수현·원승욱·김소임, 2002,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준희·김명동·배완복·서정화·이동현·이병훈, 2017,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2017 노숙인정책세미나 자료집>, 전국노숙인시설협회

남기철, 2007, “노숙인과 사회복지 실천 : 노숙인 복지시설 내의 사회복지실천 양상과 체계화”, KSI한국학술정보

_____, 2009, <노숙인복지론 : Homeless의 사회적 통합>, 집문당

_____, 2011,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활용의 쟁점과 모색”, 월간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원오, 2013, “노숙인 복지법 제정1년, 쟁점과 과제”, 도시와빈곤 103권, 한국도시연구소

정원호·서정화·임은경, 2013, “이원화된 노숙인 시설체계,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도시와빈곤 103권, 한국도시연구소

남기철·이동현·진무두, 2013, “당사자 운동의 현황과 미래”, 도시와빈곤 103권, 한국도시연구소

서정화, 2012, “노숙인 정신보건 민간활동의 성과와 과제 : 서울역 거리노숙인 상담활동을 중심으로”, 월간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종균·여재훈·박사라, 2013, “노숙인복지법 이후 거리노숙인 지원의 과제”, 도시와빈곤 103권,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이호영·김선미, 2013, “노숙인 주거지원, 무엇을 해야 하나?” 「도시와빈곤」 103권, 한국도시연구소

석희정, 2012, <노숙인의 거주상실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 지식과교양

신원우, 2007, “노숙인 음주문제의 변화”, 한국학술정보

신원우·이태용·주영수, 2013, “노숙인 의료지원의 쟁점과 과제”, 도시와빈곤, 103권, 한국도시연구소

안순봉·오범석·남기철·김의곤·서정화·김선미, 2009, <시설 입소 노숙인의 인권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이태진·김태완·정원오·주영수·민소영·신원우·송아영·정희선·김선, 20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기·홍세영·김수정, 2015, <노숙인복지시설 기능강화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한국도시연구소·보건복지부, 2000, <한국의 노숙자 2년의 흐름과 진단>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노숙자자활사업평가위원회·보건복지부, 2001, <한국형 노숙자 쉼터(shelter) 발전방안 연구>

주영수·홍창의·백한주·우석균·이상윤, 2002, <노숙자 및 쪽방 거주자에 대한 건강실태조사 및 건강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보건복지부

한국도시연구소, 2006, <노숙인 쉼터 경험자의 쉼터 퇴소 이후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현명이, 2014,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 복지재단

황선영, 2004, “노숙인 정책의 전개과정과 제도개선 방향”, 사회복지정책 제18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장

관련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가 말하는 노숙인 정책

1.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 20년의 성과를 말하다.
2.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 발전방향을 생각하다.



3장

관련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가 말하는 노숙인 정책

3장은 2019년의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 기록물 조사연구> 과정에서 노숙을 경험한 당사자 및 학계, 정부와 민간의 관련 현장 전문가, 노숙문제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에 대한 개별인터뷰 내용, 그리고 4개 영역(거리 분과, 시설 분과, 일자리 분과, 주거&지역사회 분과)의 주제별 집단토의(FGI) 내용에서 (1)지난 20년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의 성과, (2)이후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 당사자 · 활동가 ·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구분	인터뷰 참여	소속 / 직책	인터뷰 진행
당사자	김OO	노숙 경험 당사자	김진미
	노OO	노숙 경험 당사자	김남영
	송OO	노숙 경험 당사자	김진미
	주의식	노숙 경험 당사자	김남영
현장 전문가	김도진	양평심터 시설장	오기철
	김형욱	영등포쪽방상담소 시설장	김진미
	박성희	비전트레이닝센터 팀장	오기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시설장	김진미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협회장 前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이수범
	오소영	디딤센터 사무국장	김진미
	이호영	구세군가재울심터 시설장	김남영
	임도영	영등포보호의집 시설장	오기철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장	이수범
	최성남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협회장 前 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장	오기철
학계 및 전문가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정화
	노정균	노정신과의원 정신과 의사	이수범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정화
	최영아	서북병원 내과 과장	이수범
공무원 및 유관단체	기재일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공무원	서정화
	나병우	前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공무원	서정화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오기철
	이진산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공무원	서정화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참여자

분과	진행	참여자	참여자 소속
거리 분과	이수범	김남영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과장
		김영택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과장
		김진미	디딤센터 시설장
		우대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
		이진산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장
시설 분과	오기철	김 욱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국장
		김중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
		김진미	디딤센터 시설장
		문정우	열린여성센터 국장
		신창수	강동희망의집 실장
		이수진	아가페의집 국장
일자리 분과	김남영	최건우	은평의마을 부장
		기재일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김희석	영등포보호의집 사회복지사
		유태성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이정훈	양평심터 팀장
		이종만	용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시설장
		최성진	서울시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국장
		주거&지역사회 분과	서정화
김수민	구세군서대문사랑방 국장		
김진미	디딤센터 시설장		
박성희	비전트레이닝센터 부팀장		
손경훈	희망원룸 국장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지우형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		

1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 20년의 성과를 말한다.

서울시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정책의 성과

○외환위기 초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노숙인 응급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의 응급보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2000.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 1998-2000> 참조)

- 부랑인시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던 상태에서 상설상담소, 삼야거리상담, 입소상담 등의 거리노숙인 상담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노숙인쉼터를 만들어서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 → 자활의집으로 이어지는 노숙인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 외환위기로 노숙인이 급증하고 노숙인 문제가 본격화될 때부터 정부, 특히 서울시는 노숙인 문제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당시 고건시장이 종교계와 시민단체 대표, 노숙인 대표와 함께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사회 문제로서 노숙인 급증 사태에 협력적인 대응을 한 것은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해도 모범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와 위기대응체계 구축으로 거리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위기계층의 거리노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체계인 일시보호시설이 거리노숙인 유입뿐만 아니라 위기노숙인의 거리노숙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자료집> 참조)

- 서울역광장과 영등포역 주변에 마련된 주간 상담소가 주·야간 24시간 운영하는 서울역희망지원센터³⁷⁾와 영등포희망지원센터³⁸⁾로 확대 개편되면서 거리노숙인의 위험에 신속히 개입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거리노숙인이 노숙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련 사회 서비스나 보호시설, 병원 등에 연계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위기대응콜, 정신건강팀 추진 등으로 위기대응시스템이 확대되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를 만들고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실시하여 심신이 취약한 거리노숙인의 안정적 주거진입을 촉진할 계기를 마련했다.

- 알코올정신질환, 고령에 복합질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거나 고착화되는데 이에 대한 재활 시설의 확대 등 대응체계가 부족하다. 최근 알코올·정신질환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사업이 실시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자료집> 참조)

37) 서울특별시(2017.7.), "서울로7017 개장에 따른 서울역일대 노숙인 보호·관리대책"
38) 서울특별시(2019.2.), "연중 상시 영등포희망지원센터 확대운영 계획"

현장보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거리노숙인 보호의 성과를 높였다.

“서울시 노숙인정책은 한국의 노숙인 정책의 바로미터였던 거 같구요. 가장 수준 높은 노숙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완성시켜 나가고자 공무원들도 그렇고 현장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착시키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위기대응콜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정신건강팀이 현장에서 만들어진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2005년에 지방 자치제로 인해서 시설들이 2005년 5월인가에 다 지자체 신고를 했는데요. ...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있어서, 거리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인 예산이 많이 집중되기 시작한 게 또 200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2005년도에 상담보호센터 이용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특별자활근로가 시작됐던 해고, 그게 그전까지는 거리노숙인을 24시간 보호하는데 상담보호센터가 신경을 썼다고 하면 주로 보호하고 재워주고 식사 제공하는 그 정도의 일과였죠. 계속 뭐, 주취자하고 싸우고 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특별자활근로가 시작된 게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무자 - FGI 중)

“논의만 되어왔던 현장보호를 상담보호센터, 혹은 드롭인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구체화해내고 거기서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이나 보호 서비스나 특별 사업들을 통해서 거리 노숙의 부정적 결과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게 특징적인 측면”

(김진미 디딤센터 시설장 - FGI 중)

지속적인 거리노숙인 감소는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의 성과의 한 부분이다.

“일시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길게 보고 하는 정책적 성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그런 효과다...”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2014-15년도에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했을 때 제가 담당자 했을 때 평균 100-11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0-70명으로 줄었어요. 영등포 응급대피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체감 상은 최소 40-50%는 줄었다, 혹은 그때. 엄청나죠. 왜 그러느냐 봤을 때는 임대주택에 최소한 1,000분 정도 들어가셨다는 게 하나 있고...

(박강수 영등포보현의집 실무자 - FGI 중)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거리 영역에서 임시주거지원 사업도 확대되면서 점점 줄어든 의미가 있었고, ...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영등포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긴급지원제도, 임시주거지원 사업 포함해서 긴급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많이, 시설이나 거리 생활보다는 지역에, 비주택이지만 쪽방·고시원 쪽으로 많이 안내를 했고요, 여인숙 포함해서. 아무튼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고,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다시 재유입이 되지 않는 방법, 저희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시설이 아니라 바로 주거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거리 분들을 150명 정도 임대주택으로 빼고 임시주거 통해서 매년 100명씩 해서, 이런 예방적인 사업들이 노숙인들을 줄여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무자 - FGI 중)

■ 서울시 노숙인 건강 지원사업의 성과

서울시 예산으로 노숙인 진료비를 편성하여 노숙인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 노숙인 누구에게나 공공병원 이용 권한 제공하는 좋은 정책

“내가 노숙인이라는 걸 증명해서, 증을 끊어서 너무 죽어라고 아프기 전에 미리 시립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 병이 중해지기 전에, 꼭 쓰러지기 전에, 피 토하기 전에 미리 가서 진료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 같아요. 굉장히 인권적이고. 그래서 이걸 정말 잘 한 일이고 ... 내가 노숙인임을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는 등록해 놓는 건 좋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진료 받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최영아 서북병원 의사 인터뷰 중)

- 진료소 내 전문의 배치로 의료질 향상

“보현의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의과 공중보건과의가 배치되다가 이제 전문의가 배치되면서 서비스 이용 질이 확실히 좋아졌죠. 노숙인 분들의 이용 만족도도 높아졌고”

(박강수 영등포보현의집 실무자 - FGI 중)

전국 최초 정신건강팀 운영으로 정신건강 취약한 만성노숙인 문제에 대응할 체계 갖췄다.

“서울시에서 노숙인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여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숙인들한테 줌으로써 탈노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은, 치료적 의미에서나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예요. 결국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로서의 권리를 노숙인들이 획득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인터뷰 중)

지원주택 조례 제정과 지원주택 운영으로 정신건강 어려움이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주거 유지의 길을 텅 댔다.

“최근에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원주택을 조례로 만들고, 그동안에는 거리에서 혼자서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면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뭐 거리에서 만성화된 알코올 노숙인이라든가 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재활시설 아니면 요양시설 이외에 대안이 없었다면 지금은 그분들이 사회복지사의 밀착된 서비스를 받으면서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큰 정책적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정화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서울시 노숙인 시설보호 정책의 성과

시설을 통한 응급보호의 성과 크고, 노숙인 서비스의 기반이 되었다.

- 극도로 안 좋은 거리노숙 상황에서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게.

“거리노숙 상황은 가장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노숙 상황에 계신 분들을 일단 적어도 안전한 시설에서 주무시게 했다는 점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지원활동이 매개된 노숙인 서비스의 기반이 되었다.

“초기 응급구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시설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좁은 시설 환경에서 갑갑함, 처음에는 갑갑함을 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설이 시작하게 되었고. 하지만 주거를 잃은 그런 상처들을 시설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사들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일자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시설이었다고 생각해요.”

(서정화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노숙인 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시설 정비 노력을 기울였다.

“시설의 환경이 개선이 된 면도 중요하다고 봐요. 노숙인 법 이전에는 사실 무허가는 아니지만 무허가 시설에 준한 시설들이 난립해 있었어요.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노숙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설 인허가 요건... 2014년도 그때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2014년~15년 재인가를 대부분 태반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제 그런 것들이 시설 재인가를 통해 정비되면서... 노숙인 법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신창수 강동희망의집 실무자 - FGI 중)

- 노인, 여성, 정신질환 등의 노숙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를 갖추었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들어가고 ... 그래도 노인, 여성, 정신질환 이런 특성화된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게 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도 적용하려고, 특히 여성에 대한 일시보호가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런 서비스가 유형화되고 체계화, 변화가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김수진 아가페의집 실무자 - FGI 중)

시설보호 위주 정책의 변화 과제 남겼다.

- 노숙인을 등록된 시설 입소자로 만드는 시설 거주 중심의 서비스는 한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체가 너무 장기거주 중심으로 짜여진 틀들이 강하다 보니까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어딘가에 등록된 시설입소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영역의 복지 패턴, 시스템들을 너무 그대로 갖다 쓰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노숙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시설에 오래 계셔야 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이분이 가진 어려움이 정신건강이나 장애의 문제 혹은 노령의 문제라면 그쪽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노숙인이라는 별도 카테고리의 시설이라는 것들을 장기시설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데선 좀 무리가 있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서비스보다 시설 중심으로 편재된 우리 나라 복지서비스 충격을 노숙인 복지가 흡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정신요양의 측면에서도 시설 중심의 복지만 있지 서비스는 없었고 또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도 이미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정원을 꽉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수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노숙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별도로 모이게 되고, 이렇다 보면 적절치 않은 충분치 못한 서비스를 주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복지가 서비스보다는 시설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것의 충격을 노숙인 복지가 그대로 흡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시설 보호 현원에 연연하는 체계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활동은 어려워

“저는 지금 이런 지원, 현원에 연연하는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꽤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된 위기 노숙인 예방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해준다든가 혹은 여분의 쌀을 지원받게 해준다거나, 자원을 연계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버틸 수 있게 도와 드리는데. 최후에는 시설 입소를 안내해 드리지만 시설을 이분들이 꺼리는 이유는 시설의 프로그램에 마지못해 앉아서 해야 하는 게 답답한 거죠 ... 그분들이 거기서 삶의 터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뭔가 마련해줘야 하고, 사례관리를 사실 저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원에 연연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창수 강동희망의집 실무자 - FGI 중)

요양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 3종 유형화의 한계는 이후 과제이다.

- 노숙인의 복잡한 양상과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 있었던 시설 유형화

“법 만들 때에 시설에 대한 그림이 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나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독립적인 삶을 지지하는 게 보다 인권적이고 인간적이라는 트렌드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을 3가지 정도로, 여기에 전문화해서 구별해서 뿌려주면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독립이 될 거라는 굉장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양상이나 특성이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너무 거칠구요.”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 요양시설로 유형화했지만 시설환경, 인력 지원의 변화 없이 서비스 개선키는 어려워

“중증환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의 지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숙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5:1로 중증환자를 케어하라고 하면 거의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상황이고, 버티다 버티다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같은 일을 하는 쪽으로 ‘차라리 그게 낫겠다, 급여도 더 낫다’ 하고 가는 분들도 많고. 결과적으로는 각 시설이 ‘알아서 버티라’라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나...”

(최건우 은평의마을 실무자 - FGI 중)

- 유형화한 시설에 속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숙, 복합문제 가진 노숙인 등은 문제

“그렇게 유형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외국인들, 그리고 약간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성 노숙인 문제가 더 크게, 이분들이 이제 탈노숙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김수진 아가페의집 실무자 - FGI 중)

○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시설환경의 변화, 지역사회 보호의 과제 대두되었다.

노숙 경험 당사자 노선생님의 일자리 참여 이야기

내가 쉽터에 가게 된 것은... 한 5, 6년 전에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것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왕이면 서울에서 죽어야겠다 하고 한강에 뛰어내릴까 했어요. 그런 찰나에 경찰과 소방관 두 분이 나를 반강제로 끌어내렸어요. 그 후로 내가 간 곳이 어디냐면 서울시립 은평병원 이요. 병원에서 우울증이 심하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3, 4개월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습니다. ... 이후 비전트레이닝센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일명 재활 비슷한 작은 가공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노숙인 일자리센터에서 연결해 준 곳인데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어 조정 관리 일을 합니다. 나무랑 꽃을 관리해요. ...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서 내가 고용지원센터 팀장님께 전화해서 ‘아이고, 힘들어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악물고 그냥 해 보자. 일을 열심히 해 보니까 또 뒤에서 도움도 주시고.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그런 문제도 없고 좋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충분히 다 이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제일 보람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별어서 절약해서 저축하고. 이런 경험이 가장 보람 있어요.

(당사자 인터뷰 중)

■ 서울시 노숙인 주거복지 정책과 지역사회 정착지원 성과

노숙인을 위한 주거 지원의 사다리를 만들어 놓아

“거리노숙인에게 응급적으로 고시원, 쪽방 등에 주거를 정해서 수급권 획득 내지는 사회복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임시주거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임대주택사업은 주거복지 영역에서 기틀을 마련해서 현재까지도 노숙인복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무자 인터뷰 중)

“물량의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임시주거지원에서 지원주택까지 주거의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잘한 것이다.”

(박성희 비전트레이닝센터 실무자 인터뷰 중)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복지 영역에서의 업적

“최근에 지원주택이라든가 그 전에 이제 매입임대주택을 홈리스에게 연결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단 홈리스 분야를 넘어서서도 우리나라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업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주거우선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은 큰 의미

“노숙인을 영어로 홈리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집이 없어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경험으로 보면 주거지원이 탈노숙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고 지렛대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만성질환을 가진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그전 개념이 선 자활준비 후 주거지원이었다면 지금 현재 먼저 주거지원을 하고 거기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남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임시주거지원 사업 성과와 한계

- 거리노숙 탈피 자원이 되는 임시주거지원

“주거지원 받는 한 3개월 정도, 그 와중에 일자리 구하시고, 종일 일자리 구해서 나가시고, 그래도 웬만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벌이가 되서 저축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축을 한 3개월 하니까 매입 임대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모으더라고요. 그렇게 모아서 장기적인 임대주택 입주해서 독립했던 그 사례가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나, 임시주거지원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오소영 디딤센터 실무자 인터뷰 중)

“당사자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높은 거 같아요. 어쨌든 작지만 자기 공간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거리에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저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가자고 하면은 안 가시려 하는데, 방을 얻어 드릴까요 하면은 그나마 좋다고 하시거든요. 당신은 노숙을 했으니까 여러 명이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서 좀 작게나마 자기 공간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공간이 있으면 적어도 일용직을 나가더라도 퇴근해서 자기가 쉴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큰 의미겠구나.”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거리노숙인 감소 효과로 사회적 비용효과성 높아

“거리에서 임시주거지원 하면서 신규 노숙인, 초기노숙인들이 되게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자활 재할을 다 통털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줄고, 거리에서 직접 주거서비스를 받거나 임시주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결국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빠져나가는, 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주거비만 받고 생활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비용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거리노숙 기간 단축 효과

“거리 생활을 짧게 하고 그 분들이 일시보호시설을 거쳐서 자활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정 정도 고시원이라든가 쪽방에 있으면서 수급권을 얻어가지고 지역사회로 가게 하는 상당한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거 같아요.”

(최성남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노숙인들의 복지제도 진입 효과

“거리에 계신 노숙인 분들은 주거를 필요로 하시고, 임시주거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체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매입임대주택 성과와 한계

- 영구적인 임대주택 지원으로 탈노숙의 성과

“주거지원 측면에서 본다면 영구적 주택에 해당하는 집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영구적이라고 해서 무한정 살 수 없지만 어쨌든 2년씩 아홉 번을 재계약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통 계약하는 거 하고 비슷한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임시주거지원까진 이게 일시였는데, 영구적인 주거지원으로 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노숙인들에게 삶의 변화, 목적과 희망을 주는 매입임대주택

“주거가 있어서 어쨌든 이분들에게 이용이 되는 게 목적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가족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있는 주택...”

(김수민 서대문사랑방 실무자 - FGI 중)

“자기 가족들과고 연락을 하는 단계가 되면 조금의 자기가 자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이 좀 생기니까 좀 하얗든 그렇게 된 거 보면 표정이 벌써 달라요. 밝아지죠.”

(김도진 양평쉼터 원장 인터뷰 중)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 지원은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커뮤니티 사업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먼저 진행하고 있던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에 있다가 쪽방에 사시다가 아니면 일시 보호시설을 이용하다가 임대주택 좋은데 나왔다고 하여 들어가시면, 아저씨들이 굉장히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그냥 조금이라도 방지되면 이분들이 다시 내일모레 거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독사로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케어해 주는 부분이 의미가 좀 많을 거 같고.”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희망원룸 성과

- 자립지원의 효과와 주거생활 훈련 의미 있다.

“희망원룸에 계시다가 시설 가는 확률이 엄청 낮습니다. 거의 다시 끝나도 다시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고시원가면 갔지, 내가 다시 집단 생활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많이 일년 동안에 많이 바뀌시거든요. 그런 정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또 그룹홈이 할 수 없는 거를 또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훈 희망원룸 실무자 - FGI 중)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

- 당사자의 서비스의 욕구에 기반한 주택 정책

“지원주택이야말로 자립이라기보다 이분이 지역사회 생활하려면 주택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욕구 기반으로, 거기다가 주택도 이제 영구적 주택 형태로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패러다임 측면에서 말할 수 없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노숙인들에게 지원주택 제공하는데, 서울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가 사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성과이지 않을까 하고, 기존의 시설중심의 단계적인 조건으로 노숙인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거에서 어쨌든 개별 맞춤형으로...”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만성화된 노숙인에게 주거를 통해 다시 시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지원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을 보면 상당부분이 여러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노숙을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막막해하시는, 지금 내가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셨던 거 같아요. 질환이 아주 심각하신 분들이 들어가셨죠. 이분들한테 어떤 그래도 자기가 다시 시민으로 살 수 있게끔, 의식주 중에 의나 식이나 똑같이 중요한 거잖아요, 집이라는 게. 우리가 특히 만성화 되신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입주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이전에 세금혜택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으세요.”

(박성희 비전트레이닝센터 실무자 인터뷰 중)

“주택에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함께 살면서 다른 자기 삶이 형성된 거예요.”

(박성희 비전트레이닝센터 실무자 인터뷰 중)

“아무리 약 주고 뭐 해 봤자 거리에서 자는데 약 먹어 봤자 약발이 듣겠어요. 안 듣는 건데. 홈리스 질병에는 집이 약이죠.”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인터뷰 중)

▪ 서울시 노숙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성과

홈리스 권리보장으로서의 관점 변화

“예전에는 노숙인에 대해서 뭐랄까 좀 계도, 계도하거나 아니면 사회 전체의 규범을 따르도록 뭔가 이분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벗어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노숙인은 이렇게 살까 뭔가 고치자 뭐 이런 부분이 많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분들이 절대로 본인들의 문제에 기반 했다기보다는 사회구조에 따라서 피해를 봤다. 권리가 침해된 분들이다. 이분들이 권리를 온전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의 전환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인권교육 의무화로 노숙인인권 신장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특히 노숙인분야 인권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법 제정되고 나서 부터는 인권교육이 활동가들한테는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인권의식 고취나 인권 의식 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또한 교육되고 했던 것들로 기억이 들구요. 사회인권과 더 붙어서 어쨌든 노숙인 인권도 많은 부분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2 서울시 노숙인 정책과 사업, 발전방향을 생각한다.

서울시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홈리스 문제 접근은 사회통합을 상징하는 것.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강화 필요

“기억하시겠지만 11년도에 철도공사에서 강제철거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 자유 카페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또 민원에 의해서 정지되면서 결국은 우체국 앞 지하도에 생긴 응급대피소, 응급구호방으로 마무리 됐던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홈리스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감춰지는 방식으로 되서는 안 되는데 ... 그거는 거리 홈리스의 인원을 기술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გადა 붙이는 방식이잖아요. 홈리스들이 거기 있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인터뷰 중)

“제일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경쟁체제가 치열하고 자본주의가 굉장히 독특하게 발전된 사회에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삶이 포기되어지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이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일반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포용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키워 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남은 숙제들이 아닌가.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자기인식이 노숙인 공감대의 출발점〉

“노숙인이나 그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서 불쑥 나타난 괴물이 아니고 사실 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야말로 이혼율 50%기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관계단절 속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관계 속에서.”

이 사회가 바뀌어서 노숙자들이 더 정신과적 문제도 더 증가됐고 1인가구도 증가됐고 그리고 취업이라는 거 자체가 모두에게 불안하고 언제나 일자리라는 게 만연적으로 옛날처럼 한 번 일자리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라는 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나는 절대로 노숙할 가능성이 없다 라는 거 아니라 모든 사람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사회환경이라는 걸 인식하고 빨리 조기에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사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커지잖아요.”

(최영아 서북병원 의사 인터뷰 중)

노숙진입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강화가 중요해

“가장 큰 거는 안전문제가 제일 크고요. 거리에서 사고가 안 나게 하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거리에서 이분들이 안 계시게 하는 게, 강제적으로 안 계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줘서 노숙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연세가 72세면 노숙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지역에서 수급을 진행해도 무방한 분인데... 정신영역이든 수급 관련법이든 자기들 지자체나 어디 발견 기관에서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귀찮은 경우는 ‘이 사람 잘 데 없대요’ 그러면서 노숙 쪽으로 유입이, ... 위기계층에는 돈이 100원이 들어갈 걸 노숙으로 따지면 200원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경제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노숙 쪽 법이든 다른 영역의 법이든 위기 계층을 케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대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거리노숙인의 안전망 확보는 우선적으로

“우선 거리노숙인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거리생활에서의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된다. 거리생활에서의 불안한 상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안전망을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우선은 그 생활지역의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응급대피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는 갖췄지만 여전히 거리현장에서 불안한 삶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적인 권리를 위한 공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선택지가 있고, 거리생활보다 좀 더 나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쪽으로 내가 옮기겠다는 의지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무자 인터뷰 중)

복합적 문제 가진 만성 거리노숙인 보호정책과 전문화된 실천 시스템 강화되어야

“아무래도 만성화 문제는 이분들의 건강상태 악화나 거리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까지 수시로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문적인 의료체계가 갖추어져서 현장에 투입되고 지원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 전문적인 의료체계가 가동되고 의료적인 보호시스템 영역이 거리노숙인에 대한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 사례관리 서비스가 통합되면서 결합이 되어야만 이 만성노숙인 문제의 근본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무자 인터뷰 중)

“아쉬운 측면은 거리노숙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서비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나 또는 이 분야의 상담경력이 깊은 분들이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사실 지금 주거우선 정책들이 많이 강화됐지만 주거 우선 정책만으로 해결 안 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스테이 퍼스트라고 해서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아쉬운 것들 얘기하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볼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 필요해

“지방 이양을 하더라도 중앙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다든지 중앙 정부의 정책이 좀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미국 같은 경우는 NAH 같은 경우가 있어서 주정부별로 정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고 본 거 같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내놓고 이제 해마다 각 지자체나 관계기관 별로 시행계획을 받고 평가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게 개별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서울시가 또 그중에 어쨌든 우리나라 홈리스 정책에 어느 정도 선도적인 역할을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서로 이제 협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노숙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와의 협력체계와 구체적인 협력관계 구축해야

“우선은 실제적인 업무협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체계 영역,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역할이 구분되고 명시되는 그런 합의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서비스가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사각지대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사례관리 전달자들이 상시적으로 어떤 대상자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실행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나서 실제적인 액션은 또 노숙인시설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체계와 주민센터는 방문돌봄 서비스 영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체계하고 관공서의 역할과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행하는 민간시설의 역할로 구분하고 명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발굴과 사례관리를 하면서 서비스 지원하고 지원체계 안에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나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연결을”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무자 인터뷰 중)

부적절한 거처를 떠도는 노숙인 포착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방안 마련해야

“상당 기간 동안 부적절한 주거는 쪽방뿐만이 아니고 노숙인들이 밀집된 고시원이라든지 여관 여인숙, 찜질방, 사우나 이걸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만화방 이런 데, 주거가 아닌데 거기서 잠자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건데, 그 정의에 비하면 만화방이나 이런, 누가 봐도 노숙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포착할 수 없는 조사. 그걸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 실제로는 노숙인 등의 정의에 맞는 조사가 되려면 우리의 서비스가 미치는 곳 말고도 발굴 차원의 조사 있어야 하는데...”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새롭게 발생하는 노숙인과 사각지대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필요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임시주거라든가 긴급지원, 기타 쪽방, 응급쪽방 등에서 조차 보호할 수 없는, 보호를 거부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결국에는 노숙인 복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결국에는 개별 서비스, 개별 상담 사정을 통한, 개별 맞춤에 의한 그런 원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질 않나. 현재 처럼 구조화된 시설, 쉼터 내에서는 이분들이 거부한다면은 보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맞는 전환형 지원주택이라든가 기타 맞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분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서비스가 개별적인, 좀 더 심층적인 사정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내용들이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무자 인터뷰 중)

“우리 국적이 아닌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시급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인 정부로 바뀌고 나면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할 게 뭐냐,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제가 이걸 보냈던 적이 있어요. ... 우리 복지제도가, 장애인 복지법이고 어르신, 노숙인 복지법이고 내국인들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지금도 곧잘 경찰관들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고민입니다.”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 FGI 중)

“치료를 받지 않으나 내가 거리에서 노숙하고 싶진 않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정말 긴급하단 생각이 들고요. 그건 현재의 지원주택 모델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지원주택은 치료 순응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뭐라 해도, 치료를 안 받는 게 지원주택의 퇴거 사유는 되어있지 않지만, 진입을 할 때는 분명히 치료 순응적이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안 돼요. ...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랑 지낼 수 없지만 나는 거리에서 자고 싶지 않고, 거리에서 자는 게 너무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전환형 모델이 생기지 않

으면, 이거는 기관에 너무나 큰 부담과 실무자의 너무 많은 소진을 요구해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소수 특별한 사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작은 전환형 주거 모델이 마련이 되어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모델 말고 유연한 주거 모델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노숙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위기주택, 긴급거처 필요

“저희도 며칠 전에 조손가정이 왔는데 조손가정이 있을 시설을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 결국은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니까 거리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서 보호를 하는데 저희도 독립방이 없어서 사무실 옆 상담실을 치워가지고 보호를 했거든요. 저는 가족노숙인이 노숙상황에 있을 때 긴급보호는 지역이 책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구 단위에서 빈집 하나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철거가 됐다든지, 갑자기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가정폭력 시설에 가기 부적절하다든지 이러면 좀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지역이 마련하고 있지 않으면 모두 다 노숙 쪽에서 커버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지역사회 연계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 노숙인 업무 이해 절실

“보호도 보호지만 어쨌든 바로 연계를 시켜내야 되는데 개별 시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거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힘일 텐데 그렇게 해야 이분에 대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서울시는 가장 크니까 각 부처별로도 이런 걸 일종의 메뉴얼이라고 하나? 지침이라고 하나? 이런 걸 밑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수 영등포보현의집 실무자 - FGI 중)

“각 구청과 주민센터별로 노숙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어느 노숙인시설이 많은 그런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어느 정도는 이해도가, 협조요청이나 이런 때 서로 대화가 편한데, 또 그것도 그 구에 있는 주민센터별로 또 이해도가 다르고, 어디 쪽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자기네들 모른다. 또 말소 복원, 시 지침 공문을 보내 주고 알고 있어도 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또 모른다고 하고 또 찾아가서 공문을 보여줘야 하고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구청별, 주민센터별 해서 그런 서비스라기보다 노숙인 쪽에 대한 이해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한 기준은 좀 갖춰졌으면 현장에서 있는 분들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택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노숙인에 대한 편견들이 있는 게...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해서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신입공무원이든 단계별로 있을 텐데 그런 직무교육이 있을 때 노숙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열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 그걸 조금 더 매뉴얼화해서 하면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과 차원에서 아니면 복지건강실 차원에서 이 복합적인 부분들은 자활지원과만이 할 게 아니라 복지 건강실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만들든 TF팀을 만들든 해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런 사각 지대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현장 활동가들의 소진예방과 안전보장 및 전문성 강화 방안 필요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시스템에 의한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현장에 있는 활동가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소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스템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이제 활동가들의 안전보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데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서울시 노숙인 건강 지원사업의 발전방향

의료영역과 복지영역의 유기적 결합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일본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병원을 가운데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요양원인데 약간 지원주택 스타일로 요양원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게, 약간 이쪽에도 그런 집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집들이 있어서 여기서 계속 살 순 없지만 옆에 살면서 병원 등원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의식주 관리가 된단 얘기야. ... 병원에 오래 있으면 가장 건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위아래가 이렇게 요양원이나 지원주택이나 못 걷는 사람은 요양원 스타일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주택 스타일로 ... 그래서 그런 돌볼 수 있는 세팅. ... 병원 옆에 지원주택 같은 형태로 있고 아플 때만 병원에 오고...

(최영아 서북병원 의사 인터뷰 중)

전국단위 의료정책 시행해야

“노숙인 복지법 제정 이후 의료정책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숙인 의료급여 가진 사람이 800명쯤 되나, 그중에 600명이 서울시구요. ...뭐 이 정도일 건데 ... 노숙인 의료정책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데서 조금씩 저걸 하지만 전국이 통일된 표준 의료 정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거는 서울시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자체를 개선해야 돼요.”

(기재일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노숙인 의료급여 모든 병의원 시행하여 차별 해소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한다는 차별적인 조항부터 없애야 돼요.”

(기재일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노숙인을 위한 요양병원 조속한 지정 필요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요양병원도 지정병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한 곳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갈 곳이 쪽방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의료적 피로도가 높아서 간 분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면담한 분들 중에... 요양병원은 막아 놓으면 안 되는 거고, 사실 더 나아가서 지정병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인터뷰 중)

노숙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확대

- 현재 정신보건영역 전문가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 필요

“서울시의 정신보건 쪽 같은 경우가 그쪽 영역들은 이런 노숙인복지 노숙인들을 자기들의 사업 대상으로 생각 안하는 경향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발 안담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 될 수 있을까?”

(최성남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노숙인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

“실은 이게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노숙인복지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은 ‘서울 노숙인 권리장전’에도 있겠지만 서울시민의 권리로서의 어떤 거를 받는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복지건강국, 정신건강국이 있거든요. 정신건강국에서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활 지원과인 노숙인복지과랑 같이 협업해서 이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한 어떤 계획들, 어떤 통합적인 계획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화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노숙인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통합에 초점 두고 발전해야.

“노숙인 정신건강영역은 거리 만성노숙인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야 함을 제기합니다. 노숙인들이 치료를 하면서 탈노숙하고 주소가 결정되면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구에서는 거기에 맞는 복지 시스템이 정신팀이 갖고 있는 시스템보다 더 나아요.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들이 탈노숙해서 일반 서울시민으로 돌아갈 때 이분들에 대한 정신 질환 치료 및 복지 관리 면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정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인터뷰 중)

- 중앙정부차원의 노력 강화

“제일 효율적인 것은 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지역에 관내에 있는 노숙인 정신건강문제까지 같이 케어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한 인력은 거기서 위기대응콜이나 아니면 거리아웃 리치팅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계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이걸 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정신건강팀의 전국적 운영과 컨트롤타워 필요

“지방에서도 저희들 다시서기에서 했던 것처럼 벤치마킹 한다든가 해서 지방에 있는 정신질환 노숙인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던 이분들이 빨리 탈노숙 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었으면 하고 그러려면 각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좀 각별한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노정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인터뷰 중)

정신건강팀의 임시적 조직형태를 지속적 조직형태로 조례에 반영

“좀 아쉬웠던 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노숙인들은 정신 질환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임시적인 조직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조직도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조례에 반영을 시킨다 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근데 그걸 단순히 일회용으로 원포인트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항구적으로 노숙인이 존재하는 한 그 팀도 존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병우 前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범 부처 차원의 협력 방안 찾아야

- 부처간 정신건강센터 및 운영위원회 등 협력체계 신설

“복지쪽 업무는 자활지원과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신건강쪽에서 보건의료정책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TF로 운영을 하든,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정신건강센터를 둔다면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양쪽에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병우 前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서울시 복지건강국과 정신건강국 차원에서 통합적인 정책 수립해야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노숙인복지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은 ‘서울 노숙인 권리장전’에도 있겠지만 서울시민의 권리로서의 어떤 거를 받는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복지건강국이, 정신건강국이 있거든요. 정신건강국에서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활지원과인 노숙인 복지과랑 같이 협업해서 이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한 어떤 계획들, 어떤 통합적인 계획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화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복지정책실 차원의 대응과 협조 강화

“지금은 이제 복지정책실 내, 다른 시민건강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라든지 협조 강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지역정신복지체계와 협력관계 구축 및 서울시 주무과 협력관계 강화

“우리 정신건강팀이 일단은 같이 상담을 하고 치료 연계를 하고, 그리고 좋아지면은 주소를 획득할 수 있는 일까지는 우리 팀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소를 획득하고 그 노숙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탈노숙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보살펴 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분들이 치료를 하면서 탈노숙되고 주소가 결정되면은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각 구에서는 거기에 맞는 복지 시스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보단 좀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정책 하는 과에서 자활지원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상호 협조적인 체계 안에서 이거를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들이 탈노숙해서 일반 서울 시민으로 돌아갈 때 이 분들에 대한 정신질환을 치료라든가 관리 이런 것도 좀 더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정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인터뷰 중)

공공 정신건강체계에 홈리스 부분 의무적 포괄해야.

“기본적으로는 공공 정신건강 체계에 홈리스 부분이 당연히 포괄되도록, 그런데 지금 포괄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무화나 공공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커뮤니티케어니 뭐 아니면 찾아가는 복지니 하면서 ...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자원투입량은 굉장히 늘어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 그 지역 내의 홈리스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책임지도록 하는 의무조항 같은 것도 좀 들어가야 한다. ... 아마 조만간에 어쨌건 시설들도 분화를 해야 되고 요양시설들도 다 분화가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노숙인 시스템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할 거란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정신건강 시스템으로 해야지 ... 뭐 장기적도 아니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노숙인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으로 묶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까지 과정에서는 임시로 두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서울시 노숙인 시설보호 정책의 발전방향

<홈리스에게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숙소! 숙소개념을 무엇으로 잡을지 논의해야.>

집을 떠난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홈리스 서비스의 제일 가장 코어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숙소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처음에는 쉼터 형태로 한국만 존재하는 그 98년 99년 그 시기에 엄청나게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우선 공원에 텐트치는 거 보다는 이쪽이 낫다 이렇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랑인시설의 역사가, 대규모로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집과 유사한 숙소의 제공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이 개념을 만들어 내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 개념이 지원 주택이던 아니면 그냥 숙소든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에 좀...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시설 운영, 환경 개선의 방향

- 시설의 규모, 건축물 크기 등을 고려한 예산지원 필요

“시설의 규모랑 건축물의 크기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100프로 그걸 다 인정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인원수를 식사문제도 이런 건 인원 문제로 해결하되 고려 사항에 어떤 시설의 건축물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최건우 은평의마을 실무자 - FGI 중)

- 자활시설도 노숙인 독립공간 제공, 실무자당 보호인원 줄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그분들이 원하는 게 2평에서 좀 높이 잡으면 2.5평. ... 그 안에 화장실까지 들어 있는 게. 근데 그래도 그런 쉼터들에 대해 어떤 시의 예산편성이 돼서 자활시설이 이제 좀 전문화가 돼야 한다고,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 다 차별화되는데, 자활쉼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맨날 얘기해보면, 뭐 취업해라, 저축해라, 임대주택 입주 준비해라. ... 근원적으로 맨날 50명당 1명, 40명당 1명 상담하는 게 아닌 정말 인원의 기준치를 낮춰서 기존 직원들 유지를 하고 인원을 조금 더 낮춰 나가는”

(김옥 자활주거복지센터 실무자 - FGI 중)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시설 환경 마련 필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고 좀 더 인권적이고 좀 더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인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들도 변화해야 되는 거죠.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지원받아야 될 노숙인들의 서비스 권한이 제한된다는 얘기가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의무감을 갖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시설 종류별 전문화의 방향

- 시설의 방향, 다양한 노숙인에 맞는 세밀한 유형화 필요

“아직도 조금 세분하게 유형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작업은 지금도 필요하고 그 조금은 그 자활쉼터 자체도 좀 필요한 분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활쉼터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존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시설을 만들기가 힘들니까 통합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유형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 봐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도진 양평쉼터 원장 인터뷰 중)

- 재활, 자활의 유형 구분 외에도 중간단계 시설유형 필요

“남성 쪽은 이렇게 좀 비전트레이닝센터 아니면 좀 소규모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이 있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할 만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정우 열린여성센터 실무자 - FGI 중)

- 주요 노숙지역 외에도 일시보호가 가능한 시설 필요

“저희는 지역적 특성이 좀 있어요. 다른 곳과 다르게. 인근의 서초, 송파, 강동구 3개 구를 통틀어서 유일한 시설이에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다 폐지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숙인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노숙인들

상당히 많습시다. 인근 임대주택에 사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사실은 알코올중독자고 이전에 노숙인 생활 시설을 다 이용했던 분들. 이제 이분들이 가끔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얘기하시고,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도 하고 ... 저희가 시설을 비워두고 차로 갔다가 서울역에 모셔다 드려야 해요. 그럼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에 또 와 계세요. ... 일단은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설의 외형이나 성격이 달라져야 할, 저희는 자활이지만, 최소한의 일시보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창수 강동희망의집 실무자 - FGI 중)

- 요양시설은 전문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필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상당수가 사실 퇴소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되시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엔 요양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노숙인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로 전환이 돼서 그분들도 말하자면 등급 판정 하면 다 혼자 생활 어렵다고 나오거든요. 그분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걸 전부 다 노숙인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요양시설 전문화로 입소인의 인권 증진할 필요

“노숙인이라는 이름 하에 정신,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 모든 걸 다 깡그리 넣어서 이걸 공통적인 그 해당 복지 분야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해결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노숙인시설에 근무 하는 직원이나 그 입소하는 분들에 대한 학대라고 봅니다.”

(최건우 은평의마을 실무자 - FGI 중)

- 재활·자활시설의 변화 방향, 교육훈련이나 지원센터 기능 중심으로

“할 수만 있으면 노숙인 복지 영역에 가능한한 단기간 있게 하는 것이 좋다. ... 갈수록 통상적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의 연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사람이 군대도 아닌데 여러 한 공간에서 자고 정해진 대로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이런 거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시설들 경험은 굉장히 짧을수록 좋다... 시설은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응급보호, 그다음에 본인이 혼자서 일상 생활할 수 없는 분은 요양,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 경험들은 가능한 짧게 하고, 주거지원 통해서 지역사회로 가게 하고, 현재 있는 시설들은 어떤 교육훈련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센터 이런 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남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자활시설의 발전방향, 전환 서비스의 근거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의 전환이기도 하고 거리에서 지역으로 가는 전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금 시설 내에서 서비스만 제공했던 시설 내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지역사회 주거로 전환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시 시설 내에 계신 분들이 안전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심리상담이라든가 뭐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재노숙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까지 시설이 거점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저는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현재의 자활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환경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환경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영역까지 좀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시설의 정원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사 인력이 남는다면 이 인력들은 지역의 전환 서비스로 배치되면서 그 역할들을 좀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서정화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자활시설, 어떤 서비스가 되고 어떤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자활시설에서 밥을 해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초기에 우리가 워낙 많이 입소시키는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몸도 서로 간 공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밥이라도 빨리빨리 해드리자 그래서 한 건데 그게 끝났으면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10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거리에 나와 있으면 이분들이 어쨌든 숙소로 와서 자고 그러면 맨 침에 해야 될 게 의식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그런 거를 지원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여기는 공동숙소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어떤 서비스가 되고 어떤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고 하는 것은 ... 답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대형시설의 분화, 지역사회 주거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우리 나라에서 대형시설은 이제 그 사회적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숙인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장애인시설이건 정신요양시설이건 다 포함해서 대형시설은 이제 분화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추세이고 그렇다면 노숙인시설도... 시설이 불필요하진 않습니다. 단기보호라거나 시설들의 역할들은 있으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주거지원이라는 것으로 노숙인 분들의 거처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로 역할들을 지역사회 역할들을 바꿔가야 되는 게 방식이지 뭐 몇 백 명을 한 군데 모아서 거주시키면서 서비스로 주는 지금 이런 방식의 역할들은 앞으로 좀 장기화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숙인만큼이나 장기시설거주자, 장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없는 대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시설보다도 더 빨리 지역사회기반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시설의 역할 전환

- 지역사회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시설이 중간역할 해야

“물론 지역사회 인프라가 있는데 왜 자꾸 노숙인 테두리 안에 이렇게 자꾸 걸치려고 하느냐, 문제제기는 맞지만 지역사회에 인프라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례관리가 그렇게 잘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리고 노숙을 경험했던 분들의 특성은 위축이 많이 돼 있으시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저희 노숙쪽 기관을 자꾸 찾아와서 의존을 하게 되는 이것도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맞게 저희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지역사회니까 가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문제가 안돼서 찾아오시면 저희 쪽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문정우 열린여성센터 실무자 - FGI 중)

- 재가복지 영역의 서비스 구축해서 지역사회 복귀를 조력하는 역할 필요

“노숙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 영역의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관공서도 혼자 찾아가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못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결국 우리는 지역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탈시설하는 게 목적인데, 주거에 계신 분들 ...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할 서비스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해 나가는 과제가 필요하고.”

(김욱 자활복지센터 실무자 - FGI 중)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역할을 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노숙인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장애인시설이건 정신요양시설이건 다 포함해서 대형시설은 이제 분화가 되어야 되는 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노숙인시설도 시설이 불필요하진 않습니다. 단기보호라거나 시설들의 역할들은 있으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주거지원이라는 것으로 노숙인 분들의 거처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로 역할들을 지역사회 역할들을 바꿔가야 되는 게 방식이지, 몇백명을 한 군데 모아서 거주시키면서 서비스를 주는 지금 이런 방식의 역할들은 앞으로 좀 장기화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숙인만큼 장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없는 대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시설보다도 더 빨리 지역사회기반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는 지역사회 이용공간, 노숙인 종합복지관이 되어야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 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부랑인시설, 요양시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노숙인 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서 갖고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고 가시면 된다. 그런 개념의 시설로 바꾸면 된다. 근데 가서 주무실 수 없는 분들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 된다. 노숙인이 필요해서 여기 오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하면 돼요.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하게, 정서프로그램 원하면 그거 해주고, 의료지원 필요하면 의료지원 해 주고, 주거지원 필요하면 주거지원 해 주고, 고용지원 필요하면 고용지원 해 주고, 급식이 필요하면 급식을... 생활시설이 아니라도 노숙인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보현의집에 와서 그 욕구를 해결하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임도영 영등포보현의집 원장 인터뷰 중)

시설운영 제도개선 방향

- 단계론적 서비스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델 생성해 내야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상담해서 분류한 다음에 자활할 사람은 자활실험터로 보내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요양시설로 보내고, 그리고 요양시설서 좀 지내면 재활시설로 가고, 이 단계 별로 갈 거로 적적적,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항상 논의를 해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항상 아무도 작동 안했어요. 연계가 하나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맞느냐는 거에 대해 서구에서 논쟁이 많습디다. 사람이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요양시설에 가서 바로 자활할 수도 있고, 또 재활시설에 가야 될 사람이 지원주택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서 영원히 자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단계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원히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최대 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상정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제안도 하고 공간도 만들고 모델도 만들어 야지, 요양시설은 이거만 하고, 자활은 그 다음 자활로 보내고, 재활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 단계론적인 관점, 이제는 좀 떠날 때가 아닌가.”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시설 서비스 체계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노숙인들이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을 거쳐서 시설에 가지를 않아요. 종합, 일시를 중심으로 도는 노숙인분들과 시설로 도는 노숙인들이 트랙이 달라요. 그래서 종합, 일시에서 머물면서 이 수준의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는 노숙인들에게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시설을 계속 전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좀 강력하게 지역사회로 밀어내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체계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야지...”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 노숙인 욕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해야

“노숙인들 욕구가 어떤 거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숫자만 셀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조사에 바탕을 둔, 그리고 어떤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성과에 바탕을 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된다...”

(최성남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시설 지원의 잣대에 지역사회 사례관리 인원을 추가하여 전환의 동력 마련해야

“기존 시설이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고 그에 따른 인력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몇 명 재우고 있느냐잖아요. 이걸 ... 기존에 수십년에 걸쳐 지원의 잣대였는데... 자활시설들은 역사가 되면, 5년 이정도 되면 지역사회에 꽤 많이, 주변에 머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간헐적이지만 사례관리, 사후관리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위기 상황이 생기면 개입도 하고 잘 지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나가서 완전히 지역사회에 편입되기 직전에 사례관리 활동을 어느 정도 퍼센트의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면, 내가 여기서 많이 데리고 있어야지 하는 욕심보다는 내보내서 사례관리 해야지라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독려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그 환경을 개선하면서 개인 공간을 주고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인원에 대한 여분의 노력을 지역사회에 나간 사람들에게 좀 쏟고.”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 외국인 노숙 등 새로운 유형의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 모색해야

“한국에 일하러 오셨다가 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외국인을 대상에 넣지 않지만 거리에서 당장 주무시고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응급적으로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무부나 외교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들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을 위한 전용 시설, 외국인들 보호하기 위한 전용 복지 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냥 임시주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같이 좀 필요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같이 적절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시설 기능의 전환 지원해야

“자활시설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노숙인시설 영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환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근데 전제조건은 그 정도의 하드웨어와 인력구성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있는 그 시스템에서 그냥 이름만 딱 바꿔서 자활을

재활로 바뀌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재활시설은 분명히 재활시설로서의, 자활하고는 좀 더 다른 시스템과 여건들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그 이름만 문패만 바꾸는 식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 웨어 강화 방안

- 노숙인시설 환경개선과 자립프로그램 강화 필요

“저는 시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다만, 이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노숙인시설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보면은 고시원보다 못한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할거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의 변화로...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 생활공간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런 공간을 해결해 주면서 시설내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면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그리고, 그분들이 좀 자기의 자립이나 자활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가지고 진행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김도진 양평심터 원장 인터뷰 중)

- 면밀한 평가, 밀착사례관리,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고민해야

“사회복지사들이 밀착 사례관리할 수 있는 업무역량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대상자에 대한 멘탈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방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없이 대상자가 또 워낙 계속 장기적으로 사례관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리에서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잇을 만하면 또 교도소 갔다 또 나오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뭐, 이렇게 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영역 안에서 만들어야 좀 낫지 않을까?”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시설의 전문화 방향, 다양한 직군 보강으로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추구해야

“우리 노숙인 사업이 종합복지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어, 가족에도 문제가 있어, 실업 상태고, 해체 돼 있고, 나이도, 이제 신용불량이고... 다 이런 사람들에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데 시설의 종사자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회복지사,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원? 그리고 간호사, 의사, 이런 영역들이 시설관리를 위해 이런 영역들이 들어오는데, 다른 영역의 종사자들이 배치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간호사나 직업상담사나 그리고 다른 영역,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영역의 종사자들이 이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임도영 영등포보현의집 원장 인터뷰 중)

- 시설 실무자의 실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배치 필요

“자활시설에서 밥을 해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초기에 우리가 워낙 많이 입소시키는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몸도 서로 간 공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밥이라도 빨리빨리 해드리자 그래서 한 건데 ... 상담하고 직업 알선 해주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늘리고, 밥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밥 해주는 사람은 늘고 있잖아요. 조리원 대신에 조리원 없애고 직업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고 이런 사람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변화가 있다.”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실천방법, 매뉴얼을 고민해야

“지역사회로 갔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 그 매뉴얼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걸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노숙인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네 낙인이 되면 못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구요. 탈시설에 맞춰서 그분들에 대한 지역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도진 양평심터 원장 인터뷰 중)

서울시 노숙인 재활·자활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노숙인의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 개별 프로그램을 묶었을 때 노숙인을 위한 전체적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프로그램은 서비스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프로그램들이 다 묶었을 때 하나의 전체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딱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파편적으로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설이건 거리현장에 기반하는 조직이건 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홀리스의 입장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총괄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각의 배치를 해야.”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노숙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왜 시설평가 때 굳이 교육적이고 재활적이고 또 뭐 자활적인 실적 위주의 성과 위주의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분들 있잖아요, 맨날 일하고 저축하고, 임대주택 가기 위해 매일 일만 하고, 갔다 오면 또 앉아서 또 교육. 나도 받기 싫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일용직 갔다 와서 피곤한데 씻지도 못했는데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그런 상황의 일정에 맞춰서 빨리 밥 먹고 7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다 없애버렸어.”

저는 생활체육 분야를 선택을 했어요. 볼링을 같이 치러 갔는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겼다고 하이파이브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 처음에는 우리가 끌고 가지만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동호회 만들어주면 자기네가 있는 기간동안 서로 소통하게 되고 같은 방에 있는데 대화도 안하는데 그걸 하면서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 이게 진짜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조금은 그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여유라든지 자기 모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그분이 원하는 걸로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 년수로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 결국엔 다시 돌아온 게, ...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알아나가는 과정 속에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관계성을 실제 몸으로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김옥,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실무자 - FGI 중)

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본적 프로그램 예산 지원 필요

- 예산이 수반된 서비스 최저기준 현실화 필요

“그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것들이 좀 현실화 되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복지부가 해라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를 조정해라’라는, 예산이 수반된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노숙인시설에 일정한 규모의 프로그램비 예산이 지원되어야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소소한 문화생활, 여행, 여가. 그리고 이게 왜 자활에 도움이 안 돼요?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는 시설에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하는 프로그램비를 내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못해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내려주고,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냐, 그것부터 넘겨받아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좀 집행을 좀, 시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느냐.”

(문정우 열린여성센터 실무자 - FGI 중)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들마다 어떤 부분을 특화시키는 거죠. 이제 대인관계를 가르치는 시설이 있고, 금전관리를 가르치는 시설이 있고, 시설별로 나누는 거죠. 그런 업무를. 시간표를 짜서 A시설에 가서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B

시설에 가서는 사회기술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시설에서 모든 걸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술을 나한테 필요한 기술을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깐 스케줄을 짜서, 이 시설에서는 무슨 기술을 가르키면,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 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날짜에 거기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동해 기술도 배울 수 있지만 대인관계 기술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나병우 前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는 성과지급 방안 고려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적어서)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게 일자리갖기사업 참여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의식 성프란시스 인문대학 대학 참여자 인터뷰 중)

“이용자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모티브, 성과제도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예전에 했던 희망플러스, 매입입대주택 입주권을 준다거나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수 강동희망의집 실무자 - FGI 중)

민간, 현장도 함께하는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구성과 선정 기준 마련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심사의 합리적 기준, 현장도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

“어느 순간부터 그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심사할 때 그 공무원이 기본 잣대를 주고, 심사에, 초반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사를 함께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쪽 받아가지고 이거 이거 안 된다고 날리고 그 나머지를 갖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심사위원회를 현장이랑 같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노숙인들에 맡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판단할 경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심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김진미 디딤센터 시설장 - FGI 중)

- 관 주도 예산배정의 경직성 탈피

“초창기에는 어쨌든 민이 들어가서 심사도 하고 관리 제안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주도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지정하고 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경직된 프로그램 지정 운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필요

- 프로그램의 평가와 확산 필요

“우수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서 각 시설에 사이즈나 규모에 맞게 전파 한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수집하고 도출해서 필요한 좀 더 적절한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뭔지를 계속 매년마다 평가하고 수행해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 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 프로그램의 성과 성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필요

“프로그램은 그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힘든 거잖아요. 몇몇이 참가했는지가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아니잖아요. 실적과 무관한 성과의 영역이 있는 건데. 좀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게 확인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지 않나? 그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막상 필요한 프로그램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용인들에 그 어떤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헷갈리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과 이렇게 정말 노숙인들의 삶의 질 혹은 노숙인들의 독립생활에 유의미한가를 좀 성찰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의 발전방향

이태진 외, 2017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

- 노숙인의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조성 구축이 필요하다.
- 노숙인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위한 각 시설별 고용업무를 설정하고 아웃리치나 취업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지원하며 고용알선 된 노숙인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별 업무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위임받은 노숙인 복지시설 포함)의 고용업무는 각 시설에서 연계를 받거나 고용획득을 위해 직접 내방한 인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 노숙인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많은 고용 기회와 더 적극적인 발굴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시적 일자리, 공공이 제공하는 일자리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숙인에게 제공되어 왔던 일자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시점이다.

-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맞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논의 필요

“저는 이제 특별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저씨들 인터뷰를 해보면 특별자활근로에 대해서 대개 특별자활근로를 주면 급여로 방을 얻도록 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방 얻고 나면 돈이 한 20만원 남으니까 대부분 무료급식하면서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3개월이면 끝인데. 3개월 지나고 나면 끝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있다가 다시 또 특별자활근로를 얻으면 방을 얻고 또 무료급식을 하고. 요 트랩을 계속 도는, 거리 쪽에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은 일부는 8시간 일자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한테는 요 정도 일자리가 딱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자활근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 건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특별자활이라는 형식의 4시간 정도의 일자리 한달에 60시간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 그런 사람들의 그룹은 어느 정도이며 그럼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서정화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 FGI 중)

공공일자리 확대 필요하다.

- 일자리 참여 기회가 많아졌으면...

“일자리갯기사업 참여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일정한 벌이가 생기면 임대주택을 들어간다는지 고시원에 있든. 고시원에 있어도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주의식 노숙 경험 당사자 인터뷰 중)

- 근로강도 높지 않은 일로 생활 유지를 원하는 층에 맞게 공공 일자리 확대할 필요

“상당수의 분들은 사실은 특별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정도의 근무량과 이 정도의 급여 정도라면 제가 충분히 생활 가능해요. 해서 이거 자체를 자기가 직장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 단계로 해서 민간일자리를 가주면 가장 좋지만 그 수는 많지 않고, 대다수의 분들을 봤었을 때는 공공일자리에서 이분들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공공영역에 이런 일자리를 좀더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지 않겠느냐. ... 확대하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노숙인 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분들에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닐까?”

(유태성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노숙인에게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 노숙인 사회적기업을 만들 필요

“예를 들어 지금 노숙인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이*철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지금은 청소업을 해요. 거기서는 술 먹고 2주쯤 안 나와도 양해가 돼.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가족의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정신질환, 1~2주 결근하고도 복귀가 가능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낙인이 없어 이놈 저놈 하고 살아도 그래도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기업은 3일을 무단결근 하면 쫓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그 나름의 가치가 또 있거든요. 그니까 역시 우리가 뭐 ‘시설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거리노숙 해요’라는 것처럼 레귤러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는. ... 그렇게 두바퀴에서 30명, 빅이슈에서 7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이분들끼리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 가끔 알코올 재발하고 가끔 확 조현병이 왔다가는 분들, 가끔 은평병원 갔다 와도 눈치 안 보려면 우리끼리 일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 거예요.”

(기재일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양질의 일자리 발굴해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활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거죠. ... 나한테 참 좋은 기회가 왔다. 이걸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느끼게 해 주면 그런 일자리를 주는 것이 일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자활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기재일 서울시 공무원 - FGI 중)

- 노숙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자리의 발굴이 필요

“노숙인들한테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자리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자리. 내가 사회에서 역할을 하거나 예를 들어 보면 가장 많이 침단이 아닌 인력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경비라든지 건설현장 일용직, 청소직 등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적합한 것 같고 잘 선택하여 맞으면 행복할 수 있죠. 그리고 취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인테리어 필름전문가, 도배전문가, 타일전문가, 배관공, 요리사, 세차 왁싱전문가, 커피바리스타, 에어컨 설치사 등 노동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직종과 더불어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일이 적합한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호영 가재울쉼터 원장 인터뷰 중)

③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는 창간 이후 800명 이상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잡지로, 연간 100여명의 홈리스 판매원에게 잡지판매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였는데, 창간 준비를 하던 빅이슈코리아는 2010년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7월에 <빅이슈> 한국판 창간호를 발매하였다. 2014년부터 매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있다.



일자리와 함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 동기부여, 교육 등 보완 필요하다.

- 노숙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필요

“특별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생계유지를 해서 생존권 보장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어쨌든 간에 동기부여 기반을 만들어 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대신 그 특별자활근로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건가? 우리가 항상 고민했듯이 그냥 일자리 만 특 주고 단순한 일자리 하나 주고 월급여를 아주 단순히 생계비만 챙겨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관리와 배려들이 필요한 거 같고요. 일자리갯기사업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일자리, 특별자활근로 끝나고 나서 그 상용일자리로 넘어가기 전에 필요한 징검다리 일자리에 대한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데, 한 가지 더 딜레마에 빠지는데 실제로 이분들 입장에서 참 좋은 일자리인데 이게 관에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그 상용직보다는 워낙에 편하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국은 계속 노숙인 일자리를 맴돌게 만드는 챗바퀴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는 여기에도 우리가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데서 주어지는 것처럼 뭔가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높은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 정서적 지지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시키기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점들 그리고 더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확보하는...”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인터뷰 중)

- 노숙인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할 지원금 제도 필요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분들은 취업하면 장려금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사실 노숙인분들이 민간 일자리에 가기는 너무 힘들고 이분들도 지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최성진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 취업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지금까지 민간취업이 몇 분 했느냐, 취업을 거기에 따른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률보다 취업 유지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 제도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처럼 대중들 인식도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나 제도적으로 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희석 영등포보현의집 실무자 - FGI 중)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 민과 관이 협의해 일자리 정책 로드맵과 전달체계 만들어야

“지속적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가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 다양한 일자리 정책은 지금 있는 특별자활근로는 이런 시스템, 서울시 일자리는 요런 시스템, 또 새로운 민과 관이 투자하는 50:50의 일자리 시스템. 영리 영역에도 사실상 임금을 저쪽에서 50% 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과감하게 보내야죠. ...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는 개발해야 되고 ... 제가 봤을 때는 특별자활근로에서부터 민간일자리사업으로 가는 이 전달체계를 민과 관이 대토론회에서 일자리 전달체계 시스템을 5년, 10년 준비해서 만들어야 100년을 대계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 안으로 노숙인들이 이렇게 자기 위기에 빠졌을 때, 아, 이 시스템으로 들어와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이호영 가재울심터 원장 인터뷰 중)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로 근로이력 관리 필요

“작년 초반까지는 웅달샘에서 하다가 특별자활하다가 그다음에 한강으로 갔고 한강에서 결근율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왜냐면 공무원분들이 하도 입력들을 안 해주셔서. 일단 한강을 마친 것까지는 나와,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거기서 빠지고 나오면 다시 이번엔 브릿지 가서 자활 했네, 웅달샘엔 늦었나 보다, 브릿지 가서 하고, 올해는 어디? 가락시장 가서 청소하고 있구나. 이력이 보이는 거죠. ...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다면 깜깜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일자리 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돈 좀 들어서 고용노동부랑 얘기해서 워크넷을 끌어오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재일 서울시 공무원 - FGI 중)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활성화시킬 거버넌스,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 노숙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역사회센터와 노숙인 일자리 연계 방안 찾았으면

“현 노숙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사회센터가 원래 하는 운영시스템과 안맞고 뭐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그 노숙인 분도 노숙영역 외에 어쨌든 복지관이든 지역사회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접촉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숙에 대한 이해들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용산에서 하면서 안에 자활센터가 많이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노숙인 출신이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노숙에 대한 이해들에 대해서는 딱 담을 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각자 영역에서도 해야 되지만 노숙 쪽에서도 어쨌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고, 노숙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좀 끊임없이 시도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만 용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FGI 중)

-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제도적 지원 통해 발전시켜야

“어쨌든 노숙인 일자리 영역에서 지역사회로 갔을 때 지역사회에 잘 받아서 안아서 잘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금방 나갔다가도 금방 돌아오고 지역사회센터 갔다가도 금방 다시 노숙으로 돌아오고 민간일자리 갔다가도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공적 영역 안이라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센터라든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사회나 노숙인시설이 모여서 공적인 체계로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라든가 정부든 지자체든 이 자체를 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이종만 용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FGI 중)

- 사회적 경제조직들과의 협력방안 찾자.

“사회적 경제조직에 우리 인력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 그것도 저는 적극적인 일자리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오히려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노숙인들에게 하루에 4시간 일자리 한 달에 60시간 일자리 또는 하루에 8시간 일자리 대신에 12개월 지원하고 퇴직금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자리를 받아 안을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회적기업들을 공모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서정화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 FGI 중)

국가의 일자리 시스템에 노숙인이 장애없이 접근하는 트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일자리 사업 전반에 노숙인이 낙인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일자리 사업 전반에 노숙인들이 낙인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노숙인일자리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일자리의 품질이나 정규성이나 이런 게 때면 약하고 해마다 사실 공공근로 신청하는 식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기존의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노숙인이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트랙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은 관심이 많으니까 그 예산의 비중이 다른 지자체가 없어도 막 높은 거는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노숙인한테는 별도의 일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라는 논리처럼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노숙인 일자리라고 따로 섹터가 있지 않도록 바뀌 가는 게 지금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없애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기존의 일반 일자리사업에 노숙인이 들어갈 수 있는 트랙들을 같이 연결하는 걸 보강해 가면서”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서울시 노숙인 주거정책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발전방향

거리에서 집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거리노숙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패스트 트랙, 주거라는 걸 기반으로 이분들의 생활을 좀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패스트 트랙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주택을 공급하는 데 행정적 문제라든가 질환의 문제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보다는 좀더 신속하게 이분들이 거리노숙 쪽에서 탈피할 경로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개별 특성에 맞게 사정을 강화하고, 바로 자립이 가능하시면 주거 지원이나 아니면 이미 만성화 되신 분들은 지원 주택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거지지원은 주거지원 대로 이 분들이 더 만성화 되지 않게 강화해주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돼야

“삶의 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첫 단추가 바로 주거지원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동안 해왔던 매입임대 주택사업이라든지 임시주거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비용 대비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지원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들이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보건복지부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지역커뮤니티 케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묶어줘야 해요. 솔직히 노숙인이 탈노숙을 한다고 해도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고 상담하고 지역 자원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좀 더 보강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한 법제화 필요

“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준점이 되거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반영돼야”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

- 주거급여의 확대로 이어져야

“임시주거지원을 만든 거 자체가, 이분들이 주거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다른 시스템들은 굉장히 경직돼서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좀 신속성이 있는 제도로 포괄이 되어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게 주거급여로 연결되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야, 서울시 예산부담 문제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주 불안정한 프로그램에서 그래도 법 근거를 가진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임시주거의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건물 매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저렴하게 도시빈민들이 어쨌든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도시빈민들한테 서비스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쪽방·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공공성이 있는 주택확보방안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민간의 고시원 쪽방을 활용해서 그 동안은 다행히도 잘해오긴 했는데 뭔가 여기보다는 공공적인 개인이나 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여야 되는. 그러니까 고시원을 사는 것도 좋고요.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쪽방 5년 했던 것처럼 고시원도 한 5년 정도 정부가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보다는 덜 소모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진미 디딤센터 원장 - FGI 중)

- 실적보다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간 등 제도를 재구조화 해야

“거리에 안 계시게 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이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의 성격이 강한 거 같아요. 지금은 없었지만 거리노숙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되고, 자활계획서를 써야 됐고, 입주 기간도 2개월씩 해서, 연장심사를 해서 3차까지 해서 6개월간 보호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평가를 하고 재구조화해서 효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900명 명수를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이분이 다시 노숙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례관리의 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임시주거도 3개월 정도 지원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 쉽처럼 1년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2분의 1정도, 6개월 정도는 지원을 해야 사례관리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뭔가 조금 더 나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실제로 공간만 그렇게 이동했지 그 이외에 어떤 서비스가 많이 촘촘하게 제공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 각 구청별로 위기 시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24시간 365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영등포 정도에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전체 자치구 구청에 설치하면 제일 좋겠다 생각합니다. 계속 연계처를 찾아야 되고, 찾아서 그쪽에 받아달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청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보호했다가 통합사례든 부서별로 상담 해서 이 분은 치매, 단순 가출 이런 식으로 바로 연계를 하고, 또 그걸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무자 - FGI 중)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발전 방향

-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의 지속적 확대 필요

“물량이 적다보니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가장 하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 안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 일각에서는 노숙인 취약계층 임대주택이나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로또를 맞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박성희 비전트레이닝센터 실무자 인터뷰 중)

“매입임대주택은 앞으로도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홀리스에 대해서 오고 있는 물량을 지금처럼 홀리스형 얼마가 아니라 좀 큰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늘 그렇게 오도록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장기적 관점에서 사례관리 주체와 지역 통합성 고려 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례관리의 부담은 노숙인 복지 쪽이 아니라 주거복지 쪽, 소위 전통적인 주거복지 영역 혹은 뒤 지역사회복지 쪽에서 맡아야 될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시설의 벽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노숙인 주거복지센터 내지 노숙인 사례관리센터들이 좀 있어서 폭넓게 권역별로 이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센터들이 필요하고, 노숙인복지 영역에서 하든 아니면 주거복지 영역에서 하든 아니면 지역사회 자치구 중심이나 찾동 차원에서 서비스가 되든 강화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성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구요.”

(이진산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중)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문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 마련 필요

“정신관련 문제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게 그 빠르게 진행되는 서비스가 됐으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매입임대 입주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신 알콜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20프로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걱정서비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보면 어떤 사고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책임은 조금 더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매입임대 같은 경우 아니면 어떤 주거복지에서도 많은 영역들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우형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 - FGI 중)

지원주택 향후 과제 및 발전방향

- 주택과 서비스 예산의 확보가 관건

“관건은 주택과 서비스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현장이 지원 주택 관련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줘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주거 중심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적절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방식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숙인복지 전문성 가진 분들이 얼마나 지역사회 주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투입해 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 지원주택이란 형태가 시설을 대체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 기반을 만드는 데는 번외의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공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걸 계속 이제 추동해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 진입장벽을 더 낮춰야

“입주자 선정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분들이 진단을 꼭 받으셔야만 지원주택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거리에서 정신질환이 계신 분들 누가 봐도 정신질환이 계신 분들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진료를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에서 생활하시지도 않고요. 입주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성희 비전트레이닝센터 실무자 인터뷰 중)

“진입장벽을 더 낮추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증금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주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사각지대 차원에서 말씀인데 노숙 쪽만 그런 건 아닌데 시설장의 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사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동현 홀리스행동 활동가 인터뷰 중)

지원주택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지원주택의 근거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아직 지원주택의 시설수준과 내용, 입주자선정, 임대료 부과 및 지원,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이 구체화돼 있지 못하다. 특히 지원주택의 수혜대상을 장애인, 노숙인, 노인 등 사회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확한 대상이 규정돼 있지 못하다.

둘째, 지원주택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세제 및 민간 공급자(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선진외국의 경우 지원주택의 상당수는 비영리 법인 등 민간 단체가 핵심 운영주체다. 지원주택제도의 정착을 위해 대안으로 기존 관련법령을 통합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권과 복지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돼야 한다.

- 하성규, “지원주택의 기능과 과제”, 한국아파트신문(2017.08.16.)

■ 쪽방 지역 정책 발전 방향

○서종균 외, 2013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서울특별시

- 쪽방상담소의 지원은 아직 긴급한 소요에 대한 자선적 지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거주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지와 주거부문의 각 부서별로 제공 되는 지원의 결합을 통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비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와 관련된 개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개입이 저렴한 거처의 감소나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고안해야 한다.

쪽방의 미래, 도시 재생? 이주 대책?

- 임대 아파트 타운 형성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

“쪽방촌이 어떻게 보면 개발 예정 지역이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시에서 힘들면 중앙정부하고 같이 50:50 해서 다 매입을 한 다음에 쪽방주민들 복지타운, 임대 아파트 타운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언제부터 했냐면요, 쪽방상담소가 생긴 초창기부터 매입을 해라, 얼마 안된다, (안 팔지 않나요?) 조건을 제시하면 되죠. 여기는 개발한다고 한 지가 30~40년 됐어요. 계속 묵혀 왔으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걱정 수준 제시한다면 팔 수도 있겠죠. 그럼 매입을 해서 복지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면 영등포 쪽방촌 지역에 일반 쪽방촌 주민도 있고 거리노숙인도 있고. ... 생활력이 강하시고 어느 정도 검증되신 분들, 그 다음에 실버 분들이 많아요. 1인가구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수용하고 일부는 청년준다 하면 지금은 지역공동체가 많이 깨졌으니까 인위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바람입니다.”

(김형욱 영등포쪽방상담소 원장 인터뷰 중)

-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방안을 찾아야죠.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 도시환경정비 사업이에요.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가요?) 공공임대 주택으로 다 가지. (질문: 이분들한테 다 임대주택 주면 다 나가실까요?) 몽태기로 보내야죠. 몽태기로. 20명씩 끊어서 빌라 한 동씩 집어넣어 주면 돼요. 혼자 간 사람들은 돌아오죠. 거기서 자살기도 하고. (질문: 거기다 임대주택 지어주면 안돼요?) 그 동자동을 싹 밀고 12층짜리 임대주택을 다 만들자고요? 상가까지 다 밀어버리고요? ... 그래야 주택법에 맞는 주택이 된다고. 최소주거기준으로. 면적 계산하면 돈의동에, 아주 심플한데 3,636 제곱미터예요, 거기 600명 살아요, 복도 빼고 도로 빼고 다 빼고 몇 층 지어야 돼요? 17층 지어야 돼요.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살아요, 자, 건축허가 납니까? 도시계획 변경될까요? 얼마쯤 들어갈까요? 땅값만 한 5000억쯤? 한 사람당 땅이 2억... (질문: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가장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인간다운 취급을 못 받고 살아야 되죠?”

(기재일 서울시 공무원 - FGI 중)

- 쪽방 등 비적정 거처의 개선, 공용개발 방식이 필요하다.

“쪽방을 인정하고 쪽방상담소를 두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연성의 사회복지서비스만 제공할 게 아니라 쪽방이나 주거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등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한 14년 정도까지 했었고 저렴한 쪽방 사업을 17년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집주인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 영등포에 20억 가까이 쏟아 부었고, 저렴한 쪽방도 호당 임차 단가가 천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직접 매입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게 공적자금이 공공 안에서 순환되게 하는 ...

쪽방 개발에 대해서 사실 공용개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름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란 형태로 하는 공용개발이기는 한데 임대주택 안 짓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가서 노숙을 하거나 고시원이나 이런 식으로 빨려들어가는 건데 그런 임시주거지원으로 활용되는 고시원, 쪽방 이런 데를 기준을 만들고, 실제 서울시가 리모델링해서 공급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인터뷰 중)

▪ 서울시 노숙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노숙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최우선을 인권으로 두고 노숙인 권리 장전을 만든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또 강조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숙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쪽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은 언제나 갑에서 을로 침해가 일어나지 을에서 갑으로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활동가들은 갑의 입장을 아무리 읊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우리 관계는 을이지만 ‘노숙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갑이다’ 이런 입장이 있어야 그래야 인권 증진이 권리 장전이 발표가 아니라 실제 우리 노숙인 권리라는 것이 사실상 단어로 있으면 안되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활동가들의 또는 시설 종사자들의 피와 살과 세포 속에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계속 토론하고 이것을 좀 높이기 위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그 서울시도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형식적인 거 말고, 우리 민간단체도 따로 좀 그런 활동을 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노숙인이기 때문에 받는 제도의 제약을 걷어내야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인권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가장 해결하지 못한 거는, 노숙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해결돼야 한다, 이래서 저는 아까 임대주택 입주 조건도 그런데요. 사실은 거기 뭐 가족 수 따지고 누구 부양 따지고 이런 규정이 어떻게 보면 인권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숙인이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인권으로 생각 안하지만 사실 제도가 노숙인이 쉽게 참여하지 못 하게 만든 게 사실은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숙인이라는 생활 조건 때문에 뭔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인권 측면에서 좀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노숙인의 사회권 보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야

“인권위원회가 사회권하면서 이쪽으로 자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사회권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론 더 기본권 위주로 검토를 해요. 시설 방문하면 거기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가정과 유사한 생활을 하는가, 선택권을 넓히느냐 이런 건 통제의 문제가 아니고, 통제나 폭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뒤섞여있죠. 대구희망원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게 섞여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다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정부정책을 얘기하면 결국은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종사자 인원을 늘려야 되고 1인당, 그 다음에 시설 규모를 줄여야 되고 이런 이야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거는 당연히 앞에서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어야 되고 또 일자리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주거도 줘야 되고 하는 게 정부정책 인권 문제고 노숙인 서비스 인권 영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죠. 정부는 그럼 뭐냐 예산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중)

탈시설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탈시설화 내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다 탈시설화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천천히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쉼터들도 그렇고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고 좀 더 인권적이고 좀 더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인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들도 변화해야 되는 거죠.”

(여재훈 前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인터뷰 중)

4장

서울시 노숙인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제별 집단토의(FGI) 기록

1. 거리 분과
2. 시설 분과
3. 일자리 분과
4. 주거·지역사회 분과



4장

서울시 노숙인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제별 집단토의(FGI) 기록

1 거리분과 FGI 기록

일 시 : 2019. 10. 10. 오후4시~6시

참석자 : 이수범(진행/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김진미(디딤센터), 김영택(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박강수(영등포보현의집)

우대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진산(서울시 자활지원과),

최병국(햇살보금자리), 김남영(조사 연구원 /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진행

이수범

저는 거리 분과 소속으로 회의 진행만 맡았습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수범이라고 하고요. 아마 미리 연락을 받으셔서가지고 어떤 자리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두 달에 걸쳐서..., 작년이 아마 노숙인 복지 20년 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노숙인 복지 20년, 특히 정책과 관련된 백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초조사도 하고 개별 인터뷰도 해왔고요.

오늘은 조금 더 심화시키는 과정으로서, 각 시설의 영역별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포커스 인터뷰를 하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설 분과하고 일자리 분과를 진행을 했고요, 오후에 주거 및 지역사회 분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노숙인 복지 사업의 꽃은 거리노숙이지 않습니까? 거리 분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경

안녕하세요. 다시서기 정신건강팀 우대경이라고 합니다.

김진미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에서 일하는 김진미라고 하고요. 99년 3월부터 노숙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김영택

저는 구세군브릿지센터에서 거리 담당하고 있는 김영택이고요. 2010년 3월에 브릿지센터에 입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영

안녕하세요. 저는 백서 연구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브릿지센터 김남영입니다.

박강수

저는 영등포보현의집 일시보호시설 박강수입니다. 저는 2010년 1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요, 자활시설에서도 한 1년 6개월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거리에 대해서 질문지를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시설 쪽에 계속 있어서.

진행

이수범

질문만 조금 어렵게 해놨습니다. 평소 경험을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국

영등포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최병국입니다. 2004년 9월부터 있었고요. 오래 있어도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산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활지원과 이진산입니다.

진행

이수범

오늘 각 분과는 우리 시 공무원들도 같이 자리를 함께했고요. 오전에 일자리 파트 쪽에서는 기재일 주무관이 참석했고, 오늘은 또 이진산 주무관님이 오전 오후 일정이 바빠서 이렇게 마지막 타임으로 오셨습니다. 거리노숙 사업이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오후 시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질문지랑 자료는 미리 다 보셔서 한번쯤 생각들은 해보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겠지만 이번에 만들 자료가 정책 자료입니다. 노숙인 복지 20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정해봤는데, 대부분 2005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진미

보니까 10년 어간에 활동을 많이 또 시작하신 것 같아요.



노숙인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서울시의 거리노숙인 대책

진행

이수범

아마 그래서 이제 2005년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개 선배들로부터 들었거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던데, 그런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맥락은 두 개였던 것 같아요. 98년도 IMF 사태를 거치고 나서 2005년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는 시점과 2011년도 노숙인법이 만들어지고 2012년도에 시행된, 어떻게 보면 그게 노숙인 복지영역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물줄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는 2005년 지방이양화 이후의 노숙인 정책이나 사업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법 제정 전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공통질문으로 담아봤습니다. 노숙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거리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녹음을 해서요. 이름을 얘기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시설 포함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름 꼭 얘기하시고 안 하시면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유발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까 최병국 실장님이 2004년도 입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국

햇살보금자리의 최병국입니다. 2005년에 지방 자치제로 인해서 시설들이 2005년 5월인가에 다 지자체 신고를 했는데요. 그 전에도 재정, 보건복지부 부랑인시설하고 지자체 예산, 재정 예산이 분리돼 있었는데 지자체가 되면서 그게 더 확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있어서, 거리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인 예산이 많이 집중되기 시작한 게 또 200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03년도인가 복권 기금으로 처음 거리에 계신 분들 쪽방 잡았던 게,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했던 게, 2005년도에 상담보호센터 이용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특별자활근로가 시작됐던 해고, 그게 그전까지는 거리노숙인을 24시간 보호하는데 상담보호센터가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심터도 물론 겨울철에 나와서 모시고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로 보호하고 재워주고 식사 제공하는 그 정도의 일과였죠. 계속 뭐 주취자하고 싸우고 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갖기, 특별자활근로가 시작된 게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이양 이후의 변화 - 거리 대책 예산의 증가와 2005년 거리노숙인을 위한 특별자활근로사업 시작>

한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 단위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방하고 차이가 났고 그것 때문에 전국 상담보호센터 5개소하고 다시서기센터하고 모여서 전국단위 회의를 해서 민간에서 거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력적이고 실험적인 내용들을 의견을 모으는데, 아무래도 의견을 내지만 그것을 정하는 데는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났고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

이수범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이양화 되면서 단순 응급구호 형태에서 뭔가 특화사업들, 특히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서울 쪽은 그래도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많이 시작된 반면에 아마 지방 쪽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보태주시죠.

김진미

비슷한 맥락인데 지방이양된 이후에 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그 전에 거리 대책은 시설 입소 외에는 사실은 보호대책은 딱히 없었거든요.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웃리치 활동의 목표도 결국은 시설에 들어가라는 것이었고, 시설에 들어가길 원치 않거나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알코올릭 이런 분들은 계속 거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현장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논의가 쪽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방이양 되면서 서울시는 그래도 예산,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타 지방정부에 비해서는 현장 보호를 보다 더 체계화해서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속 논의만 되어왔던 현장 보호를 상담보호센터, 혹은 뭐 드롭인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구

체화해내고 거기서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니까 그 쪽에서 상담이나 보호 서비스나 특별 사업들을 통해서 거리 노숙의 부정적 결과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게 특징적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이양 이후의 변화 -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센터 운영 확대>

한계는 뭐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꼭 지방이양되었기 때문에 거리노숙 문제에 초래하는 한계라기보다는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또는 노숙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 로드맵에서는 좀 단절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계기가 또 됐던 것 같습니다. 지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행

이수범

그 부분은 또 역으로 요즘도 유효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또 질문을 드렸지만, 10여년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문제의 불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산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금 사실 유지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종교계민간협력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종민협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좀 있었나요?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는데 기존에 뭐 그 이전에 활동하고 있던 내용하고 특별히 그 뒤에 내용하고.

김진미

종민협은 그 전에 전실노협이라는 실무단체의 역할을 통해서 쪽 활동이 되다가 종민협의 활동으로 구체화 된 건 오히려 그때 아닌가요?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퇴거, (이진산: 2011년도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니까 이용 못하게 하는 그 시점에서 종교시민단체협의회가 거리 모금을 하고 사업을 구체적인, 직접 사업들을 기획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오히려 좀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전실노협이라는 그 네트워크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종민협이 직접 사업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제 기억에는. (이수범: 뭐, 행복하우스가) 네. 그 이후는 이제 행복하우스를 위탁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복지부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서 해마다 노숙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종민협이?

이진산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산이 나가는 게 예전에 한노협이 있다가 지금은 중단됐고, 종민협이 아직 유지되고 있거든요.

진행

이수범

그게 98년도부터 2002-2003년, 2005년 이 정도 사이에는 IMF 사태가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민간단체의 결합으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게 고건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공공의 예산이라든가 인력들을 전폭적으로 지원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는 약간 종교단체들, 민간단체들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종민협을 보면 간간이 사업들은 하지만, 인식개선 사업 뭐 이렇게 우리 만화책 만든다든가 공연 한다든가 행복하우스까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게 여성노숙인 취재해서 <오마이뉴스>에 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활동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미 그 전에 종민협 활동은 워낙 종교시민단체협의회의 개입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전국을 연결하는 전국 사업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노숙인복지법이 생기면서 구 부랑인시설이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노숙인 등에 묶이게 되면서 구 부랑인시설이 들어오니 전체의 한 축은 한노협이라는, 전노협이랑은 별 네트워크가 없는 요양시설을 기반으로 한 한노협 조직이 생기고, 복지부는 예산 지원을 요양시설에 하다 보니까 한노협이랑 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면서 전국 단위의 다양한 재활, 자활, 요양시설을 다 아우르는 이런 사업은 오히려 하기 힘들고, 종민협도 그 차원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노숙인 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조직은 어디에도, 민간 쪽에도 없고 복지부도 전체 종별 노숙인 시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나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행 이수범 아마 그런 부분이 지방이양 되면서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일정 정도 뒷받침이 버리니까 그나마 관심 있고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주도로 밀고 나간 반면에 지역으로 갈수록 훨씬 더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최병국 종민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종교단체 네트워크라고 하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실노협이 초창기 역할을 했었고, 전실노협이 실직노숙인을 대상으로 처음에 지원을 하다가 2000년 되면서 실직자가 빠지고 노숙인 사업으로 되고 그러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다시서기지원센터가 주로 그 주된 거리 부분은 거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전실노협이 전국단위 네트워크로 했던 사업은 2006년도에 모금회 프로젝트를 했던 임시주거지원 사업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던가. 그 이후로는 전실노협이 좀 사라졌는데, 그 전실노협 통해서 시민단체랑 결합을 해서 노실사인가요? ‘노숙인 인권을 실천하는...’ 그쪽도 결합하고 민변하고 그 인권단체 그 의사회가 뭐죠? (김진미 : 인도주의 실천의사회) 그런 단체들이 전실노협 통해서 의료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게 2005년 전후로 해서 약화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행 이수범 지방이양 전으로 해서 혹시 더 말씀을, 이걸 꼭 더 보태고 싶다고 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언뜻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이양 이후에 전국의 노숙인이 서울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김

진미 : 지금은 좀 다른데...) 법 제도화 이후에는 또 달라졌는데, 그 제도화 전, 지방이양 이후 그 사이에는 지역 쪽에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서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을 덜 오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산 지금 생각해보면 자료들 보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좀 헛갈리지만 2005년도에 브릿지센터하고 다시서기센터가 그 당시에 복권기금으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담보호센터를 시에서 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햇살보금자리나 웅달샘이나 요때 이제 민간 상담보호센터를 했던 시기가, 이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최병국 신고를 했던 거고요. (이수범 : 2004년-5년) 들어오는 프로포절은 구세군하고 햇살이 해서 2002년 11월에 전국 단위 5개 해서.

이진산 그러면 이 당시에 혹시나 지방이양을 하면서 복권기금의 사용처를 노숙인 영역으로 포괄적으로 잡아줬다든지 중앙정부나 시 단위에서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당시에 작지 않은 예산을 갑자기 건물 매입하고 하는데 투자하는 게 지금으로선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김남영 브릿지센터 김남영입니다. 그때는 저희 드림인센터가 굉장히 협소한 길 옆에 있는데 거기 마침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오셔서 ‘너무 협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바로 다음에 복권기금사업으로 건물 매입해서 옮겨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병국 저도 그렇게 복권기금이 어떤 시설에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서울역 쪽은 아무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구세군과 성공회를 통해서 서울역이 워낙에 뽀뽀하다 보니까, ... 항상 서울역에 어떤 계획이 잘 짜여 가는, 전국 단위에서도 가장 큰 모델이 서울역 부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정은 사실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무도...

이진산 요 시기가 영등포 쪽은 자유의집이 그 당시에 문을 닫고 이사 간 게 2004년도인가 그렇게 됐죠, 2004-5년도에. 그쪽에 문래동 지역에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영등포에서 그 당시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서울시에다가 계속 이전 계획을 내려달라, 뭐 공문이 계속 들어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비전트레이닝센터로 거기에 만성노숙인들을 모시고서 같이 가고 나머지 분들은 자립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걸로 그 지역에, 거리노숙인 분들이 증가하는 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보현의집에 기초해결센터가 6개월 텀을 두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당시 역사들을 찾아보니까. 근데 요 시기에 맞물려있거든요, 시기들이. 그리고 요 다음 해에 아마 그 주거취약계

층 매입임대주택이 그 당시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매입임대주택으로 2008년도엔가 처음에 지침이 나오고 그때 처음 시범사업들 진행하던 시기가.

진행

이수범

복권기금이 공동모금을 통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진산

그 당시에 서울시가 집행했어요. 시 방침은 있었어요. 장관님이 다녀가시고 어떤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신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이수범

아마 그럴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총리실 같은 데에서 복권기금 같은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였기 때문에.

김진미

제 기억에는 지방이양 사업이 되는 요 시점에 기존에 운영됐던 몇 개의 드롭인센터와 그냥 네트워크 사업만 했던 다시서기와 드롭인센터를 했던 햇살이랑 구세군브릿지랑 이런 기관들이 역할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과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이양화 과정에서 그러면 몇 개의 상담보호센터를 만들자, 기존의 드롭인센터 중에서 몇 개는 상담보호센터로 만들자라고 논의를 하면서, 어디를 시립 지원시설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서울사랑 협의는 있었는데...

이진산

궁금한 게 사실 요 시기가 일자리 사업의 전환이라든지 종합상담보호센터들이 사실은 이 당시에 확충이 되고 제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이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시즌이거든요. 2008년, 그쵸? 그 정도가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남기철 교수님 논문 보면 노숙인, 그 당시 서울시가 집계했던 수는 약간 증가하는, 조금 줄어들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런 계기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정리된 문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보지는 못했는데.

진행

이수범

2008년 시기는 조금 뒤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드롭인센터가 논의되던 그 시기는 2002년에도 만들어졌으니까. (최병국 : 준비 시기는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기부터) 그때는 아무래도 뭐 중앙정부에서 논의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 주)

< **편집자 주: 복권기금으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한 과정 >

- 2004년 4월, 복권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함.

- 보건복지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하여 복권위원회에 9개 사업을 신청하여 7개 사업 1,218억원을 확보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노숙인보호센터 설치 운영사업이었음.
- 2004년 당시 서울지역은 노숙인쉼터에 2,103명, 거리에 653명의 노숙인이 집계되고 있었고, 이는 전국 노숙인의 58.7%에 달하는 것이었음.
- 이에 복권기금으로 노숙인이 제일 많은 서울시에 상담보호센터를 확충하기로 하고, 사업주체는 서울시이며, 운영은 노숙인 사업에 참여한 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도감독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
- 이즈음 서울지역에는 상담보호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모두 노숙인자활사업비로 지원되는 시범적 사업이어서 환경이 열악하고, 당시 만성적 노숙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어려웠음.
- 서울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노숙인 밀집도가 높은 서울역~용산 지역에 노숙인상담보호센터를 1개소 신규설치하고, 1개소를 확장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움.
- 신규로 설치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는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로, 노숙인 이동이 잦은 서울역 주변인 용산구(갈월동)에 신설하여 2005년 2월 개소함.
- 확장 이전한 상담보호센터는 '구세군 드롭인센터'로, 서대문구 미군동에서 서대문구 합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4층의 498.19㎡ 건물을 매입하여 확충함.



노숙인복지법 제정과 시행 이후 서울시의 거리노숙인 대책

진행

이수범

일단 공통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지방 이양화 전후로 해서 좀 살펴봤고요. 시기를 조금 다시 앞으로 가면 정말 우리가 다 바랐던 노숙인복지법, 정말 법이 없어서 항상 사업이 흔들렸는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지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상담보호센터가 종합지원센터로 바뀌고 그 다음 서울시 거리노숙인 대상 서비스들도 증가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는데요. 서울시의 지원대책 수립이나 현장 활동 속에서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아마 이 시기는 다들 근무를 하셨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시죠.

최병국

네, 최병국입니다. 법 제정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거리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슈 중 두 가지는 의료적인 접근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 입소 의뢰를 상담보호센터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보장시설 포함해서 구 부

량인시설까지 포함해서, 입소 의뢰 권한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 분들을 물론 그 국립병원에서 의뢰를 하기도 하였고, 은평의마음도 입소 의뢰를 하지만 특히 입소 의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구청장님 서명이랑 경찰관이 같이 보는 하에서 서명을 다 받아서 들고 가도 입소 의뢰를 잘 받아주지 않고 하던 이런 문제들이 법제화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입소 의뢰하는 방식이나 진료의뢰서, 특히 노숙인 의료급여증 발급하면서 의료적인 접근은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다양한, 입소할 수 있는 거리 분들을 자활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입소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고 조금 열려둔 상태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법의 내용이 없어서 주로 현재도 다시서거나 구세군, 특히 다시서기 무료진료소 통해서, 상담소 통해서 가는 입소 의뢰가 가장 많지 않나.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많이 향상은 됐지만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
이수범 네, 아마 이 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노숙인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좋다'라는 평가는 다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입소 절차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는 뭔가 체계화되고 매뉴얼화가 되었지만 조금 더 보완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택 김영택입니다. 제가 2010년에 입사하고 나서 임시주거지원을 계속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아무래도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좀더 용이해지고 예산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서 임시주거지원 사업도 지원을 해마다 늘릴 수 있었고, 그 중에서 그런 예산 확보에서 주거지원을 예전에는 짧게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인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 동절기에는 응급쪽방하고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더 많아지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런 노숙인 분들에 대한 지원, 주거가 제일 급하잖아요, 노숙인 분들에게는. 뭐 정신적으로나 알코올문제로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제일 급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바탕이,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정이후 변화 - 서울시 예산 확보 용이함으로 주거지원 토대 마련>

진행
이수범 임시주거를 포함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많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 번째 질문(거리노숙 문제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노숙인복지법이 갖고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하고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맥락이 비슷한 얘기여서요. 변화하고 노숙인복지법이 갖는 한계도 같이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대경 다시서기 우대경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임시주거 담당하고 있었는데, 7월? 8월? 그때 서울역 야간에 그걸 하면서 서울시에서 갑자기 임시주거가 기하급수적으로 내

려오고 자활근로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오면서 그 이후로는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다시서기 안에서 정신건강팀에 있는데 2011년도 후반이 액트팀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현장에서는 정신하고 알코올에 대한 항상 아쉬움들이 좀 있었잖아요. 전문가 위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2011년도 겨울에 액트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부랑 서울사랑 하면서 이게 정착되고 지금 뭐 한 7명 체계로 돼 있어서. 물론 다시서기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역 인근으로 하긴 하지만 외적으로 서울 전역에 있는 거리노숙인들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어쨌든 지방보다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기차표 끊어가지고 '서울역 가면 다 해 준다'란 식으로, '영등포 가면 다 해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거 요즘 덜하긴 한데,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안 되는 것들은 다 노숙 쪽으로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 타 영역에서는 다들 힘들다고 하겠지만 10가지 중에 1개라도 자기 대상군이 아니면 손을, 만세를 부르는데 노숙 쪽은 사실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손을 놓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어서 손을 못 놓다 보니까, 뒤에서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이것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 아니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만큼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지금도 도저히 보건복지부나 외교부나 다 의뢰를 해도 답이 없는 분이 당장 월요일 날 퇴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 출구가 없는 것들에 유입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서비스가 좋으니까 들어오는데 그런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거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복합질환 노숙위기계층의 서울 집중 현상>

진행
이수범 너무나 다양한 복지 사례들이,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이 노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숙 영역으로 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출구에 대한 얘기는 있다가 만성질환 영역에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성노숙인 문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진미 디딤센터 김진미입니다. 여성노숙인 이전에, 어쨌든 저는 법이 생기면서 주거, 일자리, 편의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거리노숙인 대상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제일 두드러진 변화인 것 같고요. 거리노숙인 대상의 사업들을 펼칠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의 영역이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명확해진 게, 그 전에도 거리노숙인 대상의 서비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전에 딱히 자원이 없어서 되게 임시적·임의적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법 이후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임시주거비, 특별자활근로, 의료서비스 이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들이 특징적인 것 같고, 노숙인 쪽으로 모이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자산조사 없이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우린 오직 거리에서 발견되면 그 현상을 근거로, 본인의 구술에 의해서 내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들이 다 제공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온갖 사각지대들이 노숙인 서비스로 올 수밖에 없는, 현재로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법적인 근

거를 통해서 거리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인 것 같고 <법제정 이후 변화 - 거리노숙 서비스의 확대, 임시주거, 일, 의료서비스 안정화>

한계는 꼭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법은 마련되었지만 막상 또 거리 서비스 현재의 양과 질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들이 있어서 요양도 재활도 자활시설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을 담을 그릇은 현재 노숙인 서비스만의 어떤 자원이나 체계로는 어려운 게 아닌 가라는 경우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건강하면 자활시설에 보내고 치료 세팅에 진입한 사람은 재활시설에 보내고, 그도 아니고 연고도 없으면 요양시설에 보내는 딱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다 굉장히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본인도 시설에 가는 욕구가 크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도 담을 수 없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들 보면 정신질환이 너무 명백하고 양성증상이 성성한데, 자타의 위협이 없어서 입원도 안 되고 재활시설도 못 가고 자활시설도 못 가고 그렇게 심한 사람은 요새는 또 요양시설도 안 받아주는 상황이어서, 그 어떤 그릇도 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 법이 생기면서 입소의 대상을 유형화하고 분명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게 딱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는 근거도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이. 그래서 그 애매한 대상을 도대체 어디에서 담을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법 제정시 체계화한 서비스 틀로 포괄되지 못하는 노숙인 문제>

진행
이수범 우리 우대경 팀장님하고 박강수 팀장님은 거리 영역 중에서도 정신건강하고 의료영역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그 영역에서만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노숙인 법이 정신건강 영역, 의료 영역에서 아까 잠깐 최병국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좀 어떤 의미나 성과 한계들, 개선 방향들이 있는지요?

우대경 다시서기 우대경입니다. 성과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2016년도부터 자료를 뽑아왔는데, 정신알코올 상담은 보통 5,500건 정도 1년에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의 입원은 한 250건 정도, 응급입원은 1년에 한 6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장지원팀에서는 서울역 인근의 위기노숙인,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을 너무 심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연관해서 작년 기준으로 130명 정도를 요주의 인물로 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1년에 한 300명 넘게, 물론 300명이 아니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리에 계셨으면 위기노숙인에 만성노숙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거리에서 정신하고 알코올은 떼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 - 정신건강 문제 있는 노숙인에 대한 현장지원활동 강화>
그래서 이분들을 연계해서 도와드리는데, 한계는 신체질환하고 정신질환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연계할 데가 없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신체질환 케어하고 오라고 하고 그런 핑퐁들이 있고. 오늘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지역에서 관악구에서 자살시도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가지고 경찰이 보라매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보라매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 뭐 바빠서 못 간다고. 암만 바쁜 게 있어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건 나와서 하셔야 하지 않냐고. 경찰은 뭐 착한 경찰이라서 4시간 정도를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지역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대상은 아니지만 물론 센터에서 말하는 건, 실 거주하고 주소지가 돼있고 회원등록을 해야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자해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은 실시간으로 나와야 하는데 오늘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상이 아님에도 가서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각 구가 25개 구인데 25개구에서 각각 케어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서울 전역을 7명에서 실시간으로 케어한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보라매 가서 치료 끝나고 응급으로 바로 또 응급입원을 지방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신체질환은 지정병원이 많아서 연계하는데 크게, 물론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낼 데가 없는 한계점이 있긴 한데, 정신질환은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에는 은평병원하고 국립정신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다들 문제가 있죠. 은평은 조금이라도 신체질환이 있으면 받질 않고 국립정신병원은 거의 안 받으려고 하고 서울의료원은 항상 베드가 없고. 그래서 경기도권에 있는 지정병원 정신과 세 군데 보내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체질환은 말소가 돼도 받아주는데 그쪽들은 지정병원이 아니라 그냥 협력관계라서 말소가 되어있으면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신체질환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도 거기서 케어를 못하면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병원들이 없어요. 저희 팀은 일반 정신과에는 보내진 않거든요, 노숙인 분들. 서울시에서 지정한 데만 하다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고. 그리고 응급입원 같은 거 할 때는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지정병원에 보낼 수 있는데, 신체질환이 있는 분은 서울권에서 하다가 자리 없으면 인천권, 경기도권에서 하다가 경기도권에도 자리가 없으면 충청도권으로 내려가서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노숙인 분들 중에 정신질환하고 신체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을, 서울권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권에는 해야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병원 안 보내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여러 명을 보내면, 거기서도 저희가 여러 명을 보내는 게 다 관리가 되고 입퇴원 다 관리가 돼서 정신과 쪽으로 입원에 대한 확충도 좀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진행
이수범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과 관련해서 보면 노숙인복지법이 노숙인 복지에 관련된 법이긴 한데, 노숙인복지법에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심리상담?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이진산 : 지침으로 하는 거죠. 법이 아니라) 네. 어쨌든 큰 갈래로는 정신건강복지법인가? 그쪽 영역에서의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 측면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응급이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법을 같이 이쪽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약간 충돌이 생기거나 상호보완이 되어야 되거나, 복지법만 놓고 보면 복지법 안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용어는 따로 없어서 혹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보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우대경

필요하죠. 일단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 영역에서는 더 하고 있는데, 노숙 쪽을 등한시 하는 것 같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노숙인에 대한 건 정확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많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시도하고 있던 분들을 우리 쪽에서 보호할 수 있냐, 시설로 보내줄 수 있냐고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역에서 감당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본인이 원하신다면 가능한 하나 보내기 전에 자살사고가 높다고 하셨으니까 1차 치료는 하고 보내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 연세가 72세면 노숙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지역에서 수급을 진행해도 무방한 분인데 정신영역이든 수급 관련법이든 자기들 지자체나 어디서 발견해도 기관에서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귀찮은 것들은 '이 사람 잘 데 없대요.' 그러면서 노숙 쪽으로 유입이, 걸쳐서 무조건 들어오는 것들이. 물론 제가 노숙인법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뒤에 연관되기는 한데 다른 영역에서도 노숙인보다도 위기계층에 대한, 노숙인 되기 바로 전이 위기계층이기 때문에, 위기계층에는 돈이 100원이 들어갈 걸 노숙으로 따지면 200원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경제적으로도 참 적극적으로 우리 노숙 쪽 법이든 다른 영역의 법이든 위기계층을 케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기계층 노숙예방 및 조기 케어 대안 마련 필요>

이진산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 노숙인복지법 14조에 응급조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관계 시설 종사자가 질병, 동사 등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에 보면, 관련 조항에 결핵예방법이라든지 감염병예방 관련 법령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의무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숙인 사업 안에 사실 둘 수 있어요.

우대경

근데 충돌하는 게 경찰들은 그걸 안 보고 내부지침이, 응급입원은 경찰들이 서명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행정입원을 하라는 식의 내부 지침이 있어서 경찰들이 또 안 움직이죠. 법령을 내밀어도 난 모르겠다, 난 지침 받은 게..., 그렇게 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도 있죠.

이진산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서 보호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이란 상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따른 거라서.

김진미

근데 응급처치의 개념을 시설에 데려온 거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생각하는 응급조치는 길거리에서 발견하면 일시보호시설이나 응급구호방으로 데려오는 거를 응급처치라고 생각하고, 입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게 정신건강복지법이 응급입원 조항을 굉장히

히 까다롭게 만들고,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더 까다로워진 거잖아요. 그니까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함부로 응급입원하지 않는다 라는 게 기본 방침이고, 경찰들이 또 그런 문제로 인권적인 민원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명백하지 않은 입원을 돕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 조항 자체의 한계라면 실은 현재도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법을 개정한다면 노숙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나 개입을 기본 서비스 내용으로 일자리, 주거 처럼 넣고 그게 들어가면 정부 계획에서 어느 부서랑 협력해서 어떻게 계획을 만들어야 된단든지, 어느 부서의 협력을 의무화한다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일단 복지법을 조금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혹은 또 서울시 조례에라도 그게 들어가면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정신건강 영역에서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를 서비스의 내용으로 넣으면 협력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는데, 지금 노숙인에 대한 개입의 의무가 명백하지 않거든요. <정신건강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포함하는 노숙인 법 개정 필요>

진행 이수범

모든 정신질환 환자들이 응급처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정신건강팀이 아주 중요하고 크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만성질환자들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자, 알코올릭 환자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쪽 파트에서 말씀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수

의료 쪽에 저희 보현의집에 대해 얘기하면 노숙인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사실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의과 공중보건과의 배치되다가 이제 전문의가 배치되면서 서비스 이용 질이 확실히 좋아졌죠. 이용 만족도도 높아졌고 노숙인 분들이.

다만 좀 한계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정병원이 국공립병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거리노숙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원 진료 받을 때 접근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보라매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이나 가깝겠지만 사실상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처럼 보현의집이나 밀집지역 빼놓고는 병원진료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노숙인 지정병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5개년 계획을 보면 조금 확충하겠다는 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노숙인 지정병원 확충 같은 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 권리도 들어왔기 때문에, 노숙인 분들도 그렇고 종사자들도 그렇고 뭔가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 일할 때 책임감, 의무감이 한 층 상승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인복지법의 한계라고 보면 대부분의 지원 같은 게 할 수 있다/없다 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이 사업을 하느냐에 마느냐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저희는 고용노동

부 취업지원센터에서 파견시켜 줬는데 고용노동부가 생각을 바꾸면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 그럼 이런 거를 지방정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건 서울시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노숙인복지법 - 임의조항의 한계>

진행
이수범 아까 전반부 일자리 파트에서도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정신건강이나 의료 관련해서 추가로, 아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 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리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진행
이수범 네 번째로는 아마 다들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것 같아요. 거리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저희는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없다면 그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든가 그 목표 수립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랄까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훨씬 일을 하기는 선명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안개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진산 주무관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산 사실 연초에 5개년 중기계획을 보고를 했거든요. 노숙인복지정책 관련해서, 종합계획으로. 일단은 5년 안에 노숙인 수를 30% 정도 자립감소를 시키겠다는 목표가 좀 있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이게 좀 서울 중부권역에 집중돼있는 지원 시설들을 고르게 서비스를 좀 퍼져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너무 만성화된 노숙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노숙인 1인당 평균 노숙기간이 11.2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만성 노숙인들을 실질적으로 재할하기 위한 플랜들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라든지 주거지원이나 지원주택을 강화한다든지, 재활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만성노숙인 분들이 거기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수립하기 위해서 다른 주요 도시들이나 국가들에서 수립한 계획들을 좀 벤치마킹했는데, 사실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노숙인들을 다 줄이는 거예요. 영국같은 경우는 테레사 메이 때, 지금 바뀌긴 했지만 거긴 5년 안에 한 명도 없게 하겠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사실 선언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해놓더라고요. 다 없애고 싶는데 옛날처럼 인위적으로 이분들을 어디다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립을 많이 도와가지고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노숙을 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게 하고 싶는데 쉽지가 않은 문제죠. <서울시 노숙인 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진행
이수범 5년 안에 전체 노숙인들을 30%를 줄이겠다. 저도 잘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서울시의 정책 목표를.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시설 종사자들도 같은 공감대나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진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보면 항상 당연히 노숙인은 줄이자 이 흐름으로 왔지만 좀더 명확하게 지금처럼 얼마나 줄일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구사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최병국 2010년부터 11~12년 법제화, 법을 제정하는 2011년까지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거리 영역에서 임시주거지원 사업도 확대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의미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정책팀과 함께 종합일시가 회의를 했었고, 이용시설이 회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서울시의 목표는 새로 유입되는 부분을 최대한 방지해서 예방 차원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만성 대상자들만 남을 것이다, 자활이 되는 분들은 자활이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그 당시에 가졌었고, 법제화 된 이후에 7-8년 지났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영등포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긴급지원제도, 임시주거지원 사업 포함해서 긴급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많이, 시설이나 거리 생활보다는 지역에, 비주택이지만 쪽방·고시원 쪽으로 많이 안내를 했고요, 여인숙 포함해서. 아무튼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고,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다시 재유입이 되지 않는 방법, 저희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시설이 아니라 바로 주거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거리 분들을 150명 정도 임대주택으로 빼고 임시주거 통해서 매년 100명씩 해서, 이런 예방적인 사업들이 노숙인들을 줄여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경험 - 임시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통해 거리에서 주거로 가는 경로 확대>
문제는 지역에 보냈을 때 이분들이 재유입이 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는 사망사고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여러 가지 고령화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서비스가, 지역에 보내는데 지역에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든, 직접적인 그런 서비스가 돼야지, 현재처럼 사례관리자 한 명이 많은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서비스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차원하고 그분들에게 주거를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지역에서 얼마만큼 잘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
이수범 김영택 과장님도 거리 쪽에서 꽤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비슷한 느낌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김영택 네. 최실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뭐 저희 입장에서 거리에 계시다가, 노숙을 하다가 상담이나 센터를 방문해서 임시주거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시설입소, 자활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시설입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 중에서 시설을 거부하는 분들은 임시주거, 그 중에

서도 다시 특별자활,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임시주거, 특별자활까지 하다가 재노숙이 아니라 매입임대나 작년부터 제가 느끼기에도 지원주택같은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활시설 입소 경향보다는 주거생활로 점점 개인적인 주거생활로 가는 경향이 느껴져서, 제 생각에도 매입임대주택, 저희 같은 경우는 58호 운영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이나 주택으로의 연계로 해야지 궁극적으로 볼 때 탈노숙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병국

아까 얘기하다가 까먹은 게, 노숙이 재유입되지 않고 감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면 여러 가지 조금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최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포함해서 특별자활근로 내지 수급을 받는 수급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생활비, 금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소득의 수준이 예전보다는 꽤 올라간 편이다, 그래서 다시 이용시설에 오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라든가 소득 보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면 다시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
이수범**

아까 이진산 주무관님 말씀하셨던 올해 초 계획을 해서 했던 5개년 계획 같은 거, 예를 들어 예전에는 연간 계획이 주였다면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노숙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길게, 크게 상을 보는 부분들이 올해 5개년 계획으로 수립돼서 30%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김진미

글쎄 적절하다고 볼지 안 볼지를 지금은 얘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거칠게 몇 마디를 들은 거여서 30%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으로써 판단할 길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30% 목표가 만들어졌다면, 이게 면밀한 조사에 근거해야지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를 감소하려면 현재 거리노숙인이 어떤 추이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서 증감의 경향성이 어떻더라는 거와, 그의 이유가 뭘까를 추측해 볼 수 있어야지 어떤 효과 때문에 줄어드는지,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은 줄어들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여서 기본적으로는 계획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면밀한 실태파악이나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소목표를 세웠다면, 감소를 위한 이리이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에 플러스 그 대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로드맵 혹은 민간과의 논의 체계, 협력 체계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보기에 감으로는 거리노숙을 줄이는 되게 강력한 도구가 임시주거비랑 특별자활근로 수입이거든요. 이거 때문에 쪽방도 얻고, 고시원에 가 있고 그래서 거리 집계에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시주거만 해도 대상자 수로는 900명에 육박하고 특별자활근로도 동절기 때 한 시설이 포괄하고 있는 수가 500명 이상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거리에서 잠자지 않게 하는 거를, 거리로 나오는 거를 압박하는 아주 강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단기성 때문에 완전히 탈거리는 안 되는 만성적인 사람들은 잠깐 안 보였다고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만성화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예를 들어서 지원주

택이고 재활시설의 확대고 이렇다면 그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30%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주택을 매년 어떻게 확보하면 정말 30%가 감소하는지, 그 몇 호를 확보하려면 어느 부처랑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해야 할지. 재활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이거를 현 시설을 시설 전환하는 것으로 풀 건지 재활시설을 새로 만들 건지 뭐 이런 게 있고 이게 생겨야지, 또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민간이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면 재활시설이 좀더 구성 비중상 더 있어야 된단 얘기는 최근에 몇 년간 했던 것 같은데 재활시설로 전환하는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활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어떤 지원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힘든 일이거든요. 시설 입장에서 보면 자활시설과 똑같은 지원 기준으로 재활시설을 해야 된다면 이거 지역사회에서 부담은 끌어안으면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릭이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운영할 때 부담이 크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크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반적인 시설의 분포 상 자활시설 수요보다 재활시설 수요가 많아서 이걸 좀 늘리겠다고 하면 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계획까지가 같이 있어야지 시설들이 우리 전망은 세워야지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면 저는 감소 목표를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실태조사가 명백해야 하고 감소목표가 어떤 목표가 세워졌다면 목표를 수립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좀더 분명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산계획까지 있어야지 않을까. <거리노숙인 감소목표를 구현할 로드맵 구체화 필요>

이진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2013년 대비 2018년 집계 인원은 22.8%가 줄었어요. 5년 정도. 그래서 해마다 5%정도씩 감소를 보이거든요. 2013년에도 임시주거나 이런 투입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해마다 감소폭을 7% 정도로 잡으면 3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부분을. 그리고 투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시설을 재구조화하는 부분들하고, 기존의 노숙인 서비스 지원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단계식 모델이거든요, 지난 번에 토론회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처럼. 이거를 욕구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주자. 시설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지원주택 좋다. 그런데 지원주택에 가기 위해선 시설 추천이 있어야 하고 이런데 이것들에 대한 임시주거 플러스 좀더 약간 전환 형태의 지원주택을 보강하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주자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사실 아까 김진미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의 전환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도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 스태프들이 팀워크가 맞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부서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팀과 협업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단계적으로 좀 저희가 플랜, 연도별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선형적으로 서울시 노숙인복지 조례가 좀 급하게 수립된 경향이 있거든요. 수립 전에 시가 가야 할 방향을 종합계획 방안을 담아가지고 발표를 할 계획이 올해 사실 있었습니다. 종합계획 보고와 더불어서 이거를, 조례 안을 가지고 공청회 내지 토론회를 하고 이걸 다시 보완해서 시 조례와 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노숙인복지법을 견인해 내는. 법을 바꾸자는 거를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자체 간에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뭐 이를테면 임시주

거 같은 프로그램이 방침으로 있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보면 서울에서는 이런 임시주거 안내사업을 한다더라, 이런 정신건강 액트팀을 운영한다더라, 예시로 들어가 있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법을 좀 견인해 보자. 의료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대전이나 다른 지역의 종합지원센터장님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모시고 갈 병원이 없어요, 대전에 지정병원이 저 멀리 하나 있어요, 그러가지고 아저씨들 설득해가지고 한 분 갔다 오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16년도부터 제안했던 거는 노숙인 병원은 지정제로 할 게 아니라 일반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어느 병원이건 가실 수 있게, 노숙인 의료급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가 쟁이예요. 사실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는 거는 병원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한데 더 좋은 거는 노숙인 의료급여를 가지고서 일반 의료급여 환자와 같이 제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서울역에 있을 때 아저씨 한 분 모시고서 국립의료원 내과 가서 혈압약 하나 받으려면 3-4시간 걸리더라고요, 외래 통해서 가려면.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차별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공론화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어떠할까.

그래서 감소 효과는 주거지원 확대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16년도 종합계획을 보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원주택을 늘리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보고 국토부가 약속한 주택 중에 몇 호를 우리한테 루트를 알려주면 전체 노숙인의 40%가 서울에 있으니까 40%를 우리가 국토부하고 다시 가서 받아오겠다. 구체적인 협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LH 주택이 하반기 공모도 거의 없고 지금. 지원주택은 시 주택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올해 100호 하고, 근데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는데. 지원주택도 리스트를 달라고달라고 해서 아까 받았는데 주택 임대료가 워낙 비싸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아저씨들이 월세 내고 계실 만한 곳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현장하고 같이 해서 부서에서 힘에 부치는 부분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타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자꾸 같이 가서 두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법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복지법이 아무래도 단계적 모델을 중심으로 법이 설계가 돼있다 보니까 노숙인복지법 제10조에 보면 주거지원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숙인 등에게 노숙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 의무 사항은 아니고, 근데 주거지원의 형태가 어떤 월세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시설도 있어요.

진행
이수범 그쵸. 주거비 지원이 아니고 주거 지원이니까.

이진산 그래서 대다수 지자체들이, 서울도 기관장이 바뀌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시설이 많고 시설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도 주거지원 아니냐면서 주거지원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들 보시면 그런 상황들이 여실히 나타

나고 있죠. 또 하나는 노숙인의 정의가 모호해서, '노숙인 등'으로 돼 있거든요. 따옴표 안에 노숙인 등 해가지고 제2조에 노숙인 등이란 1번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 2번 노숙인시설에 계신 분, 3번 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걸로 예산을 얻어내고 아니면 관계 기관에 타부서에 협조를 구하기가 대상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의료기관 관련해서 협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노숙인복지법 - 임의조항, 노숙인 정의의 모호함>

진행
이수범 그거는 저희 위기대응콜센터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노숙인 등'의 노숙인이나 아니냐, 경찰이든 공공기관이든 계속 밀고 당겨서. 법으로는 세 가지로 정의돼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재정의할 필요는 있겠다. 특히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한 개씩 한 개씩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행
이수범 장기적인 시의 목표와 계획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요. 어떤 당해년도 중심의 계획 목표가 지금은 5개년 정도로 넓혀져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30%, 연간 6-7% 정도 해서 5개년 동안 30%라고 하는 수치의 목표가, 외국 같은 데서 보면 '거리노숙인 한 명도 없게 하자' 이런 목표도 있고, 그게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선언성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약간 위험한 부분은 30%를 줄이기 위해서 안 줄어든다면 줄이기 위한 오버액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려는 여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가 동반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를 줄이자'와 '노숙인들한테 집이 없게끔 하지 말자', '누구에게나 본인이 원하면 집을 제공하자'라는 목표는 줄일 수 있는 거지만 전혀 또 느낌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같이 좀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도 같이 담아서 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지금도 잘 줄어왔지만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목표에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

박강수 저도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제가 기초해결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일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낼 때 연령대를 꼭 분석을 해요. 기초해결센터를 보면 50대, 40대가 한 70-80%, 그리고 바로 60대로 쭉욱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9년 전에 근무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40대가 제 기억에는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50-60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 꼭 연령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

이수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없으면, 추후에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목표와 계획 수립하고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맞물릴 것 같아서.



최근 노숙인 감소추세에 대해...

진행

이수범

최근에 몇 년간 노숙인 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러면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줄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지, 금전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분이 말씀 좀 해주시죠.

박강수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4-15년도에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했을 때 제가 담당자 했을 때 평균 100-11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0-7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체감 상은, (이수범 : 입소해 계신 분들이 그렇죠?) 네, 응급대피소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소 40-50%는 줄었다, 혹한기 때. 엄청나죠. 왜 그러느냐 봤을 때는 임대주택에 최소한 1000분 정도 들어가셨다는 게 하나 있고, 제 생각에는 보편서비스가 확충되면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저는 이제 시설에 있으니까 여름에 아웃리치를 나가보면 영등포 대표적인 쪽방지역 보면 줄어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익은 얼굴들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통계 같은 걸 내놨으면 좋겠어요. 법인 시스템이 바뀌면서 잘 보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것만 보이지. <현장에서 노숙인 감소추세 확인해>

이진산

워낙 개인정보 평가 받으면서 많이 옛날에 볼 수 있던 것들이... 쪽방 같은 경우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000명 안쪽으로 들어와 계세요. 쪽방지역들이 워낙 재개발되면서 사실 주민들이 몇 분들은 쪽방을 떠나기도 하고 더러 돌아가시기도 하면서 지금 2,900명 정도 돼요. 2015년도만 해도 3,5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7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도 2015년도에 1,000명이 좀 넘었는데 전체인원이 지금 890명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활시설은 많이 안 줄었어요. 재활시설은 2015년도에 290명도 나왔었는데 지금 280명대거든요? 재활시설은 정원 대비해서 총원율이 90% 넘어요. 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이 제일 많이 줄었는데 뭐 남성요양시설 은평의마을만 보더라도 현원이 700명대 초중반 정도 돼요. 720-730명 정도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빼고 나면 600명 정도 돼요. 근데 2015년도만 해도 거기가 거의 한 900명 정도 계셨거든요. 병원에 계신 분들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도 200-300명이 한 시설에서 빠진 정도의 인원이 되고. 근데 은평의마을은 기존에 거기에 정원으로 일단 입소를 했다가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장애등록이 되고 하게 되면 옆에 은

헤로운집이나 평화로운집으로 전원을 하는 쪽으로, 전략으로 기존에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여성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보호센터로 입소를 받아서 장애진단을 받고 등록이 되면 영보자애원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영보자애원이 400명 정원에 360여명 정도 입소해 계세요. 진짜 이제 영보자애원은 고령자 분들만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시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은 건, 거리노숙인도 좀 줄고. 거리노숙인은 3-4% 정도 줄고요. 시설은 한 10%는 줄었어요.

진행

이수범

근데 자활시설이 주는 거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뀌어나가 앞으로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요양시설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어디를 특별히 갈 곳이 없어서, (이진산 : 많이들 돌아가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은평의마을 300명 정도 줄어든 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진산

1년에 한 50분 정도씩 돌아가시고요. 뭐, 신규 입소는 아무래도 집단, 큰 방에 여러 분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다시서거나 브릿지에서나 많이들 느끼실 텐데 옛날보다 의뢰해서 거기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비선호 시설이잖아요. 아무래도 가입소기간 동안에 마음이 바뀌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일 어려운 건 영등포는 의뢰 자체가..., 지금 여성노숙인들 그렇게 계신데 여성보호센터 의뢰가 아예 지금 거의 완전히 힘든, 몇 번 시도하셨다가 도저히 안 돼서. 디딤센터도 요양시설 연계 안 되어 힘든 거 마찬가지고. 다시 다시서기를 거쳐서 의뢰하라고 그러고, 그런 지경이라서. 좀 제도를 좀 바꿔달라고.

진행

이수범

수서(편집자 주: 여성노숙인 요양시설인 '여성보호센터')는 거의 뭐 의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진산

수서는 그나마 다시서기가 제일 많이 같걸요, 수서는. 근데 거기가 수서가 정원 거의 100% 가까이 차있어요. 180명 정원에 160-170명 돼요.

진행

이수범

그리고 거기는 은평의마을이 훨씬 노숙인 분들 중심이라고 하면, 수서는 노숙인 분들 외에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양 환자. (김진미 : 퇴원 환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노숙인시설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여성노숙인들 연계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노숙인 수가 감소하니까 시설이든 거리든 행복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기능 전환이라든가 역할이 변화된다든가 대책이라든가, 어쨌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단체생활을 하는 숙소개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인권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그런 환경 개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춰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 실태조사의 향후 개선점

진행 이수법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역시 같이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된 건데요. 정책 목표나 계획 수립할 때 실태조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노숙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복지부에서는 5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이진산 : 16년도에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고, 내년(이진산 : 21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수립을 해서 안 그래도 보건사회연구원 쪽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서울시는 1년에 4번씩 매년 일시집계조사(PIT)를 시행해 왔는데요. 조사의 시기라든가 방법의 일관성, 시점, 이런 걸 그냥 카운트하는 것 이외에 또 만성노숙인, 여성노숙인 등 취약한 대상을 포착하는 적절성 여부,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시점 후, 예를 들어 22시에 노숙인 수를 카운트하는데, 이분이 노숙인 이기도 하고 쪽방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세는 수가 정확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거든요. 공식적인 데이터로 활용하기가, 이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아마 다 느끼시기도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이 마침 그 날입니다.

우대경

다시서기 우대경입니다. 각 시설 인근들은 지역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안 나가서도 카운팅이 대략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인근 말고 다른 데를 많이 나가보면 한 명도 못 세고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조사지역을 잘못 선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허황된 생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정말 정확하게 한다면 주민센터 직원들과 경찰들이 0시에 나가든, 나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다 체크이 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적어서 카운팅을 올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산

근데 행정조사를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전국이 다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되게 좋은데요. 대부분의 자치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구의 노숙인들이 자기 임기동안 늘어났다고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과소집계 내지 솔직하지 않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16년에 보건복지부 조사 때도 예를 들면 목포역이다, 우리가 목포역에 눌러갔을 땐 아저씨들이 막걸리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한 명도 없다고 집계가 되고 했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창원시청 사회복지과 담당팀장님하고 올라왔는데, 창원시장님이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노숙인이 많아질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하자, 유치를 하자고 그러가지고 서울역 하고 좀 보시고 갔었어요. 근데 16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엔 창원시에 10명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장님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본인이 체감했던 노숙인 분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솔직하게 보고가 되고 다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가 되면 제일 좋은데. 저도 실태조사 가면, 저도 가끔 자율방범대 대원들 만나면 ‘어디들 많이 아저씨들 계세요?’ 그러면은 ‘어디쯤 가면 많아요.’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되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계신 분들이.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조사원들 중에 노숙인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동네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지역 단체들 협조를 구하면 어떻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방향 - 실태조사 시 지역내 민간단체 활용 방안 강구>

진행 이수법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위기대응 콜센터’를 서울시가 운영하잖아요. 그것의 최고의 큰 장점은 가시화 정책이라는 거죠. 노숙인을 드러내게 하는. 서울역에 제일 중심에 희망지원센터가 있는데 노숙인이 모이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을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긴 하는데 그만큼 보호하고 상담하게 되면서 빼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넓게 보면, 서울 전역으로 보면 줄고 있는 거죠, 위기노숙인 내지는 만성노숙인 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노숙인 정책은 가시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저께 성남시에서 종합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과 공무원 팀장님하고 다섯 분이 오셨고 오늘 창원시청에서 공무원 두 분이 오셨어요. 성남시에서 온 거는 성남시에도 종합지원센터 말고 일시보호시설이 없어서 일시보호시설 운영 계획과 예산이 내년에 반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2층에 있는데 거기 3층에다가 일시보호시설을 하는데 규모는 크진 않나 봐요. 한 50평 정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도 일시보호시설 같은 건 운영하려고 벤치마킹하려고 오는. 드는 생각이 법이 제도화되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노숙인 문제가 한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장기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조금 산으로 갔는데요, 일시집계조사와 관련해서 이야기 더 해주시죠.

김진미

일시집계조사를 할 때 다 아는 상담원들은 늘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저 사람 지금 일시집계조사 상 집계해야 되는 사람인데 노숙인 아닌데 하는 사람들 집계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우연히 술 먹고 지금 저기 저러고 있는데... 알면서도 기준에 맞으니까 집계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분 쪽방 주민인데 더워서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도 집계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맨날 있던 사람이 그 시점에 하필이면 없어가지고 집계에서 빠지네,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시집계 조사와 연간 노숙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헤아리는 거랑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집계조사는 긴, 오랜 시간동안 추이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준의 일관성을, 어떤 사람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어있는 사람을 헤아릴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그러니까는 실제 그 사람이 노숙인인지 아닌지 리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노숙인으로서의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노숙인이 아닌데, 노숙인인데 이거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노숙인이 계속 안 나오면 그 지역은 제끼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잖아요, 조사할 때. 그게 노숙인을 찾기 위한 장치로는 되게 맞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기준으로 한 시점에 노숙인을 헤아리는 엄정성 혹은 정밀성이 있느냐고 할 때는 실은 있건 없건 정한 지역은 계속 거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는 거기는 몇 년 동안 영판 안 나오네 이러면 거기 빼고 저기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거기를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과학적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을 만든 취지는 아마 사전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사전 인터뷰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노숙인 등이 거리에서 상당 기간 자는 사람, 시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상당 기간 부적절한 주거에 있는 사람들을 노숙인 등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상당 기간 부적절한 주거는 쪽방뿐만이 아니고 노숙인들이 밀집된 고시원이라든지 여관 여인숙, 찜질방, 사우나 이걸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만화방 이런 데, 주거가 아닌데 거기서 잠자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건데, 그 정의에 비하면 만화방이나 이런, 누가 봐도 노숙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포착할 수 없는 조사. 그걸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2012년에 법 막 만들어졌을 때, 복지부가 도시연구소에 연구수탁 줘서 진행했을 때 20만 (이진산 : 26만 정도 되는...) 조사됐잖아요. 그거 결국은 공개하기에 적절치 않다, 인구주택조사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랑, 실은 숨겨진 의도는 복지부가 이렇게 많다고 발표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 가지고 아마 공개발표를 안 하고 그 조사는 날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산 : 민간에 자료는 뿌려져 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조사해 가지고 10만으로 집계해서 한 번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고시원, 사우나, 병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제로는 노숙인 등의 정의에 맞는 조사가 되려면 우리의 서비스가 딱 미치는 거 말고도 발굴 차원의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자원 투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어려움을 질문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향후 실태조사 방향 - 부정적 주거계층을 포괄하는 실태조사 방안 마련해야>

진행
이수범 내후년에 조사를 하게 되면 2회차 조사인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준비할 때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폭넓게 조사할 수 있게끔 하죠.

김진미 그니까 전국조사는 최소한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진산 전국조사가 오히려 16년도 경험을 비춰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지침을 받은 게 2016년 4월인가 5월이었고, 조사하기 위해서 처음 자문회의 한 게 그해 8월인가 그랬어요. 그리고서 용역업체 선정하고, 닐센이 선정됐었는데 그 닐센에서도 노숙인 조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다른 리서치는 많이 했어도.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원으로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경험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그나마 하는데 그때 이태진 박사님이나 그 당시에 보사연 연구원들이 전화 받으면 거의 올면서 받으시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주거취약계층을 전국 단위에서 전수조사하는 게 사실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김

진미 : 전수조사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샘플로 해서 이제 (김진미 : 추정하는 거죠.) 대도시, 중소도시 아니면 아예 지방에 군 단위를 해가지고 그걸 전국 추정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연구원 박은철 박사님이 그 부분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우리 노숙인복지,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안에 시설 별로 상담을 지원하는, 그니까 상담을 기록을 하거든요. 2014년 종합지원시스템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대상자가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상담이나 서비스라든지 그러면 11,000명 정도로 집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은평의마을이나 이쪽은 시스템을 또 안 썼었고, 쪽방촌 주민들은 사실 노숙인 등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분들이 종합지원센터가 인근에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시니까 이분들을 다 집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은철 박사님하고 시준2를 다시 해보자고 설득은 하고 있는데, 아직 종합지원시스템이 지금은 일부 요양시설들은 안 들어와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금 더 실제 실인원 수가 되지 않을까. 영국같은 경우에 체인 리포트(편집자 주: 영국 민간협회의 노숙인 실태보고서)를 분기별로 내고 있거든요, 거기 도 영국 노숙인시설 협회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비스 이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 추이를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그쪽은 그걸 좀 활용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장단점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중복이라든지 익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로스(loss)하는. PIT는 익명으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카운트는 다 되니까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지침에도 도시연구소에서 맨 처음에 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걸 발표할 때는 꼭 PIT를 통해서 집계한 인원이라고 발표를 하게끔 지침이 돼 있어요. 아까 조사원 교육할 때도 시의회 보좌관 같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같이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PIT집계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노숙인 추이를 활용하는 방안>

진행
이수범 지난번에 저희가 은평의마을에 견학 갔을 때 이 이야기가 서로, 현장끼리는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예전에 요양시설들은 시스템을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인 부분들은 진료소에서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 거리노숙인들을 주로 응대하고 시설로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세부적인 이력까지는 모르더라도 입퇴소 정도만 알아도 훨씬 이분들을 응대하기가 쉽거든요.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 기능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복지부 예산을 받고 있고 두 가지 시스템을 또 써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하중도 있을 거고 한데, 최소한 다른 건 두더라도 그것만 써도 적어도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입소했고 퇴소했고 이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그때 얘기는 있었습니까만 따로 진행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까 지역 재구성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태조사 갔는데 공원에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노숙인시설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몇 년째 항상 가야 되고. 알면서도 가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노숙인이 없는 곳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여기에는... (김진미 : 그거는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던 어디는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은

필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지역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 늘어난 노숙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노숙인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교차적으로 해서 실제로 늘어나 있는 데는 또 반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지역 조정들을 매년 하면 굉장히 또 달라지니까. (김진미 : 저는 근거만 달면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어카운트인 거잖아요. 이걸 좀더... 면접조사도 진행하는데 그건 샘플링해서 하는 거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긴 어려울까요? (김진미 : 면접조사를요?)

이진산 450명을 샘플링 하거든요. PIT 인원이 올해가 3,443명이 지난 7월 달이었는데, 거기서 450명이면 11-12% 되는 거라서 통계방법에서는 샘플 숫자가 작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김진미 근데 이게 한 곳에 몰려있으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인데 어떤 시설에서는 그 시설에서 한두 명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랜덤하게 고르기 되게 어려운, 너무 적으면 랜덤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진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입소자 명부를 꼭 해두고 랜덤하게 고르거나 아니면 이 중에 3의 배수 번호를 찍거나 해서 샘플링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사실 저도 이제 보면 라포가 그날 조사하시는 분하고 잘 되어있는 분들, 특히 거리노숙인 분 중에. 저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친한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한계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술을 더 많이 드실 수도 있고, 이것보다 조현병 환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약간씩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은 과소집계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그걸 좀 분석 내용에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건 제가 복지재단하고 최종 결과보고서 할 때 그런 내용을 소통하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의료 지원,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진행 이수범 집계조사 관련된 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서 보충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숙인 정책에서 의료와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변화와 성과, 아까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다고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두 개 분야는 의료파트도 그렇지만 정신건강 영역도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는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김영택 제가 경험했을 때는 정신건강 분야가 팀이 없을 때는, 그 전에는 민원이..., 나가서 그 대상자가 분명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 민원으로 나가면 그냥 솔직히 대화가, 상담이 안 되니까 그냥 이동조치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정신건강 분야 담당 선생님이 생긴 다음에 지원한 사례로 74년생 남자분이 계신데 항상 민원 와서 지금 삼성생명 자리 그쪽에서 항상 옷 두툼하게 입고 소리 지르던 분이 계셨는데 정신건강팀이 생기고 나서 개입을 해서 병원에 입원조치하고 또 수급을 만들어 드리고 고시원 생활하면서 지금 한 거의 5-6년째 본인이다 그걸 알아요. 자기가 은평병원 가서 언제 약 타야 되고 그런 것까지 본인이 다 체크를 하고, 고시원비 다 내고, 지금 센터 가끔 방문해서 얘기해보면 그 한 분만 봐도, 다른 성공 사례들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모씨 74년생 그 분 한 분만 봐도 아 정말 이 팀이 생겨서 성과가, 민원의 대상자가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든 거 자체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인 정신건강 아웃리치 활동 사례> (이수범 :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브릿지에서는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대상자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응급입원이나 이럴 때는 직원 동행을 요구해야 되는데 직원이 저희가 없을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 쪽으로도 인원이 충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행 이수범 내년에 계획 속에는 들으셨겠지만 영등포 지역 쪽에도 종합지원센터 생기고 하면서 또 아마 최소 2명, 2명 정도는 전문요원들 배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우팀장님 어떻습니까.

우대경 일단 종사자부터 일단 정신과 상담 받으라고 말한 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크게 부담 없이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상자들도 얘기해도 뭐 그냥 알았다고 하고 편하게 오시는 게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외래라든지 입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신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보다는 인식개선이 돼서 수월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처음 할 때 알코올하고 정신하고 5:5 대상으로 봤다고 하면 지금은 7:3 정도로 알코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숫자는 비슷하네. 정신은 이게 고쳐진다?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는데 알코올은 효과가 좀 없는 게 아닐까. '쉽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알코올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코올중독 분들은 스스로 의사가 있어도 갔다가 술 깨면 또 돌아오니까 반복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못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복약관리를 한 20명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복약대장을 만들거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약을 매일 드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에 안착을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숙인들을 수급을 만들면 지역에 안착을 못 하는 것처럼, 정신 알코올 분들 더 쉽지가 않은 게 있어서. 최근에 지원주택 나오는 것들이 정신하고 알코올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전제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6-7명에 1명 정도 사례관리자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을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좀 한정적인 게 아니라 거의 없어서 저희는 지금 병원, 충청도 요즘 보내고 있는데 충청도 한번 갔다가 하루 다 까먹거든요. 이분이 액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면 2명이 가야 되고, 지역이 멀면 왕복 운전해야 되니까 7명 중에 2명이 빠져버리면 좀 아쉬운 것들이 있고, 영등포나 을지로 이런 데에선 상관없는데 상계지역에서 오면 저희가 응급 개입은 해서 한 번은 가지만 그분이 만약에 응급사항은 아닌데 계속 관찰해야 되는 분들이면 김포공항에 있는 분을 저희가 1주일에, 1달에 한 번씩 간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못 가고 사실 연락 올 때까지, 지금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다가는 경우라서, 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그 정도 충원이 되면 계속적으로 충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국 햇살보금자리는 현재 간호사가 없는 이용시설이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센터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해서 대상자를 많이 선정해놓고 지도를 했는데, 법제화 이후에는 서울역 정신건강팀도 의뢰를 하고 주변 보현의집도 의뢰를 하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더 강화가 되어야겠다. 지역에 있는 지역정신건강센터도 계속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실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계가 되고 하는데 또 실무자가 바뀌고 하면 정기적인 접근성이 많이 증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영등포에 더 생겨서 의료적인, 특히 정신보건 쪽 접근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베스트병원 사건을 보더라도 경험적으로 보면 예전에 보라매병원 복지병동에 가서 여러 차례 인권적으로 제대로 케어를 못 받는 환자 분들이 계속 불만이 있었고, 동부시립병원에서도 어떤 외과의사한테만 가면 반이 병신 돼서 나온다는 얘기를, 최근 뉴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뇌수술 38명 사망사건이 거의 노숙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은 생명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이분들의 의료적인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숙인의 의료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 필요>

진행
이수범 제가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그 전에 관계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게 정신건강전문요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사회복지 영역 인프라가 충분히 기초 작업을 하고 또 거기에 얹어서 전문요원들이 같이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영역 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각 종합지원센터에 전문요원들이 더 충원되고 하면 아마 그런 네트워크 관계들이, 지금도 통합사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확대돼서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신건강팀 모델은 전국화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 지방에서도 이런 모델을 빨리 좀 해서... 할 만큼 충분한 서울시의 정신건강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뒤집어서 보면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한 거잖아요. 대전은 두 명인가 모금회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성적 거리노숙인 문제 현황과 해법은

진행
이수범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가장 많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체 노숙인 수도 줄고 있고, 신규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곧바로 또 연계가 돼서 노숙에서 벗어나게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알코올 만성, 정신질환, 특히 만성질환자 분들 또는 여성, 장애, 미성년, 가족노숙인, 외국인 노숙인 또는 복합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도 마땅치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접근 자체도 쉽지 않고요. 이거에 가장 여러 어려움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름 각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출구전략이랄까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대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 저희가 센터에서 느끼기에는 일단 외부에서 장애가 심하신 분, 신체가 좀 거동이 어려우신 분을 모시고 왔을 때가 제일 연계하기가 힘들죠. 일단은 급하게 수급이 끊어졌던 분이더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휠체어나 목발, 양발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고시원이 다 2층 이상 이렇고, 쪽방 같은 경우도 계단이 많고, 저희가 거래하는 죽림동 쪽에는 협소하고 계단도 많고 해서 지원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센터에서 계속 보호해 드리기가 저희가 숙박실이 2층에 있고 휴게실도 지하에 있고 하지만, 그런 분은 시설 연계도 굉장히 힘들고, 시설 연락해 보면 그쪽 담당자 분들은 일단 거동이 혼자서 가능해야지 입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하나 해서 시설 내부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분들, 노숙인이라고 민원 와서 만나보면 대사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외면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신체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하고 외국국적 노숙인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이수범 영등포 쪽은 좀 어떠세요?

최병국 여전히 만성 노숙인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정신장애 포함해서요, 외국인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진 못했네요, 어쨌거나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임시주거라든가 긴급지원, 기타 쪽방, 응급쪽방 등에서조차 보호할 수 없는, 보호를 거부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결국에는 노숙인 복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결국에는 개별 서비스, 개별 상담 사정을 통한, 개별 맞춤형에 의한 원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질 않나. 현재처럼 구조화된 시설, 쉼터 내에서는 이분들이 거부한 다면 보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맞는 전환형 지원주택이라든가 기타 맞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분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서비스가, 개별적인 좀더 심층적인 사정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내용들이 파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노숙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필요>

이진산

구로에 가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중국인동포 교회도 있고요. 구로리 공원하고 그쪽 공원 주차장에 가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웅달샘이랑 쫓아서 구로디지털단지까지 걸어서 몇 차례 가봤는데 그쪽에 많이들 계셔가지고. 제가 15년도에 가고, 계속 해마다 갈 때마다 조선족이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인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시급하지 않나 그런 고민 하고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면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할 게 뭐냐,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제가 이걸 보냈던 적이 있어요. 외국인 정책업무를 법무부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노숙인시설에 예산 지원을 해주든지, 정 어렵다면 아니면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외국인 보호센터가 있는데, 외국인 보호센터가 두 개 있거든요, 우리 나라에 화성하고 부산하고, 근데 거기는 추방을 목적으로 일시보호를 하는 보호소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 특히 화교 분들이라든지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거기에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해마다 시도를 해 봤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작년에는 법무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연락은 없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15년도에 처음 아웃리치 팀들한테 우리 국적이 아닌 분들을 조사하니까 열네 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하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이십 분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참 난감하죠. 우리 복지제도가 장애인 복지법이고 어르신, 노숙인복지법이고 내국인들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지금도 곧잘 경찰관들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고민입니다.

우대경

저희가 이런 답 없는 분들을 웬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답 없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실무자들이 컨퍼를 받고 싶어도 컨퍼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 치매노인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하루에 4명씩 와버린 적이 있어서, 이분들 잡아둘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대소변 못 가리셔서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치매 노인들은 양호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 드리면 이분은 미국 재외국민이세요. 정신질환 갖고 있고요. 투석을 주 3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월요일 날 퇴원을 하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 나라 국민 신분을 회복하려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주권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메일을 주고받고 2달 안에 해야 하는데 이분은 정신질환이 있어서 욕구가 없어요. 자기가 영주권을 포기할 욕구가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

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분인데 신체질환 때문에 급하게 가셨었고. 저는 지금 디딤센터에다가 저희가 병원에 주 3회 옮길 테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가 들어온 게 반코마이신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혼자 쓰셔야 되고 소변이나 대장으로 감염이 되는 상황이라서 디딤센터에도 못 보내겠어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보호를 하면 화장실을 혼자 드려야 하고, 공간도 혼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투석을 주 3회 하시는 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고 다 답은 없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당장 저희는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디딤을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보고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니까. <복합적 문제를 갖고 노숙인 복지체계로 수렴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왔을 때 저희가 다음 질문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단순히 노숙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들이 결합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분을 보낼 수 있는 데가 지금 없어요. 저는 월요일에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분 답을 똑부러지게 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이분을 저희가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는 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간 걸 잡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근데 잡아야 되는데, 이분을 주 3회를 병원 왔다갔다하면서 식사라든지 그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용인도 있으니까 그런 소독까지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노숙 때문에 모이긴 했는데 노숙 이상의 것들이 유입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미

제 생각에는 지금 사각지대 문제들이 유사한, 설명하신 것과 결부된 것들이예요. 근데 그걸 제도적으로 풀려면 이걸 노숙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런 분들을 그럼 어느 부서에서 감당할까. 사실은 어느 부서도 이거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그 지역에 발생한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해결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이상은 다 떠넘기다가 더 이상은 방어를 할 수 없는, 결국은 노숙 영역이 끌어안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불가피한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사업비가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설명하신 경우에도 이분은 독립거주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최소한 한두 달 정도의.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방을 얻을 수 있는 예산과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거잖아요. (우대경 :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비가 있어서 특별한 사업비에서 그냥 이런 일시적인 문제들은 사업비를 쓰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두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을 아주 소수자를 위해서도 촘촘히 만들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겠으나 그게 안 된다면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이진산 : 감사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기관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 상 이런저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진산 : 지침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여성 일시보호시설이니까, 여성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 대상은 정신질환이 있으나 치료를 안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 어디라도 보낼 수가 있는데 치료를 안 받지만 내가 거리에

서 살고 싶진 않은 사람들이 여성 일시보호시설에 온단 말이죠. 근데 현재의 구조로는 이용기간을 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장기화할 수도 없고, 이걸 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서울시 감사를 받았는데, 저 그거 때문에 확인서 써주고 몇백 명을 위법했다고 해가지고 몇날 며칠에 걸쳐서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왜 연장해 줬는지, 지난 5년간 400명쯤을 30일을 넘겨 보호한 이유를 다 쓰라고 해가지고 그걸 엑셀 상담자료를 뒤져가지고 써내고 왜 위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현 시스템으로 안으로는 들여보낼 수 없는 사람들인 건데, 여기 개선할 방안이라고 질문이 주어졌으니, 치료를 받지 않으나 내가 거리에서 노숙하고 싶진 않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정말 긴급하단 생각이 들고요. 그건 현재의 지원주택 모델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지원주택은 치료 순응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예요. 뭐라 해도. 그니까 치료를 안 받는 게 지원주택의 퇴거 사유는 되어있지 않지만, 진입을 할 때는 분명히 치료 순응적이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안돼요, 현재의 지원주택 서비스는. 병식도 없고 치료를 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기존에 DSM-5에 의해서 진단명은 안 나오지만 성격장애가 명백해서 도저히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시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를 떠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지역에 잠깐 가서 지역을 헤집어 놓고 그 사람들 다 치치게 하다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누적될 텐데 이걸 개별 기관의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한계에 봉착했다단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경우를 위한 새로운 모델, 아까 전환형 주거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게 뭐 전환형 지원주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희망원룸이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빨리 독립시키기 위한 전환 주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든 저는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렇게 답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개별 주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개별 주거가 필요하거든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랑 지낼 수 없지만 나는 거리에서 자고 싶지 않고, 거리에서 자는 게 너무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전환형 모델이 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기관에 너무나 큰 부담과 실무자의 너무 많은 소진을 요구해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소수 특별한 사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작은 전환형 주거 모델이 마련이 되어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모델 말고 유연한 주거 모델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양한 형태의 독립거처 지원-전환형 주거 모델, 유연한 주거 모델의 필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보면 가족노숙인이 종종, 미성년자를 동반한 노숙인이 오는데, 주로는 모자가정이잖아요. 부자가정은 흔치 않잖아요. 자녀를 책임지면서 노숙하는 남성들은 많지 않아서 대부분이 모자가정인데 현 노숙인시스템 내에서 노숙 상황에 놓인 모자가정을 긴급하게 보호하는 곳이 없어요, 실은. 예를 들면 가족 노숙 시설이 몇 개 있는데 그 몇 개 시설이 무슨무슨 서류를 증빙해야지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모자가정이어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받거나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실은 긴급한 보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모자가정을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보호하는 곳도 단신 노숙인이랑 겹쳐서 보호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방을 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활시설들이 한 방에 몇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티오는 있어요, 여석이. 여석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을 위한 독립방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또 긴급한 보호가 안 되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저희도 며칠 전에 조손가정이 왔는데 조손가정이 있을 시설을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폭력 때문에 나왔는데 손녀를 동반하고 있어서 가정폭력 쉼터에선 안 받아요. 손녀가 초등학교 5-6학년 돼서,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가 있으면 시설들이 또 안 받거든요. 어렵다, 인지가 있고 학교까지 다니는데 노숙인시설에서 보호하면 애한테 되게 안 좋다, 우리는 정신질환 대상자들이 있어서 애를 함께 보호하기 어렵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긴급보호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니까 거리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서 보호를 하는데 저희도 독립방이 없어서 사무실 옆 상담실을 치워가지고 보호를 했거든요. 저는 가족 노숙인이 노숙상황에 있을 때 긴급보호는 지역이 책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역이, 구청에 응급보호실을 만들자고 했지만 구청이 아니어도 구 단위에서 빈집 하나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철거가 됐다든지, 갑자기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가정폭력 시설에 가기 부적절하다든지 이러면 좀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지역이 마련하고 있지 않으면, 모두 다 노숙 쪽에서 커버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위기주택, 긴급거처의 필요>**

**진행
이수범**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저는 하나, 이게 1개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환형 주거모델이나 여러 가지 응급주택도 얘기했었고 구 단위의 응급구호방도 얘기했고 한데, 이 문제는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연계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많은 한계와 제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이런 층들이 계속 더 증가하거나 늘어나는 것, 복합 아주 고난이도, 그리고 이게 꼭 노숙만 아니라 다양하게 장애, 여성, 지적, 치매, 감염까지 이걸 한 개의 시설에서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든 공간이든 시스템이든 인력이든 만들고, 저를 그걸 그냥 시설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직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준직영의 형태로 해서. 왜냐하면 보호도 보호지만 어쨌든 바로 연계를 시켜내야 되는데 개별 시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거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힘일 텐데 그렇게 해야 이분에 대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합 문제를 가진 위기계층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해 공공의 책임과 역할 필요>**

우대경

지금 노숙인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지금 인원이 한 20% 줄었다면 일의 강도는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먹거리 드리고 잠잘 곳만 있으면 해결됐던 분들이, 연세 드시고 질환자들 나오신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실무자들이 쏟는 에너지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숫자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케어하기 힘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가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각 시설에서 해결할 수 있

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이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진산

저도 고민이에요. 작년에도 해마다 예산 시즌 되면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오는데 노숙인 숫자를 노숙인 전체 예산으로 나눠가지고 노숙인 한 사람당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든다고 이제 비판적으로 기사를 내거든요. 데스크의 입장이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점점 노숙인의 노숙은 만성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복합되는 강도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진짜 답이 없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누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만성 노숙인 한 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얼마만큼 투입이 돼야 하는가. 이게 예산의 논리로 접근을 하면 이게 쉽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를 약간 공감대를 얻어내고 공론화해서 이거를, 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만들어 내려면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구성이 되어야지 않을까.

특히 거리노숙인 사업은 사실은 제일 많이 체감하시고 계시겠지만, 생활시설은 입소인 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나 종사자 수가 배치가 되고 그러는데 이용시설은 그렇지 않거든요. 취침인원하고 실제 이용인원 수하고 굉장히 괴리가 커요. 브리지 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64개지만 신고된 건 300인 시설이거든요. 500명이었던가요? (김남영: 500명) 식사하시는 분들만 200분 정도 되세요. 그리고 햇살보금자리도 취침인원은 60분 정도지만 계속 말밥 주는 날(편집자 주: 노숙인이 경마장이나 스크린 경마장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을 의미) 아니면 햇살보금자리에서 막걸리 드시고 와서 조금 있다가 또 나가서 또 드시고 계속 종사자들이 시달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시달리는 거지만 사실 그분을 그런 걸 받아 주면서 이분의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거죠. 디딤센터는 실제로 1일 3식 해서 계속 식사 제공하며 안고 있는 문제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계량화된 지표 내지 아니면 실제로 투입돼야 하는 인풋(input)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 사실 평가지표 마련하면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급하게 개발하니까 우리가 사실 답답함들이 많으니깐 설명회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런 고민들이...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산과에 가지고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은 50명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을 해야지 해결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합문제를 가진 노숙인서비스에 필요한 투입요소를 면밀 파악할 필요>

진행

이수범

연구작업도 좋다고 보고요. 그 전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 그런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난제가 뭔지에 대한 간담회라고 해야 할까요, 유관기관 간담회일 수도 있고 다 엮여있거든요. 병원이든 경찰이든 다 맞물려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어떤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는 것, 지금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구도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출구는 찾지만 자꾸 이렇게 복합적인 더 복합화된 사람들이 들어왔

을 때 계속 출구만 찾다 지치는 거죠. 어쨌든 한 시설에서만 감당해서 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론화 자리, 다른 영역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복합적 문제 가진 만성적 노숙인 문제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공론화 필요>



거리노숙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진행

이수범

시간이 10분 초과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결국 거리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 사업이긴 하지만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앙정부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하는 걸로 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는 걸로, 없으면 패스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가시죠. 최실장님 먼저 운을 떼 주시죠.

최병국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지대는 현장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 현장 실천가들이 충분히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만나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늘 고민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생계와 주거 이런 부분들, 이것은 현장에서 도와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도와줘야 된다. 최소한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면 그 외의 어려움을 시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뛰어다녀야 되지 않을까. 좀 큰 그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서 발굴의 역할에서부터 지역에 가서 케어까지 하는 역할들은 너무 힘들다. 기본적으로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설에서는 발굴해서 그런 사례들을 꺼내놓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협업을 통해서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시설이나 현장에다가 넘겨지는 역할이나 업무부담은 너무 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행

이수범

현장의 짐은 좀 덜고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박강수

저는 항상 보면 아쉬운 게 각 부처별로 있으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주취자를 모시고 가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이 보호해야 되고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증이 보호해야 되면서 서로 권한 다툼이 있다가 싸우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서울시는 가장 크니까 각 부처별로도 이런 걸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하나? 지침이라고 하나?

이런 걸 밑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공공기관별 노숙인 연계대응 공통지침 마련할 필요>

진행 이수범 요즘 시기에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게 만들어지면 현장활동자들이 일하기에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택 제 생각은 각 구청과 주민센터별로 노숙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노숙인시설이 많아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어느 정도는 이해도가, 협조요청이나 이런 때 서로 대화가 편한데, 또 그것도 그 구에 있는 주민센터별로 또 이해도가 다르고 어디 쪽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자기네들은 모른다. 또 주민등록 말소 복원때도 시 지침 공문을 보내 주고 알고 있어도 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또 모른다고 하고, 또 찾아가서 공문을 보여줘야 하고,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구청별, 주민센터별 해서 그런 서비스 라기보다 노숙인 쪽에 대한 이해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은 좀 갖춰졌으면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 이수범 아까 앞 시간에 제안으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노숙인에 대한 편견들이 있는 게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해서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신입공무원이든 단계 별로 있을 텐데 그런 직무교육이 있을 때 노숙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열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노숙인 복지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그걸 연 초에 각 자치구로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 뿌려서 어쨌든 노숙인들 응대할 때 그걸 참고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문으로는 할 텐데 그걸 조금 더 매뉴얼화해서 하면 그것도 괜찮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에 노숙인 이해의 과정 포함시켜야>

김진미 저도 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 시민의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서 (이수범 : 2.0) 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노숙인은 워낙 소수여서요, 인구 구성비에서는 소수여서 실은 관심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화하려면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숙인이 얼마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부응하면서 시나 정부도 이게 수의 논리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되었다. 몇 명을 몇 명으로 줄였다라든지 그런 거를..., 실적이요, 그 실적을 성과의 대부분으로 파악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성과를 무엇으로 볼 건지,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건지에 관한 성과지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지 않으면 어디 신문에서 예산 대비 1/n로 나눠서 얼마가 드는데 여

전히 자립을 못하고 어쨌고, 이런 논리를 벗어나기는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수범 : 지금 6개 시설 평가지표위원으로 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런 고민이랑 무관하더라도요. 양적인 얘기가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엄청 고민이 되는 게 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용시설들은, 이용시설들이 본령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형 평가의 트렌드는 그거는 그냥 목적은 기본의무니까 하고, 지도 점검 차원에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리능력이나 투명성은 기관의 지도점검에서 해소하고, 복지재단의 평가는 시설의 특별함을 좀 강화하는 방향의 컨설팅을 주목적으로 평가를 생각해 가지고 이 평가지표에서 강조되는 게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의 업무량은 괴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체 복지재단의 평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대경 지금까지 노숙인을 사회복지사가 만나고 해결했더라면 이제는 홍보가 너무 많이 잘돼 가지고 유관기관들을 사회복지사가 응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상자만 상대할 때가 더 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난해한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넘어서었다고 보고요. 이거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 제가 자잘한 것들은 전화를 안 드리고 정말 답이 없어서 전화를 드리는데, 시에서도 힘들긴 하겠지만 사실 보건복지부에 다시서긴데요 하고 전화하면 '애넌 누군데?' 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자체에서 정말 답이 없는 아까 일례로 들었던 것들은 교통정리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산 사실 참 저도 한 5년 됐는데, 자치구나 구청이나 타 기관 공무원 만날 때마다 벽같은 부분들 느끼는 부분들이 항상 있고, 임대주택 사례관리 사업 처음 만들었을 때 찾둥 공무원들과 교류를 해서 모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역사회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해 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이분들 손을 잡아줘야지 잘 사는 거니까. 그런 고민 했는데, 반대로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의뢰하는 케이스,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내가 맡고 있는 케이스 중에 답 안 나오는 케이스는 저기 보내면 되겠구나,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응급구호기관에 인계한다는 게 직무집행법의 내용이에요, 보호할 수 있는. 자기들은 구청이든 보현의집이든 모시고 가서 인수인계서 써 가지고 딱 넘기면 자기 집행법에 따른 업무는 끝이에요. 아, 그니까 이 조항은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서. 아까 노숙이 만성화되고 점점 우리가 받는 숙제들이 되게, 도와줘야 하는 숙제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전문화된 기관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이게 반대의 경우가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협조하고, 우리 역할은 어디까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게 좀 더 문서화되고 정리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아저씨들이 그러면 그 선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우리 쪽으로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 부처간 업무책임과 협력에 대한 정리 필요>

진행

이수범

노숙인 이해를 위한 책자를 자치구에 배포하자고 했는데, 언뜻 그 생각이 들어서 (김진미 : 자치구에 배포하면 아마 '어머, 이런 시설이 있었네' 하면서...) 오히려 더 걱정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저희가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움츠려 있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경계의 선을 희석시키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진산

사실은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아쉬움도 있고,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하면서 같이 갈까. 최근에 치매 노숙인이 이슈가 됐을 때도 그랬고 자치구에서 지역사회 고시원에서 답 안 나오는 분들을 사례회의를 하자고 해가지고서 갔다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범 : 광진구)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좀 고민입니다. 전략적으로 방향은 알겠는데.

진행

이수범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주무관님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 차원에서 아니면 복지건강실 차원에서 이 복합적인 부분들은 자활지원과만 할 게 아니라 복지건강실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만들든 TF팀을 만들든 해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차원의 TF구성 필요>

이진산

조금씩 나아지겠죠.

진행

이수범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어서 조금 더 힘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 복지정책과 관련된 백서작업을 하면서 해왔던 얘기가 성과물로 나올 때는 대신 홍보용이어서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긴 어렵고요. 이 중에서도 정책과 관련된 멘트 한두 개 이런 거여서 아마 책자를 받아들여 보시면 우리 얘긴 어디 갔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따로 정리를 하고 있고, 아마 서노협에서도 서노협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시설들에서 받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나마 백서 작업하면서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바람이 있다면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백서 제작과는 무관하게라도 시설 간 종사자들이 자주 모여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방법들을 만들고 또 시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해 나가면 저희가 더 힘을 받고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 시설분과 FGI 기록

일시 : 2019. 10. 10. 오전10시~12시

참석자 : 오기철(사회/ 비전트레이닝센터),

김 욱(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김종대(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김진미(디딤센터), 문정우(열린여성센터), 신창수(강동희망의집)

이수진(아가페의집), 최건우(은평의마을)

사회

오기철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 기록물 조사> 관련, 포커스 그룹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시설 분과>로서 저는 오늘 시설 분과 사회를 맡게 된 오기철입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한 분 한 분 간략히 본인 소속, 성함,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 간략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창수

네, 안녕하세요. 강동희망의집의 신창수라고 합니다. 잡다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랑 두 명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오래되진 않았습니. 강동희망의집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저는 여성노숙인 자활시설 아가페의집 국장으로 있는 이수진입니다. 근무는 2008년 10월부터 했고요. 저도 아가페의집의 잡다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저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숙대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운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종대입니다. 2006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 욱

반갑습니다.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이름은 김욱이고요.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부터 꽤 오래 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21년 돼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장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 인사·행정·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건우

은평의마을에서 근무하는 최건우라고 합니다. 2004년도부터 일을 했고요. 은평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생활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인 분들 생활지도부터 성장, 생활관 감사도 같이하고 있고. 노숙인지원센터도 같이 돼 있어서.

문정우

전 열린여성센터 문정우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2006년 3월부터 노숙인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했구요. 현재 맡고 있는 거는 행정업무 총괄이고,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상담이나 위기개입이나 여러 가지 두루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미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미입니다. 시설장이구요. 노숙 분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건... 1999년 3월부터 계속했습니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의 노숙인 정책의 변화와 사업 특징은?

사회

오기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아마 질문지는 나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눠드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형화된 답변이 나올 것 같은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현장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개별 인터뷰 할 때 이미 향후 노숙인 사업 시작할 때 분위기는 어땠고... 이런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눠서. 지금 질문이 이제 공통질문으로 2005년 노숙인사업의 지방이양부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숙인 정책이나 사업의 변화와 성과, 노숙인 정책 사업에 대해서 변화, 성과,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경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 후의 경험. 어느 분부터?

김진미

지방이양 이후 제일 큰 변화는 어쨌든 예산을 서울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정부 추진사업이 되었다는 것일 것 같구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노숙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에 정부의 개입 면에서 제일 예산투여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거리노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이랬던 면에서는 서울시가 그 전에도 IMF 직후에 노숙 문제 대응 면에서도 적극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지방이양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전적인 사업 지원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전체 전국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델들이 제일 다양하고, 적극적이고, 뭐 지역을 선도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일단 실무자들의 인건비 단일화부터... 지금 지방들은 복지부가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예산을 메꾸는 데도 어려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업의 선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의 면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강점을 많이 반영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또 특히 노숙인 중에 상당 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노숙인들이 대체로는 대도시 역사를 주변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서비스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일 많은 비중의 노숙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게 성과인 것 같구요. <서울시의 재원 투입으로 선도적인 사업 추진>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이거는 지방이양 사업이 된 이후에 지금 요양시설 쪽이랑 이렇게 원활한 네트워크가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했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기존의 구 부랑인시설과 IMF이후 만들어진 노숙인시설이 '노숙인 등'이라는 개념에 묶이기는 했지만,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숙인, 그니까 IMF 이후에 노숙인 사업이 지방사업이 되고 구 부랑인 사업은 정부, 여전히 국고지원 사업으로 남아 있으면서 구조적으로 조직 연계 활동, 네트워크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도 여전히 한 법 하에서 운영되는 시설이라기에는 너무 종별 시설특성 등이 강하고 원활한 네트워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구조적인 한계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제 경험으로는 지방이양 사업이 되기 전에는 전국집계가 복지부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거든요? 이제는 지역 소식은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추이나 이런 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노숙인들은 전국구로 회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이 좀 줄면 지방도 줄고 있는지 이걸 좀 사실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뭐 이런 단절이 생긴 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오기철

네. 김진미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느 분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 옥

2005년에 이후에 대해 크게 대략적으로 느낀 걸 말씀드리면, 2005년 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재활자활사업, 대인관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위기 관련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노숙인의 심리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상담이 주가, 역 중심의 가장 일상적인 조치를 위한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심을 두고 개입을 했던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결핵, 간염, 이런 노숙인들의 건강 부분에 대한 관리 서비스 자체가 2005년 이전에는 주됐구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지하철 공공근로가 사업 자체가 거의 뭐 서울시일자리갯기 수준의 3분의 2 수준으로 받았던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아니 보건복지부였나, 그때가?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많이 개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고요. 2005년 이후 지방이양 이후 사업적인 측면은 아시겠지만 자활사업, 특히 서울 전체, 서울시일자리갯기 사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 민간일자리 조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체계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노숙인의 어떤 전문기관에 일자리센터라든지, 새희망고용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가, 공공일자리, 서울시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특별자활근로든, 그 시간 대비 노동강도가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일자리로 연계 앞선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3개월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에는 당연히 금전관리와 관련된 것들도 수반되는데, 모으긴 모으지만 퇴소 이후에 민간일자리도 아니고 막막하게 또 시설을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한계점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공익형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체계화하지 않았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게 한 단계 변화가 됐고. <2005년 이후 공공일자리 사업을 체계화함>

그리고 특징될 만한 부분들이 노숙인 신용회복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담당 실무자들이 배워 가면서 아마 신용회복에 대해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돌이켜 보면,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고, 또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개인적인 전화를 통해서라도 배우고 묻고 하는 이 과정들이 큰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이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인 신용회복 분야의 발전>

근데 아직도, 아직도 중요한 부분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신용회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참여하는 분들만 계속 참여하게 되지만, 아닌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요, 계속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현장에서는 지금 자활신포 이런 곳들은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들어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숙인들이 변화가 돼 버린 거죠. 고착화되는 거죠. 노숙인분들을 대하는 서비스가 없어도 굳이 자기들이 알아서 생활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 실무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실무자들도 좀 뭔가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자활적인 측면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앞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우리는 있는 사람들만 봤지만,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20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의 생각이 시설에 안주하거나 시설 의존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고해서 개입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정우

저는 비록 2005년 이후에 이쪽으로 왔지만,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됐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변화잖아요. 그 이전을 겪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서울시가 가장 예산 부분이 광범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체계를 갖춰나가는 데는 상당히 잘 해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방 얘기는 할 건 아니긴 하지만, 서울시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행하는 역할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울시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현실적인 어떤 모델이 되어 준다든지 해서 파급이 될 수 있는, 좋은 영향, 파급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는 평가를 해요.

근데 제가 이천십 몇 년도였지? 거리노숙인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위기개입이나 사례개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며 정신보건팀을 만드는 TF팀에서 활동하던 당시였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융통성 있게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의지도 있었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펼칠 의지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아무래도 예산을 갖고 있는 곳이고, 이제 예산의 한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융통성, 탄력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니까 현장에서의 요구나 전체적인 것에서 봐어도 이거는 많은 요구가 있고 정신보건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TF팀을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예산을 받는 것은 크게 지원한 것이 없죠. 민간에서 했으니까.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의견이 팽팽했던 걸로 알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받았지만, TF팀에서 제안한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방이양이 되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해서 정말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을 두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두고 우리 쪽이 더 주도권이 있다, 이런 식이라든지, 적절한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드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았나, 현장에서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죠.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가 만든 평가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 기관이 모의평가까지 작년엔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협의가 돼서 그게 현장에 내려와야지 실무자들은 거기에 따른 부담을 덜 안을 텐데, 양쪽이 보건복지부랑 서울시가 서로 협의 안 된 채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무 인력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떠안게 되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이제 서울시가 이왕 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차피 큰 그림에서 당연히 이게 노숙인복지나 사회복지나 그 안에서 노숙인복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정책적으로 풀지 서울시랑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잘 적용이 되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위에서 짜그럭거려가지고 좀 실질적인 일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고, 또 서울시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는, 너무 이양이 잘 되다 보니까 탄력성을 잃은 것? 새로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본다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범 사업들을 그나마 해나가고는 있지만, 좀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왜냐하면 현장은 굉장히 변화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를 빨리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빨라지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회 변화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이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으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

오기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큰 부분이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 있으세요?

김종대

저는 뭐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느끼는 한계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2005년 지방분권특별법 하면서 이제 지방이양사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노숙인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그 당시에 노숙인사업이 집중돼 있었고, 신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아니라 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111개 있었던 신포부터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그런데 질적으로는 향상될 수 있지만, 양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 <지방정부 재량의 노숙인사업 운영 결과로 신포통폐합과 축소>

최건우

지방이양사업 되기 직전에 저희는 여의도 광장에서 만장기 들고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지방 이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추진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요양, 부랑인 쪽은 기존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됐었는데. 노숙인복지 이양 전. 저희는 기존대로 가는 편이었는데, 변화를 보면 2005년에 서울에서 지방 이양 한 다음에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복지부하고 서울시를 같이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 업무 과정이 두 가지 패턴으로 가는 과정이 계속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요. 이게 과중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숙인 정책의 변화와 사업 특징, 성과와 한계?

사회
오기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을 만들자, 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2011년도에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됐고, 12년 시행되고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거리, 종합, 일시, 요양, 자활, 자활, 이런 체계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복지시설 수립이나 현장 활동에서 노숙인 지원사업 이후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 안 하신 분부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진

먼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노숙인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뚜렷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할까,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주거복지지원사업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대두되고, 적용되고, 현장에도 적용되고 하고 했는데, 그래도 노인, 여성, 정신질환 이런 특성화된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게 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도 적용하려고, 특히 여성에 대한 일시보호를 위한 것이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런 서비스가 유형화되고 체계화, 변화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유형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외국인들, 그리고 약간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성 노숙인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이분들이 탈노숙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너무 만성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뭐라고 해야 하지. 만성 노숙인이 탈노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 여성, 정신질환 등의 노숙 특성에 맞는 보호와 주거 등 서비스 적용됨. 그러나 유형화가 되니 외국국적의 노숙인, 복합적 문제를 가진 노숙인 등 거기에 속하지 못한 노숙인 문제 대두>

문정우

일단은 유형이 체계적으로 잡혔다는 거죠.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니면 또 일자리지원센터도 생기고. 정신보건도 약간 기형적으로나마 생겼고. 저는 기형적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을 두 기관에 분배했다는 게. 독립된 것으로 줘야 그게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눠줬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유형화되고 다양한 일자리지원센터라

든지 새로운 유형들이 생겼다는 게 아주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자활시설에서 보면 자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대개 거의 없어요. 종합지원센터쪽으로는, 일자리 쪽에만 몰려있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자활시설이 줄어든 거거든요. 자활생활시설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이 그 쪽으로 간 거예요. 왕창 부풀었어. 이쪽에서 또 사실 커버하는 게 많으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종합이랑 일시 쪽으로 몰리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회전문 현상이나 만성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시설만의 체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노숙인 각자가 가진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종합하고 일시만 계속 커지는 현상이 되고, 이분들이 자활이나 지역사회로 독립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어떤 효과성을 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자활시설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인데 운영 지원에서 별로 늘어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인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나마 종합지원센터에는 인력이 있으니까, 일시보호시설은 굉장히 인력이 적거든요, 로테이션하듯이 24시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돼요. 거기도 그런 것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은 그렇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문제에도 불구하고 몇 명당 한 명의 종사자 비율, 그것도 정원 대비가 아니라 이용자 대비, 이렇게 해버리니까. <법 시행 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일자리지원센터, 정신건강팀 등 시설 유형화와 체계화 성과 있었으나, 생활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음>

실질적으로 30명 정원이면 계속 30명 있겠어요? 계속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변하고 있고, 지금 없다고 계속 다음에도 정원을 안 채울 수도 없는 거고, 정원을 설정 안 해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은 모르고 계속 서울시 실무 쪽에서는 종사자 대비 노숙인 몇 명밖에 안되니까 종사자 1명 채용을 취소 시키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뭐냐, 자활시설을 점점 없애고 그럼 종합지원센터만 키우겠다는 뜻이나?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기에도 딱 좋은.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활시설을 좀더, 그분들에게 자활을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인원을 채웠니 안 채웠니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잖아요. 저희 시설만 보더라도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각종의 그런 게 많은데, 결국은 인력이거든요, 이걸 도와주는 건 시설 환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런 걸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3교대 형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인력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자활시설이나 생활시설에는 너무 지원이 변화된 게 없다, 그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오기철

네, 이제 자연스럽게 3번질문(노숙인시설의 체계와 역할 측면에서 노숙인복지법의 한계와 개선사항)과 연이어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법 개정 이후에 두드러진 점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한계도 같이 말씀해주신 것 같으니까, 편하게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 옥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에 두드러진 가장 큰 변화는..., 그 법이 왜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관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법 테두리 안에서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미일 거고요, 생활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의 욕구와 입장 중심으로 법이 제정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나 하면은 문자를 곰곰이 봤는데 노숙인의 어떤 권리가 좀 성장되지 않았나, 권리장전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가 좀 강화되고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거지만 인권이 굉장히 많이 성장되지 않았나, 큰 부분에서는요. 그 부분이 법 제정 이후에 저희가 교육을 받고 또 인권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무에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대응해야 하는 변화였다고 생각하고요. <법제정 이후 노숙인 권리 성장> 두 번째는 사업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면, 2007년 이후부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300가구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노숙인이라 하면 홀리스잖아요. 그래서 주거가 일정치 않은 대상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탈시설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후에,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본격화 되지 않았나. 2005년부터 법제정 전까지는 아무래도 사회복지공공모금회에서 사례관리자를, 주거 지원 관련된 사업 자체를 지원했었고(편집자 주: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 지원), 그런 부분들이 노숙인 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 부분에 상당히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종합지원센터죠. 거기서 노숙인을 차별하고 재활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차별해가지고 입소를 의뢰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 기관마다 자활시설 역할들을, 아직도 정확히 체계화된 건 아니지만 자활시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여성센터, 노인센터 각자의 시설에서 어떤 변화를 자리매김을 해나가지 않았나. 그게 아마 가장 큰 시설들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

사 회

오기철

그 변화의 특성들과 함께 혹시 한계가 있다면 연이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드러진 변화는 세 가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혹시 있다면?

김 옥

이제 노숙인 유형에 따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을 의뢰하고 또 각 시설마다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계가 뭐냐면 제대로 된 차별력이 있는 유형 구분해가지고, 전문가가 차별력 있게 유형화해서 보내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주관적 요소가 많더라고요.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을 유형화했으나 노숙인 유형구분의 전문성 부족>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취약계층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기준점을 잡는 거고요. 저희가 뭐 60세 이상은 안 받는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령 노숙인들. 시간이 20년이 지나갔는데요. 근데 7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견 복합장애인 노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오래 거리생활, 시설 생활을 하다가 자기를 못 가누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암이요. 그것에 대한 수술을 받고 나서, 어디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하고 입소를 시켜야 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지막은 요즘은 전수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오늘도 하나 있는데 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안 들어가고 그냥 있는데 그 일시보호를, 항상 의뢰를 보면 서울역이나 구세군에, 거기만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 가고 싶지 않아하는 그런 대상자들도 저희가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한계점을 보면서, 그런 방안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사각지대, 복합장애 노숙인 보호의 한계>

최건우

말씀하신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한다고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도 안 받는 종합적으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발생해서 보낼 데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거의 맡고 있습니다. 거의 요양시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기존에는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 제정 이후에 전문성과 노숙인의 특성에 따라서 유형 분류를 해서 사업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주어진 환경, 그 시설에 대한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 바뀔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요양이다, 노인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같은 동종 노인시설에 준해서 인원을 받느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 그냥 전체 노숙인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논의들이 문제 시 됐었고요. 지금까지도 이런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침을 보면 요양이나 자활이나 재활이나 25:1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고요. 종합적인 노숙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령자도 늘어나고 있다, 보낼 데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정신병원에 나오시는 탈시설하는 조현병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거리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거리에 계시면 정신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는데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저희 쪽으로 다 시설을 통해서 의뢰가 되고, 올해 저희가 법인이 구세군유지재단으로 바뀌면서 좀더 적극적인 입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인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조금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증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의 지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1로 중증 환자를 케어하라고 하면 거의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상황이고 버티다 버티다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같은 일을 하는 쪽으로 차라리 그게 낫겠다, 급여도 더 낫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인력 수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번에 서서협에서 대체근무자 지원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실력있는 경험자들이 대체해서 병자를 받아도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 노숙인 사업을 좀더 전문화시키고 그 사업의 어떤 패턴이나 유형을 분류했던 것은 굉장히 괄목상대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환경 구성 같은 부분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등한 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각 시설이 알아서 버티라,라는 구조를 어떤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 재활, 자활의 유형구분은 노숙인 사업을 전문화시킨 면이 있으나 이에 따른 시설환경 구성, 인력 지원 면에서 변화가 없음>

김 옥

질문을 하기 전에 여성노숙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계점도 많고, 법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듣고 싶고요. 어떤 어려움이, 경기도 일대 보면 연고자 병원이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생겼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남성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남성노숙인이랑은 또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것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정우

저희도 자활시설이긴 하지만 저희 쪽에 오시는 90퍼센트 내지 아무리 적어도 30퍼센트 트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갖고 계세요. 아주 양호할 때가 치료할 분이 30퍼센트, 정신질환이나 뭐 그런 게 20퍼센트,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건 50퍼센트가 항시 넘고 있어요. 초반에 아주 예전에는 90~100퍼센트까지 갔었고요. 근데 이제 재활시설이 있지만, 재활시설에서는 치료를 받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잖아요? 그럼 자활이 안 되고 치료 안 받는 분들은, 또 못 있는 분들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자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형화되지 않은 자활시설, 그니까 이런 중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유형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자활시설만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걸 인정을 해줘서 인력 지원을 한 명을 더 줬던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공무원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너희는 한 명이 많으나, 다른 시설에서도 왜 너희는 종사자가 왜 한 명이 더 많으나, 이런 것만 알고 실질적인 거는, 그럼 사실 저희 같은 시설도 유형화를 만들어주셔서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페의집도 그렇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기본이고, 그 답에 2년밖에 안 되고. 저희 자활시설도 2년이 최대고 6개월씩 연장해서 그것도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사유가 있어야 1년 연장돼서 3년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자활시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어떻게 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이 그 짧은 기간에 어디 지역사회에 가고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 이용기간이라든지 입소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에서 자활로 가는 것, 자활에서 재활, 이렇게 물론 연계 단계로 우리는 체계를 만들어 놔죠. 그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자활경로를 일시보호센터에서 그 다음엔 재활이나 자활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쪽도 안 가려고 하는 분들, 우리의 의도와 함께 흘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시보호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요. 그럼 일시보호시설도 마찬가지. 아무리 말이 일사라서 한 달이나 삼개월만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 대한 것도 풀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실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여성은 그나마 저희 시설이 그렇게 애매하게 정신질환이 있고 자활이 안 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은 일시보호시설이 생기면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은 더 많이 편해진 면이 있어요. 근데 일시보호시설에서 그런 여러 분들을 해가지고 자활이나 재활이나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성 쪽은 조금 지원체계가 그나마 흐름체계가 가는 것 같은데, 남성 쪽은 비전트 레이닝센터 아니면 좀 소규모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이 있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

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할 만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활, 자활의 유형 구분 외에도 재활&자활 사이의 중간단계 시설유형이 필요함.>

이수진

이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말 2년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예전에는 탄력성 있게 기관의 입소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좀 연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분이 퇴소할 수 있는 정도의 탈시설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재활서비스를 지원해 드렸는데, 이게 2007년 2008년부터 딱 2년이상 넘으면 경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전후로 변화가 좀 커졌어요. 저희가 2년으로 입소하신, 정말 만성 노숙인이시거든요, 정말 자활시설에도 못 모시는, 갈 데 없어가지고 진짜 진짜 정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하신 분들.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활이 가능했던 근로자 좀 가능해가지고 좀 회복해가지고 탈노숙 하실 수 있었던 분들 수준으로 가신 분들이 초창기에는 들어왔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 근로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인지 기능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그래도 좀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거의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분들, 질환이 좀더 안 좋으신 분들이 기능이 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2년만에 이분들을 탈시설화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시설전원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2년이 되면 연세가 55세 된 분을 길가온혜명(노인 시설)에다가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치료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데 일단 자활시설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시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합으로 당뇨나 성인병이 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열린여성센터에서 오셨다가 다시 가신 분이 계신데 당뇨가 너무 심해지셔서 다시 저희 쪽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런 것처럼 조금 단계는 있지만 이렇게 재활시설에 있다가 회복되면 자활시설로 가고 그렇게 안 되면 요양시설로 가고. 근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나가도 사례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4번에 보시면 유형화되어 있는 분들 그런 시설에 현재에 이렇게 보면 재활시설도 자활시설도 요양시설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저희도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 안에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정신재활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 자활 이런 것보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숙이면 저희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자활까지 원스톱으로 쪽 가야 하는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정신하고 또 알코올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규모시설이다 보니까 정신이랑 알코올이랑 같이 있어요. 그럼 성향이 맞지 않다 보니까 정신재활 하시는 분들도 재활하기가 힘들고 알코올도 재활하기가 힘드세요. 알코올은 또 여성이 소수인데 이분들이 술을 안 드시게 되면 또 월등하세요. 그러다 보니 정신재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지배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재활하는 부분에서 어렵게 되거든요. 그니까 알코올중독인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유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재활을 하고 자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탈노숙을 하셔가지고 사례관리까지 하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분들을 계속 지켜봤으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거를 시설에서 제일 잘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입소기간도 확실하게 연장이 필요해요. 예전에 입소기간이

길었을 때 좀 탄력적이었을 때랑 지금 2년으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을 때랑 정말 이분들에게 서비스하거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분들이 완전히 탈노숙하는 게 진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노숙인 위한 윈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함.>

신창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노숙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뭔가가 구체화됐다. 그니까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서울시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상승으로 서울시가 계속 예산 문제로 압박을 해왔었지만 노숙인법이 만들어지면서 노숙인 재정을 만들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전까지는 기초 수급에 준한 의료, 의료급여 취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5프로 이내? 그 정도라서. 사실상 노숙인, 지방에 있는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아플 때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러면 서울로 편법으로 입소를 잡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노숙인법이 시행되고 의료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분명하게 진료를, 기본적인 것은 건강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법 제정후 서울시 노숙인 진료 예산압박이 줄고, 의료급여 시행으로 기본적인 건강권 좋아짐.>

또 하나 시설의 환경이 개선된 면도 중요하다고 봐요. 노숙인 법 이전에는 사실 무허가는 아니지만 무허가 시설에 준한 시설들이 난립해 있었어요.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노숙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설 인허가 요건, 2014년도 그때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2014년 15년에 재인가를 대부분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설 재인가를 통해 정비되는, 노숙인 법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법 제정 계기로 시설 정비, 환경 개선에서 두드러진 변화> 그 다음에 정책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노숙인 법에 입각해서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에서 3년, 사실 노숙인 법에는 없거든요. 법에는 노숙인들이 행정기관이라든가 우리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2년에서 3년이라는 건 이거는 행정 기관에서 임의로 잡아놓은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지원계획이라는 계획서가 나오잖아요. 2013년도 계획서가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2년에 3년으로 명시했던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부분은 누락돼 있지만 시설폐소 이후에 2개월 이후에는 재입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간만료폐소일 경우에. 그걸 행정의 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 태반의 시설들이 다 작살나게 돼 있어요. 법과 다른 거는 행정이 문제인 거죠. 지침이 문제인거죠. 지침이 법보다 더 강력함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노숙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행정기관이 깨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자각을 시켜준 거고. 그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법 제도를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협회를 강화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우쳤죠.



현 노숙인복지시설 체계가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목표로 적절하게 편제되어 있는지?

김진미

조금 아까 말씀한..., 그 법 말씀하시다가 계속 입소기간 규정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하셨는데, 입소 규정은 신청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구요. 그런데 저는 그 지침이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노숙인복지법이 설계하고 있는 시설의 전달체계는 어쨌든 거리에서 상담과 긴급보호를 거쳐서 재활·요양·자활 시설로 유형화해서 분류하고, 그때에 자활시설은 통상 3년정도 보호하는 게 맞다는 사회적 상식선에서 룰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른 영역의 시설들도 입소기간을 장기요양보호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두고 있고, 통상 3년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근데 요는 요양을 빼고 재활·자활 시설에서 기간 규정이 현재 노숙인의 특성이나 시설 특성에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설계에서 왜 재활시설이 자활시설보다 기간이 짧은가를 반추해보면 재활시설에서 지역사회의 독립을 고려한 설계가 아니에요. 법도 실은 거리, 종합/일시를 거쳐서 재활에서 자활로 갔다가 독립을 하는 단계적 모델을 기초로 설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시설에서 쪽 해서 증상이 치유돼서 독립적으로 간다라는 그림이 아니고, 자활로 넘어와서, 증상만 좀 안정되면 자활로 넘어와서 거기서 이제 독립 준비해서 나가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짧은 기간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 법을 위반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노숙인 법을 만들 때 어떤 그림으로 노숙인의 독립 경로를 그리고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때가 되지 않았나,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이 법 만들 때에 이런 시설에 대한 그림이 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나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독립적인 삶을 지지하는 게 보다 인권적이고 인간적이라는 트렌드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을 3가지 정도로, 여기에 전문화해서 구별해서 뿌려주면, 여기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독립이 될 거라는 굉장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양상이나 특성이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너무 거칠구요, 제가 볼 때는 분류가.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는, 아까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시보호의 기능을 모든 시설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노숙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었는데, 오히려 법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거르는 게 한마디로 굉장히 강고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일시보호를 안 하거든요. 아까 비전문적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지역에서 발생한 노숙인이 긴급하게 며칠을 보낼 곳이 저 변두리에서도, 저는 꼭 서울이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사정을 거쳐서 분류되게 되고, 그 사정을 거쳐서 지금의 재활이나 자활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못하는, 계속 말씀드렸던 복합적이고 다양한 소위 사각지대의 분들은 일시보호시설이나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체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강고해져서...

제가 볼 때는 관행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을 좀 다시 흔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노숙인의 자활이나 자립으로

가는 경로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노숙인들이 종합 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을 거쳐서 시설에 가지를 않아요. 안 맞아요. 계속 그 종합, 일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기초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노숙인들이 종합, 일시를 거쳐서 시설에 가지를 않고요. 종합, 일시를 중심으로 도시는 노숙인분들과 시설로 도는 노숙인들이 두 트랙으로 달라요. 그래서 종합, 일시에 머물면서 이 수준의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는 노숙인들에게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시설을 계속 전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지역사회로 밀어내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체계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지, 기존의 법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왜 안될까요?, 이러이런 거를 하려면 여기서 이 단계, 일시보호시설에서 막 이렇게 밀어서 시설로 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논지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 기존의 노숙인 욕구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숙인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숙인복지법 제정 당시에 설계한 노숙인 자립경로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

신창수

김진미 센터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강동희망의집은 지역적 특성이 좀 있어요. 다른 곳과 다르게 인근의 서초, 송파, 강동구 3개 구를 통틀어서 유일한 시설이에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다 폐지됐어요. 다 문 닫고 다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노숙인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노숙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임대주택에 사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고 이전에 노숙인 생활시설을 다 이용했던 분들. 이제 이분들이 가끔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얘기하시고,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절대 기존 시설을 안 가요. 지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이분들의 생활 터전인 거예요. 길바닥에서 생활하는 한이 있어도. 이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구에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예전에 한번 재워드렸더니 지갑이 싹 털려갔고. 그 전염성, 전염병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방 한 칸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분들을 일시보호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다시서기센터예요. 그러면 그 1600-9582(노숙인 응급 콜센터) 전화를 해서 응급팀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기 다시서기는 늘 항상 바빠서 그쪽 지역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 자체로 해야 하고 아니면 저희가 시설을 비워두고 차로 갔다가 서울역에 모셔다 드려야 해요. 그럼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에 또 와 계셔요. 그래서 이게 일상화 됐는데. 일단은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설의 외형이나 성격이 달라져야 할, 저희는 자활이지만, 최소한의 일시보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겨울철에 응급구호방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 한 달에 20만원만 해주면 우리 방에 별도로 방이 없으니 여인숙 방을 하나 잡아서 인력지원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그분들이 찾아오는데 이분들을 그냥 서울역에 가라고 하면 차도 없지, 밥도 못 먹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오케이를 하고 지원을 했다가 이게 구에다 보고를 했더니 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할 일이나 잘 해라, 왜 일을 벌이냐. 그렇게 팀장 과장 전화하고, 시설장한테 전화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법이, 법이 있는 것이 달라서, 편제가 달라서 해야 되고, <주요 노숙지역

외에도 일시보호가 가능한 시설 필요>

덧붙여서 일시/종합이 저는 하나의 자활시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서비스가 다 제공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생활하면서 다 되고, 거기는 장점이 뭐냐면 자유롭지만 2년 3년 기간 제한도 없어요.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영등포에서 서비스 다 제공받다가 다시 서울역으로 넘어오고, 용산으로 넘어와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임시주거지원사업 같은 경우 2~3개월 지원받고 넘어오면,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관리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합관리가 안 돼서, 그런 사례처럼. 그러니까 자활시설은 지금 문 닫아야 할 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유지도 힘들고 지금 평균 60프로 미만으로 되고 있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더 푸시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가시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종합이나 일시가 더 매력적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오래 되신 분들은. 근데 저희는 자립이 완벽하게 되는 저희 시설의 어떤 효과성을 볼 때, 초기에 진입했던 분들은 저희 시설에서 100프로 자립을 합니다, 100프로 자립을 하는데, 만성인 분들은 100프로 여건을 갖춰도 이분들이 스스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구별을 하고, 앞으로 시설 이용을 이런 식이라기 보단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뀌어나가면 되지 않나, 좋지 않겠나, 좀.



노숙인 시설 예산 지원 기준의 문제

**사회
오기철**

네, 감사합니다. 4번 질문이었던 현 노숙인시설이 자활이나 자립 목표로 편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다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시설 분류를 했는데 그 특성이나 상황에 비춰 적절하냐, 이 부분도 사각지대 얘기하시면서 다 얘기를 하셨고. 적절한 공급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후반부에도 좀 더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럼 이제 노숙인시설 전체적 운영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경상운영비가 시설 보호인원인 거죠? 현재 보호 인원과 연동해서 예산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숙인 자립자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호인원 기준으로 하는 예산 배분이 어떤지 의견을 좀 듣고 싶구요. 그런 예산 지원에 대해서 보완의 기준이나 다른 방안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보는 겁니다.

신창수

저희가 택시를 타면 예전에 택시요금 시스템이 단순히 요금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달리는 순간에. 근데 서울시내가 복잡하고 정체가 되니까 거리 시간 병산제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마찬가지로거든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용하는 선생님들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 인원수대로 하게 되면 한 분이 있다고 해서 등 하나만 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10명이라고 해서 등 10개를 켜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시설의 규모

와 면적에 맞는 것들이 배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인원에 따른 것들이 좀 돼야. 급식 같은 경우 사람 수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 이게 좀 너무나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호인원수 기준의 예산배분이라도 시설의 기본적 운영이 가능해야>

최건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그 2018년 대비 올해가 기준단가가 2.8프로 인상돼서 51,600원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 양시설이 크더라도 적더라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정원제가 아니라 현원 인원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건물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 생활인 분들을 인권적으로 수면 면적을 최대한 지키고 인권적인 면에서 쾌적한 면적을 제공하라고 하고, 방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좀 줄이면 가장 쾌적해 지잖아요. 근데 난방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못 써요. 전기료가... 그러면 방을 합쳐야 해요. 그럼 이제 빈방은 놀리게 되고,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도 위법하게 되고, 인권문제로 제소되고. 이걸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저희도 뭐 올해도 인건비 부족하고 안전문제도 있어서 총 하나를 아예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거의 한 80명에서 100명의 인원이 다른 층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타난 갈등, 생활인 분들의 기존 갈등부터 해서. 근데 주무관께 말씀드렸더니,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수면 면적 약속을 했냐,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이라는 건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 테두리 안에서 적용하겠다 하면 예산이 올해도 40퍼센트 운영비가 깎여서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깎겠다고 하는데. 올해 저희가 법인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 요양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도 병원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혼자 계신 분들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할 때, 집이 있어도 갈 데가 없어서, 연고자가 없어서 저희 문을 두드리는 분이 있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치매도 있고 받을 땀 거기 밖에 없다, 뭐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해외 나갔던 분이 거기서 불법체류자 되어 들어와야 하는데 한국에 연고가 없다, 받을 땀 너희밖에 없다, 안 받으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랑 해서 오고 그분 와서 직접 전화를 받고 출입관리소로 모시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니네 인원으로 그냥 몇 명이니까 이렇게 해라, 건물 유지 그건 모르겠고, 그냥 해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은 시설의 규모랑 건축물의 크기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100프로 그걸 다 인정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인원수를 식사문제도 이런 건 인원 문제로 해결하되 고려 사항에 어떤 시설의 건축물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분들은 지침을 주셔서 모르겠다 하고 잘라버리니까. 그러면 시설 뚫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장님은 시설을 몇 개의 시설로 분화해야 하나 그럴 정도로 못하겠다, 이러시는데. 이러다 안전사고 터지거나 뭐하면 시설장에게 책임 묻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보호인원 외에도 시설의 규모, 건축물 크기 등을 고려한 예산 지원 필요>

김종대

다시서기는 이용시설인데 숙박자 기준으로 운영비를 받다 보니까 참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 연계하고 빼내야 하는데 적정 수준에 위태위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딜레마가 많은데. 이게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진료소, 희망지원센터 이런 곳을 다 통틀어서 받거든요. 인원으로 안 받고. 특이하게 숙대 종합지원센터만 종합지원센터 겸 일시보호시설인데 거긴 또 인원으로 받고요. 저희도 이번에 한 50프로 저번 대비 줄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또 빼내는 작업을 많이. 임시주거로 많이. 오면 초기에 다 빼다 보니까 이제 어디 연계도 안 되는 분들이 남아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실제로 저희도 5층짜리 건물이고 인원수에 상관없이 항상 돌리는 시설인데 저희도 더 모집해서 모아놔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서비스를 좀 줄여서 이용하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계하거나 이런 이용시설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들은 좀 인원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운영비가 책정돼야 하지 않나. <보호인원 감소로 운영비가 줄어들면 기본적 운영이 어렵게 되어 연계서비스 축소를 고민하게 됨>

이수진

뭐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약간 계절 변동으로 운영비가 어떤 때는 많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좀 적게 써서 남고. 근데 남을 때는 왕창 사야 하고 모자랄 때는 어디서 다 끌어와서 해야 하는. 이걸 1년 정도로, 분기로 해서 반납하고 이게 아니라 1년 평균으로 줘야,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생활시설이다보니까 어느 계절에는 많이 들고 적게 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옥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예산 관련해서 예산 측정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우리는 밥 먹는 거 있잖아요, 노숙인분들. 저는 그래요, 현원대비 나오는 줄 알고. 현원대비 하더라도 단가가 2,500원이잖아요? 1식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먹다보면 더 여유롭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남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점심시간까지 다 하게 되면요.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 현인원이 아닙니다, 실제 식사 인원은. 도대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나가야 할지를, 미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먹을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시에다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 맞는 겁니까. 특별하게 대답 안하고 인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식사 인원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때 그 운영위원회에 플러스 마이너스 겨울은 10명 더 플러스 뭐 이렇게, 여름은 5명 플러스 임의적으로. 근데 그거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 실제 인원으로만 하라는. 근데 대규모 식단의 경우 그게 안 됩니다, 식재료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급식비 집행시의 인원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그래서 아까 신창수 선생님이 얘기해주셨지만, 여기 자활쉼터가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자활쉼터만 한 20년 있었지만, 근데 큰 변화라는 건 생활인들의 욕구를 듣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자기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임대주택 가기 전에도. 지금 현재 60% 70% 수준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 자활시설 이용인이 60~70%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공급이 많아서 그렇다 뭐,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이 생겨서 계속 거기서 잡아둬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자활쉼터도 얘기하

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맞춰서 70프로 제공 받아가지고, 저희가 77명인데 지자체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안 풀려고, 설치 초기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맞추려고 75명으로 딱 맞춰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 법이, 자활심터 생활인들에게 적용하는 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60~70% 입소 걱정만 하고 있는데 제가 희망원룸을 잠깐 운영해봤는데 거긴 50, 50이었어요. 학동이랑 아현동에. 근데 1.5평까지 나오는 큰 공간도 있었는데 그런 공간도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2평에서 좀 높이 잡으면 2.5평. 이분들도 3평까지는 말을 못 해요. 보통 3평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화장실까지 들어 있는 게. 근데 그래도 그런 심터들에 대해 시의 예산편성이 돼서 자활시설이 이전 좀 전문화가 돼야 한다고,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담보호센터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여성심터 다 차별화되는데, 자활심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맨날 얘기해보면, 뭐 취업해라, 저축해라, 임대주택 입주 준비해라. 뭐 하나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 안에서 그 분들이, 선진국들은 다 그렇거든요. 약간만 칸막이만 잘 해가지고 지원 나온다고 그러면. 그 담에 근원적으로 맨날 50명당 1명, 40명당 1명 상담하는 게 아닌 정말 인원의 기준치를 낮춰서 그 기존 직원 유지를 하고 인원을 조금 더 낮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자활시설도 노숙인별 2평이상의 공간 제공, 실무자당 보호 노숙인수 감소로 서비스 질을 높여야>

김진미 지금 경상운영비 중에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가 있는 거고, 급식비 말씀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인건비인 것 같고요. 보호 인원 대비 지원하는 데서 인건비 기준을 계속 이렇게만 두는 것은 사실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되면 자활시설의 목표는 몇 명을 데리고 있는지가 되게 되어서 자활시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에 맞춰서 편성된 인력을 이용인이 준다고 줄인다는, 말씀해주신 폭력적인 사정도 물론 있지만 시설이 가지고 있는 본령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인력지원 기준이... 자활해서 빨리 독립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전에 만들어진 보호 인원 대비 인력 지원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현원이 주니 인력도 줄여야 한다는 기준을 들이대면, 그건 자활시설은 되도록이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작년에 협회 차원에서 시설 방문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입소인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경로로 독립시키기가 물었을 때 어떤 시설들은 실제로 인원이 부족해서 지역사회의 고시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하면 차라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시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시설이 노숙인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종합지원센터에서 안 보내주어서라는 식으로 원망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그건 그들의 욕구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고 그에 따른 인력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몇 명 채우고 있느냐잖아요. 이걸 시의원을 비롯해서 누구나가 몇 명 채우고 있는데 당연히 몇 명 지원돼야지, 기존에 수십년에 걸쳐 지원의 잣대였는데... 숙박자 플러스 낮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사례관리 품이 드는 거잖아요. 채우는 데만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은 낮에 사례관리 활동을 하는 데에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숙박자 플러스 낮 이용

인 사례관리로 몇 퍼센트를 인정해 준다면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면, 예를 들면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인력이 20명이면, 지역사회에서 내보내서 사례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자활시설들은 역사가 되면, 지역사회에 꽤 많이, 주변에 머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간헐적이지만 사례관리, 사후관리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위기 상황이 생기면 개입도 하고 잘 지냈는지 확인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 하잖아요. 그니까 지역사회에 나가서 완전히 지역사회에 편입되기 직전에 사례관리 활동을 어느 정도 퍼센트의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면, 내가 여기서 많이 데리고 있어야지 하는 욕심보다는, 내보내서 사례관리 해야지,라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 좀 그런 방법을 독려해주면 어떨까, 재우는 인원 100프로 플러스 알파 지역사회 사례관리 인원을 포함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면서 개인 공간을 좀 주고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인원에 대한 여분의 노력을 지역사회에 나간 사람들에게 쏟고. 그게 인정이 되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자활시설들도 <보호인원 기준에 지역사회로 독립시켜 사례관리하는 인원수를 추가해줄 필요>

이수진 아까 4번 논의의 유형화라는 것도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활시설에서 사례관리, 저희도 사후관리를 4년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후관리가 오히려 힘들 때가 있어요. 명절 때 다 부르고, 공동작업장에도 불러서 하거든요. 그분들도 인력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체계가 있는 걸 또 유형화시켜서 이런 것 좀 플러스하는? 소장님 말씀처럼 플러스하는 경우가, 저희가 좀 탈시설 쪽으로 많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 옥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활심터가 지금 현재 입소 인원 자체가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다면, 잘 생각해보시면, 시에서 우리가 지금 주거지원 사례관리 인력 한 명 지원받고 있다고요. 그럼 '재난 지원받는데...', 그런데 하는 역할은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심터에서는 몇 명 안 되지만 그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분은 거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활심터에서 관리까지 그분들 가고 있어요. 안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현원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기본적인 월세 낸 다음에 그 임대료를 더 못 내면 솔직히 취업 연계, 금전 관리... 그런 진짜 너무 심한 문제 다 풀어안고. 그럼 자활시설 역할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 해서 지금 구조적으로 인원 기준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이 변화가, 전 그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아까 얘기한 거고.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까지 하는 역할에 따라 조금 그 부분들을 인정하면 아마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 <시설에서 독립한 지역사회 거주자 사례관리를 인정하여 종사자 배치기준 상향해야...>

문정우 그니까 대체로 노숙인시설들이 소규모인 거잖아요. 30인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정말 부족해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걸 숙박자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근

데 그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받는데 그걸 우리 저번 달에 많았는데 이번 달에 독립시켜서 줄어서 이번 달 기준으로 신청하면 편차가 또 있고요. 그래서 숙박자 기준으로 운영비를 줄 이유가 뭐냐, 이걸 현실에 맞게 정원 대비로 가줘야 하는 게 맞고, 그게 정 안되겠다면 그럼 어떤 구간을 설정해다오, 설정해서 만약에 정원 대비 50퍼센트가 됐다 그럼 딱 50퍼센트가 아니고 운영비를 그래도 최소 운영할 수 있게 70에서 75퍼센트 이렇게 좀 해준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큰 시설은 큰 시설대로 건물이 크고 기본 유지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단계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는 식비예요. 서울시는 식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식비가 몇 년째 동결돼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저희 조리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시장에 가면 더 싸요, 더 좋고. 좋은 물건을 가질 수 있는데 식자재 업체 선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금액차가 엄청나게 나요. 그럼 식비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한 분이 오늘 외박을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음식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노숙하다 오신 분들 엄청 드세요. 1인분이 아니에요. 2인분 3인분 매끼마다 점심도 엄청 드시고. 그분 점심에 없는 거라고 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도시락도 싸가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발빠르게 오르는 식비에 맞춰서 운영비를 주든지, 그 한 명 한 명 외박한 사람까지 체크를 하면서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님 식비를 풍부하게 주든지. 이래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모독적인 거죠.

최건우 예전에 구에서 할 때 따지면서 저희 시스템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저희 급식업체에 주문을 하면 최소한 5일 전에 해야죠. 저희 현원을 기준으로 주문을 넣어야 하는 거고. 주문을 하면 비용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당일날 사람이 없다고 음식을 갖다 버리고 그거 메꿔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외박한다고 하고 들어와요. 또 아무 얘기 없이 안 들어와요. 그럼 안 들어 올 거 미리 예상하고 그 사람 꺾 미리 안 해놓을 순 없잖아요. 그니까 항상 밥을 넉넉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건 좀 강력하게 협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서 이제는 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더이상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당했어, 할 건 아니라고요. 명확하게 창구를 통해서 말해야 하고, 법의 잣대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 있지만, 지금 근로기준법상 저희 시간외수당 15시간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구청 지자체는 시설에게 책임을 떠맡기잖아요. 우리 얘기를 좀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노숙인 자활/재활프로그램에 대해

사회 오기철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정리를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에요. 저희가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프로그램, 재활시설은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노숙인분들, 같이 계시는 이용자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체계인지,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설 의존도를 낮춰서 탈시설 할 수 있다든지, 독립 생활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자활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창수 저희는 재활시설이고 엄밀하게 따져서 서울시가 바라는 자활프로그램은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자활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태반의 예산을 다 자르고. 처음에 아예 다 잘렸어요. 그래서 잘린 이유가 뭐냐? 거기 애초에 나온 자활프로그램에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는데. 왜 이러이런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제출했느냐. 왜 쓸데없냐라고 얘기했더니 심사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다, 직접적인 자활에 필요한 프로그램만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을 싸웠어요. 왜 당신들 잣대로 맘대로 하느냐, 시설 이용인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가야 되는데. 나 사회복지사로서 사실 무슨 얘기까지 했다면, 저희는 그 취업률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잠깐 자랑할게요. 저희 정원 15명이고 현원 12명이지만 저축액이 1억이 넘어요. 빨리 자립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 둘이서 맞고대를 하는데 지금 일요일날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할 수 없고요, 일요일 날도 거의 70%가 다시 또 일을 나가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아르바이트를 나가신다고요. 그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아저씨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을 어떻게 짤냐면 지역사회랑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걸 짤더니 지역주민이 90프로인 거예요. 그니까 남의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보내냐고. 안한다 그랬어요.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그만 거 하나 그럴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아저씨들은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남들 여행 다니는데 여행하고 힐링하고, 뭐 그리고 서로간의 구성원간에 좀 친분도 쌓고. 그리고 또 딱딱한 우리 딱딱한 종사자들하고도 좀 소통하고 싶고, 그 답에 지역주민들이랑도 소통하고 싶고 그런 건데. 전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재활이나 요양에서 그런 자활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활 프로그램이죠, 재활. 자활프로그램은 어디서 해야 하나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아저씨들 막 보내면 돼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활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인가? 아니다. 일단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 이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매년 80프로 90프로 자립에 성공했다고 떠들어대는데, 매년 8,90프로씩 자립했으면 아저씨들 없어요, 씨가 말랐어야죠. 근데 매년 동일한 사람들이 임시주거지원 받고 있잖아요. <자활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계획되기 힘들.>

김종대 아, 그건 다르죠.

김진미

매년은 아니에요

신창수

제가 3년 전 통계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3년 전까지.

김종대

3년전, 2016년.

신창수

아니 그니까 3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변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임시주거지원 받고 다시 받진 않지만 다시 이용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활과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고용노동부에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고용노동부에 다 있어요. 근데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것저것 자격직무 취득 관련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그거 취득해서 어디 취업해요? 일용직밖에 없잖아요. 그럼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왜 아저씨들이 안 하나면 거기 가서 아저씨들이 취업이 돼서 일반 직장에 가게 되면 노숙인이라고 하는 낙인감 때문에 거길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노숙인이라고 드러날까봐. 이것 신청해서 직장 다니다가 회식하다가 어떻게 노숙인시설이었던 거 알게 되면 그날로 그만두고 와요. 울면서 술 왕창 먹고 열심히 자립 준비하다가 그냥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원 프로그램들을 예전에는 자활지원과에서 우리에게 가져와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랑 연계해서. 100프로 다 실패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노숙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잘못된 거라고. 기존의 시스템에 프로그램 다 있어요. 여지껏 그것 반복해왔던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 옥

보니까 이용자 욕구에 맞춰,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데, 저도 초에는 교육적이고 치료적이고 뭐 재활적인 그런 고민들을 교수님들처럼, 저 요즘 욕을 먹었어요. 근데 왜 시설평가시에 굳이 교육적이고 재활적이고 또 뭐 자활적인 실적 위주의 성과 위주의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전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분들 있잖아요, 맨날 일하고 저축하고, 임대주택 가기 위해 매일 일만 하고, 갔다 오면 또 앉아서 또 교육도. 나도 받기 싫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일용직 갔다와서 피곤한데 씻지도 못했는데,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그거 안 내해 주고. 그런 일정에 맞춰서 빨리 밥 먹고 7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다 없애버렸어. 다 해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해봤어요, 제가. 저는 생활체육 분야를 선택을 했어요. 볼링을 같이 치러 갔는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겼다고 하이파이브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번에는 당구를 치러 갔어요.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아래서 자장면 먹어가면서. 당구에서 이겨서 너 몇이니 몇이니 그런 소소한 어떤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것들도 했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배드민턴도 바깥에서 한 게 아니라 실내 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그런 관련된 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안 합니다, 올해는? 올해는 안합니다? 왜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끌고 가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동호회 만들어주면 자

기네가 있는 기간동안 서로 소통하게 되고 같은 방에 있는데 대화도 안하는데 그걸 하면서 서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 이게 진짜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조금은 그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는 그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는 자기가 여가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야지 꼭 결과위주로 시설평가 감사 오면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제가 놀랐습니다. 자활센터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요, 뭐, 취업시키고 그 담에 저축시키고, 전문기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는 노숙인 전문기관에 취업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예전에 다 해가지고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원부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뭐 없나요? 생활에 대한 거 뭐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여유라든지 자기 모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그분이 원하는 걸로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 결국엔 다시 돌아온 게, 나라면 내가 교육받고 싶겠어요? 교육 안 받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놓고, 논다는 게 아니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알아나가는 과정 속에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관계성을 실제 몸으로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냐면 시가 아니라 지자체라고 생각해요. 지자체가 항상 보면 지도하고 관리하는 측면만 오고 예산만 그냥 넘겨주는 정도로 본다는 거면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금 일시보호시설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어떤 역할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숙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문정우

이용하는 분들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전처럼 자활이나 뭐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초반,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고 그니까 모여서 미술치료나 그런 걸 하면 그래도 그것 자체에 자기 얘기를 하는 데 의미를 두시고 이제 모여라 하면 좀 모이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워낙 개별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뭐 개별상담이나 몇 명이 야유회 같이 놀러 가는 거라든지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소소한 문화생활, 여행, 여가. 그리고 이게 왜 자활에 도움이 안 돼요?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분들이 티비 보면 누군 놀러갔고 뭘 했는데 또는 직장 가가지고 누군 어디 갔다왔다더라 얘기하는데 자긴 갔다온 적도 없고 놀러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괴리감도 크고 상실감도 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저희 시설에 들어오면 초기 쉼터 적응이나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만 모시고 1박2일 여행이나 하루 여행을 다녀오거든요. 얼마든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면 노는 거라고 다 잘리고. 뭐 자격증과 관련된 건 그나마 좀 해줘요. 근데 물론 자격증을 시설에서 하는 건 의미는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저희는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그걸 하면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자격증 따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 아니 그래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걸 하라고 해서 다 하면 다 잘라버리고 심사에서. 그러면 자활에 도움이 되는 게 사진 찍기, 캘리그래피, 그건 뭐 자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예산 엄청나게 들었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편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지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몇 년째 계속 사진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캘리그래피도 그러시고.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예요. 근데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보세요. 그리고 작년인가 언젠가 대규모로 노숙인들 전체를 데리고 여행을 가네요? 여행을 좀 개별적으로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이걸 또 어느 시대 행삽니까? 자기들이 대규모로 데려가는 여행은 되고, 시설에서 각자 가는 여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시설에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하는 프로그램비를 내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못해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내려주고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냐, 그것부터 넘겨받아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좀 집행, 시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좀 현실에 맞지 않냐.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은 좀 심리 치료 이런 건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노숙인시설에 일정한 규모의 프로그램비 예산이 지원되어야>

이수진

저희는 조금 반대예요. 낮 동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 노숙인이란 편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비가 깎였어요. 재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절반으로 깎였어요, 올해.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프로그램 사업비가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존에 전문재활 프로그램에서 강사분을 초빙해 놔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내년에도 깎였어요. 선생님들이 전문재활 프로그램도 하지만 야외프로그램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줄고 있어요. 사업비가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 저희는 정말 낮 동안에 전문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가 정말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 특성에 대해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최건우

쪽 말씀을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법제정 이후에 아, 요양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렇게 관계형성이 안 돼 있었구나. 이렇게 우린 탄 데로 가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좀 화가 난 것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요양원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중증환자도 있고 정신증 환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일반 알코올 환자도 있고 많습니까. 근데 법에서는 그냥 다 그냥 노숙인이예요. 그냥 다. 프로그램 하래요. 평가에 보면 그냥 규모가 크니까 프로그램이 돈 많이 들어가야 한다, 해요.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 특화가. 이런 것들이 뭐 저쪽에 계신 생활인 분들이 이쪽에 오면 능력이 막 확 좋아지는 거라고 특화사업을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본인의 몸에 안 맞으면 그건 안 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뭐 막 공공근로 통해 만들어도 생활인분들이 만족함을 못 느끼시면 이걸 쓸데없는 거, 낭비잖아요. 거기에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지금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인가요? 근로기준법 바뀌면서 특례업종에서 저희가 빠져나오고 52시간제 지키라고 하고 되게 FM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도 힘들지만 그걸 또 누군가는 전담을 하고 해야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래도 그걸 내년에 평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요구에 맞춰서 하고 싶냐? 아유 뭐 하고 싶죠. 누굴 가지고 해요? 직원? 중증환자들로 프로그램 해야 하는데 밥 주기도 힘든데 누굴 가지고 이걸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욕 시키다가 허리 다 나가고 새로 서울시 대체인력에서 와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신 거지 뭘 그걸 해요. 근데 교수님들이 평가 오시면 아 여긴 특성화된 게 없네, 더 뭐 이렇게 한 걸 해야 하지 않냐. 나들이요? 저희 75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나들이 한번 가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행사를 하지 말고 몇몇씩 다섯명씩 영화도 보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합니까? 그 직원들은 뭐 로보트입니까? 잠도 안자고? 우리가 받는 급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왜 장애인도 있고 중증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그냥 노숙인으로 합쳐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지원해라? 특성화된 그쪽 유형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담거나 이런 걸 맞추면 어머어마해합니다. 솔직히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면, 가장 적은 돈으로 이분들 관리하려고 노숙인시설 운영하는 거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뭐 지금 좀 짚금짚금 말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김진미

저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라고 하면 굉장히 전형적인 심리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노숙인이라 같이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기존 다른 종별의 이용인들 입소자분들의 특성과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니까 좀 전형 프로그램, 무슨무슨 치료, 무슨무슨 역량강화 뭐 이런 기존의 다른 사회 영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틀로 보는 거를 좀 깨야지 창의적인, 노숙인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한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심사할 때 공무원이 기본 잣대를 주고, 심사에. 초반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사를 함께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쪽 받아가지고 이걸이건 안 된다고 날리고 그 나머지를 갖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심사위원회를 현장이랑 돈 주는 데를 같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노숙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판단할 경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좀 심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심사의 합리적 기준, 현장도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 그래야지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평가도 다른 것들은 다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프로그램은 그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힘든 거잖아요. 몇몇이 참가했는지가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아니잖아요. 실적과 무관한 성과의 영역이 있는 건데.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게 확인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지 않냐? 그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막상 필요한 프로그램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용인들의 그 어떤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기관 홍보를 위해 마련한 사업인지 헷갈리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과, 이렇게 정말 노숙

인들의 삶의 질 혹은 노숙인들의 독립생활에 유의미한가를 좀 성찰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떤 거는 정말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관을 홍보하는 거지 이게 노숙인들이랑 맞나? 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있어서.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필요>

신장수

저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매년 어떻게 하나면,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시설 평가가 좋으니까, 교수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노숙인시설 특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잘 푸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경향을 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저축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등등 이렇게 카테고리로 세분화해서 하는, 세분화하면 우리가 하는 일상 자체가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서울 시에서도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 저축관리를 하게 되면 저축 우수 포상을 했었잖아요? 모범 우수상 저축 뭐 그런 것도 이전 다 없어졌어요. 그럼 희망플러스 통장 자격도 주어지고 매입임대 입주 자격도 주어지고 이런 것들 실시한다 하면서.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왔었죠. 올해부터는 하겠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안 됐고요. 어쨌든 그때 시도가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서 뭔가 당선이 되거나 열심히 했던 분들에게는 서울시가 뭔가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 정책들. 근데 지금은 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니까 우리도 아저씨들에게 저축을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러면 매입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답니다, 희망플러스 자격증 20만원 이게 이번만큼 업 돼서 줬습니다,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용에 그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걸 못할 거라고 한다면, 그 이용자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모티브, 성과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다시 예전에 했던 희망플러스, 매입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다거나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완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성과지급 방안 고려>



주거서비스, 지역사회 정착 자원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각 시설의 발전전망은?

**사회
오기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어쨌든 시설 관련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노숙인복지시설 중심이 주거 서비스 확대라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이 주거 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 시설 유형별로 이 주거라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 자활, 요양, 종합, 일시.

김 옥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입주자들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에 지원하는 거는 상담, 간담회, 월세관리, 취업, 그 미취업이나 이직 발

생했을 때 월세 공과금 못내면 안되게끔 만들면 최저한의 수준인데 그 수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웠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꼭 제공을 해야 하느냐라는 걸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진짜 많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역 안에 사례관리 전문기관도 있고, 또 찾아가 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재가복지 임대주택 대상자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노숙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 영역의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 안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그런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관공서도 가기 힘들고 혼자 찾아가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연계하고 애벌 치료해가지고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못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결국 우리는 지역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탈시설하는 게 목적인데, 주거에 계신 분들 생활인분들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혼자서 자생할 수 있고, 혼자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할 서비스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해 나가는 과제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 필요>

문정우

저는 지금 그래도 저희 자활지원에서, 노숙 쪽에서 정책 쪽으로 평가해주고 싶은 게 이런 주거 사업을 좀 좋게 평가해주고 싶어요. 노숙인복지법이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물론 이런 노숙이라는 상황 때문에 주거가 없는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했고, 그게 시작되면서 또 지금은 주거지원, 아니 지원주택 사업까지 연계되면서는 저는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노숙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가 없어서 오셨기 때문에 주거를 확보해주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순탄하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해당 과라든지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법률적인 거라든지 이게 협의가 돼야지, 협조가 잘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었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부터 저는 진짜 자활지원과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신보건 영역에서 있다 왔는데 그쪽도 보면 이런 주거가 필요한 취약계층이거든요. 정신질환이 만성이고 그럼 가족체계도 또 없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수급자로 사는데 주거가 불안정하고, 이분들한테 필요한 주거인데도 거기서는 이걸 해결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신보건 쪽에서. 정말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정말 주거정책이 필요한 곳인데, 그쪽은 민관이 협력이 특히 관에서 협력이 잘 안 이뤄지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 노숙 분야는 관 쪽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커다란 공으로 돌리고 싶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원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신보건 쪽에서는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 건데도 저희 노숙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물론 말은 되죠. 지원주택의 출발도 외국에서도 보면 만성 노숙,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 정신보건 쪽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그래서 정신보건 쪽에서 저희 정책을 상당히 부러워해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서 주거와 관련한 것들 계속 확대해 나가고, 특히 노숙쪽에 대한 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해서 확대하게 된 것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저희는 여성쪽이니까 여성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정신질환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지원주택을 통한 지원체계가 정말 절실하거든요. 저흰 매입임대도 나가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분들의 증상관리가 안 되고 또 외로워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좀 밀착된 사례관리가 돼야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데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자연스럽게 이 지원주택의 문제가 가장 절실했고, 그걸 잘 풀어내서 이렇게 제도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그 남성분쪽에서도 그런 대상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로서는 비전트레이닝센터 정도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자활시설에 계시는 분도 그런 대상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치료는 안 받아도 왜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사례관리가 필요한? 뭐 적응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지역사회 인프라가 있는데 왜 자꾸 노숙인 테두리 안에 자꾸 걸치려고 하느냐, 문제제기는 맞지만 지역사회에 인프라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례관리가 그렇게 잘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리고 노숙을 경험했던 분들의 특성은 자존감이 좀 낮으시고 위축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저희 노숙쪽 그 기관을 자꾸 찾아와서 의존을 하게 되는, 이것도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맞게 저희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역사회니까 가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문제가 안 돼서 저희 쪽을 찾아오면 저희 쪽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건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활시설로 안 가고 일시보호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에서도 곧바로 매입임대나 지원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활로가 생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숙 분야에서 이런 지원주택이나 지원주택이랑 유사한 그런 건 계속 확대돼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노숙인 시설의 중간역할>

신창수 주거 서비스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착 이 두 가지는 저희 자활시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돼요. 주거서비스 확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뤄져왔고요, 저희는 주로 전세임대 입주를 통해서 자립을 하게 되는데, 거의 100프로 매입임대는 왜 안하냐면 매입임대는 특정 지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 일자리랑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지금 매입임대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세임대를 추천을 하게 되면 일자리랑 가장 근접한 곳에 그것을 마련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계속 고민하는 게, 태반이 지역을 떠나요. 지금 사시는 분들이. 그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9,500까지, 구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죠? 주로 수도권 경기도 주변으로 많이 가는데, 서울에서는 그 돈 가지고 전세를 구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니까 사람 살 만한 주거를 말씀드리는데. 출퇴근도 용이하고 아니면 저쪽에 아주... 제가 한번 사례관리 때문에 가보면 주변에 맨 그 문 제투성이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게, 매입임대 보면 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에 거기를 벗어나는, 거기를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로 나가서 외려 더 망가져서 다시 시설로 들어와요. 이런 분들은 벗어나고 싶은데 결국은 그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지방으로 가야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 지역 일자리와 지금 노숙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지원제도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니까 지역, 지금 LH에서 하는 전세임대는 지원금이 9천만원에서 서울에서는 좀더 올려주든가. 아니면 매입임대처럼 매입임대를 좀더 보완, 보강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일자리랑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연구가 돼야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회 오기철 그런 상황이 될 때 시설에서는 어떻게 발전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신창수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지원, 현원에 연연하는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저희는 현원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지역에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꽤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거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다시 거기로 나갔게 된 위기 노숙인들 예 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해준다든가 혹은 여러분의 쌀을 지원하게 해준다거나 자원을 연계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버틸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최후에는 시설 입소를 안내해 드리지만 시설을 이분들이 꺼리는 이유는 시설의 프로그램에 마지 못해 앉아 해야 하는 게 답답한 거죠. 그런 것들도 싫고 죽어도 거긴 가기 싫다라는 그런 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지역도 떠나기 싫어해요. 이분들이 거기 삶의 터전인 거예요. 거기 친구들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길 떠나면 전혀 생소한 데 가서 정말 싫은 건데. 그런 주거권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삶의 터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뭔가 마련해줘야 하고, 사례관리를 사실 저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원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 보호 현원에 연연하는 체계에서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활동 어려워>

이수진 저희는 정신질환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들어오실 때도 말하지만 지속적인 증상관리거든요. 퇴소해서도 증상관리. 이분들이 증상관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탈노숙이 되고 주거안정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에서 어느 정도 사회성이나 기능이나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증상관리를 하시면 사례관리가 꾸준히 돼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원으로써 지금 퇴소하시면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주택이 저희에게 가장 알맞아요.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또 20년까지 생활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생활도 보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주택 쪽으로 저희도 전환을 해서 시설과 지원주택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이 시설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능과 사회성과 증상관리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주택으로 장기간 꾸준히 사례관리가 이뤄져서 증상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증상관리가 될 수 있고 주거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

오기철

어쨌든 주거로 가지게 되면 인원이, 예를 들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수진

근데 여성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있으신데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 만성적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능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유지하더라도 지능이나 인지기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점점 더 늘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원주택까지 가시면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러지 못하신 경우에는 참 좀 그런...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65세까지만 받았어요. 근데 65세 한 분이 도저히 다른 데 가실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노인시설 갈 수도 없고, 다른 시설 쪽으로 예전에 부랑인시설 쪽으로 보내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령을 70세로 늘렸어요. 가서가지고 증상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이 되지 않나. 저희쪽으로 오셔서 어느 정도 향상이 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가지든지 장기임대주택이 돼서 사회로 복귀를 하시든지, 이쪽으로 양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여성노숙인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기철: 지원주택으로 가기는 갈 수 있도록) 사례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오기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있으면?

최건우

저희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향후에 보면 저희도 조금 증상이 좋아지시거나 욕구가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자활시설에 연계를 해드릴까요? 하면 본인들은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평의마을 시설 자체가 집이에요. 규모가 크니까 그 안이 또다른 마을이거든요. 그니까 내 친구도 있고 내 일상도 있고 하니까 그 앞다가 뭐 뭐 그런 거를 마련해 드려도, 꺼내드렸어요. 여기가 내 집이고 이용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시설로 전원을 좀 늘리면 겁내하세요. 요양을 하다가 건강은 좀 좋아졌지만 낯선 곳에 가면 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시고. 요양 하실 분들이면 거의 엄청나게 무너져 오신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또 실패하고 그때 나 다시 발견 안 되면 어떻게 할까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주거 정책이나 주거 서비스가 확대돼서 안전권 안에 들어오고 하면 저희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무서운 곳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런 루트들이 좀 생겼으면. 저희 요양원도 요양으로만 메우는 서비스가 아니라 요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중대

저희도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 여러 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신건강팀에서 지원주택, 재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110호 했었고, 지금 이렇게 느낀 건데,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직접 주거서비스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1년에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노숙인분들이 저희 센터에 왔다갔다하는 시점에서 집중하는 거는 정신건강팀에, 다른 팀에서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저희가 느끼는 건 임시주거지원 사업 이거는 좀더 체계화해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고. 보통 저희가 매년 540명 정도의 지원 예산을 받아서 많을 때는 106% 적을 때는 96% 임시주거를 지원하고 그 중에 150에서 200명 정도는 기초수급으로 대부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서 예방차원에서... 임시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아저씨들이 돌고 있다면, 저기서 좀 나오는 방법은 임대주택에 밀어넣는 방법이 좀 필요할지, 그렇게 매입임대를 해보니까 너무 좀 어렵다, 이런 게 좀 있고. 매입임대도 이번 7월에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지침이 개정이 돼서 계약 전환이 이제 됐는데,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간담회를 하긴 할 건데 전환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매입임대도 좀 활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실질적으로는 전환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여 있어서 더 대상을 늘리거나 뭐... 이런 부분이 직접 계약으로 전환하고 타 주택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면 공실이 되면 또 새로운 분을 맞고 이런 순환적인 건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고여 있으니까 좀 어렵다, 그리고 대상은 너무 많다, 이런 거죠.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체계화로 임대주택 입주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민은 개별 계약하도록 전환할 필요>

김진미

상대적으로 똑같은 일시보호시설인데 햇살보금자리는 한 150호 정도를 운영하는데 대부분이 전세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이 그러면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주택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했던 게 잘못된 거냐,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현재 지원인력이나 기관이 월세를 결국은 마지막에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관리 운영의 어려움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가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서 주택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게 햇살이 전세임대주택 중심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전세임대주택이 아까 서울 지역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방을 얻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햇살 경험을 쪽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이 그 몇 호 아닌 것 중에 택1 하는 것보다 내가 집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면 노숙인들끼리 정보를 주면서 야 저기 가면 할 수 있다, 부동산을 데려가고 이런, 굉장히 자주적인 방식은 띄는. 꼭 기관을 끼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관은 들어간 사람들에게 위기가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그니까 부담이 적으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임대주택도 기관에게 월세 부담의 책임을 지운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해소해 준다든지, 그걸 메꿀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은 굳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여서. 결국은 주거 서비스, '그렇게 중요하다고 공감할 해준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줘라'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게 월세관리 부담만 주지 말고 사례관리 활동 지원해야>



노숙인복지시설 발전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사회

오기철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5분이 남아세요. 주거문제 어떻게 각자 자활시설, 재활시설, 여성시설, 요양시설 기능들, 제 역할들을 말씀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해주셨던 얘기들 다 모아서 간략하게 이제 노숙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노력과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발전 방향이라든지.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마디씩 정리해주시면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씩만 말씀해 주시면.

김 옥

저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보다는 이렇게 장기계획은 계속 중앙의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주무관이 바뀔 때마다 너무 중앙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바뀌어서 잘 안 맞지 않나. <정부,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 필요>

사회

오기철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 옥

먼저 저는 지금 정부라고 했는데 저는 서울시 있잖아요, 디테일한 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직원의 권리 중요하죠, 근데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단절됐고요, 생활인들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횡수도 줄고, 네,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디테일한 대책을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저녁에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경비원 직원, 그래야지 직원들이 하나 돼서 일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야간수당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체휴일을 주는 거거든요, 보상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될 근무, 복지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지자체에다 바라고 싶은 거는 너무 관리감독적인 측면으로 다가오지 말고 현장중심에서 먼저 지자체는 직원부터 봐야 됩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고, 감정노동을 하고 있고. 생활인들 민원에만 대처하는 반응들이라든지 사업의 문제성만 이리저리 마라저러지 마라 검거한다든지, 그런 것들 속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활쉼터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호 원하고 있는데, 에어컨비 달라, 40만원 달랑 주고 말아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오실 때마다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도 한번 듣고 끝나는 거가 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현장에 오셔서가지고 먼저는 직원들 애로사항 그런 부분을 일단은 파악을 하시고 생활인들은 직원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현장 중심의,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해야>

최건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법 같은 거 좋아하니까, 법이 시행이 되었으나 노숙인의 특성, 노숙인시설의 특성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노숙인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것 같은. 제도적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인권하고도 결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인권 부분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제도, 장애인 인권이나 여러 가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숙인 쪽에서도 지금 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어떤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진미 : 제도적 차별이 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니까 그 요양 쪽으로만 바라보면 아까도 건의했지만 노숙인이라는 이름 하에 정신,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 모든 걸 다 깡그리 넣어서 이걸 공통적인 그 해당 복지 분야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해결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노숙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 입소하는 분들에 대한 확대라고 봅니다, 큰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양시설 전문화를 지원해야>

문정우

크게 정부와 지자체라고 했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좀 현실적으로 풀어야 하는 건 종사자 기준 같은 것들, 그게 묶여 있으니까 그게 또 오래 유지되는 바람에 이게 현실에 맞지 않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서울시도 얘기할 때는 꼭 그게 어쨌든 기준이 되니까, 현실에 맞게 빨리 풀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복지 분야도 그렇지만 노숙인복지 분야는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는지 그런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와 닿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특히 노숙인쪽 분야는 지자체 구에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시만 잘 연관돼 가지고 굴러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노숙인 분야에서 자활지원과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민과 관이 잘 협력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복지분야, 정신보건 분야, 제가 너무 안 돼 있는 분야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나마 여기가 민관이 잘 협력을 이뤄주고 민에서 요청하는 거를 좀 받아들여 주려는 자세들이 있고. 또 이제 민에서도 관과 같이 협조를 이루려고 하는 밀고 당기기를 상당히 잘하는 그 관계인 것 같은데. 서울시 특히 해당 과도 칭찬을 했지만 저는 이 노숙인복지 분야에 선도적으로 초반에 일했던 그 민간들, 그 역할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끌고 나갔다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아까도 제가 말했던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가 먼저 한 건 아니잖아요. 민관이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에 필요한 거니까 하고 그걸 설득해서 제도화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이제 지원주택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민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봐요. 열정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고, 그래서 자활지원과에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는 지금처럼 민간에게 잘 협조를 하셔서, 민관이 제안하는 것을 잘 협조하시고, 그렇게 민과 관이 잘 협력하는 걸로 나간다면, 다른 분야보다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앞으로도 잘 유지돼서 노숙인복지 분야가 잘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의 선도적 역할과 관의 협조로 성과 있었음>

김진미

네, 뭐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저도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건 빨리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좀 찾아가지고 법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법이 지금 현실의 노숙인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면밀하게 개입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야말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좀더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차원의 사업계획, 구체적인 목표, 그에 따른 예산지원 필요>

신창수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관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거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노숙인시설이나 노숙인분들은, 사실은 특히 저희가 받고 있는 느낌은 굉장히 정부가 지자체가 감시자 역할만 강조돼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런 관점이 바뀌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런 정책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이뤄져 있고. 또 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책에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담아야하겠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왔어요. 그런 요구들이 지금 어떻게 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설장님들은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사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느낌으로 잘 전달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회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견이 계속 제출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통로. 그래서 변화를 시켜야 한다. 답답하다, 법대로 안 한다, 뒤에서 욕할 것 없이 계속 만나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문제는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관 소통의 장 필요>

이수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쪽 현장의 소리가 정부나 지자체에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가깝게는 지자체의 공무원분이 노숙인복지 아니면 복지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혀 다른 분야에 있다가 오시면 정말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노숙인 혹은 노숙인복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 오기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쨌든 중장기 사업, 또 다른 20년의 서울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진행 순서에 따라서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두 시간 넘게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일자리 분과 FGI 기록

일 시 : 2019. 10. 10. 오전10시~12시

참석자 : 김남영(사회/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기재일(서울시 자활지원과), 김희석(영등포보현의집), 유태성(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정훈(양평쉼터), 이종만(용산지역자활센터), 서정화(조사 연구원 / 열린여성센터)

이수범(조사 연구원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김준희(조사 연구원 / 한국도시연구소)

사회

김남영

저희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 기록물 조사연구 일환으로 이번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하고자 여러분 모셨고요,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서정화입니다.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이고요, 백서 기록물 조사 TF팀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용산지역자활센터 이종만 센터장입니다. 노숙인 지역사회 연계 부분들 이야기 때문에 오게 된 거 같은데요, 아는대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의 김준희입니다. 백서 작업하는 연구진으로 들어와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유태성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유태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희석

영등포보현집 김희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일자리지원센터 최성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이번에 새로, 신입사원입니다.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양평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범

저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수범입니다. 백서 연구진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20년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포커스를 두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나오면 좋은 백서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김남영 20년 백서 연구팀의 연구원 김남영이고요, 구세군브릿지종합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재일 주무관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지를 사전에 보내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발언을 하실 때에 다 녹음이 되는 점을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발언을 하시기 전에 성명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말씀이 끝나면 다른 분이 그 다음에 차례대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김남영 공통질문으로, 2005년 지방이양화 이후의 노숙인 정책이나 사업의 변화와 성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의견 있으신지요.

서정화 2005년 이전부터 일하신 분이 저밖에 없나요? 다 안 계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의 변화와 한계는?

사회
김남영 '일'은 노숙인의 탈노숙과 자립의 경제적 기초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노숙인복지법 제정과 시행 이후 노숙인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떤 면입니까? 이와 관련한 한계가 있다면 어떤 면입니까?

이종만 서울인가요? 아니면 지방까지 같이 해야 하나요? 서울은 사실 변화가 좀. 그 전부터 했던 노숙인 정책이 계속 시행되어 왔는데 노숙인복지법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가장 큰 차이는 지방에서도 노숙인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다른 정책도 잘.

기재일 없었습니다.

이종만 가장 상황을 잘 아시는 기재일 주무관님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없었나 보네요.

기재일 왜냐하면 노숙인복지법 제정할 때 노숙인, 그 보건복지부가 그 이듬해에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냐면 6억 원 책정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쉽게 얘기해서 그게 실태조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태조사 하고 자활프로그램 조금 더 하고 요 정도 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6억까지는 그걸로 땀이기 때문에 예산 끝. 그러기 때문에 자활사업? 뭐 일자리 프로그램? 그

런 쪽에다가 예산을 쓸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늘어난 것도 없고요. 지금 보정관리법도? 안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도 없고.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는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역으로 유입이 좀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는 했으나, 특별히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뭘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정훈 여기서 질문이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노숙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일자리 영역도 이제 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기재일 주무관님이 그 과정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그 일단 법에 명시된 이후에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특별한 일자리 관련된 변화가 좀 없었었나요?

서정화 우리 '새희망 고용지원센터'가 몇 년도에 시작됐죠?

이종만 2007년 초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화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정부도 유사한 형태로 오게 되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런 영향이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지원 해가지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해서 노숙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럼 법 제정 이후에 노동부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관련한 정책에 '노숙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간 일자리 발굴 같은 거랑 연결돼서 활동하지 않아서 뇌리에는 없지만, 어쨌든 법 제정 이후에 중앙 고용노동부에서 노숙이라는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계기는 아니었을까? 우리의 피부로 느끼진 못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서울시가 그동안의 정책을 되게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해 왔었고 이명박 시장님이 일자리 발굴을 많이 하면서 해 왔었기 때문에 법 제도 전후반 이후가 피부가 와닿게 확 달라진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노숙인 법 제정후 고용노동부가 노숙 쪽에 관심을 둔 듯함>

이수범 혹시 서울시 취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인가요?

이종만 '일자리지원센터'. 그게 2015년일 겁니다.

이수범 그 전에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좀더 달라진, 변화를 했다고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정훈

일단 처음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세워지면서 가졌던 마음은 딱 그거였어요. 일자리 지원체계의 정립, 수립? 그것을 가장 저희 팀에서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단순히 어떤 일자리에 한분 한분을 연계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약간 혼동이 왔던 게 새희망고용지원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뭐냐? 결론은 뭐냐면 저희도 똑같이 새희망고용지원센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희망고용지원센터를 같이 통합으로 지원해 드리고, 업체를 개발한다든가 시설한테 안내를 해준다든가, 노숙인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도 해주고, 이런 다양한 그니까 처음에 이분들이 거리에서 시설로 가셨다가 거기서 임대주택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이런 일자리 지원체계를 좀 구축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크진 않지만, 일정한 자국은 남기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문제들이 자꾸만 도출됐었고, 그중에 지금도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우리 현장에 계신 취업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쁜 분들이에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그 일을 시작한 부분이 일자리지원센터였는데, 오히려 저희도 모르게 일을 과중하는, 일이 또 추가되는 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호응을 보이신 분들도 있었지만 좀 귀찮아하신 모습도. 사실은 그게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지만, 보니까 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새희망고용지원센터가 브릿지센터 이렇게 큰 어떤 데에 상주하고 있는 것처럼, 각 시설에 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취업 전문 상담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시설에 한 명씩이라도 들어가 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그분들하고 저희가 조율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들었습니다. <2015년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센터 만들었으나 역할 고민이 큼>

최성진

다 말씀해 주셔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새희망고용지원센터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도 그냥 새희망고용지원센터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요. 딱히 달라진 건 없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새희망고용지원센터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새희망고용지원센터들의 업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일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을 짤 때 원래 플랜이 그게 아니었는데,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겨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새희망고용지원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노숙인시설 직원들하고 새희망고용지원센터 직원들하고 임금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가 낮았으니까. 그런데 2011년부터 이제 급여 개선이 되기 시작했죠. 11년부터 시작을 했고, 임금 단일화 얘기 나오면서 13년에 임금 차이가 크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새희망고용지원센터 계신 분들이 자꾸 나왔어요. 저희가 예산을 짜고 처음에 플랜을 짤 때 원래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딱 들여다보니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회복지사까지 가진 분들도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오는데 여기서 안 좋은 처우 등등 해서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새희망고용지원센터를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니까 고용노동부랑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의 급여를 사회복지사

만큼 올려주려고 했어요. 4급 상담원이나? 생활지도원? 그 정도 수준까지 하면 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으리라. 왜? 다른 데 직업상담사 채용하는 데보다는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거든요.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들보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급여 일부를 같이 대니까, 고용노동부랑. 그래서 새희망고용지원센터를 강화하면서 그걸로 공공이나 민간에 전체적으로 뿌려진 일자리를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고용노동부랑 협이가 안 되고 그냥 센터를 하나 세워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나중에 벌어진 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차별성을 찾기가 힘들죠. 애초에 센터 하나가 왜 더 필요했느냐에 대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원래 그 돈은 새희망고용지원센터를 강화하고 더 역량을 강화해서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던 돈이 별도의 센터가 돼 버리니까, '이 센터는 그럼 뭐에다가 쓰지?' 라는 질문에서 계속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새희망고용지원센터와의 차별성 때문에 시달렸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서정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겼고, 새희망고용지원센터가 현재는 병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희망고용지원센터가 없어지게 되면, 그 새희망고용지원센터에서 워크넷을 사용하고 노동부하고 협력이 되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성진

사실은 그냥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직원들이 저 포함해서 현재 총 3명 있는데, 일단 저희 쪽은 어쨌든 브릿지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일자리 연계가 가능하지만, 다시서기하고 보현의집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상주하신 분들이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혼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고 시설들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 2회나 3일 정도 그쪽에 파견을 나가서 그쪽에서 바로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연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없어진 것에 대한 공백은 메꿔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화

오히려 후퇴되는 거네요. 일자리 정책이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후퇴되는 상황에 처한 거네요.

최성진

네.

이정훈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일단 처음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지원체계였어요. 그래서 새희망고용지원센터는 일일이 찾아오는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시설을 주로 대응하는, 그니까 시설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많이 잡고 있었어요. 일일이 시설을 찾아보면서 원장님하고 아니면 시설 담당자들과 논의해서 이 시설에 계신 분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직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맞게 면담도 진

행하고 했었는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하면, 차별화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똑 같았어요, 민간일자리 발굴이 제일 1번이었고요. 공공일자리는 어차피 관리 차원이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었거든요. 그니까 사회적 일자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민간일자리도 그렇고 사회적 일자리도 그렇고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서울시 직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일자리를 발굴하는데도 사실 서울시 공무원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아무리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해도 그게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시에서 좋은 꺼리, 좋은 일자리 발굴했다고 하면 좀 같이 동의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지원이 돼준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지원센터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 협조나 동조도 필요하지만, 시에서 우리 자활지원과도 힘을 좀 실어주면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좋은 일자리 발굴의 어려움>

기재일

애초에 저희가 새희망고용지원센터를 해서 권역별로 강화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정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점을 2013년 이전으로 돌려보죠. 한강에 3월부터 11월까지지만 200명 늘어났죠. 남산에 120명 늘어났죠. 그리고 계속 민간일자리 발굴한다고 하는데 바로 민간일자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이면 건강하거든요. 체력이 된다는 건데 그분들 굳이 일자리지원센터 안 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반나절짜리 일자리 뭐에다가 쓰냐고 얘기하지만, 사실 체력 회복하는데 그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처음에 막 시설 들어가서 체력 안 좋을 때, 일자리지원센터가 그러면은 한강사업본부나 남산에 있는 공무원들과 협의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도 기업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면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마지못해라도 만나주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한참동안 소속을 묻겠죠. '당신은 소속이 어디냐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자리 발굴을 일자리지원센터 주 업무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일자리 발굴은 공무원이 해야죠. 가서 샅샅이 물이 나오면 우물을 파서 수맥을 찾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우물을 돌을 쌓고, 그래서 우물을 길러 먹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은 일자리센터가 하는 거지.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점에 '너희가 위탁을 받았으니 너희가 가서 우물 파서 하라'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공급이 충분히 되질 않으니까 줄 게 없는데 어느 시설이 일자리센터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가서 일자리를 한강을 가서 12개씩 200개를 따오면 그거를 일자리센터에서 힘들 실어주는 방법은 그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시설에 배분해 주세요. 시설에 공정하게 배분해 주세요. 자, 이번에 어느 건설현장이 생겼습니다. 건설현장 나가실 분들이 몇 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배분해 주시라고 그러면 그 쪽 채널로 사용해야 하는 거지. 왜냐면 일자리 할 때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일자리도 협의해야지, 따오면 그것도 사람 배정해야지, 그거 신청 받고, 그거 뿌리고 그다음에 뒷감당해야지, 혼자 다 하니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것들을 일자리센터에서 해줘도 그냥 공무원은 샅 들고 가서 열심히 물만, 물 나오는데 열심히

히 파면 되거든요. 그것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민간일자리 민간일자리 하지만, 글썬요, 그게 지금 아까 이정훈 국장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제가 부연을 하는 건데요. 애초에 일자리센터에다가 일자리를 맡긴다, 전체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약간 좀 난센스죠. 왜냐 하면 엄마들도 그렇고 나가서 자기 힘으로 취직할 정도의 사람들이 일자리센터 오지도 않을 거고요. 일자리센터가 민간에다가 뚫어서 건강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없는 처지고요. 인원들에 대한 관리는 아니고요. 사실은 못 가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정신장애 있는 분들, 체력 많이 떨어지신 분들, 어디 보낼 건데요, 결국은 서울시 공조직 안에서 끼워놔야죠. <일자리 개혁은 관에서, 민은 노숙인과 일을 연계하고 관리해야>

이종만

일단 얘기가 일자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연관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일자리 관련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질문지에 맞춰서 간략하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얘기가 깊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에서 노숙인 법 제정이라는 것과 그것이 계기가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처음에 와서 예전에 초창기 노숙인 특별 자활근로사업이 내용 자체들이 변하고 또 그 속에서 공공근로, 지금은 공공근로라는 말은 안 쓰고, 일자리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얼마 딱 주고 말고 그랬는데 그게 법적으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고 이러면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계속 처음에 단순하게 시작되어서 나름대로 노숙인 분들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줘 오는 것들이 계속 꾸준히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초창기에 아주 단순했던 일자리 세팅보다는 그래도 많은 부분이 계속 정책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이라든가 후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일자리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강화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어요.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이 계속 쌓이고 체계를 갖추며 강화되고 있음>

기재일

예전에 정책보고서 보면 원래 공공근로라는 용어가 노숙인 분야에서 처음 생긴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기기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 관련 법 해가지고 취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노숙인들을 몽땅 다 집단 수용을 했죠. IMF때 거리생활을 피하게 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들 뭘 할 게 없으니 문제가 생기니까 공공근로로 800명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야, 우린 노숙을 해야 일자리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IMF때니까 너도나도 다 힘드니까. 그래서 공공근로가 일반 저소득층까지 확대가 됐고요, 거꾸로. 그리고 나서 자활영리단 사업, 건강한 사람 중 태백산맥에다가 사람들을 싣 다 보냈죠. <공공근로는 노숙 쪽에서 처음 생긴 용어>

그리고 나서 특별자활근로가 먼저 생겼죠. 골골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러면 특별자활. 그니까 저는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 머물러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인가요? 당시 이명박 시장이 공사현장에다가 넣자는 아이디어를 또 넣죠. 또 넣었습니다. 이번에 또 골골하는 사람 또 어떡하지? 왜냐면은 그 예산이 그 특별자활 예산에서 당겨왔거든요.

갑자기 급하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했는데 공원에다가 놓자. 그러면 또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또 공원에다가 하니깐 맨날 반나절 파트타임만 하네. 그 다음에 뭐해요. 가락시장 같은데 뚫어서 전일제 달라고 그러고. 장애인시설까지 갔다가 계속 웨이브 타는 거 같아요. 지금.

2010년도쯤인가요? 이제 한계에 부딪혔죠. 제 개인적으로 뭐였나면 알코올릭들은 방법이 없어요. 건강하냐?, 튼튼하냐?, 튼튼하면 전일제 보내면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 반일제 보내면 되는데, 체력적으로 근력이 좋은데 알코올중독이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그때 나온 게 사회적 기업이죠. 그 또 사회적 기업 한다고 거기다가 육성을 했고요. 지금 또 자활지원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과에 없는데? 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종만 센터장님께서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그런데.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웨이브 타고 있어요. 지금은 또 저점인 거 같고요. <특별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기업 등 비슷한 공공일자리 흐름 지속돼>

사 회

김남영

새희망고용지원센터 있잖아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김준희

아까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저희 취업지원팀이 노동부에서 다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방문 상담하셔서 그것을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자리라는 게 4단계가 일단 형성이 된 다음에 취업이 되는 건데 단순히 방문상담 몇 번으로 해서 그게 이렇게 취업으로 연계가 되겠는가? 저는 좀 그런 게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세 분이신데 그렇게까지 상주해 계신 분들을 적혀두고 방문상담을 할 만한 여력이 있으신가 한 것도 의심도 들기도 하고요.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들의 위상과 의의는?

사 회

김남영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간일자리 질문까지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앞선 질문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기조로 '공동작업장 - 특별자활 - 일자리 갖기 - 민간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위상과 의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성

저희 센터는 네 가지를 일단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실무 경영 임원에 대한 답변을 마저 드리면요. 실무영역의 입장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이런 일자리 사무실, 창구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노숙인의 작업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반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단계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표를 잡고 있죠.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근태가 가장 안 좋은 곳들이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특별자활에서 근태조절을 하고, 좀더

강화된 일자리 갖기에서 좀더 강한 근태훈련 이후에 민간일자리로 간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제가 잡은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냥 가장 근태가 안 좋으신 거리노숙인들은 계속 공동작업장 안에 계시고, 특별자활로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사실 그 루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일자리 갖기 같은 경우에는 다들 비슷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저희랑 꾸준하게 저희랑 유대가 깊으신 분 중에서 선별을 하는 상황인 거고, 민간일자리는 저희가 2007년부터 고용센터 운영을 해왔고 올해 말로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 올해 하면서 민간일자리 쪽은 정말 쉽지 않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노숙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니깐. 그리고 최저임금도 많이 더 올라가서 실제 노숙인 분들을 고용하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임금이 올라간 후부터는 노숙인보다는 차라리 다른 분을 좀더 채용하겠다고 하세요. 거기다가 또 노숙인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스스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를 통하지 않고 알아서 구하시는 거죠. 그나마 저희한테 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근태훈련이 덜 되거나 혹은 알코올릭 좀 있으시거나 혹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고, 이게 악순환이긴 한데 고용센터 운영해보신 센터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과가 있잖아요. 실적을 채워야지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일단 그분들이 더 오셔서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근태 이게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점점 '아 이 정도까지 최저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못쓰겠습니다.' 얘기하고 저희를 기피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는 점점 더 열악하게 처음처럼 구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없어지고. 이게 반복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공동작업장 - 자활교육 - 일자리 - 민간일자리'의 단계적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는 저는 특별히 효과는 많이 못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각 영역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실제 공동작업장이나 특별자활이나 일자리 갖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어쨌든 자기 생활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단계를 통해서 민간일자리로 간다는 목표로 본다면 그렇게 큰 성과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자활근로-일자리 갖기-민간일자리라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음.>

이종만

안에 계신 분들은 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나온 지 거의 2년 다 돼 가고 있어요. 나와 있을 때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숙인 사업을 운영해보고 그러는데 오히려 노숙 쪽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노숙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받겠다는 의지들이 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여 년 전에 겨울철 같은 경우 보면 막 200명씩 자활근로 해도 한 300명, 400명씩 하겠다고 신청하고 그랬는데, 지금 노숙인 자활근로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지 않고 인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동작업장이든 아니면 다른 일자리 지원이든, 주거를 지원해 전체 노숙인이 줄어들었든 간에 어쨌든 노숙영역 안에서 적어도 생활해 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선택하는데 있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질적으로 한 사람이 완전히 딱 사회에 민간일자리 취업,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노숙을 탈

피하는 데 있어서 일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노숙 영역 안에서 일 선택의 다양성이나 선택지라든가, 코레일 부분도 들어와 있는 거고, 공동작업장 부분도 있는 거고, 긴급하게 어쨌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에 대한 접근 영역이라든가 폭은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 노숙 영역 안에서 노숙을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제공됨.>

기재일

제가 자주 이종만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2007년에서부터 2013년 그때까지 되돌아가 보자구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시장 표창을 20개에서 한 50개까지 그래봤어요, 일자리 때문에. 아까 유태성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 올라가고요. 누구랑 부딪히고 있다면 결국 외국인 근로자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최저임금 받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럼 우리 식구들이 경쟁력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경쟁률이 생겨요. 성실한 사람은 평가를 받아요, 그 일터에서. 하지만 경쟁력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인건비 50% 제공해 줬지 않습니까. 임금의 50% 심지어는 70% 지원해주고, 아주 심할 때는 100%. 그냥 사람만 써라 그리고 외부에다 사람 갖다가 사람만 맡겼죠. 그래도 '난 저 사람 싫어' 그러면 어쩔 수 없었죠.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리고 나서 뭐했냐면 계속 그 사람들이 고용할 수 있는 동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시장 표창도 주고 온갖 노력들을 다했습니다. 그 역할이 줄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활이 막 300-400명 들어오는데 올해는 200명밖에 못한다? 그게 아마 11월 달일 겁니다. 왜냐면 공원에 다 일 나갔던 사람들이 공원이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공원청소, 눈 치울 사람이 훨씬 적어도 되니까. 그럼 센터에 돌아오죠. 그게 뭐 했냐면 일시적인 현상인데 계속 일을 했거든. 3월부터 10월말까지 11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조금 몸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센터 와가지고 센터일이라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일자리 개수요?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안 보이죠? 지금은 다 시설에 박혀 있잖아요. 시설에서 다 급식보조하고 예전에 영등포구에, 미안합니다, '내생애 에스프레소'에 제가 사람 안 찾지 않습니까? 알아서 운영하시라고. 근데 그거 인건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숙인 일자리라고 계산하고 있대요? 저희는 그쪽에서 알아서 사회적 기업이든 뭐든 가게 되면 거기에 시설비 같은 거라든지 초기운영비를 두고 알아서 독립 재산으로 운영하십쇼 했는데 지금보고 있으면 그게 다 일자리야. 개수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들 시설 안에들 있어요. 지금 다시서기에는 더 이상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걸요. 왜냐면 다 특별자활 일자리 줄었으니까. 여기 가서도 나 일자리 줘, 나 다 찾는데 그러면 다른 센터 가서 웅달샘 가서 그러다가 거기서 다 찾는데 그럼 브릿지 갔다가 이러는데. 지금 특별자활 일자리 다 나가있는 상황인데 이제 없죠. 다시서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서기만 이용합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주 거리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자활시설들이에요. 옛날에 자활시설에서 꽤 큰 자활시설의 국장님이 그런 얘길 했거든요. '요즘은 행복해요. 해볼 만해요.' 왜? 아침에 출근하면 다 출근했대요. 자기가 9시까지 자기 시설에 오면 한 명도 안 남아 있대요. 아침에 다 출근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 갔다오면 그럼 오전 끝나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두런두런 있다가 해 넘어갈 때쯤 되면 전일제도 퇴근하고. 지금 자활시설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침에 소장님, 실장님 딱 출근하면 정말 싹 출근하고 없나요, 사람들이?

서정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그런가요?

기재일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는 뭐냐면 일자리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일자리 하고 있잖아요. 나아지지 않았단니까요.

서정화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센터에서 데이터를 잡잖아요. 그 '노숙인 일자리 갖기'가 시설과 연계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일자리 갖기 중에 예를 들면 '내생애 에스프레소'라든가 무슨 사회적 기업 만드는 그런 비영리 기업들, 그쪽 일자리 갖기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최성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서정화

10명뿐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10명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문제를 좁게 보시는 거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이라고 했을 때 주로 많이 갔던 데가 공원 쪽에 많이 갔었고, 하루 종일 일자리로 공원쪽 많이 갔었고, 보호작업장 많이 갔었어요. 오히려 사회적 기업인 노숙쪽 기업으로는 하나도 안 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노숙쪽 기업에도 기업이니까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늘어난 건데, 이걸 몇 명 안 되고. 실제로 이 8시간 일자리 규모가 공원이거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전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기재일

급식소 보조원 이런 데로 들어갔어요, 시설들 이런.

서정화

급식 보조원으로 8시간 일자리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기재일

네~

서정화

근데 지금 각 구청에서 시설에 들어오는 공공근로는 다 없었거든요. 이미 조리원 인력이 지원이 되는데 왜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지원을 하냐 해가지고 시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노숙인 일자리는 전체 몇 개고 몇 개의 일자리에 몇 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통계가 좀 있나요?

최성진

제가 매월 통계는 받고 있지만 특별자활이나 일자리갖기 이런 공공일자리는 센터, 그냥 어디 있는지 센터에만 나오고요. 민간일자리는 좀 구체적으로 이분이 얼마를 받고 무슨 업종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서정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 일자리갯기 일자리가 한 700개다 그러면 그 일자리 중에서 100개는 시설에서 일하는 일자리고 뭐 이런 거는 있나요?

이정훈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일자리갯기나 공공근로나 특별자활근로나 저희 시설에 보내주세요. 민간일자리 제외하고 다른 거는 근속기간은 언제고 어디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더 디테일하게 기입하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갯기나 공공근로나 특별자활은 그거는 굳이 그렇게 내용을 깊이 있게 쓰지 않습니다.

서정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느끼기에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공공일자리 중에서도 8시간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특별자활근로로 그것도 6개월 주던 거를 3개월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인원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갔고. 실제로 그분들은 3개월 하다가 그만해야 되는, 그래서 3개월 지나고 또 쉬었다가 1년에 연간 총 6개월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연속해서 6개월을 쬐고, 180일 지나면 끝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연계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일자리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면 일자리 질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시간 일자리 많이 줄었고 4시간 일자리는 많이 늘었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공동작업장-특별자활-일자리 갯기-민간일자리 이런 단계적 정책 설정과 그것이 현장에서 되게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공동작업장-특별자활-일자리 갯기-민간일자리로 가는 이 과정에 이 계단을 넘어서는 사람은 저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설에 들어와서 특별자활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당장 들어와서 쓸 용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활로 한다고 하면 이제 근로를 전제로 해서 교통비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몇 달 특별자활 하면서 돈도 좀 모으고 건강도 회복되면 일반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상당기간 공동작업장에 있어야 될 분들도 있고, 또 상당기간 특별자활근로 이상은 못하는 1년정도 가까이 특별자활근로 이상은 못하는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는 들어오자마자 노동력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일자리 취업해요. 민간일자리로 바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전제로 가능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자리 정도를 어느만큼 확보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시스템학하게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쨌든 특별자활근로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진 분들은 상당기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계단을, 의미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자리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자활근로 수준의 일이 필요한 노숙인도 있으나, 전체 공공일자리 중 단시간 단기일자리 비중이 커 일자리 질은 좋지 않음.>

이정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재일 주무관님이 옆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기재일 주무관님하고 서울 노숙인 일자리 갯기 사업 초창기가 전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아, 일을 이래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자리 사업은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부, 특히나 민간 일자리들과 연계가 되고 거기에서 또 이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또다른 사업장을 알게 되고, 그걸 또 뚫으러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뭔가 자꾸 늘어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원래 일자리 갯기 사업이 그냥 그 기간 동안 참여가 아니라 업체에서 이분들을 50%의 급여를 지원을 받아서 한 명 쓸 거 두 명 써서 그 일에 구명난 인력, 능력을 보완한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던 게 1년동안 일을 시켜보고 괜찮은 사람은 회사에서 흡수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역량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저희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서울의료원이었어요, 여기 대학까지 나온 친구였어요, 단지 노숙시설에서 노숙을 하다가 임대주택 나간 것밖에 죄가 없어요. 능력은 굉장히 탁월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어떤 의약품까지도 이 친구가 거기서 배분해주는 그 역할까지 했어요. 그럼 바로 발전직이라는 시험을 볼 때 이 사람이 자기도 하게 되면 경력도 있고 하니까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신규를 뽑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낙담을 하고 나와서 나중에 노숙인시설의 간사까지 잠깐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일자리 갯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요게 또 때마침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아저씨들이 저축 막 유도하니까 500-700만원 요 정도 되는 분들이 한 30-40명 막 늘어나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우리 선생님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임대주택사업이 딱 터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요걸 관리를 해놨더니 임대주택이 딱 터졌는데 들어갈 대상을 못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는 세팅이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연결이 되어서 임대주택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었는데. 특별자활근로도 사실은 처음에 '이게 뭐지? 노숙을 장려하는 거야?' 이랬는데 이게 단순 자립자금이 아니라 취업자금으로는 아주 좋더라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자활근로를 그 대상자의 적절한 상황에 꽂아놓고. 우리가 종합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면서 특별자활근로라는 것을 참여하면서 일에 대한 어떤 연습, 워밍업을 좀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건강도 좀 회복하면서 요 월급이 나올 때 이것을 취업자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활근로라고 해서 서울시 일자리 갯기를 갖다 대든 민간일자리 갖다 대든. 그럼 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때가 일자리 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체계가 마련이 되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자리 담당자는 그 판에서 놀기가 참 좋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처음에 능력도 안 되는데 제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갔던 것은 그런 판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구인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우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서울시와 협력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실무자들이 굳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거기다가 적절한 사람만 연결시켜 놓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처음 시도했었는데. 그런 일자리 지원체계라고 봐야 하잖아요. 공동작업장-특

별자활-일자리 갖기-민간일자리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일자리 지원체계인 것처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건강, 신용불량, 근로의욕이 없든, 근로의욕이 강하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인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들을 많이 배분해서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활근로 참여로 워킹업을 하고 지축을 하면서 임대주택에 연결되는 사례>

이수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2005~6년도부터 특별자활이 시작되었던 거 같은데 다른 지방에서도 견학을 오시면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단계별로 반일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공동작업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하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하기 이전에 또는 중앙정부가 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선도적으로 시작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고. 그게 아마 2006년 이후부터 2011년, 12년도까지.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더 그려야 되거나 정책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센터 얘기도 했지만 뭐가 없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초기 문제의식을 떠나서 일자리지원센터의 확대 또는 재편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단계별 일자리에서 제가 볼 때 맹점은 수요에 비해서 전일제 일자리가 저는 적다고 봐요. 적어지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반일제 일은 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별자활근로를 통해서 일자리갖기 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저는 그게 현재까지 성과는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 미비한 성과가 사실은 굉장한 의미있는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더 질적으로 반일 일자리만큼 전일 일자리도 넓힐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영역에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 활동들을 거울삼아서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다음으로 나아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게 지역자활센터 같은데 그쪽하고 벽이나 턱도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일자리가 일자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하고 크게는 맥락이 닿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하고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아까 주거부분은 말씀들 하셨고 사실은 일반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이럴 때 뭔가 이분들하고 결핍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치료, 치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면 단순한 일자리하고 취업 연결 이것만 하는데, 노숙인분들의 특성상 주거나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들이 저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같이 고민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특화자활사업에서 치료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서울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전담 인력지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자활근로처럼 체험의 일자리인데 그 예산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특별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그냥 근로만 시키거든요, 하루에 5시간,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상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평가를 하긴 이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영역에서도 보완을 하면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참여자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결합의 필요>

기재일

좋은 일자리 자체가 재활치료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심리상담 한다고 해서 피정도 보내고 명상프로그램도 시켜보고 절에 보내서 템플스테이도 시켜보고 해병대 캠프도 갔다 그러데요? 별걸 다 해봤죠. 자존감 회복시킨다고 뭣도 하고 공연관람도 하고 (정신교육도 했어요...) 인문학 강좌도 하고 다 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었어요. 지적장애인시설 그러니까 시설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요.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배경에서 피해의식이 강한데 지적장애인시설에 가면 장애인들이 되게 잘 믿어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다.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식구들이 일정정도의 성과를 내고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월급들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그분들 월급을 우리가 주니까. 그분들의 생산가치가 장애인들에게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회복지사들 원장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식구'인 거예요, 이제, 같이 돈버는.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이거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연말에 설문조사 해봤거든요. 설문조사 맨 마지막 문항이 뭐였냐면 주관식이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노숙인 일자리 도우미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뭐 더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서 저를 기함시켰냐면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거칠게 말하면 이제 남 걱정할 정도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정 보내고 명상 보내고 뭘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안됐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라고요? 장애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한 6개월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애착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였지? 엮어지기는 했는데 구세군에서 했던 거, 그 빨강마차 사업도 그랬었어요. 노숙인이라고 저희가 광고는 못하고 취약계층이 만든 붕어빵 그거 판다고 열심히 저거를 했는데요. 정말 딱 휘슬러에 데려가서 교육시킬 때는 정말 꼬질꼬질한 할아버지들이 었거든요. 한 달 교육받고 나오니까 짜끔... 근데 나 같아도 별로 안 사먹고 싶어요. 그런데 서너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되요? 어우 그냥 연세가 조금 드신 거지, 깨끗하게 제복 입고 깨끗하게 모자 이렇게 씌우고 본인들이 위생관리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서울역쪽방상담소 그쪽에 바리스타 교육을 카페베네에서 시켰죠. 네 분이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분들 쪽방주민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분들 지금 돈 모아서 매립임대주택 가야 하는데 자꾸 금천 이런 데 나와서 지금 안 가고들 계시는데요. 물론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맨날 청소만 시키고 맨날 시장 청소시키고 공원 청소시키고 그런 거 말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좀 괜찮은, 아까 얘기한 서울의료원처럼 병원에서 흰 가운 입고 베드 밀고 다니고, 뭐 닦고 그러면 피정 안 시켜도 돼요. 자존감이 그냥 알아서. 왜냐하면 사회가, 내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쯤 된다는 건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거든요.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주거는 중요하죠. 주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주거 이후에 그 일자리를 과연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주거도 많이 필요한데.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활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면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거죠. 일이 자기가 딱 느끼기에 죽었다 깨어나도 내 능력으로 이 일자리를 잡을 수 없어. 즉 공공, 우리 시설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다라고 그 사람이 딱 인지하는 순간 꼭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다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참 좋은 기회가 왔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느끼게 해주면 그런 일자리를 주는 것이 일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자활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 발굴의 의의와 필요>

이수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 바로 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고. 상당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과정으로서 뭔가 준비단계에서 그런 자존감을 높이거나 준비자격증이란 뭐든 준비한다거나 나눠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성과 평가

서정화 기재일 주무관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도 이제 이수범님처럼 적은 인원이지만 실제로 시설 내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청소하는 것이 훨씬 더 직장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고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설 처음에 와서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설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다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조차도 두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특정한 퍼센트 정도는 시설 내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보호작업의 개념으로 특별자활근로를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저씨들 인터뷰를 해보면 특별자활근로에 대해서 대개 우리가 특별자활근로를 주면 특별자활근로 급여로 방을 얻도록 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방 얻고 나면 돈이 한 20만원 남으니까 대부분 무료급식하면서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3개월 지나고 나면 끝인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있다가 다시 또 특별자활근로를 얻으면 방을 얻고 또 무료급식을 하고. 요 트랩을 계속 도는, 거리 쪽에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은 일부는 8시간 일자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한테는 요 정도 일자리가 딱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자활근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 건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특별자활근로 있으시죠.

김준희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자활을 좀 기피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고 또 저희는 인력사무소가 영등포 근처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사무소 몇일만 뛰면 한 62만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사대보험 포함해서. 그 정도는 몇일만 나오면 거뜬히 벌 수 있는데 내가 특별히 특별자활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식도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더러는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당분간은 구직활동 기간에 생활비라도 마련해보고 싶으니 특별자활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좀 각각각색인 거 같아요. 그런데 보통 자활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피하는 부분들이 강한 거 같아요.

유대성 저희같은 경우는 확실히 일시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면밀히 다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다 훑어는 보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분들 스스로 사실은 자활근로를 벗어난 좀더 상위의 일을 구하기에는 저희가 봐도 무리인 분이 사실 좀 많이 계시긴 해요. 많이 계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까 단계 면에서 민간 일자리까지 나와 주시면 참 감사하긴 한데, 실제로 제가 많이 독려도 하고 혹은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저희가 봤었을 때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 일자리 나오면 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개중에 계시긴 합니다. 올라서 취업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사실은 특별자활근로나 공공근로 정도의 근무량과 이 정도의 급여 정도라면 제가 충분히 생활 가능해요, 해서 이거 자체를 자기가 직장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제 이 단계로 오면서 민간일자리로 연결을 해야지,라고 목적을 두고 근태훈련도 하고 사실 교육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대상자를 보면서 목표를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계로 해서 민간일자리로 가주면 가장 좋지만 그 수는 많지 않고, 대다수의 분들을 봤을 때는 공공일자리로 이분들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공공영역에 이런 일자리를 좀더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지 않겠느냐고 최근에 와서 저희들끼리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었을 때는 사실 특별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삶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가 저소득층이나 노숙인 분들한테는 어쩌면 더 나은 정책이 아닐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활근로, 공공근로 수준의 근로와 급여로 삶을 유지하는 현실 - 공공 일자리 확대의 필요>

기재일 노숙인을 지금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거리 노숙 한 칠백 몇명 그다음에 일시보호시설 이용인원 등등 하면 천 몇 명, 그죠.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 이상. 이천삼백 명. 그런데 예를 들어 거리노숙인이 가장 더 열악할 것 같죠? 저는 누워계신 분들,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더 열악할 것 같은데요? '아무 것도 못하잖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삼천 몇백 명이라고 하지만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거리 왔다가 시설 왔다가, 왔다갔다하는 인원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지금 아저씨들 패턴이 그럴 거예요. 다시서기에서 3개월 하다가 뭐라고 잔소리 하면 영등포로 넘어와서 웅달샘에서 하다가 EITC(근로장려금) 받고 실업급여 받으면 특별자활 할 때보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때는 뭐합니까? 일어나서 술 드시죠. 그리고 특별자활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일근무 아니거든. 한 달에 반 근무거든. 그러면 우리는 언젠게 보고 있냐면 시설에 나가서 일할 때를 보고 있거든. 시설에 안 나갈 때는 그 사람 근무일 아닐 때는 한 열흘 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서정화 수서에는 특별자활근로자가 많지 않아요?

기재일 많아요.

서정화 일시보호시설하고 거리가 많은 거지. 자활시설에는 많지 않아요.

기재일 그렇지. 그래서 지금 거리쪽을, 일시보호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근 안 하면 영등포구 가서 술 마시고 있을 거예요. 유태성 선생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노숙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노숙인 보호과가 되어야지 자활과가 되면 안 되죠.

유대성 죄송하긴 한데요. 주무관님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하지만 너무 좀 비하시하는 것 같고요.

기재일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요.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이 2011년도에 뺄 때까지도 계속 그거를 보였거든요, 그런 현상을. 그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한 30-40% 그룹이 영등포와 서울역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특별자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그런데 그 이후에 EITC(근로장려금) 이랑 실업급여가 꽤 늘었거든요.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 보면 내가 이분을 영등포에서 뵈었다, 서울역에서 뵈었다? 헛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헛갈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양쪽 다 왔다갔다 하시니까요.

서정화 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어떠세요?

최성진 저희는 특별자활을 좀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특별자활 마지막에는 항상 민간일자리를

상담을 받게끔 강제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별 효과는 없고, 어쨌든 저도 주무관님처럼 일자리 현황조사 통계 내용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무관님 말씀대로 다시서기에서 영등포로 넘어가고 영등포에서 했다가 다시 브릿지로 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특별자활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 시설에서 공유를 해 달라, 이분이 3개월을 했는지 6개월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시에서는 공유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분들을 봐서는 노숙인 분들 대부분이 특별자활을 하기를 희망하고 민간일자리를 하더라도 시설 내 특별자활이 자리가 나오면 민간일자리를 그만두고 특별자활로 가고. 그래서 특별자활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일 예전에 일자리 정보 시스템일 때는 그게 걸려졌거든요. 한 달에 한 서너 명 정도씩 걸려졌는데 되게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죠. 두 탕 뛰세요.

서정화 지금 우리가 노숙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서울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입력을 안 하나요?

기재일 저도 시스템을 잘 안 써서요. 그리고 최근 몇 년동안 쪽방을 해서요.

이수범 최근에 몇 년간 노숙인 수 증가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준다는 평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일자리의 영향력도 있을 것 같고, 복지시설이 일자리든 무언가 서비스를 통해서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실제 전체적인 수가 줄어드는 것 보면 노숙인시설 수가 줄어서 줄기도 했지만 그 외의 긍정적인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외적인 설계들이 확대되어서. 그리고 이제 특별자활근로를 예를 들어서 A시설에 가서 3개월 하고 B시설에 가서 3개월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용자분들의 선택인 거 같아요. 그걸 가지고 부도덕하다 아니면 잘못했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시주거지원 사업처럼 서울시에서 필터링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참여자분들을. 그러면 저는 그거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문제지는 특별자활근로도 초창기에 10개월 했다가 6개월 하다가 또 3개월, 지금 1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시설에서 지도점검 한 거 보면 1개월 연장? 3개월 이상 연장했던가, 그러면 올해부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치료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하나 하면서. 저는 특별자활근로 3개월 해서 이분한테 어떤 것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월수를 늘려서 4개월이면 첫 달에 참여하고 두 번째 달 하다가 세 번째 달 종료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가 좀 계획해서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일

잠깐만요. 우리 근본적으로 지금 놓치고 있거든요. 이거 일자리잖아요. 공공부조 아니잖아요. 임금 주는 거잖아요. 특별자활을 그렇게 많이 하면 정말 5시간동안 그 사람이 뭐라도 하는 걸 합니까? 제가 옛날에 특별자활 할 때 그걸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보내기. 그래서 일자리를 계산할 때 그거였거든요. 특별자활 인원을 줄 때 어느 시설이든지 마찬가지로는 생활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정말 5시간 아니라 3시간이라도 그 사람이 일할 거리가 있냐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고 있는 거는 이게 일자리인데 지금 마치 공적부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서 그래요. <특별자활근로는 공적부조가 아니라 일자리이다>

서정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기재일

지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게요. 공적부조를 해야 될 사람은 공적부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임시주거지원처럼 대가없이 줘야 할 사람은 대가없이 줘야 하는데 이게 근로의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사대보험 다 들잖아. 근로기준법으로 예를 들어 부당 노동으로 우리가 진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종만

그렇게 하면은 노숙인에 대해 일자리 부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노숙인이라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어쨌든 보호의 방식으로 의료든 주거든 일자리든 이런 것들을 하고.

기재일

일자리는 보호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지요. 주거나 의료나 이런 것들은 보호사업입니다. 그런데 자활사업하고 보호사업을 뒤섞어 놓게 되니까 사업의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수범

그 지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특별자활근로 사업이 말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자리 사업일 수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내용적으로, 저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이냐면 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근로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주거 및 주거지를 얻었을 때 그 사람 또 근로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거리에서 노숙하지 말고 주거 구해서 나가라는 건데 그냥 주기는 어려우니까 일자리 형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100%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복지마인드를 들이겠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특별자활근로는 일자리이지만 복지적 성격을 갖는다>

기재일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수범 실장님이나 이종만 센터장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몇 달동안 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서거나 브릿지나 옹달샘이나 막 수십 명씩 백 몇십 명씩 하게 되면 한 시간 일 시키기도 힘들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 근로감독은 돼요? 출석체크만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왔다갔다하면 쓰레기 하나 줍는지 모르고 출근부에도장 찍혔으니까 돈 주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우리 과에 쉬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재는 일도 안 하는데 월급 받아요. 그게 특별자활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렇게 못 움직일 것 같으면 일자리 애초에 주지 말았어야죠. 임시주거지원 주고 보호쪽으로 갔어야죠.

서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건 그런 현재 일자리와 평가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서기 특별자활 200명, 브릿지 150명, 막 이래요. 그럼 150명이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우리 시설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특별자활근로를 하는 대신 주거를 얻어야 한다고 매칭을 한 거잖아요. 서울시 정책 선발 자체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를 정말 5시간 막 세계 또는 3시간이라도 세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실은 시설에 주기보다는 공원청소든 뭐든 거기에 반일제를 많이 늘리고 그쪽에 사람들을 보내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창기에 이런 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양들이 많이 줄어들고 내부로 들어와서 실제로 아저씨들 일 거의 안하고 출근도장 찍고 1시간 일하고 나면 5시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또 일이 많아가지고 이 힘든 일을 하고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하나 향의하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변화를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저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한테 특별자활이라는 형식의 4시간 정도의 일자리, 한달에 60시간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또는 그 일을 하면서도 노동을 5시간은 못하고 3시간만 하고서도 그 급여를 줘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의 그룹은 어느 정도이며, 그럼 이 특별자활처럼 주 60시간 하는 일자리로 외부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초창기에 반일제 일자리를 11개월 지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한 달 단위로 증빙해서 옮겨가는 방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맞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논의 필요>

기재일

조금 더 의욕적으로 생각하세요. 노숙인은 왜 퇴직금 받으면 안돼요?

서정화

맞아요, 12개월 일자리. 예.

기재일

공원에서 그렇게 잘랐던 건 겨울엔 사실 눈 치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서 그랬지, 전일제들은 퇴직금 줬었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그랬고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도 그랬고 복지재단도 줬었어요. 전일제 일했던 사람들은 다 퇴직금 줬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특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말을 조심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자활지원과 물이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 고여가지고 지금 여기 썩고 있으니까 니 탓이나 내 탓이다 그러고 있는 거지. 뚫고 나가는 데가 없으면 물은 계속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낫구요. 또 두 번째는 서정화 소장님 말씀처럼 뭐를 해야 되냐면, 일자리지원센터에다가 그거를 맡기려고 했었는데 그 총 담당들이 결국 안 맡기더라고요. 예전에 시설에서 제일 싫어했던 거 그거잖아요. 다달이 한 번씩 인력현황 조사표 하는 거. 꼬맹이 젓먹이까지 해가지고 우리 쉼터에 몇 명 있는지, 일자리 나가는 사람 어디 나가는지, 특별자활 하고 있는지, 일자리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취직을 했는지, 취직을 했으면 취업성공패키지 교육프로그램 받고 있는지,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죠.

서정화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일자리지원센터에 매월.

기재일

그러면 거기서 지금 그 전일제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예를 들어 일용직 포함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나요? 그걸 거꾸로 자활지원과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공공에 전일제 몇 개 만들어졌냐고.

서정화

저희 시설은 매월 보고를 해요. 일자리센터에다가 몇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어쨌든 기본 퇴직금을 받는 일자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시설에서 만약에 특별자활근로로 대체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없다면 혹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지원과 예산을 주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에 뭔가를 하거나 이런 연계는 가능할까요?

기재일

그러면 이제 이종만 센터장 같은 분들이 더 늘어야죠. 지역자활센터는 노숙인 받으면 힘들어해요.

서정화

그러니까. 혹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실은 뭔가 노동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내부에서는 못 찾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이종만

이쯤에서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특별자활근로 뭐 이런 개월 수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노숙인 일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 그게 상정이 되어버리면 이게 짧게 길고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일자리는 다른 지역사회 공적 일자리는 연계되어서 흐르다보면 실제적으로 개월 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대세면요. 그런데 대세는 거의 다시 노숙일자리 하고, 또 그거 끝나면 노숙 일자리 다른 게 있거나 그 노숙 안에서만 일이든 뭐든 박혀 있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그 부분들 한계 때문에 개월 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가 강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자활센터로 가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번에 일단 쉽게 얘기하면 노숙인 일자리 보건복지부에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강력하게.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노숙인 거부 의사가 강했어요. 차상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역자활센터가 노숙이든 차상위든 또 도시 근로자의 몇 %던 간에 어쨌든 일자리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소화했으면 좋겠는데. <방향 - 지역자활센터가 노숙인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특히 노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우리 용산이나 중구나 영등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노숙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노숙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가 원래 하는 운영시스템과 안 맞고 뭐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그 노숙자 분도 노숙영역 외에 어쨌든 복지관이든 지역사회든 끊임없이 계속 접촉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숙에 대한 이해들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용산에서 하면서. 자활센터가 많이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노숙인 출신이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요. 노숙에 대한 이해들에 대해서는 딱 담을 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각자 영역에서도 해야 되지만 노숙 쪽에서도 어쨌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고, 노숙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좀 끊임없이 시도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도 올해 입이 좀 늘고 차상위 2차까지 늘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데 묶어서 노숙인 집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노숙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생겼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 - 노숙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 일자리 연계 방안 찾았으면>

기재일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6가지 일자리 중에 인턴형을 제외하고는 다 창업지원이 지 않습니까? 창업지원이다 보니까 지금 노숙인 사회적기업 그런 형태로 뭘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활사업단 그게 옛날에 이제 공동체 자활기업, 그런 식으로 가서 등등 이제 자활을 시키는 건데. 지금 이종만 센터장님이 계시는 데가 굉장히 특수해요, 용산 지역 자체가. 왜냐면 용산이 25개구 자치구 중에 인구가 제일 적어요. 따라서 수도 적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형이신가요? 확대형이신가요? (이종만: 아뇨.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시죠. 그러면 이제 직원이 6명? 그 정도를 가지고 백 몇십 명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서정화: 너무 열악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단이 지금 한 기업까지 열 개쯤 되시죠. 그러면 아까 백오십 명을 열 개로 나누겠습니다. 열다섯 명입니다. 즉 김밥천국에 열다섯 명 근무한단 얘기입니다.

이종만

참고로 지금 저희가 직원이 열 몇인가, 어쨌든 사례관리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전문인력을 줄 수가 있어요. 사업단 해가지고 규모로 해서 쓸 수가 있고, 지금 올해 하반기서부터 이제.

기재일

노숙인을 하라지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보건복지부가 돈을 더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사업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비가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노숙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생계급여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계급여 조건이나 자활급여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노숙인이잖아. 이게 자활급여를 받으면서 노숙인일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면 뭐냐면 우리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입만 하나 더 늘은 거야. 쉽게 말해서 밥상 위에 밥이나 반찬은 늘지 않는데 숟가락을 하나 더 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도 빠듯해 죽겠거든, 직원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고. <지역자활센터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한 노숙인 포괄하기 힘든 구조> 사실은 이제 그 매입임대주택 들어가구요. 조금 건강 괜찮은 분들, 이용시설 하시던 분 중에 강사나 의뢰인 쪽으로, 강서에는 지역자활센터 3개 있거든요? 그쪽으로 임대주택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해보자고 하시고 등등 하다가 조건부 수급자가 됐어요. 지역자활센터 출근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서정화: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강서지역자활센터 갔습니다. 청소사업단이란 말이예요. '여기는 자전거사업단이 없나요?' 그래서 강서·방화 쪽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자전거사업단이 없어졌어요. 이분은 자전거를 하고 싶는데 계속 청소, 배식 이런 쪽으로 돕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의 일과 노숙인이 원하는 일자리 매칭의 어려움>

서정화

그렇다면 노숙인시설 예를 들면 특별자활근로 별로 4시간 정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산이 만약에 몇십억이 있어요. 현재 막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전환한다고 하면 지역자활센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부에서 지정지원을 받는 데에서 우리 서울시가 인력을 준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일

두 번째로 우리가 자활지원과에서 4시간짜리는 공헌처럼 지역자활센터가 인건비를 다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쓰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는 사업비도 주세요. 어차피 지역자활센터 오는 사람들은 차상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인건비가 공짜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다 줄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 넣는다고 한들 저쪽에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서정화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종만

맞아요.

서정화

자, 그러면 그다음 방법이 뭐가 있을 거냐 찾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우리 쪽에 시설들이 '두 바퀴'가 어쨌든 30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체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인력을 계속 훈련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그니까 공헌사업이라든가 예전에 우리가 일자리 전성기 시대에 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늘리거나. 지금 공원도 다 줄었거든요, 실제로는. 그걸 늘리거나 어떤 방법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자활근로 별로 4시간 정도의 일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이왕이면 길게 제공해서 그걸 통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기재일

결국은 남의 밥숟가락 뺏아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강이나 남산에서 다시 비정규직 뽑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고 다시 비정규직을 뽑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또 오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 4시간짜리 일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어디 꺼달라고, 자활지역센터가 푸른도시국이든 도시재생본부든 어딘가를 붙들고 통사정하든 협박을 하던 일을 얻어내는 것이 4시간짜리라고요. 앞으로 공공일자리 이런 쪽에다 계속 넣을 수 있느냐,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공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점점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추세고, 그게 또 전체적으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두바퀴가 30명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에코그린 같은 데들은 호텔 청소 들어갔거든요. 청소는 몇 시간 안에 정해지는데 그거 말고 선별자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인원도 한 30명 되거든요. CEO가 노숙인에 대한 깊은 이해 갖고 있고 멤버들도 다 노숙인들이야. 노숙인 사회적기업으로 신고를 하라니까 꼭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도 한 2주쯤 술 먹고 안 나와도 돼요. 그 사람이 왜 술 먹고 괴로워하는지 동료들이 알면, 갔다 와도 '갔다 왔니?' 그리고 다시 붙여줘요. 사장이 해고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3개째 확보했거든요. 호텔? 그런 거 몇 개 더 하면 한 2-3백 명 돼요. 그게 4시간 8시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르신은 연세가 있으니까 4시간 반하고 얼마 받읍시다, 근로계약 할 수 있어요, 도급. 이 방식이 옛날에 자활영리단 방식과도 통해 있어요. 옛날에 자활영리단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벌하고 얼마. 한 달만에 다 하든, 근데 그땐 기한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달 반에 여기까지 하고 얼마, 이런 식으로 줬는데, 지금 비슷한 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모색해야 하고 결국은 사회적기업 양성이라고 봐요. 근데 그 사회적기업이 일을 어떻게 뚫을 거야. 그 뚫는 건 또 아까부터 말했지만 샵 들고 다녀야 하는 거 공무원이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동세차사업 했다가 저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안 파본 곳이 있어요. 공공주차장들. 여기 종로 주차장, 광화문 주차장 합쳐서 4천 명이예요. 그런데 이동세차사업 하는 그런 것들을 사회적기업 만들고 싶죠. 민간에서 만들고 싶죠. 근데 그거 누가 뚫어줄 건데, 그 주차장.

서정화

공무원이 뚫어줘야 한다고 아까부터 얘기하잖아요.

기재일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더 싸요. 예를 들어서 두바퀴가 지금 돈을 어디서 받아요. 광명시청에서 받았어요. 도급식으로 일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30명이면 150만 원이면 한 달에 4,500만 원을 안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빅이슈 70명이잖아요. 그럼 얼마 되냐고. 1억5백만 원만큼 안 주고 있는 거야. 일 년이면 12억이예요. 12억이면 우리 일자리 전체에서 1/10을 훨씬 넘어가요. 두 개, 지금 빅이슈랑 두바퀴랑 합치면 서울시가 저기다가 만약에 예산으로 주고 만약에 고용을 했다고 하면 15억이 훨씬 넘어가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이분들끼리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자력으로 일반사회에 나가서 다른 분들이랑 표 안 나가게 취직해서 내보낼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내보내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 가끔 알코올 재발하고 가끔 확 조현병이 왔다가는 분들, 가끔 은평병원 갔다 와도 눈치 안 보려면 우리끼리 일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 거예요. <방향 - 노숙인 사회적기업 만들어내야>

이종만

저도 이제 그쪽 부분들에 대해 계속 오랫동안, 이제 어쨌든 노숙인 영역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취약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어떤 부분들로만 이렇게 가야 한다고 특정하지 못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와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노숙영역 안에서 노숙인들끼리 모여서 일해 나가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영역들이 가장 모범적인 답인 것 같고. 가장 우수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실 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또 실무 안에서 그만큼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많은 노력... 하여튼 그런데. 이것 외에도 민간은 민간일자대로 또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또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노숙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특별자활이나 일자리갯기나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부분들, 민간일자리 영역으로 취업들을 연계해 내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자활 이쪽과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 일자리 부분들이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센터로 중심으로 하든 정책적으로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각 영역이 다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향 - 노숙 내 공공일자리 외에 민간일자리 연계, 사회적기업 구축 등의 활성화 방법 찾아야>

기재일

그리고 실무적으로 참 아쉬운 게 옛날에 2011년까지 노숙인 일자리 지원 정보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버그가 났어요. 근데 그게 예산 없이 짠 프로그램이라 딱 과간 직원들 가지고 버그 잡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었어지고, 그다음부터 카페 가지고 했는데 확실히 카페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유태성선생님이 말한 거기에 이제 일자리정보 시스템에 우리가 지금 노숙인 상담 이력을 넣는 것처럼 이 사람을 특별자활에 넣었다, 어느 현장에 넣었다, 이런 것들을 꼭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설에서 못 보죠. 근데 시청직원들은 보이죠. 김땡땡 이렇게 딱 찍으면 나오는 거예요. 작년 초반까지는 웅달샘에서 특별자활 하다가 그다음에 한강으로 갔고 한강에서 결근율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왜냐면 공무원분들이 하도 입력들을

안 해주셔서. 일단 한강을 마친 것까지는 나와,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거기서 빠지고 나오면 다시 이번엔 브릿지 가서 자활 했네, 웅달샘엔 늦었나 보다, 브릿지 가서 하고. 올해는 어디? 가락시장 가서 청소하고 있구나. 이력이 보이는 거죠. <방향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로 근로이력 관리할 필요>

서정화

그러니까 지금 주무관님 말씀은 예전에 일자리 종합시스템처럼 일자리 종합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총괄, 이렇게 지원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기재일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 노숙인종합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서정화: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근데 이게 모둘러 형식으로 짠 거면 모르는데 어쨌거나 꽤 돈이 들어가겠지만 각 시설에서 시설의 일자리나 특별자활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무력한 게 저는 아무나 찍으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유태성선생님이, 자기 시설에 새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입력을 하고 우리 시설에 잡아넣는 순간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요. 우리 시설에 있을 때는 보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굳이 안 물어보더라도 그러니까 일하기가 되게 좋은 거지. 어떤 분들은 계속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딱 사람 앞에 세워놓고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일하려고 노력했네. 이런 게 보이면... 일자리센터고 뭐고 간에 뭘 알아야 하죠.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냐면 깜깜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일자리 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돈 좀 들여서 고용노동부랑 얘기해서 워크넷을 끌어오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워크넷 끊어지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한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워크넷이 끊어지면 어디까지 안 보이는지 이제 잘 몰라, 실감 안 나. 그저 끊어지고 나면 낭패야. 그때 하나도 안 보이면 진짜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고. <워크넷 정보 연계가 끊긴 이후 대책 필요>

특별자활 제안용어도 2005년도 3~4월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한 14년 써먹은 용어니까 용어도 바꾸고 <특별자활근로라는 용어 재검토 필요> 저는 웬만하면 그거를 시설별로 분석해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발끈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1에서 12까지 정말로 다시서기가, 브릿지가, 아니면 게스트 하우스가 딱 써야 하는 근로량을 정해서, 우리가 5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4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이거를 그냥 시설운영부에 줄까. 치사하게 자활지원과가 '야, 신청해 봐.' 그래서 '막 잘라. 야, 니가 뭐 알아, 딱 시설은 더 급하던 말이야.' 이러지 말고 아예 그냥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딱 4시간 일 할 사람은 '딱 이만큼입니다'라고 아예 시설별로 그냥 일반운영비로 쥐버리고 그걸로 죽을 끓이든 밥을 하든 우리 이제 관여하지 않는 거야. (서정화: 일자리에서 빼버리고?) 왜 일자리에서 빼버려요. 어쨌든 간에 통계에는 넣고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일자리 가지기 사업 담당 공무원은 그걸 그냥 시설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고 시스템에 알아서 넣기로 하고. 그 외의 것들, 공원 쫓아다니고 복지재단 쫓아다니고 무슨무슨 재

단 쫓아다니고 용역회사 건설회사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하게. 그리고 한 명쯤 더 있으면 예전에 참 재밌었던 게 이정훈 국장님이 그게 재밌었나 봐요. 저는 지금 두바퀴나 뭐 상호를 고치긴 했지만 참살이랑 빅이슈랑 막 할 때요, 너도 나도 노숙인 가지고 사회적기업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중 한 사람이 박 0재예요. 저는 되게 희박하게 봤는데 어쨌든 잘하시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봤다면 오 괜찮은데 하는 사업 계획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져온 사람이 포기하데? 우리가 그런 것들 막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전담하는 팀이 있고. 예를 들어 흥대 애들이 들고 온 프로젝트 경우에는 오 내가 해볼까, 이거? 이 정도로 괜찮은 아이템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은 노숙인에 대해선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도 또 해나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화해야죠. 그러니까 시설 허드렛일 4시간짜리는 아예 별도로 독립시켜 버리고 시설운영비로 주든지 아니면 일자리 예산에 주더라도 그냥 아예 고정배치. 연간 몇 명 죽을 끓이든 밥을 하든. <시설내 일자리 실수요를 파악해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노숙인 일자리 발굴은 별도로 진행할 필요>

서정화 그 사람한테 1년을 주든 한 달이든 시설이 알아서 하고

기재일 너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자리센터화 하는 거고. 이거는 주로 다 외부 쪽으로 전담하고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야 할 거고,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고 등등. 그리고 우리 과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 시설은요 예산 모자란다고 하면 의회 설득하기 힘들어요. 예산과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 예산 모자란다고 하면 어? 더 갔다가 써. 그런데 우리 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산이 모자라요. 그런 비겁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퇴직금 없앨 때 난리가 났는데 그랬더니깐요 담당한테. 예산 사정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국가예산 그렇게 걱정하면 너는 공무원연금 안 받겠네? 왜 노숙인만 퇴직금이 없어야 해? 옆에 있는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요. 그래서 좀 공공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4시간도 아까 특별... 뭐 15일 주고, 아 요즘 임시주거라는 사업비가 또 생겼잖아요. 그럼 특별자활의 목적성이 사실 없어진 거예요. 원래 방값 얻으라고 주는 임시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이 어떻고, 일 년에 몇 달이, 이런 소리 좀 다 집어치우고 다시 틀을 짤려면 좋겠어요.

노숙인 일자리 정책에서 정부/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사항은?

사회 김남영 노숙인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측면의 노력과 지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수범 저는 이제 사실 이 근로노숙인 문제를 하면서 항상 제일 힘들어하는 게 출구전략이거든

요 만성 노숙인들에 대해서. 사실 일자리에 관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비슷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있지만 요즘엔 정체되었고 지금 또 변화는 필요한데 뭔가 계속 예전 방법들을 반복하는 것 같고. 뭔가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우리 내부에서 특히 일자리에 관련되어 어쨌든 출구전략을 바깥쪽에 뭔가를 만들어서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예를 들면 예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공공기업인가요, 근로 채용할 수 있는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각 시설에서 종사자 개인이 되거나 자활지원과에서 담당자 개인이 되거나 이 수준을 이용을 잘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지원주택도 제도화했듯이 일자리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화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면 훨씬 더 노숙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분들 물론 일을 하시기에 더없이 힘든 신체적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들 채용했을 때 혜택이 업체들에 많이 가죠.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노숙인분들도 사실 몸은 멀쩡할진 모르겠지만 또 다른 마음이든 어디든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어떤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할 때 이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뭔가 합시다 하고 모여서 뭔가를 해보면 산도 옮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노인분들도 옛날에 하시던 게 있어서, 저는 제대로 걷거나 하시려나 하는 분들 모시고 일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보다 일을 더 잘하세요. 이분이 전에 건설현장에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분들 근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먼저 포기를 한 마음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숙인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도 취업에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도 취업취약계층이라는 네임을 넣었던 것처럼 노숙인분들도 취업하시게 되면 그 업체에 어떤 세제혜택이라든지... 똑같은 사회복지의 복지대상자들 아닌가요. 이분들한테 그런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제가 봤을 때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지자체 정부 쪽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노숙인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여 민간취업처를 확대하는 방안>

최성진 저도 이정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분들은 취업하면 장려금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사실 노숙인분들이 민간일자리에 가기는 너무 힘들고 이분들도 지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항상 그런 고민을 해왔거든요. 이런 지원금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는 일자리지원센터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민간일자리에 맞춰져 있는데 노숙인분들이 민간일자리에 가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일반인분들도 가기 힘든데. 그래서 특별자활이나 반일제나 전일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세분되어서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석 지금까지 민간취업 몇 분 했느냐, 취업을 거기에 따른 방침을 짚어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률보다 취업 유지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취업을 하셨어. 취업하셨는데 그쪽 본인들끼리 사내에서 저분이 노숙인이다, 보현의집에서

왔다, 그게 노출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치 않게 나오게 된 사례들이 빈번하게 좀 발생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실직이 되면 또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죠.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도치 않게 사회적 일자리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꼭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처럼 대중들 인식도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나 제도적으로 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취업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유대성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영역 일자리가 다양화, 확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민간위탁고용센터의 종결 상황, 저희 센터 입장에서 그런 사업 종료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가야 할지에 대해 저희 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종만

어쨌든 노숙인 일자리 영역에서 지역사회로 갔을 때 지역사회에 잘 받아 안아서 잘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금방 나갔다가도 금방 돌아오고 지역자활센터 갔다가도 금방 다시 노숙으로 돌아오고 민간일자리 갔다가도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공적 영역 안이라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라든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자활이나 노숙인시설이 모여서 공적인 체계로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라든가 정부든 지자체든 이 자체를 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부분들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노숙인 일자리 정책 - 지역사회 거버넌스, 제도적 지원 통해 발전시켜야>

서정화

저는 마무리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는 서울시 일자리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예산을 내리는 정도의 일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일자리지원센터로 다 가 있는 상황이라 일자리지원센터가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했던 역할을 공적으로 맡아서 하면서 서울시의 권위가 필요하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의 일자리, 우리가 아까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한다, 또는 노숙인을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을 좀 양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경제조직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우리가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공원 청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우리 인력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 그것도 저는 적극적인 일자리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오히려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노숙인들에게 하루에 4시간 일자리 한 달에 60시간 일자리 또는 하루에 8시간 일자리, 대신에 12개월 지원하고 퇴직금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자리를 받아 안을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회적기업들을 공모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은 인건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적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일자리지원센터가 간담회를 해서 그런 걸 한다

든가. 저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한동안, 2015년까지는 정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고, 사회적 경제조직하고 네트워크해서 그렇게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실제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예를 들면 다시서거나 브릿지나 어디에 '200명 줄 테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일을 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기관에 관해서는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채널들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 - 사회적 경제조직들과의 협력방안 찾자>

**사회
김남영**

2시간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주거·지역사회 분과 FGI 기록

일 시 : 2019. 10. 10. 오후1시~3시

참석자 : 서정화(사회/ 열린여성센터),

김수민(구세군서대문사랑방), 박성희(비전트레이닝센터),

손경훈(구세군브리τζ종합지원센터 부설 희망원룸), 이동현(홀리스행동),

지우형(서울노숙인시설협회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

김남영(조사 연구원 / 구세군브리τζ종합지원센터), 김진미(조사 연구원 / 디딤센터),

이수범(조사 연구원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회

서정화

서울시 노숙인 정책 20년이 됐습니다. 오늘 모임은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고 성과를 홍보하고 또 20년 이후의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백서작업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노협은 그 중에서도 한 영역, 20년 동안의 각 시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또 각각의 영역별 정책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그런 기록물 조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연구 위탁을 했고요. 저희가 현장 실무자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오늘 일자리, 주거, 거리, 시설 이런 분과들을 나눠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방향도 나누는, 그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는 주거와 지역사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 쪽에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얼굴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여성센터 서정화입니다.

김수민

예, 구세군서대문사랑방 김수민입니다.

지우형

예, 저는 서노협 그 매입임대 담당자 사례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지우형이구요. 현재 매입임대 운영 기관으로서 종합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예, 안녕하세요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희입니다.

김남영

예, 저는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브리τζ센터 김남영입니다.

손경훈

희망원룸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경훈입니다.

김진미

네, 이 연구 때문에 옵저버로 참여한 디딤센터 김진미입니다.

이수범

네,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다시서기센터의 이수범입니다.

사회

서정화

홀리스행동의 이동현 선생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부터 임시주거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십사 해서 오고 계세요.

오늘 주로 논의하려고 하는 건 사전에 질문지 드렸던 것처럼, 주거 관련 내용으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2005년 지방이양화 이후에 노숙인 정책, 주거정책이겠죠. 사업의 변화와 성과,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총론적인 내용입니다. 1999년부터 자활의집이라고 하는 주거가 시작이 됐고요. 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참고자료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2006년도부터 매입임대주택, 민간지원 사업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리노숙인들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사업이 있었구요. 그리고 2010년과 2011년도 법 제정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거리노숙인들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진행이 됐구요. 2005년부터 논의가 돼서 2006년부터 노숙인들을 위한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단신자 매입임대주택은 300호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구요. 그리고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었고, 2011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노숙 쪽에 그 임대주택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정신질환 및 알코올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구요. 2018년도 4월에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주택 사업이 본격화됐고 올해에 1차 운영자 공모를 했고 이제 입주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는 이런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노숙인에 대한 주거정책 성과, 변화와 한계 등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지는 않겠구요,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경험

사회

서정화

먼저 말씀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초창기부터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초창기부터 하셨는데.

김수민

초창기는 아니고요. 구세군 서대문사랑방 김수민이고요. 초창기 때는 아니고 저희가 서대문사랑방에서 처음 실행했던 거는 아마 2012년부터일 겁니다. 그때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 전에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 진행하면서 그때 저희 시설 이용인들을 그쪽으로 연계해드리는 주거지원서비스들을 그렇게 연계해드리다가, 12년도에 운영기

관으로 선발되어가지고 아마 2014년도에 시범사업 중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은평구하고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27가구를 저희가 넘겨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당시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운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를 이제 저축 그 당시에는 일자리 지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저축관련 신용회복 관련 그런 사업을 주로 하다가 한계를 부딪치죠.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천만원이상 이천만원 정도 모았는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고 또 가족도 해체가 됐고, 그러다 주거로 저희가 눈을 돌리게 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한다면 주거가 있어서 어쨌든 이분들에게 이용이 되는 게 목적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가족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부분에 큰 메리트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분들이 한 가지 또 떠안고 있는 거는 초창기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언제쯤 여기서 나가야 되나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편으로 생각하는 게 주거재단에 얘기하는 게 이거를 운영기관과의 계약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입주민들하고 직접계약으로 가자, 그게 탈노숙이지 않나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그 주거복지 담당자들과 논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논의 상에는 입주민하고 LH하고 직접계약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걸 지금 좀 더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노숙인에게 목적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우형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지우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5년 그 전 중앙정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의 주거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했던 시점 같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에서도 분명 필요는 하지만 그냥 거리에 계신 분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정책 반영이 없었나. 그래서 이제 시설 입소에 관한 그런 거로 해서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만 입주를 시켜서 거리에 보이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 같구요. 그 이후로 노숙인 법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정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인도 하나의 사람이다, 그분들의 기본적인 주거권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중에 주거취약계층 관련 업무지침서라는 게 돼서 이분들의 주거권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항상 제가 실무를 뛰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법은 그렇고, 말은 그렇고, 혜택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상 이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이라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 정부 시책으로 가고 있는 주거방향 그런 게 우선되고, 그 다음에 공급물량이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노숙인 관련 주거취약계층의 그런 것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정책하는 방향과 저희가 생각하는 주거복지 방향과 조금 상이하게 돌아가는 그런 한계가 한계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계-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 정부 시책상 우선사업이 아니어서 공급물량 등의 한계 있음>**

사회 서정화 질문 1번 2번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법제정 이후로 줄 때는 정책대상으로 올라는 값이나 공급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성희 비전트레이닝센터 박성희입니다. 제가 비전센터에는 2011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까지 비전센터에서 업무를 맡아서 2015년부터 주거사업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듣고 보고 한 것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래도 2005년 이후 지방이양화 이후부터는 노숙인 정책이나 주거복지 정책에서 아까 서두에 서정화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변화들이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주택까지 왔는데 거기서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지우형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이 너무 적다는 거, 그리고 노숙, 노숙인복지의 꽃은 탈노숙인데 그렇게 되면 주거가 있어야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는 있으나 공급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제도 속에서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가장 계급이 하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참 이 시작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것들을 더 극복할 수는 없는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쪽만 주장할 수는 없는데. 사회적으로 주거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노숙인 취약계층이 임대주택이나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로또를 맞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래도 물량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주거안정 이후에 다른 정책들이 맞물려서 함께 발맞추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래도 잘 가고 있지만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 - 매입임대주택 물량 부족>**

사회 서정화 네, 어쨌든 총론적으로 이렇게 어떤 주거의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잘한 건데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아까 희망원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2012년도에 희망원룸이라고 하는 우리 쪽에 가장 최초로 유료로 원룸을 제공하고, 고시원이죠?, 거기서 일정기간 일년 동안 이용한 다음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아주 특별한 시범사업이었어요. 시범사업 끝나고 본 사업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연구진들은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고 먼저 초대되신 분들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훈 선생님.

손경훈 희망원룸 손경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서 제가 아마 경력이 짧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나머지 분들이 더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보태자면은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호를 임대주택으로 구했다

하면은 노숙인이나 이쪽 취약계층 쪽에 한 15%,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이상 하는 것도 이쪽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새터민이라든지 청소년 애들이라든지 이쪽에도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거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인식개선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쪽방주민이라고 하면 되게 힘든 곳에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거리노숙인이다 하면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거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사지 멀쩡한데 일 안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인식개선도 조금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야 노숙인 쪽에도 조금 많은 %가 할당이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 지금 주제가 맞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 해봤고요. 그리고 어느 시기든 뭐든지 다 시행착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해서 해왔더니 10년만 지나도 약간 추세가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이 다 시간이 흐르면 그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자리가 있고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시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물량 확보의 바탕 -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 주거지원사업의 성과는?

사회
서정화

이제 여기 계시는 연구원님들 중에서도 총론적으로 평가하실 게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죠.

김진미

디딤센터 김진미입니다. 저는 어쨌든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주거서비스가 더 많이 노숙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의 하나로 기입이 됐다는, 기록이 됐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거 같구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전에 민간이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운영하던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임시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건 되게 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이런 지속적으로 기금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거리노숙 대책의 하나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들어왔다는 거? 주거역시도 주거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 이후에 매입임대주택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자 지원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다고 보구요. 그러면서 유의미한 분기점이 됐다고 보는데, <노숙인복지법의 주거지원 항목에 근거해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으로 주거서비스 가능>

좀 전에도 발언하신 분들께서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법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어느 부서에..., 이게 정부책임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만 있지 어느 부서가 노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확보에 책임을 진다라든지, 어느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든지, 의무조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법에는 어느 부서와 협력해서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준점이 되거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공급의 불안정성이나 뭐 너무 적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주택공급의 기준이 되거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 필요>

사회
서정화

또 다른 두 분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총론입니다.

이수범

저도 200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요. 사실 2005년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아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1번 질문에 한정해서 보면 2005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화 되면서 변화하고 있었던 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005년도 이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홈리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의 중앙정부의 역할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2005년도 지방이양화 되면서 약간 그 어떤 공백 상태 같은 거, 중앙정부는 좀 책임을 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좀 빠져버리는 그런 게 있지 않았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공백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더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보는데 특히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공백기에 저는 저희 시설들이 그 당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임시주거지원 사업 또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주거와 관련된 사업들은 오히려 그 시점에는 민간들이 좀더 주도해서 해왔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도 받아서 지원하는 과정들이 어쨌든 2005년도 전국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서정화

김남영 선생님 하실... (김남영 : 앞에서 다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1번 2번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는 어쨌든 법제정 이전에는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이행이 되었다면 법제정 이후에 정부의 사업으로 주거정책들이 시행되었다고 하는 기본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와 이후 방향에 대해

사회
서정화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주거서비스가 있는데요. 질문지 5쪽으로 넘어가 각각 주거 사업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주거지원 사업에 관해서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 사업을 알고 계시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

문에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지금 거리노숙인들에게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수요에 맞는 공급방식인지, 아니면 뭐 입주자 선정 방식이 적절인지, 기본금액은 적절한지, 또 거쳐 확보를 주로 우리가 쪽방이나 고시원으로 하고 있는데 입주할 때마다 너무 열악한 주거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쳐 확보의 적절성이라든지, 주거유지 효과 측정에 대한 적절성이 어떠한지 등 총괄적으로 임시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만큼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시설도 임시주거로 의뢰한 적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리쪽에 계시는 이수범실장님이나 아니면 브릿지랑 연결되어 있는 희망원룸 쪽에서도 이 사업을 알고 계신다면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영 : 임시주거지원 담당자인 분은 한분도?) 안 오셨는데요. 여기 다시서기가 대표로 오셨네요.

이수범

제가 그 임시주거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거리 아웃리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리에 있는 분들을 상담을 진행을 한 적도 되게 많지만 저는 그 상담 이외에 따로 또 시간을 별도로 할애를 해서 주변에 있는 쪽방이라고 하죠, 그 쪽방을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녀보고 쪽방에 계신 분들과 앉아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봤고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제가 그 매입임대 업무를 진행하면서 임시주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을 때 이제 공급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가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지원이 되고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공급방식이 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진짜 어떤 주거가 부족해서 주거 때문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신용회복 문제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임시주거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구요. 근데 입주자 선정방식에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게 뭐였냐면, 안정적인 주거 방향으로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3개월이면 3개월 딱 끝나면 이분들은 다시 또 거리로 나왔고요. 또 이분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임시주거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것들을 반복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시 차원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 주변에 있는 쪽방을 운영하는 사업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지고, 그럼 그분들은 입주민을 입실시키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 좋은 부분들보다 실질적인 거리에 계신 노숙인분들 주거를 필요로 하시고,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체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임시주거지원 이용을 반복하는 한계, 복지체계 진입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 측면>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거리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임시주거 지원을 무한정 몇 개월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다음 단계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연계시키는 부분들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긴급지원제도 쪽으로 연계가 된다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수급도 한다거나 초기노숙인 분들은 일자리를 연계한다거나 이렇게 이행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 또 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최장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다시 이제 거리로, 또 이제 다시 유통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좀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는 다수의 분들에게는 이게 어쨌든 거리에서 만성화되지 않고 바로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마 연 1회 정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화 : 2년에...) 2년에 한번. 그래서 그 기간이 거리에서 뭐 만성노숙인이든 또는 이제 더 지원해야 될 대상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2년에 한번 정도 굉장히 텀이 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좁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의의 - 거리 노숙 탈피는 돕는 역할>

**사회
서정화**

이동현 선생님이 오셨으면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또 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고요. 하실 얘기 있으시죠. 여성일시보호시설 하시니까.

김진미

이수범 실장님이라 앞서 말씀하신 분 의견 대체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기간이 물론 임시주거비가 전체 사회서비스 맥락에서 보면 긴급주거비랑 유사하기 때문에 무한정 임시주거비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6개월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였다가 점점 그 대상자 수는 늘리면서 지원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와서 이제 지금은 초창기 임시주거지원 대상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상에게 실적이라는 의미의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서비스의 양에 비해서 어쨌든 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되게 유의미한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무리 긴급주거비의 성격이어도 두 달 정도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은 조금 과도하게 실적위주의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그릇된 방향으로 그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고, 대상자를 볼 때 그래도 그동안 임시주거비가 그나마 '주거 먼저'의 이념에 가까운 정책이었던 거잖아요. 특별히 주거를 유지할 자격기준을 많이 따지지 않고 자산을 뭐 별다르게 점검하는 것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거리를 벗어나기 되게 유리했는데. 두 달의 지원으로 되도록이면 고시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락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급이 될 사람이 되게 1차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원의 기준이. 그런데 실은 거리에는 물론 수급대상이 되지만 치료를 안 받고 그래서 못 받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또 수급선정의 가능성이 있어서만 해주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고시원 유지 효과, 고시원 유지 실적 이거를 좀 너무 고려하다 보면 지원은 필요하지만 수급이 될 가망성은 없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포괄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원기준이나 그리고 이거는 사전인터뷰에서도 나왔던 인터뷰인 것 같은데 고시원 지원비 자체를 조금 더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 비용으로는 주요 노숙지역 주변의 고시원이나 쪽방을 벗어날 일은 없거든요? 이십오만원 수준이라는 건 저희가 조금 떨어져서 연희동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연희동만 해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십오만원 지원으로는. <주거 먼저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긍정성. 그러나 수급신청 가능한 대상자 위주의 선정 우려>

**사회
서정화**

그럼 쪽방지역에 고시원을 얻는 것 이상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 십오만원 가지고는?

김진미

그래서 조금 재검토, 조금 실적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지역 기반이나 지원액은 지금보다는 좀 높아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시원 주인이나 쪽방 주인들에게 그 배를 불리면서 잠깐 노숙을 벗어났다가 그다음에 또 그 노숙으로 갔다가 또 서비스를 찾아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 더 끊어내려면 이거보다는, 쪽방·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공공성이 있는 주택 확보 방안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민간의 고시원, 쪽방을 활용해서 그동안 되게 다행히도 잘해오긴 했는데, 뭔가 여기보다는 공공적인 개인이나 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조금 확보하여야 되는. 그러니까 고시원을 사는 것도 좋고요,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쪽방 5년 했던 것처럼 고시원도 한 5년 정도 정부가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보다는 덜 소모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임시주거지원 개선 - 지원액 상향, 공공성 있는 임시 주거지 확보 모색>

**사회
서정화**

지금 서울시에서 뭐 연 지원이 인원이 900명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6개월씩 지원하면 300명으로 줄어드는 거고 2개월씩 하면 900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라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게 공공성 있는 주택확보 예를 들면 고시원 몇 개를 아예 서울시가 장기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 수준으로 주거환경을 좋게 하고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 방식, 쪽방사람들이 돈을 벌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수범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이 같은 임시주거지원 사업도 큰 틀에서 보면 그 시설 중심, 그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설 중심 사업이라기보다는, 개별주거라고 보기도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정화 : 개별적 임시주거.) 이게 공동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뭔가 거주 형태가 조금은 바뀐 긍정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공간적으로 물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실제로 공간만 그렇게 이동했지 그 이외에 어떤 서비스가 많이 촘촘하게 제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센터도 연간 540명 정도인데 담당자 3명이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1개월 지원하는 분도 있고 3개월 지원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정책 총량을 N분의 1로 나눠보면 실제로 사례관리자당 수가 많아서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 만들고, 사진 찍어서 전입신고 하고, 거기서 뭐 이제 수급되실 분들 수급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 좀더 필요하죠.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주민 센터라든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하물며 쪽방상담소라든가 요즘 찾동 서비스도 많이 있고요, 일단 어쨌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주거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역주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주소만 만들었다

고 지역주민이 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실제 거기까지는 업무상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오거나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례관리자를 늘리든 N분의 1을 평균을 줄여서 늘리든 이런, 지역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든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자활 쉼터 같은 경우엔 지금 1년인가요? 입소하면 있을 수 있는...? (서정화 : 2년) 재할 이... (서정화 : 1년, 1년 플러스 1년) 재할이 좀 바뀌었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쉼터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쉼터에 들어가면 거기 단체생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을 통해서 보호도 받고 사례관리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임시주거지원을 받으면 사례관리자 한 사람한테 받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받는 서비스의 양이나 다양성은 훨씬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처럼 2년 1년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쉼터도 그 정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임시주거도 3개월 정도 지원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 그래서 쉼터처럼 1년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2분의 1 정도 6개월 정도는 지원을 해야 사례관리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뭔가 조금 더 나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주거지원 방향 - 지원기간 연장하여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시간 확보>

**사회
서정화**

우리가 임시주거지원 사업 이후에 이 주거지원 사업 하신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없죠?

김진미

남기철 교수님이 초창기에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거유지효과를 단년도 기준으로 측정을 해요. 그 해에 지원한 사람이 그 해에 고시원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해서 연간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엔 주거유지율이 늘 70%이상으로 나와요, 지금 실적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이게 2년 3년을 혹은 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그거보다 확 떨어지는 거죠. 지금 임시주거지원비의 효과성이나 그 예산효율성이 높다고 우리가 강변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일 년 단위 측정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훨씬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지원기간이 조금 늘고 사례관리 인력을 조금 더 주면, 저희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15케이스 내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깐 물론 저희는 별도의 직원이 없어서 저희 직원의 기본업무 부담이 높아지긴 하지만, 케이스가 많지 않으면 어떤 게 가능하면 저희는 신촌 쪽에 주로 고시원 입실을 시키는 신촌동주민센터랑 회의를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신촌지역의 고시원에 가면 전화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입실했다. 그럼 방문을 해요, 찾동 사례관리자가. 그래서 여성들이어서 정신질환이 많기 때문에 고시원에서 재발해서 뭐 막 경찰 부르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의논하는, 고시원 주인, 저희, 찾동이 같이 논의를 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고시원비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긴급주거비로 넘어가는 게 또 가능해서 적은 예산에 비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기간이 좀 늘어나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보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압박을 좀더 내려놓고 아니면 예산을 진짜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조금 더 유지하게 해서 지역으로 밀어 넣는 게 조금은 가능하거든요, 지금보다는. 막 이렇게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임시주거지원사업 - 지역과 통합사례관리 사례>

**사회
서정화**

저는 어떤 생각도 해봤다면, 저도 초창기에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했었거든요. 모금회 임시주거지원 사업비 받아서 했었는데 그때 담당자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그 열악한 여인숙, 쪽방, 보안이 안 되는 쪽방 이런 데 여성이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것. 밤에 문 잠그는 거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주택에 내가 이 사람을 안전한 집이라고 소개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지역사회는 요즘 긴급주택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차원의 임대주택을 빌려서 거기를 단기주택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기존의 고시원 같은 데를 서울시가 매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좋게 해주는 방향도 하나 있겠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받아서 그거를 그냥 긴급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너무 우리가 종합지원센터 주변의 쪽방과 고시원 여기만 집중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긴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찾동이 같이 사례도 안 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지역사회로 임시주거지원 사업도 지역사회로 확산 펼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임시주거지원 방향 -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수범

생각나는 거 중 하나가 사실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저는 예방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노숙인이나 위기 노숙인 또는 노숙의 경계에 있는 분, 특히 저희는 위기대응콜센터를 통해서 출소하신 분들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는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거든요, 당장 오늘 하루 보호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이제 긴급지원제도도 주거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주거문제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그렇게 생겨날 때 굉장히 의미있게 쓰여지고 있고, 노숙인 시스템에 오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연결해서 다시 또 지역사회로 나눠지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긴급주택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의 소규모 응급, 희망 보호방 같은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에서는 노숙인 쪽방만 아니라 다른 연계된 곳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24시간 365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역이나 희망지원센터, 영등포쪽 이 정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공간들을 전체 자치구 구청에 설치하면 제일 좋다 생각하고요. 한 4~5인, 2~3인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좀더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말씀하셨던 긴급주택 구해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단순하게 그냥 하루만 보호하는 대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하게 치매로 집을 가출했다거나 실종됐다거나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돈 떨어졌을 때 보호할 데가 없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구청 단위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일개 사회복지시설이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연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계처를 찾아야 되고, 찾아서 그 쪽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청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보호했다가 통합사례든 부서별로 상담해서 이분은 치매, 이런 식으로 바로 연계를 하고, 또 그걸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역사회에 응급보호 가능한 공간 확보 필요>

**사회
서정화**

임시주거지원사업 토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늦게 오셨는데요. 홀리은행의 이동현 간사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임시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랑 이후의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이동현 선생님께서 임시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랑 발전 방향 얘기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현

임시주거지원 사업이요. 앞에 하신 분들 말을 못 들어서 약간 겁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씀드리는 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례가 지체장애인이신데 진단 못 받고 당뇨로 인해 절단되신 분이예요. 며칠 전에 심사를 받았는데 4급밖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몸 쓰시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스타렉스에 오르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하시고, 휠체어에서 이제 그 소변기를 잡고 일어나거나 이런 걸 못하시는 거예요. 등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못하나 싶은데, 장애에 익숙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계속 거리에 계시다가 쪽방에 들어가신 지가 20일 정도 되는데, 거기가 1층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낮은 턱이라든지 그 쪽방입구의 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소지를 위해서만 둔 거고, 주소지 유지하는데 내가 24만원씩을 쓰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임시주거지원이라는 것으로 법률에는 임시주거비 지원이 아니라 임시주거지원 사업이고 서울시도 사실은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하죠? (서정화: 네 그렇죠,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하죠.)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이라고도 하고 혼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법률이 정한 바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 어떤 자원 배분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 쓸까 했을 땐, 더 긴급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곳에 쓴다고 하면 장애가 있거나 노령이거나 해서 홀로 거주하거나 보행하거나 이럴 수 있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돈을 대는 문제, 그리고 돈을 뭐 조금 더 모아서 35만원이라든지 더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임시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쪽방이나 고시원 이런 것들에 무장애 설비 같은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라든지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작 제일 필요한 분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쪽방 주민이나 고시원 주민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주거지원 방향 - 임시거처에 무장애 설비를 하여 직접 공급하는 방식의 서울시 계획 필요>



희망원룸

**사회
서정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원룸입니다. 노숙인 사업에서 처음으로 유료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료 주거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희망원룸 사업이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5년 지나고 나서 사업이

다시 주사업으로 넘어갔는데, 희망원룸 사업에 대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인지, 산정방식은 적절한지, 거처 확보는 적절한지, 희망원룸의 현재 의의와 향후 확대 필요성 여부는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경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열어 주세요.

손경훈

희망원룸 직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깐,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 위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희망원룸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랑 지금이랑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많이 다르고요. 2012년이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했던 부분하고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외국에서는 2010년 되기 전에 이미 지원주택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이 된 거겠지만 처음에는 희망원룸이 자유하우스 같은 거로 해서 음주를 하실 수 있다거나 마음껏 24시간 약간 휴게소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됐다가 그 쪽방 주민분들의 반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조용히 따로 옮겨서 지금 같은 형태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의 축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도 바뀌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기사도 안 좋은 쪽으로 뜨고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실 진행해야 하는지 저도 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의 질문 문항에 임대주택 가더라도 선생님들이 계속 원래 있던 그 시설을 계속 의지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희망원룸이라는 곳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예전 표현으로 하면 중간쉼터라는 개념이 되겠구요. 지금 서울사랑 쓰고 있는 용어는 전환형 지원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화 : 전환형 지원주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희망원룸 처음 시작은 지원주택 개념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심사도 속된 말로 뻑세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자활하실 분들만 뽑았었는데 지금은 지원주택 개념이니까 수급자분들도 물론 반구요. 그리고 이걸 가정인데 제가 이 전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대문사랑방을 통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35가구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주거복지재단의 김영환 과장님께서 자기들도 검토해보고 판단하기를, 자기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을 시설에 있는 분들이 돈을 잘 벌고 수입이 안정됐다고 해서 내보냈더니 거기서도 아무도 옆에서 터치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안 드시다 술을 드시고 도로 거리로 가시거나 보증금 다 빼먹고 지역주민하고 싸우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제 돈을 버니까 희망원룸은 일단 방세도 자기네들이 먼저 내보고 싼값이지만 먼저 내보고 요리도 자기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훈련과정이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시설에서 저희 쪽에 추천해서 저희가 점수 채점해서 받았는데, 와서 매일 술 드시고 매일 소란피우시고 이런 분이 계셔서, 아주 몇 년 전인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무리 케어를 해도 안돼서 추천해 주셨던 시설의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우리 시설은 술을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술 먹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술을 드시면 못 주무시기 때문에 안 드셨는데 희망원룸에서는 드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드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체가 안

되고 매일 드시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마다 그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술 먹을 수 있게 하고 편하다고 해서 희망원룸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시설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작은 병을 얻었다고 큰 병원에 가지 않듯이 어떤 분들은 희망원룸 같은 게 필요할 거고 어떤 분들은 임시주거지원 같은 게 필요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지원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 하나가 저는 희망원룸이라고 생각하고요. 희망원룸에서 만약에 중간형 단계로서 앞으로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와서도 그 전의 시설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식으로, 이런 식이라든지, 예를 들면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정말로 영구임대주택 쪽으로 갔을 때는 거기 지역주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과정을 거치는 전환형 지원주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원룸은 중간쉼터, 혹은 전환형 지원주택 역할을 하고자 함.>

사회

서정화

공동 주방은 있는지? 대부분 사서 드시거나...

손경훈

들어오신 분 성향에 따라 많이 바뀌는데요. 정말로 만약에 내가 요리 잘해서 그게 취미인 분이 들어오시면 그 선생님을 위주로 돈을 걸어서 장은 누가 봐오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담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분이 또 안 계시면 또 각자 드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서정화

희망원룸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 해주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현

저는 희망원룸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는 전제를 해주시고, 다만 저는 고시원이 변형된 어떤 형태라는 점에서 집중해서 말씀드리라고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국일고시원 화재나 그 이전에 계속 고시원이라든지 여관, 여인숙 이런 데서 사실 사람 죽는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뒤따른 일들이 소방대책 중심으로 갔었고. 그러다가 올해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안정 취약계층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거안정을 같이 보장하는 취지로 작업을 했지만 역시나 안전 쪽에 가 있고, 주거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전혀 하중을 갖지 않은 원안에서 그렇게 수정된 채로 통과되어서 사실은 추진했던 저희 입장에서 아무런 기대를 안 갖고 있는 지금 참담한 마음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서울시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정확히진 않은데 한 예산 60억정도 됐던 것 같고, 거기에 25억씩 두 개를 고시원을 사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아마 토지임대비, 이렇게 예산이 꽤 많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고시원 매입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3월에도 고시원 건축기준을 서울시에서 만들었고 7 제곱미터 외창 만들라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적용되는 곳이 리모델링형 사

회주택밖에 안 돼요. 딱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다 적용하려면 국토부 관할인 고시원 건축기준을,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거기에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의견은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럼 딱 두 곳에 적용할 것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언론에 되게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용역한 다음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용역을 도시연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발표한 시기는 용역이 선정이 되지도 않은 시기여서 정말 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저는 희망원룸이 고시원들이 앞으로 치중해야 할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실의 기준이라든지 복도의 면적과 외부에 면한 창문이 있다든가 통풍이라든지 환기 이런 부분들, 지금 있는 기준은 고시원에 주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책상 꼭 있어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학습자를 위한 공간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하는데 희망원룸이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모델로 좀 차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경유형 지원주택, 전환형 지원주택, 이런 이름으로 적절한지는 사실 좀 회의적이고 그랬을 때는 사실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생활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장애 쪽에는 자립체험홈 이런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기술을 배우고 이리기 위해서 사실은 1년, 맥시멈 1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가고. 일단 고시원 등 비적정주거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경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양을 확보해서 실험해 가는 그런 모델로서 저는 희망원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손경문 제가 한 말씀 계속 드리자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서 지금 계속 시량은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일단 의뢰를 했더니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건물을 했을 경우에 한 건물에 3층 이상 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한 층에 3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7명에서 9명...

사회 서정화 일반주택을 쪼개서 한 거라서 언론에서 방 쪼개기 해가지고 쪽방 만든 거에 대해서 문 제제기를 받았거든요. 서울시가.

손경문 그래서 지금 27명인데 9명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 서정화 그룹홈이네.

손경문 아주 힘든 상황이고. 근데 뭐 그룹홈도 저번에 주신 이 자료에서 제가 봤더니 지금 약간 한계 같은 게, 들어가신 분들끼리 서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유지율이 떨어진 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도시연구소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게 저희랑은 관계가 없는데 좋게 기사 난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게 희망원룸에 계시다가 시설 가는 확률이 엄청 낮 습니다. 거의 다시 끝나도 다시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고시원가면 갔지, 내가 다시 집단생활 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많이 1년동안에 많이 바뀌시거든요. 그런 정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또 그룹홈이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그러니까 저는 현 시기에 희망원룸의 모델로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확장성을 보 장했을 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십여명 아니 이십여명 계신데 스 물다섯명이 쓰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 그렇게 딱 붙어서 생활의 기술을 배우게 하고 이런 형태, 물론 지금 이제 그룹홈 같은 경우는 보면 사례관리자가 운영기관용 임대주택 사례관리도 하고 그룹홈 사례 관리도 하고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 너무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례관리 할 사람이 많 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원룸에 들어오신 분들 이 다 시설로 회귀할 확률이 당연히 낮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뭐랄까, 처음에 입주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 그런 부분은 꽤 크게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 사실은 그 건 물이 다중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건축법에 용도변경을, 건축물을 용도 가 있는 거기에 맞게 되는데 안 되면 어쨌든 여기서 일단 불법인 거죠. 그렇지만 애초에 건물 매입해서 그 거를 뭐 다중생활시설로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저렴 쪽방에서도 문제지만 서울시는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정책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5년이 맥시멈이고 그 안에서 운신의 폭 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저렴쪽방

사회 서정화 자연스럽게 저렴한 쪽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시간을 썼고 한 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주제는 소화를 해야 돼서 저렴한 쪽방은 잘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쪽방 지역 저렴한 쪽방이라는, 이름도 명확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쪽방을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이동현 간사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현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사업을 줄여서 그냥 저렴한 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서울시도 이렇게 쓰게 하더라도. 근데 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되게 호기인 것 같 다고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인데. 목적을 제가 기억하는 게 두 가지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쪽방주민의 공동 체를 만들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쪽방지역이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데 임대료를 낮춰서 가격결정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도자료와 사업계획으로 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임차인으

로서 임대인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려면 엄청난 독점이, 임차인들을 모집을 해서 협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물량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되지 못했고.

사 회

서정화

한 180호정도 그렇죠?

이동현

쪽방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해서 일단 5년동안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 수준은 아닌 거고 이제 수리 정도 해서 5년 동안 임차하는 것이 있고, 5년 이후에 집주인이 '임대 안 놓을 거예요'라고 하면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계획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양호한 주거환경에 주민들이 낮은 월세로 살았다면 그 비용이 매몰되더라도 그 비용의 성과로 5년간의 행복한 삶으로 대체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도 효과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설문조사를 해보긴 했는데 임대료가 낮아진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집이 관리되는 이런 부분들, 최근에는 새꿈1호점이 6월 2일로 계약이 만료이고 건물주가 더 이상 세를 안 놓겠다 라고 하는데 퇴거시점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7호 중에 7호가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6월인데 지금 10월 이잖아요. 10월 10일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동자동사랑방과 저희가 주민들 1대1 면접하고 그래서 임대주택 신청하고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계약한 분은 두 분밖에 안 되세요. 또 그중에 이혼이 안 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인의 개인정보동의서가 못 들어가면 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선정이 안 되다가 한 분은 이혼신청해서 소재확인서 내서 이제 1인가구로 인정을 받는데, LH는 안 해주고 SH만 해주거든요. SH는 소재확인서 플러스 구청의 추천서 들어가면 1인가구로 봐주는데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서 이거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아예 못 가게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관리자로서 쪽방상담소의 역할수행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집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큰 따옴표 쳐서 이야기하자면 "아저씨 노가다 뛰시는데 직접 수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그리고 퇴거에 있어서 전체 모여 놓고 이제 '나가셔야' 라고, 나가셔야 한다, 임대주택 신청하셔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임대주택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라고. 어쨌든 동행을 하지 않는 요런 문제와 내용 증명으로 전부 다 퇴거통보서를 보냈어요. 그런 과정에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평소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6월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는 다 5년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재계약한다는, 예를 들어 9-10번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만료인데 건물주가 계약하겠다, 그런데 월세를 올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남대문 쪽방 같은 경우 욕쟁이할머니 집이 거기가 1호 저럼쪽방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10월 2일자로 그 양동지역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이 됐어요. 여기가 소단위 관리지구라고, 그래서 재건축 중간절차로 사업이 개시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용산구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금 주민 180여 명은 이주할 곳을 용산구에 7곳을 만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사 회

서정화

신문에 나왔죠? 이거.

이동현

그래서 7곳을 가봤는데, 그중에 2개는 벌써 방을 다 만들어놨어요. 고시원을 다 만들어놨고 이제 입주만 용산구 눈치보느라 못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저럼쪽방에 살던 분들도 또 그 이십 몇 만원 되는 월세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요는 이 기획이 역시나 직접 시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으로 인해서 뭔가 시 재정 투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그건 사실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대충 한 삼사십억원 들은 거로 아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사실은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서 항상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용도의 그런 쪽방이나 주거지를 만들어서, 희망원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전환형 주거로서 그게 6개월이든 희망원룸처럼 1년이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서울시는 몇 년 전에는 저럼쪽방사업 내부적으로도 문제 있어서 없었다,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시의회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없앤 게 아니다, 그 돈은 우리가 회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앤 건 아니고 신규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규신청을 안 할 뿐이다, 신규공급을 안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집주인이 계약을 하면 계속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신규는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은 있는데. 이 힘든 저럼쪽방 사업 자체도 문제지만 저럼쪽방을 이렇게 문을 닫는 상황에 있어서도 후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수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럼쪽방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희망원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하튼 개별주거의 형태로서 그게 전환주거든 그룹홈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의 전제는 우리 홈리스 영역에서의 주거서비스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다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원룸과 같은 경우도 예전에 2동 했다가 줄었잖아요. 어떤 평가 속에서 그렇게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동이 있으면 한 동은 음주자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한 동은 조금 제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줄어서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저럼쪽방 임대 임차하는 그것의 한계는 저럼쪽방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립 시설화 되어 있는 몇 군데를 빼고 대부분 쉼터 같은 경우도 다 임대건물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의 자산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시의 소유의 건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온전히 이것이 이제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 쉼터들도 다 재계약의 어려움이 있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될 경우에는 구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시 차원에서도 노숙인 복지사업을 하는 건물 공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책임지고 시립 건물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럼쪽방 같은 경우도 저는 공공에서 이걸 만약에 샀다면 훨씬 달랐을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 들이고 또 나름 신경써서 환경개선도 하고 했는데 실제 5년 지나고 나니까 건물주가 재계약 못하겠다,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현실에서 실제로는 여기 살았던 분

들이 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시가 건물을 매입해서 적어도 노숙 쪽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실제로 이 희망원룸도 그렇고 저렴쪽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분들이 5년 정도 생활을 하셨는지 이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보완해야 될 점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이런 어떤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임대형식으로라도 이런 주택들도 향후에는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다양하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아마 저렴쪽방도 다 종료하는 걸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회 서정화 그렇습니다. 네, 저렴쪽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렴쪽방 얘긴가요?

박성희 아까 희망원룸하고 저렴쪽방의 의미는 참 아름답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지해 오면서 이게 물론 이수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도적으로 그 다음 넘어갈 수 있는 단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쪽방에서 5년 동안 살고 있으면 매입임대로 갈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희망원룸에서 2년 동안 살았으면 매입임대나 아니면 다른 주거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간단계로 살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이분들은 시설 내지는 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좀더 검토하고 그런, 이게 취약계층 임대주택만 보자면, 매입임대주택만 보자면 물량도 너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없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고 계속 목소리 높여서 조금 더 확장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주택하고 연결이 된다면 알코올이나 정신질환하고 연결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그래서 임시주거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발굴되신 분들이 지원주택으로 오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지원주택이 만들어졌듯이 임시주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원주택이 많아져야 되듯이, 희망원룸이나 저렴쪽방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향후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경훈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제가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희망원룸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지만 행복하우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 서로 연계가 되거나 그런 측면이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임대주택을 아까 35호를 사랑방 명의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사람이 줄고 하다 보니까 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갈수록. 그래서 지금은 개인 전환하는 식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모든 시설도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이것도 계속 확장이 되면서 정확하게 그 점검지표라든지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원래 계속 제도가 바뀌니까 그런 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주택

사회 서정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주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주택정책이고요. 이제 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지에 있는 것처럼 수요에 맞는 공급 방식인지, 입주자 선정방식의 적절성, 기관과 금액의 적절성, 발전방안, 이런 내용을 총괄해서 지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거쳤구요. 지금 본 사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은 선주거 정책이고요, 후 회복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거리노숙인이나 시설에 계신 알코올의존이나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매입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본인이 자활해서 지역사회로 나가셨을 때 계속 돌아오는 확률들을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는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주택 형태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매입임대주택 30호에 서든다섯 명 정도 계시고요. 그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잘 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 지원주택이 지금 시범사업 끝나고 본 사업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이 되고 참 적절성있게 잘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 선정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게 이분들이 진단을 꼭 받으셔야만 지원주택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바로 선 주거 정책인데, 거리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누가 봐도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진료를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에서 생활하시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지금 이 지원주택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고 갈 건지, 그래서 입주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요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서의 한계>

기관과 금액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이것도 이제 이랜드복지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거리에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 보니까 회복률도 좀더 빠른 것 같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리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훨씬 의존성이 더 낮구요. 직원에 대한 의존성도 낮구요.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좀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그 공급 방식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원주택은 거리에 계셨던 분들은 그 거리에 맞춰서 지원주택이 지어져야 되고, 센터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센터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나면 커뮤니티가 오로지 다 서울역에 있는데 마천동까지 오셔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처음부터 100가지를 처음부터 다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맺어졌던 어떠한 서비스들, 이용하는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마천에 오시면 바로 다시 하셔야 되고요. 거리에서 이제 바로 그 임시주거사업을 거쳐서 오셨던 일곱 분이 계셨는데 제가 서울역에 매일 잡으러 다녔어요. 초창기에 6개월 동안은 그 쪽에 가서서 술도 드시고 복지 서비스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안 오시고, 집만 쥘서는 이

게 조금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지원주택에서 살면서 조금 더 안정되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 수요에 맞는, 지금 중앙정부의 공급방식 말고 지자체별로 이런 권한부여를 해 준다면 지방정부에서 수요를 제일 파악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 어떤 주택이 필요하다, 지원주택이 어디에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 효과성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자>

사회 서정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질문인데요. 말씀하셨던 일곱 분 임시주거지원 받고 가셨다가 서울역에 자주 오셨던 분은 6, 7개월 지나고 나서는 그 주택에 안정하셨나요?

박성희 네. 안정하셨습니다. 네. 두 분은 병원으로, 술 문제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가셨지만요. 지금은 이제 안정이 되셨죠.

김진미 저는 그냥 질문인데요. 이랜드의 기금지원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사회 서정화 계약기간 없어요. 3년동안 향후 노숙인 사업을 하게 되는 3년동안 200호 사업인데 200호 사업동안에는 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앞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호보다 더 많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지원주택을 더 늘려라 해서 늘린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까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3년동안 200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 제도화가 되니까 제도의 사각지대가 또 늘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민간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절차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할 수가 있는데 제도화가 되니까 일단 입주할 때 의사소견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단명이 나와야 되고 의사 소견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희망원룸이나 이런 데가 전환형으로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지원주택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은데...

이동현 일단은 그 돈 문제가 나와서 어쨌든 보증금 300이라는 게 사실 뭐 홈리스 내지는 노숙인들 내지는 주거취약계층 이렇게 불리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보증금 체계가 너무 다층적이예요. 그러니까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생계-주거 수급자에 대해서 보증금 없이 보증금 백만원, 원래 백만원이죠? 50만원, 100만원인데 50만원을 그 노사공동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거. 어쨌든 보증금 백만원을 월세로 전환해서 주거급여 안에서 받는 방식을 내는 안 받고 있으니까. 그게 6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서정화 : 네. 올해 6월부터 안 받는 거로.) 어쨌든 내는 사람도 0원 내는 거니까 보증금 없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또 전세임대는 그렇진 않아요. 통일성이 전혀 없는 거죠. 보증금 얼마 받을 거냐라는 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똑같이 50만원 받다가 매입

임대는 0원으로 하고 뭐 전세임대는 50만원 계속 받겠다라는 것은 똑같은 지원사업이고 예산 책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젠데 맞지 않다고 보고. SH공사는 보증금 100만원으로 또 가고 있고, 그대로 100만원, 게다가 월세를 15만원 수준으로 묶어서 집의 선택지가 굉장히 없죠. 말씀하신 지역적 편중, 절반 정도 광진구에 가 있습니다, 중랑구에 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300인데 그런 300이라는 돈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2016년 시장 이슈로 101호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활지원과 101호 갖고 있다가 그것을 지원주택으로 30호, 38호 하고 남은 거 철거민들한테 16호 주고 이런 식으로 갔던 말이지요. 평균이 비전 게 제일 썼어요, 제일 썼고. 평균하면 보증금이 410만원 이거든요? 대충 그 정도를 받겠다는 거죠. 시세 30프로를 다 받겠다는 건데 주거취약계층 중에서도 지원주택에 들어갈 분이라면 그런 목돈 마련이 더 불리했을 분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인데 300으로 간다는 가정 자체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지 수단으로서 보증금을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기업답지 않은 딱 임대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갈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300만원을 사실 시설들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랜드재단이나 이런 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서울시 노인복지나 이런 파트에 전화를 했더니 어디냐고 해서 어디라고 했더니 혹시 기업 아는 데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못했대요. 이랜드에서는 자기네들 지원을 안 해주는데 기업 아는 데 있으면 연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 왜 시가 정책사업을 하는데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안 잡으면 안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증금은 사실은 저도 똑같은 대상계층 그리고 오히려 더 불리함이 있으신 집단들이라면 보증금 없애는 것들이 맞고. 그로 인해서 아주 일부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주거복지 성과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입장벽을 더 낮추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증금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보증금 문제>

입주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사각지대 차원에서 말씀인데, 노숙 쪽만 그런 건 아닌데 시설장의 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사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시설장 추천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그 원래 있었던 기관이나 시설들의 어떤 책임을 연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적절한 분인가라는 의도라고 하면 사실은 활동가들의 어떤 테스트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 그 진단서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하니 아니면 뭐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 공무원의 현장조사서를 통해서 이 사람 긴급지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로 되어 있고, 이런 좀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오히려 가더라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주거 준비'에서 '우선'으로 가겠다는 정책 실현에 있어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다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에 의존을 한다면 그건 철저히 단계론적 접근이지 우선적 접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주신청시 시설장 추천서 요구는 보장성 훼손>

양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서울시에 의견서를 이미 예전에 냈는데 저희가 추계한 거는 연 400개 필요해요. 집이 쪽방 빼고 고시원 빼고 시설, 거리 했을 때 400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기존 실태조사에 근거를 해서.

근데 어쨌든 100개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개가 안 되죠? 올해가 100호죠? 다 합쳐서?

사회
서정화 그러니까 3년 간 지금 200호 216호인가 됐다고 이렇게 적혀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추가 확대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동현 양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방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마이홈을 통해서 임대주택은 모두 다 메일로 뿌려지는데 지원주택은 뿌려지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공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이 제도를 알고 있어서 신청하고자 할 때 접근성이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같이 알렸으면 좋겠고, 이랬을 때 지금 경쟁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고 그때 회의때 우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 이런 것도 좀 알아보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확대 필요>

매입임대주택

사회
서정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는 사례관리자를 서울시에서 공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함해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우형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열어 주시면...

지우형 일단 매입임대주택은 단신자 매입, 2006년에 저희가 실행하면서 서울 공동모금회 사업을 해서 사례관리자 파견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매입임대 입주에 대한 신청상담은 어머어마합니다. 신청 상담을 제가 공지를 하고 신규 입주상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예전에 상담을 받으면 하루 평균 이십 건이 넘게 신규 상담건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항상 걸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이 예전에는 LH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 100만원이 있죠?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신규입주가 됐을 때는 보증금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고 운영기관에서 보증금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 보증금 자체가 기존 주택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그대로 내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리에 계신 노숙인 분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으로 계신 분들이 그만큼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실 수 있느냐가 문제지만, 또 그만큼의 월 임대비를 충분히 내고 주거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항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주거권을 제가

보장을 해드리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주거유지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을 때 제가 초창기 130호 아까 거의 한 140호 정도 가량을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을 따지면 한 4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기관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LH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운영기관한테 넘기기 때문에 운영기관은 운영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공급을 어떻게 보면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구요.

입주민의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리 노숙하는 분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바로 상향으로 해서 입주를 시켰을 때는 주거생활에 대한 문제도 항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자체들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일반 거주자와 같이 거주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과 구청 담당자의 민원과 또 여러 가지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 입주 선정의 방식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주거안정이 약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분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축도 아마 관리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저축관리에서도 저축 부분이 얼마만큼 상당한 액으로 이분들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신가, 그러니까 총체적인 내용은 이분이 주거를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매입임대주택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걸로 선정방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 않고 저희가 한번 고시원에 3개월이상만 거주하신 분들 입주도 실질적으로 해봤었거든요. 해봤었는데, 항상 문제는 운영기관이 떠안고 갑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기관의 손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자가 그만큼 어떤 노력을 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드리고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의지를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LH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기관에 법적예고 통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건물 명도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체납금에 대한 소송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운영기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주 선정방식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검증이 되지 않으면 입주를 하는데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 입주 기간은 지금 20년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돼 있는걸 보면 기간이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개념이예요. 그래서 운영기관은 그 주택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거기 계신 대상자 분이 20년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 분은 들어오면 영구임대주택 같은 오랜 기간을 거주하실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저희가 이제 노숙을 해서 어느 정도 젊은 층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이분이 고령화됐을 때 다시 주거형태로 가시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20년이라면 한 40세때 만약에 들어오셨다 그럼 분명히 60세 정도면 퇴거가 되셔야 되는데 그 이상의 주거형태로 갈 때는, 아직까지 20년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개별주택, 개별전환 하는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개별전환 됐을 때도 거주기간이 전 거주기간과 합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이분이 개별 계약으로 왔을 때는 그냥 개별로 거주기간이 계산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고

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임대주택도 신청을 하고 선정은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세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서정화 : 주택을 확보하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입 임대 나오셔서 20년 후에 주택 상향은 공공임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주택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분들한테 기회가 될지. 왜냐면 이분이 거주하고 계신 기간 동안은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신청할 수가 없을 거예요. LH임대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 무주택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매입임대주택의 발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운영기관의 부담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기관이 실질적인 부담이 없어져야지만 발전 방향이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는 그렇게 많고,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윗 단계,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법이 좀 틀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떤 걸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우선권 주고, 주고, 주고, 하다 보니까 주거취약계층 노숙인들한테 들어가는 주택은 정말 소량으로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신혼부부 그게 우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지금 줄고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아마 적절하게 노숙인 주거취약계층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갖는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와 양에 비해서 공급양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인 직접 계약 주택으로의 전환도 처음 입주 때부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면 조금 더 운영기관은 부담을 덜 갖고 아마 충분한 공급량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기관의 관리부담 줄여야>

사 회 서정화 시간이 한 20분정도 남았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추가로 겹치는 내용 말고 추가로...

이동현 네, 추가로 할 것만. 일단 이 제도개선 부분이랑 서울시 논의에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을 텐데 동의를 같이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지침이 7월 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에는 이제 부엌이라는 것만 들어가는데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상이 확 넓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미혼모 등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의 범주를 확장을 시켰죠. 주거형태만 보다가 이제 개인의 그 외의 상태들까지 반영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똑같은 파이 가지고 칼질 서로 시킬까봐 우려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없어요.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2000호씩,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이 2천호 예산이었는데 한번도 2천호 한 적이 없거든요. 1천호 넘는 게 불과 한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을 그렇게 하더라도 실공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야. 특히 LH공사 직원들도 늘 하는 얘기가 서울 수도권 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량을 더 할 수는 있는데 ‘너네 왜 천호밖에 안 해?’라고 하면 ‘서울지역이 물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H공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전에 제도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침 개정을 할 때 일단 입주자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은 타

임대주택 이외에 없으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운전이 안 돼요, 실제로 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대문구 아직도 그렇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장 받으러 다니거든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관계고 막 수십년동안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동사무소 직원도 알거든요. ‘그분 혼자 사시는데 안 돼서 어떡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선정위에서 논의를 해서 이 사람 혼자 사는 것 맞으니 그 부인의 동의서 받지 않고 입주시키자 이렇게 적어도. 많진 않지만 지역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형용화되어 있는 입주자선정위원회를 없애서 제도 시행에 걸림돌 되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자 신청서 보면 군대 갔다 왔냐, 술 먹냐, 이런 것들 다 물어봐요. 어디에도 없는 신청서류인 거죠. 굉장히 낙인감 유발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당연히 균등하게 표준화시켜서 없애자는 것이고. 선정평가표 95점 넘어야 되는데, 맞나요 95점? (지우형 : 네 맞습니다.) 총점 95점 넘어야 되는데, 60점을 그 신청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점수 줘야 되는데 동직원, 동은 아니고 구에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60점을 주냐는 얘깁죠. 이게 운영기관에서 점수받는 경우에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운영기관도 신청 통로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신청통로로 기능하기에는 우리가 점수받으면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경로설정을 하시더라고요? 실무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정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근데 구에서 점수를 60점 준다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서 이것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입주자 선정위원회 불필요하다 생각>

그리고 저는 운영기관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어떤 사람이 운영기관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직접 자치구에 신청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운영기관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받을 분들은 브로커 형태나 뭐가 됐든지 간에 조밀하게 사례관리를 받을 분들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집이 제공되는 게 필요한 분들은 행정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기본루트로 해서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지역사회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건 지역사회에서 노숙인 지원체계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결하라고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숙제로 안아야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진입했을 때 약간의 기간 정도는 노숙인 지원체계가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통합사례관리를 하든지 지역사회 주거복지센터 이런 데서 자기 과제로 안아가지 언제까지 계속 이방인 취급을 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이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향후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기본루트는 행정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기관과 행정이 모두 매입임대주택 공급처가 되어야>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사례관리자 파견에 대해

사회
서정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연스럽게 4번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다섯 번째 질문이 현재 운영기관을 통한 노숙인 복지시설 중심의 사례관리 배치에 대한 평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0개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서 사례관리자를 파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한 번의 연구가 있었고, 많은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 차원의 주거복지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각 기관에 파견하는 방식보다는 모여서 경력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저희도 사례관리자 한 명 받아가지고 운영기관 지금 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에서 공급물량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지역,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은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서대문 정도,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닌 이상은 저희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운영기관의 위치에 맞게 공급물량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외적인 지역들은 공고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사례관리자들도 활동하는 범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 있는데 갑자기 강북구라든가 거기까지 점프 뛰어서 이분들의 사례관리를 돕는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고, 그렇게 따지면 권역별로 이분들이 하나의 주거에서 나와서 나눠줘야 되겠죠. 사례관리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것만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지역은 되게 노말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건사고 없이 진행이 되는 반면에 우리 지우형 선생님처럼 많은 관리를 하다 보면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던 사례관리자들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어떤 분들은 경험이 많고, 적고. 서로가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피부로 와 닿지도 않고, 그게 다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 저는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의 체계화 필요>



노숙인 주거 정책 발전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우리 전달체계의 변화에 대해

사회
서정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아니면 좀더 보완 의견이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99년 자활의집부터 시작해서 노숙인의 자립은 주거지원과 밀접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거지원 정책들이 발전되어 왔고 또 주거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사례관리 지원들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거 정책의 발전과 또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이라고 하는 주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어떻게 좀 변화돼야 되는지, 또는 우리 전달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형

사례관리자 업무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매입임대 업무를 제가 2014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예전 방식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 사례관리 방식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운영기관이 얼마만큼 감수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좀 생각하고 봤을 때, 저는 만약 운영기관이 덜어낼 수 있다, 아니면 사례관리자가 어떤 부분에서 덜어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원방식이 노숙인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비거주형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제한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를 통하지 않으면 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프로도 안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주신청부터 입주공급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포라는 게 실질적으로 입주민들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서도 지역사회서비스를 이분들이 이용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것들을 사례관리자가 뭐 동주민센터 같이 방문을 하고요, 찾동을 찾아가시고 같이 사례관리 연구를 하고, 구청을 통해서 사례관리 상담을 하고, 다시 연계를 하고, 이렇다 보면 사례관리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거를 입주민들이 아시게끔 되더라고요,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하루에 전화를 받는 양이 한 40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지역사회 연계상담을 하루에 한 4건, 5건, 뭐 심하게는 주거시설 상담까지 하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재작년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횟수가 현재 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치모임회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치모임에서 그 지역의 서비스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경험담을 또 거기서 얘기하게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가 의외로 잘 돼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의외로 잘 되고요. 단,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신 관련이예요. 정신 관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지역서비스가 개인의 의사존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실질적 신고를 해서 어떤 대응을 하려 해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받고 뭐 주거 관련 긴급지원, 여러 가지들은 예전에 다 저를 통해서 했지만 현재 저한테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지역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 역할이 이런 데서 많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자 열 분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게 아마 그냥 '저거까지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초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주민센터 갔고요. 복지센터 갔고요. 종합센터 갔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초석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례관리자가 꼭 필요

했고 또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을 때도 사례관리자들이 또 그만큼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운영기관이 감당해야 될 그 업무들 또한 사례관리자 분들이 일부분 또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례관리자의 영역은 분명히 늘어날 것 같고요.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역할 수행 경험>

지자체나 정부, 지역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신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더 친밀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서비스가 됐으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매입임대 입주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신 알코올 관련 문제 있는 분들이 한 20프로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그래도 진단 안 받으려고 그래요. 될 하려고 해도 사례관리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찰 동원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정신건강센터 이용해야 되는데 이분들 또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적정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고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요런 책임은 조금 더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매입임대 아니면 어떤 주거복지에서도 많은 영역들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 노력해야>

**사회
서정화**

네, 일단 뭐 사례관리자의 확대 필요성과 또 정신 관련 영역과 이쪽에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역도 지자체 과제를 정리해 주셨구요. 한두 분 정도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희

저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중에서 권한 위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계속 이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부터 사업관리 서비스까지는 지자체가 훨씬 자기의 지자체 안에서 어떤 수요가 필요하고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게 정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한다고 해도 이게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서울역을 놓고만 본다면 그쪽이 지원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주택들이 지어지고 선정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주거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매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아주 정말 난생 처음 가보는 곳에서 다시 살아야 되고, 이런 정책이 참. 물론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면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러한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어떻게 점검할 건지, 어떻게 잘 돌아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동현

지자체 두 개하고 중앙정부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지우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정신건강 측에서도 사실은 중독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사례관리에 있어서 어려운데 사실은 통합중독센터가 아마 4개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의 확대, 이

러한 시스템의 확대를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로는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은 임대주택 공급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지방공사 공급을 많이 하는 수밖에 현실적인 해법이 안 될 것 같은데, SH가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공급한 게 18년도에 20개 정도밖에, 21개가 20개가 그래요, 너무 작아요. 지원주택이라든지 그룹홈 이렇게 준 것만. 근데 이런 정도까지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개인신청해서 갈 수 있는 것 정도는 20개, 21개밖에 안 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뭐 유니버설 디자인은 커녕 엘리베이터 없는 집이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더 취약한 계층은 배제되는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필요>

또 하나 개발사업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쪽방들이 싹싹 사라지고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들면 쪽방 한 50개 날아가고 이런 식인데 수익률은 게스트하우스가 한 두 배 정도, 공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두 배 정도가 높게 나온다는 보고서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윤추구하는 개인 입장에서, 민간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2025 도시 기본,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양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원래 양동 쪽방, 남대문 쪽방촌이 다 공원이었어요. 근데 쪽방 있는 데를 소위 존치 역할을 하는 소단위 정비구역과 소단위 정비지구와 소단위 관리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소단위 관리지구로 편입되었는데 이게 그냥 집주인이 재건축하는 그 절차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날개를 달아 준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사전 정비작업하려고 이미 사람을 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길 건너편에 있는 두 동을 한꺼번에 사서 엮그제는 작업하다가 한번 싸움이 났었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사실 소단위 구역으로 묶은 이유는 쪽방과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근데 요게 소단위 정비로 바뀜으로써 들어오는 게 1, 2종 근생하고, 노유자시설하고, 도심형 숙박시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안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주택 의무라든지 이런 게 아무 상관없는 거죠. 공원 만들어서 숲터가 없어지나 게스트하우스 들어와서 없어지나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식은 훌륭했으나 결과는 너무 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서울시가 왜 이렇게밖에 도시계획을 심의할 수 없는가, 너무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슬럼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나라 쪽방이라는 것이 가난한 이들 잠자리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방정부가 도장을 찍어주고 있으니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건 대구도 그렇고 지금 다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제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쪽방촌 개발로 저렴주거 사라져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임시주거 하는 지방이 7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채찍을 들 것인가. 혹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일곱 개의 어떤 당근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주거 지원하는 지방공사 어쨌든 잘하나 못하나 SH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천은 왜 안 하는데,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럼 인천공항 노숙자 는다면 종합지원센터는 왜 안 만드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칼자루를 아예 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중앙정부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이수범

노숙인 분들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지원주택이 또 핫하긴 하지만 사실 그 임대주택 사업의 공급물량이 충분했다, 지속적으로 충분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숙인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정체돼 있어서 지금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주거,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지원주택에 대해 예를 들어서 몇 년에 몇 호씩 한다는, 이런 물량적인 수량적인 목표라도 제시하면 적어도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에 대한 실태, 의사 파악을 통해서 그만큼의 물량이 필요하다면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몇 호씩 공급하겠다는 이런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원주택 공급목표와 계획 명확히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민간 영역에서 시설들에서 사례관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지역 행정체계든 또는 보건 체계든 어느 쪽에서도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그게 뭐 통합사례관리 형태든 뭔가 거버넌스의 형태든 그걸 제도화해서 안정되고, 상식의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좀 풀어갈 수 있게 공공에서 주도해주면 좋겠다고, 예, 민간에서 개별 시설이 맨날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사실 이게 보면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하고 관련된 건데요. 의외로 노숙인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병원이든지 어디든. 왜냐하면 노숙인들 평소에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지역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하나 제안하자 하면, 공공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들어오면 직무교육도 있고 뭐 과정별로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 노숙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노숙인복지서비스 안내에 관련된 교육을 의무화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공공에서 이해하기가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게 좀 생기면 좋겠다 생각이구요. 더 나아가면 연간목표가 정해지면 사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주택에 올해 100호를 하는데 한 뭐 5명당 사례관리자가 한 명이면 적어도 100호를 그해에 목표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례관리자 뭐 이십 명, 이십오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서정화 : 뽑아서 교육시키고..) 그게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결핵환자 요양쉼터 미소꿈터 할 때 3개월 전에 뽑았거든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시간도 짧았고, 고생도 줄었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일 벌려놓고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부터 그 목표 대비해서 뽑아서 교육시켜서 배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좀 앞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들의 노숙인 이해를 위한 수업 필요>

사회 서정화

네, 알겠습니다. 세시 일본입니다. 혹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손경훈

저는 제가 경력도 얼마 없고 이해도 조금 짧아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저런 분들을 왜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알고 있고 이분들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게 그냥 마음의 상처가 더 크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깨닫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제도적으로 요런 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획해 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스럽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파이팅했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서정화

네,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20년 사업을 정리하면서 오늘 포커스그룹으로 연구진들이 고민했던 것들의 추가적인 고민들, 현장의 고민들을 담는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부터 제도상의 문제까지 폭넓게 이야기해 주셔서 내용을 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주제별 현장 실천가들의 토론을 협회 차원에서 정기화한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사업을 같이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협회 이름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기점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5장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노숙인 정책과 사업



5장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노숙인 정책과 사업

1 프랑스 - 홀리스와 연대하는 상인과 주민의 지역 네트워크 르 까리옹 Le Carillon

프랑스의 르 까리옹(Le Carillon)은 홀리스들이 거리에서 배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인 네트워크다. 까리옹 네트워크에 가입한 상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와 홀리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 모든 사람들은 와이파이, 물 한 병이나 빵 한 조각, 미판매 식품, 신문이나 잡지, 화장실, 응급 처치 키트, 핸드폰 충전, 전화사용, 응급상황에서의 도움 요청, 음식 데우기, 무료 우편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상점의 고객은 뜨거운 음료, 식사, 과자, 안경, 미용서비스 등을 미리 구입하여 상점에 맡기고 홀리스들이 찾아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홀리스는 까리옹의 대표 중 하나이고, 자원 봉사를 하면서 다른 홀리스에게 까리옹을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과 지역주민 등과의 유대를 장려하기 위해 연대 행사나 활동을 조직한다. 요리, 정원 가꾸기, 피크닉 등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벤트로 개최된다. 까리옹의 가맹점은 웹 플랫폼에서 홍보되면서 더 많은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까리옹에 가입한 상점 입구에는 까리옹의 로고와 제공되는 서비스가 픽토그램으로 현관에 부착되어 있다. 2015년에 만들어진 까리옹은 현재 프랑스 8개 도시에서 700개가 넘는 소매 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르 까리옹의 로고와 상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픽토그램>

- 참고자료 : <https://www.lecarillon.org>

2 프랑스 보르도 지역 - 홀리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역사의 터치스크린

비영리단체인 Solinum과 SNCF 철도공사는 프랑스 보르도의 생장 역 광장에 홀리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였다. 2018년 6월 스크린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이 없는 홀리스도 24시간 신뢰할 수 있는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터치스크린은 홀리스들이 위생, 음식 등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다는 것과 20%는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터치스크린에서 상황(여성, 남성, 커플, 동물 동반 등)에 따라 검색을 한 다음 무엇을 찾는지(재활센터, 씻거나 먹거나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간 등)를 선택하면, 구글 지도에 검색에 해당하는 장소가 나타난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3,000개가 넘는 장소 정보가 구축되어 있고, 지역 협회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주소들이 업데이트 된다.

2019년 3월에는 연대스크린(borne solidaire)으로 불리었던 터치스크린 실험이 종료되었다. 설치된 지 며칠 만에 70여 명이 이용했으며, 평균 상담시간은 5분이었다. 4개월 동안 2,460건의 검색이 기록되었고,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여성들이 이 서비스를 좋아했다. 음식, 위생 및 복지, 숙박 서비스에 가장 수요가 많았다. 현재 터치스크린은 인터페이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맹자를 위한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단말기의 높이를 낮춰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키우는 것도 고려 중이다. 아랍어와 아프가니스탄 언어 중 하나인 dari로 콘텐츠를 번역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 중이다. 실험은 끝났지만 연대 스크린은 올해도 생장 역에 여전히 남아 있고,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다.



<http://www.solinum.org/fin-de-lexperimentation-de-la-borne-solidaire-en-gare-de-bordeaux->

saint-jean/

- 참고자료

<https://www.20minutes.fr/bordeaux/2285459-20180608-bordeaux-borne-orienter-sdf-vers-acteurs-solidaires-installee-gare>

<http://www.solinum.org/fin-de-lexperimentation-de-la-borne-solidaire-en-gare-de-bordeaux-saint-jean/>

https://www.lepoint.fr/high-tech-internet/a-bordeaux-une-borne-tactile-pour-renseigner-et-orienter-les-sans-abri-20-05-2018-2219873_47.php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une-borne-numerique-pour-aider-les-sans-abris-1527182331>

<http://www.aqui.fr/societes/une-borne-solidaire-pour-les-sans-abris-a-la-gare-de-bordeaux,17222.html>

<https://soliguide.fr/apropos>

3 프랑스 파리 - 홈리스가 운영하는 집 보관소



<http://www.lejardindesentreprenants.org/2019/06/19/associer-les-personnes-aux-decisions-les-concernant-meme-les-sdf/>

파리 시는 홈리스들이 짐으로 인해 낙인찍히거나 이동성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짐 보관소를 설치하고, Mains Libres 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홈리스들은 매일 아침(7시~9시)과 저녁(20시~22시)에 짐을 맡길 수 있다. 홈리스들은 보관소가 설치된 Les Halles 지구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자신의 이동성을 찾기 위해 보관소에 소지품을 예치해야 하며, 절차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각 사용자는 라커 번호, 짐 보관소의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입되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받는다. 이용 기간은 제한이 없고, 사용 종료 후에는 반납 전표를 작성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는 안 된다. 한 번 이용한 사람은 다시 이용할 때 우선순위가 되고, 보관소에 자리가 없을 때 새로 이용하는 사람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다. 짐 보관소에서는 휴대폰 충전, 인터넷 상담과 같은 보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짐 보관소는 일주일에 1인당 2시간을 기준으로 7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홈리스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짐 보관소에서의 알코올, 마약, 폭력 예방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에도 참여한다.

Mains Libres 협회는 매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짐 보관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홈리스와의 사회적 연대를 개발하고자 한다.

짐 보관 서비스로 인해 홈리스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덜 받게 되어 도시 내에서의 이동이 한결 자유로워졌고, 일자리나 머물 곳을 찾는 활동을 하기도 쉬워졌으며,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으로 인해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었다.

- 참고자료

<http://www.mainslibres.asso.fr/wordpress/>

<http://w35-associations.apps.paris.fr/searchasso/jsp/site/Portal.jsp?page=searchasso&id=52814>

4

프랑스 파리 - 홈리스가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도시 명소 안내



<http://www.alternative-urbaine.com/nos-balades/>

Alternative Urbaine은 취약계층의 고용과 문화·관광을 결합한 혁신적 형태의 사회적·직업적 연대이다. 도시 산책로의 가이드로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교육 및 재활 자원으로 사용한다. 협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노숙인, 장기 실직자, 전 출소자 등)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의 알려지지 않은 도시 산책을 제안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구역을 재발견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찰병(éclaireurs)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점진적으로 직장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 정찰병 등은 지역의 숨은 곳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도시 산책의 내용을 함께 만들고, 도보 여행 경로를 구성한다. 산책은 무료이며 모든 사람들이 산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찰병들은 각 방문자가 제공하는 팁 외에도 시간 당 약 10유로의 고정 급여를 받는다. 예비 정찰병들은 약 3개월의 가이드 교육을 이수하면 '도시정찰병'이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해야 한다. 방문에는 집단 및 개별 워크숍, 연극, 박물관 및 영화 관람이 포함된다. 본 사업의 목표는 전문 관광 가이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 참고자료

<http://www.alternative-urbaine.com/>

<https://www.la-croix.com/Solidarite/Actualite/Vincent-chomeur-et-guide-touristique-a-Paris-2014-07-31-1186191>

5

핀란드의 홈리스 지원 정책 - 국가행동계획

핀란드는 유럽에서 홈리스가 감소하는 유일한 나라다. 1980년대부터 국가, 자원봉사자, 자치단체, NGO는 홈리스 감소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00년대에 국가차원에서 홈리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가장 취약한 장기 홈리스들에 대해 다루었다. 예를 들어, 해당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단체와 지방 정부는 홈리스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제공하고 그들을 겨냥한 서비스를 개혁했다. 참여 기관과 정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홈리스들의 삶을 인간답게 만든다.
- 국가의 확고한 지침은 홈리스 감소를 공동의 목표로 전환시킨다.

이 과정은 2008년에 시작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은 사회가 제공하는 많은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홈리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전환이 필요했다. 즉, 모든 시스템은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에 근거하여 기획되었고, 이는 주거를 갖는 것이 인간의 권리인 동시에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작동한다.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은 홈리스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외에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주거우선(Housing First) 모델 덕분에 탐페레(Tampere)의 헤르말레(Härmälä)에서는 지원주택단지 모델 덕분에 1년 만에 거의 25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절감했다.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사람이 홈리스일 때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연간 9,600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장기 홈리스 한 명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면 연간 약 15,000유로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87년 이후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얻었다는 것이다.

- 운영구조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는 홈리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법무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사회복지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고용경제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내무부와 긴밀히 협력한다.

- 정책목표

홈리스 지원 정책의 방향은 주거우선(housing first) 모델로 2008년 홈리스 국가행동계획³⁹⁾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국가행동계획은 세 시기로 나누어 수행되었으며, 첫 번째 시기는 2008년에서 2011년, 두 번째 시기는 2012년부터 2015년, 마지막 시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다.

■ 국가행동계획

39) Finnish national homelessness strategy

▶ 참고자료 : The action plan for preventing homelessness in finland 2016-2019: the culmination of an integrated strategy to end homelessness? (Nicolas Pleace, 2017)

1) 국가행동계획 2008-2011

- 10개의 도시에 1,250개의 주택 및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 제공
- 응급대피소(emergency shelter)와 공동주택(communal services)를 영구임대지원주택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국가행동계획 2012-2015

- 홈리스 예방에 집중
- 숨겨진 홈리스(hidden homeless)의 발견
- 헬싱키에서 280건의 퇴거조치가 예방됨

■ 국가행동계획 2016-2019

▶ 참고자료: Action Plan for Preventing Homelessness in Finland 2016-2019(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16)

(1) 주요 목표 : 홈리스 예방 강화와 홈리스 재유입 방지를 통한 홈리스 감소

가. 홈리스 예방 방안

① 합리적 가격대의 주택 확대 및 홈리스를 위한 주택의 다양화 :

- 2019년까지 최소 2,500개의 새로운 주택을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홈리스나 집단에게 배정한다.
- 헬싱키 수도권에 약 1,700개의 주택이 제공되며, 헬싱키 시에만 750주택을 제공한다.
- 새로운 주택의 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청년, 학생, 거주허가를 받은 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② 도시 홈리스 예방 전략 :

- 도시 홈리스 예방 전략에는 교도소 수감 대상자였던 홈리스, 거주 허가를 받은 난민을 포괄한다.

③ 거주허가를 받은 난민과 재정착난민(quota refugee⁴⁰)의 사회 통합 촉진 :

- 난민들의 주거욕구와 주택의 가용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난민 수용 시 주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④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주택에서의 퇴거 가능성을 예방하고, 신용 등급을 상실한 사람에게 주거 접근성을 높임 :

- 청년을 위한 재정 및 부채 상담이 Ohjaamo 기관에서 일주일에 2번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국가 핵심 교과 과정의 일부로 주택 및 재정과 관련된 학습 자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액 대출 모델 개발: 저소득 가구가 부채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대출(social lending)을 보완한다.

⑤ 무신용등급자를 위한 가계보험(household insurance)⁴¹ 도입

⑥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 안내 강화 :

- Ohjaamo와 같은 대상자 직접 접촉 기관에서 청년, 이민자,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안내를 강화한다.
- 핀란드 청년 주택 조합(NAL: Finnish Youth Housing Association), 청년주택 관련 기관, Ohjaamo와 같은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 역량, 전문성을 강화한다.

⑦ 일자리 지원의 주거사회적 접근 강화 :

-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관리에 대한 법률의 개혁, 주거복지 관점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Act)을 시행한다.
- 사회복지보건부, 교육문화부, 환경부는 KELA⁴²에 생성된 자원이 재활에 쓰이도록 한다. 주거 강화, 일상생활기술(everyday skills)을 보강하여 홈리스를 방지한다.
- 사회복지, 보건, 청소년복지 교육에 있어서 주거복지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⑧ 위험집단(risk group)은 시설에서 독립주택으로 전환이 보장됨. :

- 필요한 경우, 지방당국은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임명하며 사회복지사는 이행(transition)의 성공과 서비스 패키지의 통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방당국과 RAY(핀란드 슬롯머신 협회)는 사회적 관계(환경, 이웃과의 중재, 임대인, 가족관계)를 지원한다.
- 400채가 주로 헬싱키 대도시의 교도소 석방 홈리스에게 할당된다. 형사 처벌기구 (Criminal Sanctions Agency)는 지방당국, 조직 및 이해 집단과 협력하여 수감자가 추후 홈리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을 별도로 고용한다.

나. 홈리스 재유입 방지 방안

① 금주주택 서비스는 물론, 음주가 가능한 주거 서비스의 포괄적 이용이 보장됨. :

-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원칙에 따르면, 협약된 도시들은 헬싱키 대도시권 외부를 포함해 전국에

40) refugees arriving through the refugee resettlement process.

41) 주택보험, 세입자 보험, 임대보험 등을 포괄함.

42) 사회보험공단(Finland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서 음주를 허용하는 주거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헬싱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금주주택 서비스를 보장한다.

② 홈리스였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지원 :

- 장기 홈리스를 위한 단순작업과 의미 있는 일상 활동을 장려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는 아니지만 홈리스였던 사람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구직 능력을 향상시킨다.

③ '작은집(small homes)' 프로젝트가 가장 어려운 집단을 위한 대안으로 제공됨. :

- '작은집(pietettuvat)' 실험은 현재 주거형태로 성공하지 못했던 대상자를 위해 공동주택 형식으로 5~10개의 작은 별개 주택을 건설했다. 해당 주거모델에 관심이 있는 도시에서 시행되었다. 동시에 '작은집'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지원 서비스도 설계되었다.

④ 긴급 주거와 청년 대상자 연계를 위한 '야간 쉼터'는 헬싱키 수도권에 설계됨. :

- 청년 홈리스가 밤새 머무르고 헬싱키 대도시 지역에서의 서비스 연계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새로운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 주거 및 주거 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과 긴급 청년 쉼터 및 관련 기관들이 함께 청년 야간 쉼터를 개소했다. 해당 쉼터는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 운영 모델 중 하나를 차용할 예정이다.

(2) 미국의 패쓰웨이 주거 우선(Pathways Housing First) 모델과의 차별점

핀란드의 주거우선(Housing First) 모델은 미국의 모델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패쓰웨이 주거 우선(Pathways Housing First) 모델과는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 핀란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집세를 낸다. 여느 핀란드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주택 수당과 기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거주자 소득의 30%가 자동적으로 임대료로 지불되고, 주거지를 제공한 임대인이나 조직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책임을 진다.
- 미국과는 달리 핀란드에서는 치료하기 위해 사전에 대규모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자동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사회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2) 주거 우선(Housing first) 철학

① 주거는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함

홈리스는 임시 주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주거가 영구적이고 가정의 평화가 보장될 때 건강과 사회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립적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모델은 평범한 임대아파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24시간 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이 가장 좋은 모델일 수 있다.

② 선택존중

당사자는 치료와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독물을 완전히 끊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중독물의 사용과 정신과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재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거주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된다.

③ 거주자의 재활 및 권한 부여

당사자와의 상호작용은 신뢰와 공동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당사자의 여건에 따라 스스로 재활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화와 상호작용의 목적은 항상 당사자들과 함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의 권력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거주자는 일상의 가장 작은 업적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④ 공동체 및 사회로의 통합

주거우선(Housing First) 모델에서 거주자는 그들의 거처가 집(home)처럼 느껴지도록 도움을 받는다. 집은 거주자가 자신의 삶을 조직할 수 있고, 자신의 삶과 환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를 들어, 주거지를 갖는 것은 영속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더 넓은 사회에 연결되었다고 느끼도록 돕는다. 거주자에게는 그들의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와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주택단지에서는 체계적인 지역사회사업이 주민과 함께 이루어진다.

⑤ 앞서 언급한 원칙 외에도 핀란드에서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가치는 공동체 의식이다. 많은 주택 단지는 생활 공동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구성원으로서의 강한 의식을 통해 개인의 참여와 권한을 부여한다.

(3) 쉼터의 축소

주거 우선(Housing First)이 홈리스들의 삶을 향상시킨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쉼터를 더 영구적이고 인간적인 생활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주거불안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이용할 수 있는 몇 개의 긴급 대피소(쉼터)가 있지만, 그 안에서 매일 밤을 보내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헬싱키에는 2008년에 호스텔과 쉼터에 600개의 침대가 있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응급용 침대가 52개 있는 서비스 센터가 있다.

구분	지원주택	임대주택	호스텔 및 쉼터
1985	127	65	2,121
2008	552	2,033	558
2016	1,309	2,433	52

- 주: 헬싱키 홈리스 주거 옵션

(4) 주거 우선(Housing First) 모델의 참여자

주거 우선(Housing First) 모델은 협동 사업으로, 핀란드에서 주택정책이 구성되는 방식에도 여러 행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택은 도시, 민간 기업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 의해 지어지고 있다.

장기 홈리스 감소를 위한 비용 검토 측면에서도 부문별 경계선을 넘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 증가는 종종 다른 분야에서의 저축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장기 홈리스를 위한 안정적인 집을 짓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길에서 생활하는 것이 사회에는 아무런 비용을 부여하지 않지만, 거리홈리스는 대개 경찰이나 병원과 같은 값비싼 응급 서비스에 부담을 준다.

(5) 핀란드의 저렴한 주택 건설 지원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ARA)는 홈리스 정책 시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RA는 주택과 건설과 관련된 보조금, 보증금을 수여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국가보증 및 이자보조금
- 특별한 욕구가 있는 집단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보조금(예: 홈리스, 장애인, 학생). 보조금은 승인된 투자비용의 10-50%에 달함
- 주택 자문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비용의 최대 35%)

(6) Floating Support 서비스 LIITU

LIITU는 Pori 시가 개발한 서비스 모델이다. LIITU에서는 정신과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2명이 이동 서비스 팀(mobile service team)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팀은 흩어진 주택(Scattered housing)에 있는 주민들을 방문한다. LIITU 팀은 고객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LIITU는 아파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개인 위생과 영양을 돌보는 등 고객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LIITU는 어려운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최근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별로 floating support를 주선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7) neighborhood work

지원되는 주택 단위의 연락처를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는 주택별 전화번호의 비상상황용 전화번호일 수 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은 그들이 연락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한다. 전화와 문의로 신속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협회와 주거사업자 이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 네트워크는 주택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한 이웃은 학교와 통학버스 노선 근처에 지원 주택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대해 지원 주택의 주민들은 차례로 안전조끼를 입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순찰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고 모두가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하도록 돕는다.

또 다른 지원 지원주택 근처에 있는 공원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 공원은 지원주택 주민들의 술자리가 되었고 사용된 약물 주사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지원주택 세입자들은 도시와 공원을 정비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지원주택 주민들은 일주일에 두 번 공원을 청소하고 유지한다.

부 록

1. 내 기억 속의 노숙인 지원 활동- 노숙인시설 실무자의 이야기
2. 서울시 노숙인시설 현황

부록1

“내 기억 속의 노숙인 지원 활동” - 노숙인시설 실무자의 이야기

내일의집 정태호 원장 - 노숙인 복지 21년차

지난 20년은?

노숙인시설이 자리잡기까지 20세 청년으로 받돋음할 수 있어 축하드립니다.

거리의 남성노숙인 동사방지에만 급급해 있던 때, 한곳만 모델로 시작하자고 건의하여 1998년 9월 13일 최초의 여성노숙인 쉼터 내일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등포역, 서울역, 서소문공원, 청량리역, 석촌역 까지 아웃리치를 하고 쉼터에 도착하면 새벽 2~3시, 하루 2, 3시간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노숙인도 자활쉼터부터 회복쉼터까지 다양하게 분류되어 남성노숙인 쉼터와 또다른 특성을 인정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성 쉼터는 엄마와 아이들까지 책임지기에 보육, 장학금 연계 등 엄마와 자녀들의 문제에 언제든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오래 시달려 무기력에 빠진 여성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주거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성노숙인 모자쉼터에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심신쇠약이나 알코올중독,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엄마가 입원하게 되면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가족체계가 없는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살 그룹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신병을 인정하지 않는 여성들은 병원이나 쉼터에 연계하기가 막연합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 도움을 받을 주거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숙인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종사자 추가배치가 필요합니다. 돌봄을 위해 숙직근무자가 꼭 필요한 현실에서 실무자가 돌아가면서 숙직하고 연장근무를 하기에 너무 피곤해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특별한 기억은?

1998년, 쉼터 실무자들도 서울역, 을지로 등지로 아웃리치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서울역에서 어떤 여성이 저희 쉼터에 입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윗머리와 아랫머리가 없이 머리를 중간에 잡아매서 너무 무서워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쉼터는 황금방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방석에 앉혀서 작은 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헌데 무서워보이던 그분이 너무나 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착한 일을 하도 많이 해 독점적으로 상을 받아가서는 이 황금방석 상을 없애버렸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처음에 들어와서는 큰 뷔페 접시에 밥을 가득 담아 와서 다섯손가락으로 밥을 먹던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시간에 밥이 나온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되는 때가 왔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오기철 팀장 - 노숙인 복지 20년차

지난 20년은?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출발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노숙인 정책의 발전이 없었을 것이며, ‘관’의 지원이 없었다면 안정적인 노숙인 사업은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체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도 노숙인 복지 사업의 큰 의미입니다. 건강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것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의 서울시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일자리와 주거정책을 펼친 것이 제가 본 마지막 의미입니다.

앞으로 20년은?

우리에게도 故 제리 스테이너가 제시한 ‘긍정적 이탈’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노숙을 벗어나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앞으로의 노숙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연구의 방향이 사업의 내용이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노숙인’, ‘사람’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자립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직 노숙인 복지 서비스 수혜자인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노숙인의 숫자, 프로그램 참여자 수, 예산 대비 성과 등의 숫자들도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겠지만, 노숙의 삶에서 벗어난 많은 분들의 ‘긍정적 이탈’을 연구해서 아직은(Not Yet) 지역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분들에게 연구 결과를 안내해 드려야 하는 것이 서울시 노숙인 복지의 정책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년은?

노숙인 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귀이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취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활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활의 기본조건은 '취업'에서 '안정된 주거'로 변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시주거, 지원주택, 희망원룸,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꾸준히 확대 제공하여 탈노숙의 효과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0년은?

노숙인 복지 각 분야의 운영과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정성 확보가 선행된다면 서울시 노숙인 복지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돌봄서비스는 개별적이어야 하고, 당사자의 욕구와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침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대체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데,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어렵습니다. 현실에 맞는 인력배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은?

응급보호사업에서 일자리, 주거지원, 프로그램사업을 민간과 협력하여 발전시켜왔습니다. 또 노숙인 복지법을 만들면서 거리노숙인 전수조사, 다양한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도 민간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노숙인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리, 일시보호, 종합지원센터, 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경로를 통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노숙인시설의 사업 목적과 실적 등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시설유형을 전문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사회복지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전문영역의 결합과 협력을 통해 만성, 취약계층 거리생활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억은?

거리노숙을 하던 분들이 안정적인 주택에 입주해 사는 모습은 감개무량합니다. 햇살 실무자를 만날 때면 90도로 과하게 인사하는 김규민(가명) 님. 서울역 광장에서 10년간 노숙과 음주를 하던 2009년 12월쯤 쪽방·비닐하우스 매입임대주택이 나와서 함께 방문해 집을 둘러보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서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고, “다시는 거리에 나가 앉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이주영(가명) 님은 사업실패와 술 문제로 가족과 헤어져 오랜 기간 쪽방에서 지내다가 햇살보금자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분입니다. 주택에 입주한 후 처음 맞는 새해 명절에 헤어진 딸과 사위, 손자가 집을 찾아 함께 식사했다며 ‘가족과 다시 만나는 이날을 꿈꾸며, 술도 끊고 열심히 살아왔다, 살 집을 마련해준 시설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며 잘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20년은?

앞으로도 기존 사업 준비를 통해 좀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종사자 전문가 활동이 필요합니다. 거리 노숙인의 60% 이상이 신용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 사무소 등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를 전문가로 육성해야 합니다. 신용회복 전문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노숙인 대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쉼터에 입소한 사람은 수 미터 밖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쉼터 자체도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지고 그 일부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쉼터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시설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속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은?

공적인 집계에서는 전체 노숙인수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거리노숙인들의 만성화 요인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고, 연계처가 태부족한 상황은 아직도 개선되고 않고 있으며, 경찰 및 지자체를 통해 지역에서 이탈하여 노숙인시설로 연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콜을 통해 지역경찰과 지자체에서 희망지원센터로 연계된 케이스가 연간 2천여명에 달하는데, 치매환자, 중증질환자, 수급권자로서 주거를 상실하거나 상실할 위기에 있는 분들이 빈번히 연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거리노숙인 만성화의 심화는 거리노숙인 보호체계와 의료적 연계과정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병원 퇴원 후 연계과정에서 의료적 단절 문제, 정신질환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특성화된 보호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거리노숙인의 생활시설 거부현상은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만성노숙인의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 문제에 초점을 둔 지원주택 사업이 실행되고 있지만, 지역 내 주거생활을 유지할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사례관리체계가 지역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활동이나 경험이 일천하며, 지역의 노숙인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한 거리 만성노숙인이 지원주택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숙인의 욕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셰어하우스(Share house) 같은, 전혀 다른 연계 체계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노숙인 자활시설의 비중은 높지만, 자립·자활을 하지 못한 노숙인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는 노숙인들을 위해 노인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특별한 기억은?

48억의 빚으로 고통받던 김선생님이 기억납니다. 2009년 서울시와 가정법률상담소의 신용회복서비스를 통하여 개인파산과 면책처리가 되어 기뻐했던 김선생님, 그분의 기뻐하는 모습과 신용회복 이후 열심히 생활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난 20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응급구호로 시작, 제도권 복지의 틈을 메우는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주거 우선 지원 정책의 지속,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주거를 지원받은 노숙인은 대부분 다시 노숙인 쉼터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폐를 끼치는 문제적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주민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지역 활동을 병행하여 시설 퇴소 후 주거에서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폐쇄적이거나 시설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중독 재발이나 정신질환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쉼터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서 혼자 거주가 어려울 때 안정적인 공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응급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차단하고, 거주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노숙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회복을 위한 '일' 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일'을 회복의 매개로 생각하여 근로 형태, 근로 내용을 관계 맺기, 희망 찾기,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구조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억은?

우선 “장도리사업단”.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피는 사업입니다.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은 급성기를 제외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력이 있기에 자격시험이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원,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원을 넘어, 병원 의무보조원으로 취업한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목공사업단”입니다. 장도리사업단에서 목공동호회로 시작하여 현재 4명이 근로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목공방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공간을 확보하였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와 담당자 인건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일자리맞기 8시간 근로자 2명을 지원받아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숙인들의 사회적 가치 지향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영화 “위 캔 두 댓”의 실제 모델인 이탈리아 논첼로사회적협동조합을 탐방하여 40년간의 정신장애인이 주축이 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경험을 배운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십자가쉼터 안치영 원장 - 노숙인 복지 11년차

지난 20년은?

20년이란 시간을 처음부터 해오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의 반 정도를 함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시작했던 시작점에서부터 지금과 비교해도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서울시 노숙인 정책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20년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통 보조금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도전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할 리 없다는 것은 알지만, 반대로 그런 사업 기회가 없다면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부록2 | 서울시노숙인시설 현황

시설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원시설 현황임.

시설현황 목록

1. 종합지원센터	1.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3. 디딤센터 4. 만나샘 5. 용달샘드롭인센터 6. 햇살보금자리
3. 자활시설	7. 가나안쉼터 8. 강동희망의집 9. 광야홀리스센터 10. 구세군가재울쉼터 11. 구세군서대문사랑방 12.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13. 길가온혜명 14. 내일의집 15. 대한성공회살림터 16. 두레사랑의쉼터 17. 수송보현의집 18. 시립 양평쉼터 19. 시립 영등포보현의집 20.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21. 소중한사람들 22. 아침을여는집 23. 애원희망홀 24. 열린여성센터 25. 천애원희망의집 26. 청담광명의집 27. 화엄동산 28. 희망나무 29. 흰돌희
4. 재활시설	30. 늘푸른자활의집 31.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32. 십자가쉼터 33. 아가페의집
5. 요양시설	34. 다일작은천국 35. 시립 여성보호센터 36. 시립 은평의마을
6. 쪽방상담소	37. 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38.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39. 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40.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41. 시립 창신동쪽방상담소
7. 무료급식소	42. 시립 따스한채움터
8. 협회	43.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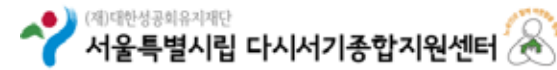


표 어	홀리스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한다
설 립 목 적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그들의 자립 및 자활에 기여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주 요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9.21.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개소 ▶ 2002.04.~현재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개소 및 운영 ▶ 2005.03.~현재 -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Drop-in-center) 운영 ▶ 2005.09.~현재 -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 시행 ▶ 2006.01.~현재 - 노숙인 수급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서울시, 공동모금회) ▶ 2006.01.~현재 - 단신자매입대주택사업 운영(서울시, 국토해양부) ▶ 2007.04.~현재 - 고용노동부 취업민간위탁사업 '새희망고용지원센터'운영 ▶ 2011.11.~현재 - 서울역 현장 '응급대피소' 신규 개소 및 운영 ▶ 2012.04.~현재 - 민관협력사업(서울시+코레일+다시서기) 노숙인 청소사업단 '희망의친구들' 운영 ▶ 2012.11.~현재 - 노숙인 24시간 365일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 운영 ▶ 2012.12.~현재 -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노숙인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팀 운영 ▶ 2013.12. - 노숙인자전거재활용 사업단 '두바퀴희망자전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 2014.01.~현재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명칭 변경 (상담보호센터->종합지원센터) ▶ 2015.01.~현재 -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서울역 응급대피소 內) ▶ 2016.01.28. - 노숙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공간 길' 개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37 2,3층) ▶ 2017.01.20.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리모델링 확장 개소 및 운영 ▶ 2018.09.06.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워크숍 개최'거리에서 희망으로 윈스탑, 논스탑' ▶ 2018.10.11.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다시STAND! 다시START!' ▶ 2019.01.01. -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삼성전자 '나눔과꿈' 우수 지원사업 [노숙인수전사교육사업] ▶ 2019.07.01. - 중앙자활센터-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희망포인트] 시범사업
시 설 장	 

· 시설 유형: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주요사업

1.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 일일 약 350여명 일시보호시설 이용. 주간 200명/야간 150명(야간잠자리)
- 일일 170여명 저녁 무료급식 진행(동절기 200명)
- 시설입소 및 수급, 생활상담 / 주민등록 복원 및 무료사진촬영
- 특별자활근로, 임시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지원 사업운영

2. 다시서기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 일일 약100 ~ 150여명 휴게실 및 서비스이용
- 시설입소 상담, 응급보호, 아웃리치 활동
- 응급쪽방지원, 코레일청소사업단 운영
-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질환 전문상담 (정신건강팀 운영)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서울역응급대피소, 우리웃방 운영

3. 서울역 무료 진료소

- 일일 약 80여명 진료, 상담, 투약
- 1차 진료를 통한 진단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객담검사, HIV진단)
- 2차 진료 필요한 경우 공공, 민간 의료서비스 연계
- 결핵 및 영양한자 쪽방지원사업 / 안경지원사업 / 치과진료사업

4. 기타 사업

- 문화카페 길 운영 사업
-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 운영 사업
- 노숙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전사 전문가 교육 사업
- 거리 위기 노숙인 회복지원 '희망포인트' 사업
- 노숙인 축구 (희망FC), 풍물 (두드림), 심리상담 (마음세우기) 프로그램 운영

주요사업

시설정보

운영법인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설장	허용구
입소정원	170명	종사자수	55명
홈페이지	http://www.homelesskr.org	전화번호	02)777-5217
E-mail	dasiseogi@daum.net	FAX번호	02)777-5394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표어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
설립목적	시설입소, 주거, 고용, 공적부조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지원을 통한 거리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 11. - 구세군드롭인센터 개소, 주·야간 상담시작(out reach), 야간응급 잠자리, 세탁, 이미용서비스, 센터 내 무료급식 시작 2003. 01. - 전담간호사배치 의료서비스 제공 2004. 08. - 구직프로그램 운영(이력서 작성법 교육,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 노숙인 여름나기 캠프 실시 2004. 11. - 야간 특별상담 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숙인 차량지원사업 선정 2004. 12. - 아산병원 건강상담 및 진료 실시, 주민등록복원사업 시작 2005. 02. - 푸드뱅크 사업 시작, 센터 이용자 체육대회(1차~6차) 2005. 03. - 서울시 노숙인 특별자활사업 시작 2005. 06. - 한센복지협회 연계 피부과 진료 사업 시작 2005. 09. - 센터이전(서대문구 합동13번지) 드롭인센터에서 브릿지센터로 개명 노숙인과 함께하는 한가위 나누기 행사 2005. 12. - 전국 푸드뱅크와 함께하는 기탁업체 물품 나누기 행사 2006. 01. - 광역정신보건센터 연계 정신상담 및 스크리닝 시작 2006. 02. - 서울시일자리맞기사업 시작(1차~3차) 전국실직노숙자협의회와 연계하여 임시주거지원사업 시행 2008. 03. - 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새희망고용지원센터' 개소 2008. 07. - 거리 노숙인을 위한 실내 무료급식 시행 2009. 01. - 임시주거 지원사업 재선정 2009. 03. - 고려대 불자회 무료진료 시행(격월) 2010. 05. - 노숙인 자활 축구단 재창단 (제1회 노숙인 자활축구대회 우승) 2011. 07.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에 따른 거리이동 상담소 설치 및 거리상담실시 2011. 08. -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시작 2011. 11. - 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새희망고용지원센터' 최우수기관 선정 2012. 04. - 서대문보건소, 결핵협회 노숙인 결핵검진 2012. 06. -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명칭 변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사업 시작(공동모금회) 2012. 12. - 브릿지종합지원센터센터 재수탁 협약(5년), 거리 노숙인 알콜 정신상담사업 시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지원사업 선정(모닝) 2013.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협약(5년),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재선정 2014. 03. -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실시 2014. 11.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재선정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06. - 자활체육대회 축구 우승,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2016. 05.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기금사업 “취업&한마음 희망더하기”행사 개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 개최 ▶ 2016. 12.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호영관장) ▶ 2017. 05. - 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 개최 ▶ 2017. 06.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기금사업 “취업&한마음 희망더하기”행사 개최 ▶ 2017. 07. - 노숙인시설 평가 ▶ 2017. 08. - 재수탁 평가 실시 ▶ 2017. 12. - 시설 운영 재위탁 체결(2018~2022 5년간) 2018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 체결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아간 아웃리치 간호봉사 시작 ▶ 2018. 01. - 부설 희망원룸 프로그램사업 시작 ▶ 2018. 05. - 노숙인 주거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카페 테바’ 오픈 ▶ 2018. 06. -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혁신프로젝트팀 선정 전국 새 희망고용지원센터 구축자 대상 만족도 조사 1위 ▶ 2018. 07. -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이동 목욕 차량 운영 ▶ 2018. 09. -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 개최 ▶ 2018. 10. - 서울시 건강체육대회 축구단 종합 우승 한국철도공사 희망일자리사업단 업무 협약 ‘노숙인 희망일자리 사업’ 진행
시 설 사 진	
주 요 사 업	<p>• 시설 유형: 노숙인종합지원센터</p> <p>• 주요사업</p> <p>1. 거리노숙인 기초생활지원사업(일시보호시설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편의서비스제공(목욕, 세탁, 이발, 사물함 등) - 무료급식,응급 잠자리, 의료서비스 제공(무료진료, 의료보호신청)

주 요 사 업	<p>2.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상담 및 사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상담 및 사정 기능 강화) - 알코올, 정신 노숙인 위기관리 - 상담, 치료 연계 - 여름철, 겨울철 노숙인 보호사업 <p>3. 거리노숙인 자립, 자활 사업(고용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새희망고용지원센터 운영 - 지속 가능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p>4. 거리노숙인 주거 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활근로 및 일자리를 통한 주거 유지 관리 - 임시주거지 지원 및 수급 신청 - 임시주거 및 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사후관리 - 흑서기, 흑한기 응급구호방 운영(거리노숙인 일시주거보호) <p>5. 재노숙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을 통한 연대의식 강화 (축구단 운영)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복지지원 연계 																								
시 설 본 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운영법인</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구세군유지재단법인</td> </tr> <tr> <td>시설명</td> <td>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td> <td>시설장</td> <td>이 문 재</td> </tr> <tr> <td>입소정원</td> <td>400명(1일이용 인원) 64명(숙박) 150명(이용정원)</td> <td>종사자수</td> <td>18명(부속사업 일자리지원센터 포함)</td> </tr> <tr> <td>홈페이지</td> <td>dropin.or.kr</td> <td>전화번호</td> <td>02)363-9195</td> </tr> <tr> <td>E-mail</td> <td>bridge9199@naver.com</td> <td>FAX번호</td> <td>02)363-9198</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td> </tr> </table>	운영법인	구세군유지재단법인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이 문 재	입소정원	400명(1일이용 인원) 64명(숙박) 150명(이용정원)	종사자수	18명(부속사업 일자리지원센터 포함)	홈페이지	dropin.or.kr	전화번호	02)363-9195	E-mail	bridge9199@naver.com	FAX번호	02)363-9198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운영법인	구세군유지재단법인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이 문 재																						
입소정원	400명(1일이용 인원) 64명(숙박) 150명(이용정원)	종사자수	18명(부속사업 일자리지원센터 포함)																						
홈페이지	dropin.or.kr	전화번호	02)363-9195																						
E-mail	bridge9199@naver.com	FAX번호	02)363-9198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 일시보호시설



표어	<p>미션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노숙할 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일시보호하여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노숙상황의 여성들을 전문 노숙인 생활시설에 연계하거나 제도적 안전망에 진입하도록 돕는다.</p> <p>비전 -노숙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며, 세상 밖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문을 연다. -탈노숙을 위한 낮은 디딤돌을 놓는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 활동한다.</p>
설립목적	<p><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거를 잃을 위기에 있는 여성들이 노숙의 위험을 벗어나 안전과 생명을 지키도록 일정기간 보호 노숙인을 돕는 전문 생활시설에 연계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숙 탈피를 준비할 수 있는 길로 안내</p>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5.12.08. - (사)열린복지의 프로그램사업으로 현재의 디딤센터 4층에서 '겨울철 노숙인보호대책 - 여성노숙인 응급보호프로그램' 운영 ① 2016.01.01. - <디딤센터> 여성일시보호시설 운영 시작 ① 2016.01.08. -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설치신고 완료 ① 2016.01.26. - 여성노숙인 정신과 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노정균신경정신과) ① 2016.02.1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여성노숙인의 겨울나기프로그램" 운영 ① 2016.05.02. - 여성노숙인 응급보호 이불 빨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대문지역자활센터) ① 2016.07.01. - 여성노숙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시작(일문화카페) ① 2016.07.03. - 디딤센터 공동작업장과 마리몬드의 일감 교류 협약 체결((주)마리몬드) ① 2016.07.03. - 여성노숙인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두손컴퍼니) ① 2016.10.10. - 서대문구 노숙인시설연합회 협약 체결 (서대문구청,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열린여성센터, 구세군일죽쉼터, 구세군희망원룸) ① 2017. - 보건복지부 매칭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선정, "여성노숙인 회복과 자활의 기초 다지기 - 바느질&뜨개질 프로그램" 운영 ① 2017.01.02. - 여성노숙인 응급보호 이불 빨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① 2018.01.02. - 여성노숙인 공동작업장 협력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주)정문패키지, 상명상사, 리얼패키지, 우진봉투, 에스애피) ① 2018. - 보건복지부 매칭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선정,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바느질&뜨개질 프로그램" 운영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거리노숙여성의 회복과 탈노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성일터"사업」 ◎ 2019. - 보건복지부 매칭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선정, "이웃사랑&환경사랑 실천프로그램" 운영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여성 일시보호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노숙인 응급보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아웃리치 활동 - 응급잠자리 제공 - 생활편의 제공(목욕&세탁&이미용서비스) - 임시주거지원사업(월세&생필품지원, 사회복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2. 건강회복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증진: 식사지원(1일3끼), 기초건강검진, 병원연계&동행, 생필품지원 - 정신건강관리: 정신상담, 진료연계, 증상 및 약물관리, 입원연계, 사례관리 3. 평가·사정을 통한 시설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테이크, 상담, 이용인 사례회의 - 시설의뢰, 사회서비스 연계(주민증복원, 수급신청지원 등) 4. 일자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활근로사업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공공일자리 지원 - 민간일자리 연계(빅이슈코리아)

주요 사업	5. 노숙인교육문화사업 - 이용인 오리엔테이션&간담회 - 법정의무교육 실시 -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운영 6.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거리노숙여성의 회복과 탈노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성 일터”사업」 운영 -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이웃사랑&환경사랑 실천프로그램」 운영			
	운영법인	(사)열린복지		
시설 정보	시설명	디딤센터	시설장	김진미
	입소정원	35명	종사자수	7명
	홈페이지	http://homelessness.or.kr/	전화번호	02)332-5515
	E-mail	opendidim@daum.net	FAX번호	02)332-5506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표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설립 목적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중한 우리 이웃에게 지원과 지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사회구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 인정복지관 만나샘 착공 ▶ 2005. - 인정복지관 만나샘 사용승인 및 사업개시 ▶ 2007. - 웃음치료 시작 ▶ 2008. -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시작 - 효과적인 대화법 프로그램 시작 - 만나샘 프로그램 참여자 워크숍 실시 ▶ 2009. - 음악치료 시작 - 만나샘 인문대학 시작 - 북 클리닉(Bok clinic) 시작 - 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 시작 ▶ 2010. -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 2011. - 혹서기 응급구호방 운영 - 혹한기 응급구호방 운영 ▶ 2012. - 「책을 읽는 사람들」 시작 - 혹서기 무더위쉼터 운영 - 축구팀 발족 - 민들레예술문학상 글쓰기 특강 - 혹한기 응급쪽방 운영 ▶ 2015. - 시설명칭 변경(인정복지관만나샘→인정만나샘) - 「중독로그아웃」 프로그램 시작 ▶ 2016. - 시설명칭 변경(인정만나샘→만나샘) ▶ 2018. - 희망합창단 발족 - 공동작업장 운영개시
시설 사진	 

주요사업

- 시설 유형: 남성 노숙인이용시설
- 주요사업
 1. 상담지도사업
 - 아웃리치, 입소상담, 생활상담, 취업상담 등 이용회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화하여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2. 응급보호프로그램
 - 목적: 응급잠자리제공, 혹서기에 무더위쉼터 운영하여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의 생명을 보호한다.
 - 응급잠자리지원: 연중무휴, 19:00~익일 07:00까지
 - 무더위쉼터 운영: 매년 6월 15일~9월
 3. 기초생활지원 사업
 - 목적: 목욕, 세탁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미용, 피복지원서비스를 하여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인식개선이 되도록 한다.
 - 편의시설지원(목욕, 세탁): 월~금 9:30~17:30
 - 이·미용서비스: 매주 월요일 13:~17:00
 - 피복지원서비스: 필요시 수시지급
 4. 응급의료지원사업
 - 국·공립병원에 진료의뢰, 건강검진(대한결핵협회 연2회, 지역 보건소), 보철 및 틀니지원, 안경지원(노안), 일반의약품지원
 5. 실내무료급식사업
 - 중식: 매주 월~금, 12:00~13:00(토·일·공휴일 제외)
 - 지원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석식: 연중무휴 18:00~19:00
 - 지원처: 자부담
 6. 취업알선사업
 - 노숙인특별자활사업
 - 목적: 자기통제 등 근로능력을 배양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 지원처: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요사업

7. 주거지원사업
 - 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
 - 목적: 쪽방·고시원, 연관, 여인숙 등에 사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정착 하도록 돕는다.
 - 지원처: 주거복지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8. 자활프로그램
 - 음악치료(Music Therapy)
 - 목적: 음악활동 경험을 통해 자아존감향상,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긍정적 정서수정이 되도록 한다.
 - 희망합창단
 - 목적: 우울증 완화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자활 욕구를 증진하고 집단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긍정적 희망을 찾도록 한다.
9. 행정지원
 - 목적: 주민등록복원, 신용회복 등 노숙인 스스로 하기 어려운 행정업무처리를 지원하여 자활에 도움을 준다.

시설정보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인정만나샘		
시설명	만나샘	시설장	이병희
입소정원	49명	종사자수	8명
홈페이지	https://www.mannasem.org/	전화번호	02)757-7595
E-mail	mannasem@hanmail.net	FAX번호	02)757-7597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45		



표 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리노숙인들을 행복하게 한다.
설립 목적	거리 노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전파를 통해서 영혼의 변화와 자활을 통한 생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함.
주요 업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3. 04. - 센터개관 ① 2004. 02. - 『노숙인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정식인가 ① 2005. 04. -문래동 1가로 센터 이전(현 소재지) ① 2006. 01. -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시작 (공동모금회) ① 2006. 11. - 옹달샘드롭인센터 내 동절기 응급구호방 설치 ① 2009. 03. -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참여 ① 2009. 05. - <옹달샘 배움터-한글교실> 개설 ① 2009. 06. - <옹달샘 배움터-대입검정고시반> 개설 ① 2009. 10. - 거리노숙인 실내급식지원사업(서울노숙인복지센터협회) ① 2010. 03. -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30명 수료 ① 2011. 11. - 『노숙인자활 전문프로그램』(영등포구청) 시작 ① 2012. 03. - 『2012년 제1기 자활전문프로그램』(영등포구청) 시작 ① 2012. 03. -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시작 (서울시청) ① 2012. 07. - 노인운동재활지도사 자격증 교육과정 (2012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함께하는 작은 변화』) 진행 ① 2012. 09. -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 수상(센터장 박성곤) ① 2012. 10.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운영시작 ① 2012. 12. - 신용회복 우수시설 선정(서울시청) ① 2015. 01.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응급구호방 (생활실 2실, 샤워실, 화장실 등) 설치 ① 2016. 12. - 희망나눔지원사업 (공동모금회지원) 선정 ① 2017. 10. - 유한대학교 지역사회 산학협력서 협약 체결 ① 2018. 01. - 영농자활사업 “희망을보자 건강한 채소” 선정
시설 사진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일시보호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보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자리를 비롯하여 세탁, 목욕, 생필품 지원 등 편의 서비스 제공 - 연중 365일 석식 제공, 명절 3식 제공 2.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거리 상담을 통한 센터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활의 기회를 제공 3. 보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치료 및 기초의약품 지급,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 특별프로그램(개인위생교육, 결핵예방교육 등) 진행 4. 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활근로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연계 5. 임시주거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 - 노숙생활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 6.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 - 매입임대 입주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7. 영농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체험활동을 통한 자활을 유도 - 힐링프로그램(캠핑, 관광지방문 등) 진행 8.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 개입 및 현장 상담 진행 - 응급구호방 운영을 통한 응급 잠자리 및 생활용품 제공 			
	운영법인 (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시설 정보	시설명	옹달샘드롭인센터	시설장	박성곤
	입소정원	150명	종사자수	12명
	홈페이지	http://www.ongdalsam.org/	전화번호	02)2068-9113
	E-mail	ongdalsam9114@daum.net	FAX번호	02)2672-9113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94길 6, 2층 옹달샘드롭인센터		



표어	노숙인의 자립자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공동체 돌봄
설립 목적	이웃사랑의 신앙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기본적 서비스와 의료,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 자활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 한다. 사회적 약자와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장과 경제, 그리고 각 개인과 단체 및 교회와 협력한다.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 희망사랑방(쉼터) 개설 ▶ 2000년 - 주간편의시설 햇살보금자리 개설 ▶ 2002년 - 햇살보금자리 상담보호센터 개소 ▶ 2004년 - 햇살 확장개소예배 및 지역주민한마당, 성탄절 연합예배 ▶ 2005년 - 노숙인특별자활사업 ▶ 2006년 - 서울시일자리갯기사업, 임시주거지원사업 ▶ 2007년 - 태안 가의도 기름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 2008년 - 노숙인인권세미나 및 예배, 성탄절거리연합예배 ▶ 2009년 - 쪽방비닐하우스매입임대 32가구 LH와 계약 ▶ 2011년 - 국민은행 스타렉스 차량지원 ▶ 2012년 - 노숙인 자격증취득(운전면허 13명 취득),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영등포노숙인축구대회 우승 ▶ 2013년 - 노느매기협동조합 창립총회, 서울시노숙인시설 평가회실시 ▶ 2014년 - 근로자퇴직연금가입, 민들레문학특강, 서울시자활체육대회 축구4강진출, 노느매기햇살 후원의밤 ▶ 2015년 - 마사회 렛츠런 기부금전달식, 임대주택 7개자치구운영(108호) ▶ 2016년 - 햇살자활캠프(숙초), LH협업사업 축구탁구활동 예장총회장 이성희목사 설교 거리성탄예배, 햇살보금자리 LH주거복지대상(탁구대구입) ▶ 2017년 - 매입임대입주자총회(111호), 서울시노숙인이용시설평가실시, 예장노숙인복지회 내복나눔행사, 임대주택입주자모임 ▶ 2018년 - 영등포산업선교회60주년 선교 심포지엄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자격증취득 2명 영등포구청 협업 영등포희망지원센터 24시 거리노숙인 보호활동
시설 사진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일시보호거리노숙인들의 일시보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들의 응급보호 및 숙식제공 - 다양한 상담활동으로 서비스 연계와 재/자활 기반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리아웃리치 및 응급구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지원센터 현장지원 및 거리노숙인 시설연계 -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및 병원연계 - 동절기, 하절기 특별대책 보호활동 2. 취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일자리사업, 특별자활근로 운영 - 거리노숙인 특화자활프로그램사업 - 참여자의 급여로 주거마련을 통한 자활의지 고취 3. 기능보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복지증진 - 장비보강 4. 임시주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에게 초기 주거지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생활 도모 - 주거생활유지에 생필품을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 - 주민등록 복원 및 장애인 등록,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발급으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다양한 지역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 5. 임대주택사례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의 초기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 공적지원 연계를 통하여 기본생활권을 제공 - 사례관리 통해 지역사회 정착 지원 6. 프로그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지원 자격증취득 프로그램사업 - LH공사 협업을 통한 사례관리사업 - 민간후원을 통한 프로그램실시 			
시설 정보	운영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시설명	햇살보금자리	시설장	김기용
	입소정원	74명	종사자수	12명
	홈페이지	http://sunshine-shelter.or.kr	전화번호	02)2636-8182
	E-mail	dropincenter@hanmail.net	FAX번호	02)2636-8183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41-16		



▪ 자활시설



표어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설립 목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거리 노숙을 하거나 노숙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노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더 나아가 노숙의 위험이 있는 잠재적 저소득층에게 노숙을 하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 사회복지법인 신애복지재단 설립 (이사장 : 김도진 / 서울 동대문구 전농 1동 620-46) 1998. - 가나안센터 개소 1999. - 자활영성교육 실시 1999. - 서울시민대상수상(이사장 김도진) 1999. - 서울시 우수 쉼터 선정 2000. - 서울시 우수 쉼터 선정 2004. - 자혜의료재단과 자매결연 2007. - 가나안센터 시설신고(원장 김도진, 정원 180명) 2007. - SH 임대주택운영(서계동 6가구 / 용두동 6가구) 2010. - 소외계층의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 시작 2012. - 가나안자활농장 시작 2013. - 가나안센터 재신고(원장 김도진, 정원 149명) SH 임대주택운영(안암동 6가구) 2015. - 가나안소독 자활사업 신고 가나안쉼터 변경신고(원장 김정재, 정원 110명) 2017. - 시설이전(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6-1) 2018. - 가나안쉼터 재신고(원장 김정재, 정원 110명) 2019. -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설립 가나안쉼터 변경신고(운영체 :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시설 사진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료 숙식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의료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보건소, 동부시립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적십자병원 진료 가능 3.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일자리(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서울시일자리, 노인일자리), 민간일자리, 쇼핑백 공동 작업장 - 모집공고, 구직정보게시 등 4. 자활영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을 위한 영성교육 실시 5. 자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 및 파산면책, 저축 및 금전관리 프로그램, 주민증 재등록, 자체자활지원사업, 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금연 & 금주, 단도박 교육) 등 6. 임대주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가정 서계동 4호 운영 7. 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도시락배달 - 문화여가사업 - 안경지원사업 - 한방치료지원사업 - 동아리활동(맛집 찾기, 축구 등) - 인지작업치료(치매예방교육) - 요양 병원연계 - 미술치료 - 돌레길 걷기 - 목공예 배우기 - 여행 프로그램(매년 다른 곳으로 연 1회 실시) - 생일밥상(월 1회 생일축하 실시) - 운동교실 - 상담실 운영(연세대, 서울장신대와 MOU체결 진행)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td> </tr> <tr> <td>시설명</td> <td>가나안쉼터</td> <td>시설장</td> <td>김 정 재</td> </tr> <tr> <td>입소정원</td> <td>110명</td> <td>종사자수</td> <td>13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www.canaanhomeless.or.kr</td> <td>전화번호</td> <td>02)964-1556~8</td> </tr> <tr> <td>E-mail</td> <td>cross13@daum.net</td> <td>FAX번호</td> <td>02)965-416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죽정빌딩 (우)02554</td> </tr> </table>	운영법인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시설명	가나안쉼터	시설장	김 정 재	입소정원	110명	종사자수	13명	홈페이지	www.canaanhomeless.or.kr	전화번호	02)964-1556~8	E-mail	cross13@daum.net	FAX번호	02)965-4165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죽정빌딩 (우)02554		
운영법인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시설명	가나안쉼터	시설장	김 정 재																						
입소정원	110명	종사자수	13명																						
홈페이지	www.canaanhomeless.or.kr	전화번호	02)964-1556~8																						
E-mail	cross13@daum.net	FAX번호	02)965-4165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죽정빌딩 (우)02554																								
시설 정보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td> </tr> <tr> <td>시설명</td> <td>가나안쉼터</td> <td>시설장</td> <td>김 정 재</td> </tr> <tr> <td>입소정원</td> <td>110명</td> <td>종사자수</td> <td>13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www.canaanhomeless.or.kr</td> <td>전화번호</td> <td>02)964-1556~8</td> </tr> <tr> <td>E-mail</td> <td>cross13@daum.net</td> <td>FAX번호</td> <td>02)965-416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죽정빌딩 (우)02554</td> </tr> </table>	운영법인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시설명	가나안쉼터	시설장	김 정 재	입소정원	110명	종사자수	13명	홈페이지	www.canaanhomeless.or.kr	전화번호	02)964-1556~8	E-mail	cross13@daum.net	FAX번호	02)965-4165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죽정빌딩 (우)02554		
운영법인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시설명	가나안쉼터	시설장	김 정 재																						
입소정원	110명	종사자수	13명																						
홈페이지	www.canaanhomeless.or.kr	전화번호	02)964-1556~8																						
E-mail	cross13@daum.net	FAX번호	02)965-4165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죽정빌딩 (우)02554																								

표어	'강동종합복지관 강동희망의집'은 주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마중물이 됩니다.
설립목적	강동희망의집은 지역 노숙인들의 사회복지귀를 위한 실천 활동과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마을지향 사업을 추구하며, 지역 내 노숙예방을 위한 빈곤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10.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자활시설) 개원 ▶ 2007.06. - 노숙인시설 신고필증 교부(제 서울강동-노숙인-200706914-01호) ▶ 2012.12. - 노숙인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현대식개보수(리모델링)공사 ▶ 2014.03. - 임정백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강동희망의집 시설장)취임 ▶ 2014.03.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위탁운영 약정 체결 ▶ 2014.05. - 시설신고증 변경 ▶ 2014.07. - 주방, 욕실, 개보수공사, 에어컨 설치 ▶ 2014.08. - LED 교체공사 실시 ▶ 2015.02. - 강동구 거리노숙인 조사 및 후원물품 전달 ▶ 2015.02. - '관장님과 함께 새해맞이 담소와 맛있는 식사를' 프로그램 실시 ▶ 2015.05. - 자활프로그램 '한키마' 실시 ▶ 2015.08. - 자활프로그램 '희망볼링' 실시 ▶ 2016.05. - 입소자 구강검진 실시(강동보건소) ▶ 2016.08. - 응급처치 교육실시 ▶ 2017.04. - 문화나들이 국립극장 달오름 '홍보씨' 관람 ▶ 2017.06. - 응급처치교육 실시 ▶ 2017.09. - 자활프로그램 '희망볼링' 실시 ▶ 2017.12. - 문화활동 강동아트센터 ▶ 2018.04. - 강동희망의집 인권지킴이단 결성 ▶ 2018.07. - 무더위쉼터 운영 ▶ 2018.09. - 자활프로그램 '짬뽕으로 하나되기.함께해서 좋고, 나누어서 좋은 우리는 강동인!' 프로그램 실시 ▶ 2018.12. - 지역 거리노숙인 응급 구호활동 ▶ 2019.07. - 무더위쉼터 운영 ▶ 2019.08. - 자존감회복과 힐링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실시 ▶ 2019.10. - 지역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활동(구호물품 지급 등)

시설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제공 - 저축관리 프로그램 - 일자리 지원 - 주거지원 - 기타 연계서비스 지원 2. 자립저해 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 지원 - 건강관리 및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연계 - 체납보험료 분납 및 결손처리지원 3. 자존감회복과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례회의를 통한 자율적 시설운영 - 여가·문화 등 힐링프로그램 운영 4. 노숙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일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노숙예방을 위한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 			
시설 정보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시설명	강동종합복지관 강동희망의집	시설장	임정백
	입소정원	15명	종사자수	4명
	홈페이지	www.kdswc.co.kr	전화번호	02)2041-7851
	E-mail	okscs@naver.com	FAX번호	02)475-4588
	주소	서울시 강동구 진향도로23길7		

광야홀리스센터

표 어	또 하나의 작은 꿈을 디자인해주는 광야홀리스센터
설 립 목 적	신체적 건강 회복 Physical health 심리·정서적 건강 회복 Psychological health 영적 건강 회복 Spiritual health 건강한 사회인으로 지역사회 복귀 Healthy member of the community
주 요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 노숙인쉼터(미인가시설) 개소 ▶ 2000. -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정원 30명) ▶ 2005. - 입소정원 50명으로 증원 ▶ 2007. - 신축건물로 이전(정원 94명) ▶ 2013. - 노숙인시설 재신고(정원 79명) -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종합우승 ▶ 2014. - 노숙인시설 재신고(정원 79명) - 제15회 광야인의날(노숙인 잠바나눔 행사) ▶ 2015. - 입소정원 73명으로 조정 - 제16회 광야인의날(노숙인 잠바나눔 행사) ▶ 2016. - 제11회 합동결혼식 - 제17회 광야인의날(노숙인 잠바나눔 행사) ▶ 2017. - 제18회 광야인의날(노숙인 잠바나눔 행사) - 백두산/한라산 비전트립 프로그램 ▶ 2018. - 제12회 합동결혼식 - 제19회 광야인의날(노숙인 잠바나눔 행사) - 강원도 정선 힐링기차여행 프로그램 ▶ 2019. - 제20회 광야인의날(노숙인 잠바나눔 행사) - 전라북도 전주&군산 힐링기차여행 프로그램
시 설 진	 

주 요 사 업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1. 알콜중독예방 프로그램

절주 또는 금주를 통한 입소자의 건강회복 및 자활기반 조성

- 알콜의 위험성과 올바른 지식 습득
- 절주 또는 금주에 대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2. 금연프로그램

금연을 통한 입소자의 건강회복 및 자활기반 조성

- 금연동기 파악 및 흡연자 평가
-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 제공
- 금단증상 및 스트레스 관리방법 교육

3. 밸런스워킹PT 프로그램

밸런스워킹PT를 통한 입소자의 건강회복 및 자활기반 조성

- 유산소 근력운동, 전신운동, 혈액순환
- 다이어트 효과, 심폐지구력 증가, 자세교정

4. 희망축구단사업

축구를 통한 입소자의 건강회복 및 자활기반 조성

-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인간관계 훈련
- 자존감 회복, 자활의지 고취

5. IFS(내면가족체계치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 IFS 모델을 적용한 집단상담을 통한 자신의 보호자 발견

- 자신의 보호자와 신뢰관계 발전을 통한 자활의식 고취

- 전문상담가들과의 집단상담을 통한 자신의 실질적인 문제점 발견 및 해결방안 탐색 및 강구

6. 꿈가득희망가득 여행프로그램

여행을 통한 힐링과 정서적 안정감 향상

- 입소자간의 유대감 강화, 인간관계훈련

- 입소자와 직원간의 친밀도 향상


- 인생의 희노애락을 나누며 서로의 내면세계 치유

주요업	7. 문화체험 프로그램 영화, 뮤지컬, 연극 관람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향상 - 입소자간의 유대감 강화, 인간관계훈련 - 입소자와 직원간의 친밀도 향상 8. 트레킹 프로그램 트레킹을 통한 입소자의 건강회복 및 자활기반 조성 - 입소자간의 유대감 강화, 인간관계훈련 - 입소자와 직원간의 친밀도 향상 9. 알바트로스 야학사업(법인협력사업)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입소자들에게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초·중학교 과정 : 삼성실업학교 - 고등학교 과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법인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시기정	시설명	광야홀리스센터	정 경 화
	입소정원	73명	종사자수 8명
	홈페이지	www.sagilsa.org	전화번호 02)2636-3373
	E-mail	kwangya73@daum.net	FAX번호 02)2068-7254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3 (우)07306	

표어	
설립목적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들에게 통합 적인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 구세군ARC(성인재활센터) 일족쉼터 설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 2010. - 수련재활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 시작 ▶ 2011. - 단독 구세군일족쉼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으로 이전 - 구세군일족쉼터(노숙인자활시설) 시설 등록 - 구세군일족쉼터 개관식(구세군연회교회) ▶ 2012. - 3대 원장 정위 백승열, 정노순 사관 부임 - 은평구 불광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 2012 노숙인 저축관리 우수시설 선정 - 2012 노숙인 신용회복 추진 우수시설 선정 ▶ 2013. - 강북구알코올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구세군ARC재활사업 시작 및 수련생 입소식 - 단신매입임대주택(덕양구 행신동 소재) 위탁 운영 ▶ 2016. - 북가좌119안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4대 원장 광용덕, 윤정민 사관 부임 ▶ 2017. - 5대 원장 강태식 사관 부임 - 강원대학교 부설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 구세군일족쉼터에서 구세군ARC쉼터로 기관명 변경 ▶ 2018. - 2017년 전국노숙인복지시설 평가 A등급 우수기관 선정 - 6대 이호영 원장 부임 - 구세군ARC쉼터에서 구세군가재울센터로 기관명 변경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노숙인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식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숙식 제공하여 생활과 취업의 안정을 도모 - 편안함과 휴식이 가능한 생활의 보금자리 지원 2. 자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교육 정보 제공/취업 알선, 취업소양교육 실시, 건설인력시장 확보, 서대문구고용지원센터 연결, 구인처 개발 및 홍보를 지원 3. 일자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의지 고취 및 퇴소 후 자립지원 4. 신용회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5.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주거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 6.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병원 연계 의료지원 7. 그룹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정착 			
시설정보	운영법인	재단한국세군유지 재단법인		
	시설명	구세군가재울쉼터	시설장	이 호 영
	입소정원	36명	종사자수	6명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iljook2030	전화번호	02)309-3009
	E-mail	dlfwnr2030@hanmail.net	FAX번호	02)6442-2031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대1다길2 백마빌라 101호		



표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설립목적	위기 상황에서 거리로 나오게 된 남성 노숙인을 보호하여 회복을 지원하고, 재활 및 자활의 지원을 통해 노숙을 이탈하고 주거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함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 09. - 구세군 아현영문 병설시설로 가칭 구세군서대문사랑방을 개소함 서대문사랑방(서대문구 총정로2가 43번지)개소-초대원장 임헌택 사관 1999. 10. - 서대문사랑방 생활인 총20명 입소함 2000. 12. - 서울시 노숙자 대책 협의회 시설 표창장 수여 2001. 01. - 구세군아현영문 소속에서 구세군 대한본영 사회부로 변경됨 2002. 10. - 구세군유지재단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충호 사관이 원장으로 추대됨 2004. 05. - 구세군유지재단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안근정 사관이 원장으로 추대됨 2006. 02.~12 - 서울시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사업 2006. 07. - 구세군유지재단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홍봉식 사관으로 추대됨 2007. 05. - 서울시종로구약사회와 업무협약식 체결(이병천 단장) 2007. 04. - 서대문사랑방의 지역 섬김이 활동 발대식(지역청소 기타등) 2007. 11. - 서울시 종로구 소방서와 긴급업무 협약식 체결 2008. 01. - 2008년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 평가 우수 기관 수상 2009. 05. - 시설 내부 배관 누수로 인해 시설 개보수 공사를 기능보강으로 진행함 2009. 07. - 자원봉사 인증기관 지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10. 01. - 구세군유지재단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백승열 사관이 원장으로 추대됨 2010. 10.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발대식 '소규모창업프로그램 빨강마차' 휘슬러 코리아의 지원으로 빨강마차 9대를 기부받아 사업진행함 2011. 04. - 구세군유지재단의 인사이동으로 김도진 원장이 추대됨 2011. 02. - 2010년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 평가 우수 기관 수상 2011. 09. - 주거복지재단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2012. 04. -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로부터 단신계층 매입임대 27호 인수 함. 2012. 06. - 김도진원장 서민정책유공시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함 2012. 04. - 디자인나눔센터를 통하여 시설정면개선 및 옥상개선, 도배를 진행함 2012. 05. -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사무실 집기 및 생활집기를 후원받음 2012. 05.~11 - 노숙인복지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진행함 2012. 11. -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기관 이동차량지원사업에 선정됨'모닝경차'수령 2012. 11. - 서예프로그램 전시회 진행함 / 인사동 물파스페이스 (2012년11월30일~12월 04일) 2013. 11. - 서예프로그램 전시회 진행하였음/ 인사아트프라자 (2013년11월13일~19일) 2014. 02. - 2013년 서울시노숙인시설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05. - 건강프로그램 진행(트레킹, 금연, 금주, 단도박, 대인관계회복) ▶ 2015. 01. - 서울시공동모금회 하나은행 공익신탁 사업선정 ▶ 2015. 11. - 서예, 도예 프로그램 자체운영 진행(마음으로 쓰고 빛은 붓글씨) ▶ 2016. 11. - 서예, 도예 프로그램 인사동전시회 진행(인사아트프라자 4층) ▶ 2017. 07. - 2017년도 노숙인복지시설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음 ▶ 2017. 11. - 2017노숙인문화예술제 서예, 도예프로그램 전시분과 참여(구세군빌딩) ▶ 2017. 11. - 구세군자선냄비 본부 주관으로 식당 리모델링 실시 ▶ 2017. 11.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기능보강으로 건물 외벽공사 실시 ▶ 2018. 11. - 홈리스작품전시회 서울시청 지하 갤러리에서 진행 /11월1일~3일 ▶ 2018. 11.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기능보강으로 화장실 복도 등 공사 실시 ▶ 2018. 11. - 홈리스 그림에세이 '우리 인생 책'을 출간하였음/ 노경실 작가 협업 출간 ▶ 2019. 04. - 건강프로그램 진행(트레킹 금주) ▶ 2019. 07. - 구세군유지재단의 인사이동으로 김노정 원장이 추대됨.
시 설 사 진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자활시설 • 주요사업 1. 상담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소상담 :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과의 개별상담을 통해 '자립의 의지가 있는지' 등 저희 시설의 목표 및 운영방침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입소가 결정되며, 부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입소를 의뢰한 유관기관 및 시설로 다시 안내합니다. - 취업상담 : 노숙인 관련 유관기관 및 시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평소에 구축하여 필요시에 이와 연계하여 취업 정보를 소개하여 준다거나, 인력회사 등과도 연결하여 일용직 등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활 및 법률상담 :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에 관련된 서비스와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서비스를 제공 - 의료서비스 : 기본적인 상비약을 갖추고 있으며, 병원연계를 통해 무료 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관리교육, 금연교육, 단주교육, 성교육(에이즈 교육)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특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프로그램 : 아유회프로그램은 직원과 입소자들 간의 원활한 관계를 향상하며, 서로 잘 알지 못하던 관계를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선하고, 각 개인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 트레킹프로그램 : 트레킹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이용자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민들과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설이용자분들에게는 자립에 대한 의지를 독려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리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 함 - 자활사업 : 서울시 일자리 갖기 사업 및 특별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 자활사업 등이 있다. 자기관리 능력과 자아존중감 등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자활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 지원서비스를 통해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 상향이동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숙인 분들이 사회 복귀에 재기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입주자 관리 및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3.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인권 및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관련 교육을 진행 하고 있음 (년 2회) - 시설안전 종합교육 진행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대피 및 진압훈련 및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년 4회) 4. 서울시 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사업 (공방프로그램-가족, 목공) 																
시 설 기 본 정 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법인(단체)명</td> <td style="width: 45%;">구세군서대문사랑방</td> <td style="width: 15%;">시설장</td> <td style="width: 25%;">김 노 정</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cafe.daum.net/SARANGROOM</td> <td>전화번호</td> <td>02)312-7225</td> </tr> <tr> <td>E-mail</td> <td>mys009@hanmail.net</td> <td>FAX번호</td> <td>02)3147-2321</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81</td> </tr> </table>	법인(단체)명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시설장	김 노 정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ARANGROOM	전화번호	02)312-7225	E-mail	mys009@hanmail.net	FAX번호	02)3147-2321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81		
법인(단체)명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시설장	김 노 정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ARANGROOM	전화번호	02)312-7225														
E-mail	mys009@hanmail.net	FAX번호	02)3147-2321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81																

표어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설립목적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육체와 정신, 그리고 도덕성과 사회성뿐만 아니라 영성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재활·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숙인자활시설이다.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06. 03 - 구세군총정로사랑방 개소 ▶ 1999. 11. 01 - 구세군자활사업단 창단 ▶ 1999. 11. 16 - 서울역 야간상담 및 무료급식 자원봉사단 구성 ▶ 1999. 11. 25 - 알콜 클리닉 프로그램 개시 ▶ 2001. 03. 21 - 노숙인보호시설 신규실무자 교육기관 선정 ▶ 2001. 07. 01 - 노숙인취업정보알선센터 운영 (일꾸미터-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장소) ▶ 2003. 04. 05 - 서대문푸드뱅크 후원사업 결연 ▶ 2006. 02. 01 - 서울시일자리갯기사업 프로젝트 사업시행 ▶ 2006. 09. 06 - 개인파산 및 면책프로그램 시행 ▶ 2007. 02. 01 - 노숙인주거복지지원사업 시작 (대한주택공사, SH공사 -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사업 시범사업) ▶ 2008. 02. 28 - 센터 이전 및 시설명칭 변경 (구세군총정로사랑방▶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 2008. 08. 29 -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주거복지재단 선정) ▶ 2008. 12. 16 - 국무총리표창 수상(주거복지부문 우수기관 선정) ▶ 2009. 04. 01 - 서울시 노숙인 인문학과정 시작 ▶ 2010. 06. 25 -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개시(중랑보건소, 중랑구정신보건센터 지원) ▶ 2012. 05. 31 - 노숙인 복지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 ▶ 2012. 11. 23 - 아산복지재단 아산상 복지실천부분 표창(김성재) ▶ 2013. 06. 11 - 민들레 예술문학특강 실시 ▶ 2013. 07. 08 - 무더위쉼터 지정 개시 ▶ 2017. 04. 20 - 건강생활 체육프로그램 개시 ▶ 2018. 06. 22 -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개시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복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 : 입소/생활/취업/신용회복/주거지원/퇴소/행정지원 등 제반 상담 - 초기생활지원 : 잠자리/식사/개인위생(목욕,세탁)/의류 및 생필품 제공 2. 건강관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의 건강검진지원 및 정신건강검진 실시 - 의료보호에 따른 의료조치 3. 자활복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참여 - 민간일자리 취업정보 제공 및 연계 - 취업교육 및 전문취업의뢰 4. 주거복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주거제공 - 사례관리 및 간담회 진행 - 주택관리 및 안전관리 - 임대료 및 공과금관리 - 제반 자활복지서비스 제공 5. 문화행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상영 및 여가활동 - 생활체육활동 - 명절행사(추석,설날) - 생일잔치 - 송년회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구세군유지재단법인</td> </tr> <tr> <td>시설명</td> <td>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td> <td>시설장</td> <td>최 동 식</td> </tr> <tr> <td>입소정원</td> <td>75명</td> <td>종사자수</td> <td>9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www.jjbcenter.com</td> <td>전화번호</td> <td>02)313-1991</td> </tr> <tr> <td>E-mail</td> <td>jjbcenter@hanmail.net</td> <td>FAX번호</td> <td>02)365-7228</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58길 20</td> </tr> </table>	운영법인	구세군유지재단법인			시설명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시설장	최 동 식	입소정원	75명	종사자수	9명	홈페이지	www.jjbcenter.com	전화번호	02)313-1991	E-mail	jjbcenter@hanmail.net	FAX번호	02)365-7228	주소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58길 20	
운영법인	구세군유지재단법인																							
시설명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시설장	최 동 식																					
입소정원	75명	종사자수	9명																					
홈페이지	www.jjbcenter.com	전화번호	02)313-1991																					
E-mail	jjbcenter@hanmail.net	FAX번호	02)365-7228																					
주소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58길 20																							
시설정보																								

표어	노숙인의 삶의 질 향상 / 노숙인이 양질의 자립자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
설립목적	취약계층인 노인노숙인들에게 체계화된 전문적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의 발판을 마련한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한다.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노인)노숙인 사업 시작 ▶ 2005. -혜명노인센터로 명칭 변경 및 시설인가 ▶ 2009.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 ▶ 201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임대차 계약 ▶ 2011. -혜명노인센터에서 '길가온 혜명(惠明)'으로 명칭 변경 ▶ 2011. -주거복지재단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주거취약계층) ▶ 2012. -제1회 홈리스 서예·도예 전시회 전 개최 ▶ 2013.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설립허가 ▶ 2013. -제2회 홈리스 서예·도예 전시회 전 개최 (인사동 인사아트갤러리) ▶ 2014. -어르신(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구로구청) ▶ 2016. -길가온혜명(惠明) 시설 정원 변경 49명 -> 60명 ▶ 2017.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공모선정 ▶ 2018. -2017년 노숙인시설평가 우수시설 선정(A등급 / 보건복지부) ▶ 2019. -제6회 홈리스 도예 전시회 전 개최 (구로구민회관 내 '구루지')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자활시설(노인특화) · 주요사업 1.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자립퇴소자 대상 임대주택 입주 -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개별 사례관리 서비스 진행 - 현재 매입임대주택 59개호(주거안정망 주택 7개호 포함) 운영.

주요사업	2. 자립프로그램 사업			
	- 신용회복 지원 및 상담(파산, 워크아웃, 면책) 진행			
	- 금전관리 프로그램 (자립금 및 생활비 관리)			
	3. 사회보장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신청지원			
	- 주민등록 복원 지원서비스			
	4. 의료지원 사업			
	- 무료 병원진료(진료의뢰서 발급 - 서울시립병원 연계)			
	- 의료급여 서비스(건강보험공단) - 6개월 이상 체납자 신청			
	5. 프로그램 사업			
- 여가활동, 영농, 문화 활동, 건강관리, 바리스타 프로그램 사업 시행				
- 자립퇴소 준비를 위한 요리교실 프로그램 진행				
6. 공동작업장 사업				
- 입소인 및 자립퇴소자를 대상으로 부업식 공동작업장 진행				
7. 일자리지원 사업				
- 노숙인특별자활사업 / 서울시일자리사업 지원				
- 구직정보서비스 : 구직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구직정보 전달·연계				
8. 노인일자리 사업				
- 시설입소인 및 지역 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 수행인원 : 135명 (공익형 45명, 시장형 90명)				
9.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개별 / 집단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시설정보	운영법인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시설명	길가온혜명	시설장	배명희
	입소정원	60명	종사자수	10명
	홈페이지	www.gilgaon.or.kr	전화번호	02)891-5732
	E-mail	119hmyung@hanmail.net	FAX번호	02)891-5731
	주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나길 14		



표어	희망을 통해 부활을 꿈꾸는 내일의집
설립목적	삶의 터전을 잃은 위기에 있는 모자가정이나 단신 여성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거와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자립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09.13. - '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 시설 개소 ▶ 1999~현재. - 여름캠프사업 진행(년1회) ▶ 2000~2014. - 자활의집 운영 ▶ 2001~2007. - 실직여성 자활을 돕기 위한 녹색가게 운영 ▶ 2007~2009. - 생협(생명살림터) 운영 ▶ 2010~현재. - 초기정착금 지원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 진행 ▶ 2011~현재. - 월별생일잔치 사업진행 ▶ 2012. - 공동모금회 후원 노숙경험 여성모자 가정지원사업 진행 ▶ 2013. - 자활프로그램 연극치료(20회기)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 15주년기념행사(위기여성자활사례집 발간; 새로운 봄날을 꿈꾸며) - 자활프로그램 갈등해결프로그램(9회기) 사업 진행 - '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에서 '내일의집'으로 시설명 변경 ▶ 2014. - 양천구로 시설 이전 및 신고 ▶ 2015. - 노숙인문화지원사업 발도로프 인형만들기(10회기)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리스 여성 당사자 좌담회 ▶ 2016. -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MOU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 요가프로그램(12회기) 사업 진행 ▶ 2017~2019 - 서울시식생활교육지원사업 요리교실 지원사업 진행 ▶ 2017. - 위기가족정서지원사업 '과거완결! 꿈꾸는 가족'(6회기)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지원 작은 도서관 설치 ▶ 2018. -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 '꿈을 향한 전진'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 20주년 기념행사 '다시 빛나는 내일의집 20주년' ▶ 2019. - 자활프로그램 '평화적 의사소통과 연결'(5회기)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천주거복지센터 MOU체결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여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9호) 및 그룹홈(5호) 운영 - 입주인 사례관리(상담 및 복지서비스자원연계) - 시설 생활인 주거지원 정보안내 및 자원연계 2. 신용회복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서비스 자원 연계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안내 3. 취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 지원 안내 - 공공일자리 연결 - 민간단체 일자리지원사업 연결 4. 심리정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1회기 정기상담 진행 - 월1회 생일파티 진행 - 년1회 여름캠프 진행 - 년2회 나들이 지원사업 - 자활프로그램으로 집단 및 개인프로그램 진행 - 여가선용지원사업 (오리교실, 기타교실 등)진행 - 작은 도서관 운영 - 문화체험활동(공연관람 등) 진행 5. 초기정착금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초기시 구직활동 및 정착에 필요한 후원금 지원 6. 장학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녀 장학지원 사업(생활인, 퇴소인) 7. 지역커뮤니티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천 마을네트워크 회원단체 활동 - 마을 축제 및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운영법인	개인		
시설정보	시설명	내일의집	시설장	정태호
	입소정원	20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jth3132	전화번호	02)497-6333
	E-mail	samilth@hanmail.net	FAX번호	02)461-6251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0길 2-1 401호 (우)07915		



표어	함께 살며 서로를 살리는 희망의 공동체 살림터
설립목적	1998년 상도동 고시촌을 빌려 경제 문제로 주거 위기와 가정 해체에 직면한 가정을 보호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현재까지 대한민국 유일 시설입니다. 입주한 대상 가족들이 최대 2년 안에 자립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법률, 심리,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03. - 봉천동 나눔의 집 가건물을 이용하여 노숙가족 보호사업 시작 ▶ 1999. 08. - 1차 '자활의 집' 입주 - 2가구(총 14가구 입주) ▶ 1999. 10. - 아이들 방과 후 교실 시작,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범국민결연사업' 동작구 창고 개설 ▶ 2001. 01. - 자매결연 프로그램 및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 2002. 10. - 기관신축공사 및 이전 ▶ 2003. 02. - 위기가족 아동지원 사업 ▶ 2006. 03. - 위기가족 자활·자립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 2008. 01. - 기본권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사업 ▶ 2011. 02. - 위기가족 인권보호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 2011. 08. - 아름다운가게 희망나누기 사업 선정 - 아동정서지원 프로그램 ▶ 2016. 06. -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 2017. 07. - 노숙인 가족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연계 지원 사업 ▶ 2018. 11. - 삼성전자, 서울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최종 선정 ▶ 2018. 12. - 관악구 일대 거리 노숙인 인권보호 활동 ▶ 2019. 03. - 위기가족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 활동 ▶ 2019. 09.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학과와 함께 저학년 미술치료 진행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가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터의 입주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장 2년간 입소 보호 - 침구류(이불 베개 등) 및 초기생활용품(샴푸, 린스, 치약, 칫솔, 세제 등) 지원 -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 알선과 의료서비스 지원 - 각종 상담(법률, 심리, 미술치료 등)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매입임대주택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및 재 노숙 방지 - 현재 3가구 운영 중 3. 나눔과꿈 사업 - 봉천동 시간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와 사랑의 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을 신청하여 살림터 내 주거위 기 가정과 관악구내 취약계층의 지역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봉천동 시간은행 사업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음 4. 마음날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개인·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마포들음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5.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영어교실, 미술치료, 발달치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대한성공회유지재단</td> </tr> <tr> <td>시설명</td> <td>대한성공회살림터</td> <td>시설장</td> <td>최 석 진</td> </tr> <tr> <td>입소정원</td> <td>35명</td> <td>종사자수</td> <td>6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s://salimter01.blog.me</td> <td>전화번호</td> <td>02)875-3474</td> </tr> <tr> <td>E-mail</td> <td>salimter@daum.net</td> <td>FAX번호</td> <td>02)875-3490</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3층</td> </tr> </table>	운영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시설명	대한성공회살림터	시설장	최 석 진	입소정원	35명	종사자수	6명	홈페이지	https://salimter01.blog.me	전화번호	02)875-3474	E-mail	salimter@daum.net	FAX번호	02)875-3490	주소	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3층	
운영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시설명	대한성공회살림터	시설장	최 석 진																					
입소정원	35명	종사자수	6명																					
홈페이지	https://salimter01.blog.me	전화번호	02)875-3474																					
E-mail	salimter@daum.net	FAX번호	02)875-3490																					
주소	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3층																							

표어	회복과 자립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숙박 및 식사제공을 통하여 안정적 주거와 기초생활 지원 -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지원 -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존감 및 생활능력 향상 지원 - 신앙교육을 통해 심신안정과 삶의 회복을 지원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05. - 노숙인 10명으로 사업 시작 ▶ 1998. 09. - 교회옥상 4층에 쉼터건물 완공 ▶ 2006. 12. - 공간 개보수로 정원 25명으로 증원 ▶ 2012. 12. - 시설 리모델링(난방, 도배, 신발장, 옷장 등) ▶ 2013. 10. - 쉼터 수련회(가나안농군학교) ▶ 2014. 05. - 세면장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 2015. 06. - 교인가정 초대 행사 ▶ 2017. 10. - 농구대잔치 개막식 관람 ▶ 2018. 08. - 가족나들이(강화도) ▶ 2019. 08. - 여름나들이(파주)
시설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웃놀이(2017. 1. 2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농구대잔치 관람(2017. 10. 14.)</p> </div> </div>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자활시설 · 주요사업

주요사업	<p>1. 재활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관리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 정신건강 사례관리 (일상생활 상담 및 증상의 변화 관찰) (정신건강 상담) (관련기관과 연계강화) - 자원자들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한 영적 회복(매주 1회) <p>2. 자활 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사회적 보호 일자리제공, 서울시 일자리 갖기, 공공근로 등) -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추진) (취업자에 대한 정기적 저축관리를 통한 사회복귀 주거 보증금과 생활비 마련하도록 지원) (서울시 저축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희망통장 갖기 지원대상이 되도록 지원)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서울시 직영의 직업훈련학교를 통한 자격증 취득 지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교양교육 실시) <p>3. Do Dream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음악회, 인권교육, 신앙교육, 인성함양 등 실무자와 교회 -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정기교육 실시 - 생활지식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 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체육활동, 식사교제 등을 통하여 공동체 회복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두레교회</td> </tr> <tr> <td>시설명</td> <td>두레사랑의 쉼터</td> <td>시설장</td> <td>구 교 형</td> </tr> <tr> <td>입소정원</td> <td>13명</td> <td>종사자수</td> <td>3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td> <td>전화번호</td> <td>02)2635-8390</td> </tr> <tr> <td>E-mail</td> <td>dooresr1004@hanmail.net</td> <td>FAX번호</td> <td>02)2635-8391</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14</td> </tr> </table>	운영법인	두레교회			시설명	두레사랑의 쉼터	시설장	구 교 형	입소정원	13명	종사자수	3명	홈페이지	-	전화번호	02)2635-8390	E-mail	dooresr1004@hanmail.net	FAX번호	02)2635-8391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14	
운영법인	두레교회																							
시설명	두레사랑의 쉼터	시설장	구 교 형																					
입소정원	13명	종사자수	3명																					
홈페이지	-	전화번호	02)2635-8390																					
E-mail	dooresr1004@hanmail.net	FAX번호	02)2635-8391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14																							



표어	실천하는 나눔복지 실현하는 자비세상 만들기
설립목적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주요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 수송보현의집 개소 ▶ 2012. - 시설 리모델링(기능보강사업) ▶ 2013. -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종로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 온라인 모금사업 진행(네이버 해피로그) ▶ 2014. - 불교노숙인복지지원센터(바보나눔) 응급구호 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기능보강사업(생활관 / 식당 리모델링) - '내생애에스프레소 2호점'(바라밀 1호점) 오픈 ▶ 2015. - 노숙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커피문화강좌) 수행 ▶ 2016. - 기관이전(종로구 수송동 → 은평구 갈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우수프로그램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2017. - 사회복지 노숙인시설 기관 현장 평가(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사업(희망만들기 5단계) 수행 ▶ 2018. - 국가안전대진단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희망만들기) 수행 ▶ 2019. - 시설 장비보강사업(에어컨 / 공기청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희망만들기) 수행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알선, 취업정보 제공, 교육, 유관기관 연계,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 공공근로, 특별자활, 서울시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지원 2. 금전관리사업(자활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성 있는 저축과 소비생활 유도 - 자립, 노후대비, 경제적 기반 조성 / 사회 및 가정 복귀 유도 3. 신용회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워크아웃, 파산, 면책 진행 / 채무변제로 경제적 재기 기반 마련 4.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통한 정서, 심리적 안정 / 정신건강 증진 - 정기적 상담 및 자활 계획 수립 / 장기자립계획 마련 5. 여가·문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활동을 통한 심신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 생활 선용 - 문화육구 반영 외부시설을 활용한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6. 자활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요소(분노조절, 치매예방, 심리극, 인생설계, 하우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 자립·자활 교육을 통해 생활인 스스로 진로 의식 함양 독려 7. 지역사회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구성원의 일원임을 유도 - 신체, 건강의 중요성 인식 유도 / 자활 의식 함양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조계종사회복지재단</td> </tr> <tr> <td>시설명</td> <td>수송보현의집</td> <td>시설장</td> <td>신용삼</td> </tr> <tr> <td>입소정원</td> <td>20명</td> <td>종사자수</td> <td>5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blog.naver.com/soosong98</td> <td>전화번호</td> <td>02)737-4894</td> </tr> <tr> <td>E-mail</td> <td>soosong98@naver.com</td> <td>FAX번호</td> <td>02)737-4896</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31길 22-7 A동 301,302,303호</td> </tr> </table>	운영법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명	수송보현의집	시설장	신용삼	입소정원	20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soosong98	전화번호	02)737-4894	E-mail	soosong98@naver.com	FAX번호	02)737-4896	주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31길 22-7 A동 301,302,303호	
운영법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명	수송보현의집	시설장	신용삼																					
입소정원	20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soosong98	전화번호	02)737-4894																					
E-mail	soosong98@naver.com	FAX번호	02)737-4896																					
주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31길 22-7 A동 301,302,303호																							
시설정보																								



서울특별시립양평센터

표어	양평센터는 "BEST"를 지향하는 노숙인 복지실천 전문기관
설립목적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노숙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숙인을 입소시켜 의료지원 서비스, 생활지도, 취업지도 및 알선,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입소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을 도모하고, 재활 및 자활, 자립의 기반을 형성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5 - 시설개소 ▶ 2001. 6 - 가족관 증축(340.2m), 식당동 휴게실 주방 증축(240.15m) ▶ 2003.12 - 희망관 개축(346.19m) ▶ 2004. 9 - REACTION-21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소규모 공동창업) 연구조사 ▶ 2005. 8 - 신축건물(프로그램실 및 숙소) 완공 ▶ 2006. 1 - 서울특별시립 양평센터 수탁 관리자 선정 ▶ 2007. 3 - 특별자활사업실시(장수풍뎅이 사업, 유기농 작물재배) ▶ 2008. 7 - 한국마사회 공익성 기부금 공모 사업(농촌사랑 부문)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 ▶ 2009. 4 - 참살이 영농조합법인 설립 ▶ 2010. 2 - 참살이 영농조합법인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2012. 4 - 서울영농학교 개교, 교육관리팀 조직(팀장1, 영농실습장 운영요원2) ▶ 2013.12 - 서울영농학교 교육관 신축건물 준공 ▶ 2014. 1 - 양평센터 자활센터로 유형변경 ▶ 2014. 6 - 양평센터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법인 선정 서울시 우수탁 계약 체결 ▶ 2016. 4 - 화전2리 마을 일사일촌 협약 ▶ 2017. 2 - 보건복지부 우수복지시설 선정 ▶ 2018. 2 - 가족관 증축 준공식 ▶ 2019. 7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선정 서울시 위·수탁 계약 체결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1. 센터운영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인력이 운영함으로써 입소인들에게 실적이고 수준높은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비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직원에게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사업	2. 입퇴소 관리사업	- 안정적인 주거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로의 완전한 자립에 이바지 함		
	3. 급식사업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입소인에게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로 건강한 식생활 영위와 건전한 생활 유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4. 기능보강사업	-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노숙인자립자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기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5. 상담지원사업	- 개별 혹은 집단 상담으로 입소인에 대한 소통과 입소인의 내재하고 있는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하여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6. 의료지원사업	- 입소인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개인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7. 건강증진사업	- 양평센터 의료지원 사업은 입소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8. 고용지원사업	-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공유와 각종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9. 영농자활사업단	- 영농자활사업을 통한 기술력 확보 및 자립자활계획 수립		
	10. 공동작업장	- 신체적 장애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외부 일자리 참여자가 어려운 입소인들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해 기본생활유지비 소득 및 자활의지 고취		
	11. 신용회복지원사업	- 신용회복사업 및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해 신원복원을 추진함으로써 빠른 자활 자립을 도모한다		
	12. 저축관리사업	- 저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금전 관리하는 법을 습득 및 신용불량인 입소인에게 시설명의 통장을 제공, 저축을 유도한다		
	시설정보	운영법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양평센터	시설장	김도진
입소정원		131명	종사자수	15명
홈페이지		http://www.yp1004.or.kr/	전화번호	031-775-4940
E-mail		ypshelter@hanmail.net	FAX번호	031-775-4940
주소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의집

표어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 실현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존엄의 입장에서 노숙인의 권리 존중 및 심신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과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의 기틀 마련 2. 노숙인의 사회참여, 지역사회중심의 노숙인 복지시스템 형성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 3.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숙인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기여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5.-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수탁관리 선정 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 개소 2004. 1.- 노숙인 중간쉼터(일시보호시설)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건강검진의로 프로그램 실시(양방, 한방) 11.- 제1회 혹한기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활동 실시 2005. 9.- 서울복지재단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 기관 선정 / 생활시설부분 : 동절기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2008. 6.- 휴먼 서울시민 제1회 「인문학 강좌」 시행 (경희대학교) 2010. 4.- 노숙인 「임대주택 지원 사업」 기관 선정(주거복지재단) 2012. 2.-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도움단지 취업센터 운영(민간 위탁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노숙인 「드림플러스밴드」 창단 및 제1회 콘서트 진행 2013. 8.- 보현의집 희망 카페 개소 「내 생애 에스프레소」 2014. 7.- 노숙인 「공동작업장」 시범사업 선정 및 운영 2015. 5.- 제1회 공동작업장 개시 2016. 3.- 제1회 국고보조금 자활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보현윈드오케스트라」 창단(한국마사회 후원) 2017. 4.- 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등록(내과 전문의) 2018. 4.- 보현의집 「인권지킴이단」 창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 최우수시설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 10.-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자전거 국토종주 2019. 1.- 나눔과 꿈 3년 사업 선정 「보현윈드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기부자 선정 「자전거 국토종주단」
시설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리 아웃리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지원 사업 - 병원연계 사업 - 거리상담 사업 - 계절 생활용품 배분사업 - 거리 노숙인 전수조사 - 긴급구호자 보호사업 2. 부속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사업 - 노숙인 건강검진 사업 - 정신과 상담 및 진료 - 틀니지원 사업 - 안경지원 사업 - 음악 심리치료 사업 - 거리 예방접종 사업 3. 일시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상담 사업 - 생활지원 사업 - 혹서기 무더위 쉼터 - 혹한기 응급구호사업 - 단기근로사업(공동작업장) - 플라워테라피 프로그램 - 국궁 프로그램 - 자전거 국토종주단 4. 자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사례관리) - 취업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위탁) - 금전관리, 신용회복 사업 - 여가지원 사업(오케스트라, 스포츠단) - 문화체험 사업 - 정서안정지원 사업(서예프로그램, 인문학역사탐방) - 주거지원(자립지원방-1인실 운영 / 매입임대지원 사업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복귀(보현카페 '내생애에스프레소' / 365봉사단 운영 / 지역사회연계사업)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td> </tr> <tr> <td>시설명</td> <td>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의집</td> <td>시설장</td> <td>임도영</td> </tr> <tr> <td>입소정원</td> <td>288명(일시-99명, 자활-189명)</td> <td>종사자수</td> <td>34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www.bohyeon.net/</td> <td>전화번호</td> <td>02-2069-1600~4</td> </tr> <tr> <td>E-mail</td> <td>mp123qm@naver.com</td> <td>FAX번호</td> <td>02-2069-1605, 6</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td> </tr> </table>	운영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시설장	임도영	입소정원	288명(일시-99명, 자활-189명)	종사자수	34명	홈페이지	http://www.bohyeon.net/	전화번호	02-2069-1600~4	E-mail	mp123qm@naver.com	FAX번호	02-2069-1605, 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운영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시설장	임도영																					
입소정원	288명(일시-99명, 자활-189명)	종사자수	34명																					
홈페이지	http://www.bohyeon.net/	전화번호	02-2069-1600~4																					
E-mail	mp123qm@naver.com	FAX번호	02-2069-1605, 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표어	노숙인 스스로가 주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
설립목적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08 - 게스트하우스 개소(대방동) 1999. 10 - 게스트하우스 이전(송정동) 2000. 12 - 신관 증축(생활관 10개실) 2005. 0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2007. 0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설일용직 노숙인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2007. 09 - 노동부 민간위탁 사업 '취업능력 고취 프로그램' 2008. 08 -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거점기관 선정 2009. 09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시설 에너지 열효율 개선사업' 2010. 04 - 마사회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2011. 06 - 마사회 지원 '홀리스 축구대회' 개최 2012. 01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 변경 2013. 05 - 조선히otel 취업연계 '호텔리어 프로그램' 2014. 1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아빠의 희망춧불" 양초작업장사업 선정 2015. 11 - 나눔 숲 공모사업 "힐링 하우스" 선정 2016. 10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지원 "역사를 배우GO, 느끼GO, 변화GO" 프로그램 2017. 08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지원 "나눔 목공사업"진행 2018. 06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지원 "알쓸신잡(인문학)프로그램"진행 2019. 0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사업 / 직업체험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생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의 시설입소 유도 및 시설이용자들의 기초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초기 및 방문, 거리 입소상담, 타 기관 전원 의뢰 및 연계 - 생활상담, 기초생활품지원, 이용자간담회, 이용자 고충처리회의 - 분기별 1회 인권지킴이단 회의, 의무교육(인권&성희롱 예방교육) 2. 사례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이용자의 자립계획 및 개별적 상황에 따른 지원서비스 연계 활성화 - 월 1회 사례회의, 외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방식 마련 3. 공공부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복원 및 신용회복 지원

주요사업	4. 의료재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치료지원 - 병원&보건소 건강검진, 순회진료&건강강좌, 진료의뢰서비스 - 이용자 사회복귀교육, 병원방문 서비스, 의무실 운영 - 노숙인 의료급여 관리, 의료 민원서비스 		
	5. 자립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 활동 강화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특별자활 근로 및 간담회, 공공근로사업 - 공동작업장 관리, 우수 이용자 표창, 저축관리 프로그램(시설) 		
시설정보	6. 주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유도 및 자활의지 확대 - 기존 및 신규 입주자 관리 		
	7. 정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및 다양한 외부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 전통문화 체험사업, 시사교양 프로그램 		
	8. 지역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 및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 운영위원회, 직원역량강화사업, 자원봉사활동, 유관기관 네트워크 - 실습교육, 유관기관 연계, 홍보사업 		
	9. 여가프로그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및 화합 유도 - 명절행사, 문화체험, 자활체육대회 		
	10. 후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후원자 개발, 후원자 관리, 후원물품 배분, CMS 및 바자회 		
	11. 인문학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지식 및 견문 확대 유도 - 문학·철학·역사 등의 교육 20회 진행, 문화체험 프로그램 1회 		
	12. 체험 삶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이용자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 의욕 고취, 직업체험 - 자조모임 형성, 자기주도적 프로그램(공동모금회 선정사업) 		
	13. 급식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대상으로 급식제공을 통해 균형적 영양관리 및 식생활 영위 유도 - 조식,중식,석식 제공(1일 3식), 위생안전교육 및 급식관련 교육 - 개별적 치료식 제공, 급식 선호도조사 		
	운영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법인		
	시설명	서울특별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설장	김 장 훈
	입소정원	134명	종사자수	13명
	홈페이지	http://www.homelessgh.org	전화번호	02)2215-9251
	E-mail	jo24gh@naver.com	FAX번호	02)2215-9254
주소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25			



표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설립목적	잠자고 생활할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교육하여 직장을 알선해 주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 소중한사람들 노숙인 자활쉼터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3번지 하나로교회 부속 건물 - 초대 원장 유정옥 ▶ 2009. - 소중한사람들 노숙인 자활쉼터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중구 중림동 274-3 중림동 소중한사람들 센터 - 노숙인 감수성 회복 훈련 실시 - 노숙인 그림치료 실시 - 서울시 희망프로젝트 참여 - 노숙인 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 2011. - 노숙인 작업 훈련장 오픈 (서울 구로구 497-5) ▶ 2013. - 노숙인 귀농 추진 프로그램 청평 농장 운영 ▶ 2014. - 노숙인 쉼터 소방 스프링클러 장비 설치 ▶ 2015. - 노숙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링프로그램, 영화감상프로그램 ▶ 2016. - 공동모금회 지원 소규모 복지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기능보강 실시 ▶ 2018. - 시설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실시 - 볼링프로그램, 영화감상프로그램 ▶ 2019. - 서울시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취득 프로그램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식주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식사, 잠자리, 피복, 생필품, 기타 서비스 제공 2.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상담, 정기상담, 구직상담, 의료상담, 귀가 및 귀향상담 등 - 생활인에게 심도 깊은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1회 실시 3. 실직 노숙인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 노숙인의 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 - 실직 노숙인의 알코올, 금연 예방 및 단도박, 대인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4. 실직 노숙인의 취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 실직 노숙인의 저축 및 금전관리 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류 작성 방법 안내 및 구직 자료 제공 -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신용회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입소상담 및 저축 및 자활계획을 수립하여 워크아웃 및 개인파산을 진행하도록 신용회복사업을 안내 6.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관리 및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생활인을 연계하여 자립 지원 - 희망원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거지원 7.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실시 -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 발급 서비스 제공 8. 문화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나들이, 체육활동, 영화관람 등 - 생활인을 대상으로 야외나들이, 체육활동 영화관람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목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운영법인</td> <td colspan="3">소중한사람들</td> </tr> <tr> <td>시설명</td> <td>소중한사람들</td> <td>시설장</td> <td>유정옥</td> </tr> <tr> <td>입소정원</td> <td>44명</td> <td>종사자수</td> <td>7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www.sojoonghan.org/</td> <td>전화번호</td> <td>02)365-9106</td> </tr> <tr> <td>E-mail</td> <td>street9106@naver.com</td> <td>FAX번호</td> <td>02)365-9104</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중림동)</td> </tr> </table>	운영법인	소중한사람들			시설명	소중한사람들	시설장	유정옥	입소정원	44명	종사자수	7명	홈페이지	http://www.sojoonghan.org/	전화번호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	FAX번호	02)365-910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중림동)	
운영법인	소중한사람들																							
시설명	소중한사람들	시설장	유정옥																					
입소정원	44명	종사자수	7명																					
홈페이지	http://www.sojoonghan.org/	전화번호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	FAX번호	02)365-910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중림동)																							
시설정보																								

표어	지역 사회 통합형 노숙인 자활전문센터
설립 목적	아침을여는집은 IMF 이후 우리 사회에 실직, 빈곤에 빠진 노숙인에게 응급구호로서 설립된 배경을 기초로 현재까지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 초기 입소인에게는 일자리연계에 집중하고, 입소기간이 경과 된 입소인은 저축관리 및 생활안정에 힘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주택으로의 입주와 일자리를 병행한 자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 - 1월 실직노숙인 구호와 자활을 위한 '아침을여는집' 개소 (성북구 보문동) 2000. - 4월 노숙인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조직, "홈리스의친구들" 결성. - 6월 지역연합 공동부업장 '어울포장' 시작(2002년까지 운영). 2001. - 5월~10월 사회기술훈련 '멋진 인생 만들기' 2003. - 독거노인을 위한 도배봉사 2004. - '정신건강에 문제를 지닌 노숙인 사회통합서비스모델' 진행 2006. - 건설교통부 주관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운영업체로 선정 2007. - 1월 23일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시설 운영법인으로 선정 2008. - 서울시 노숙인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 나눔마을(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작 2009. - 5월 22일 시설 이전(정릉4동 266-60 3,4층) 2010. - 합동야유회 '나는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제주도 37명) 2011. - 1월 11일 아침을여는집 이전(성북구 정릉2동 409-1번지 301호, 401호) - 아침가족한마당 '여름자연캠프' : 열린여성센터 공동참여 (참여인원 60명, 경기도 가평 1박2일) 2012. - 입소인 자활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살기좋은마을' 서울시 혁신형사회적기업 및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시설부분 저축왕, 신용회복 우수시설 선정 및 그룹홈 운영 2013. - 노숙경험 매입임대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16.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택배물류 IoT(무인택배사서함)을 통한 노숙인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활성화"(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 및 종료 (노숙인 9명, 자활인력 6명, 노인27명 일자리 창출) 2018. - 추석 나들이 지원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설 사진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 입소인들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활·자립에 근본적인 목적을 둔다. - 자치모임 : 최소 월1회 생활자 전원과 실무자가 모여 생활에 관한 제반 논의사항을 결정하는 능동적 참여형 회의체계를 통해 책임의식 고취 시킨다. - 의료서비스 : 입소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 2. 저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과 저축이다. 이중 저축은 창업, 주거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입소인에게 필요한 조건이다. 3. 구직지원 및 구직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가족 중 일반구직을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서, 보호된 사회적일자리를 이용하지만, 직종도 경비나 청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 기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성(자격증 취득 포함)과 희망업종에 맞는 구직을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주택 : 노숙인 쉼터생활자 중 (입소기간 3개월 이상) 150만원 이상의 저축과 월 100만원 이상 소득자 중 단독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 성북,종로주거복지센터와 수시로 매입임대주택 상담 진행 한다. - 공동생활가정 : 홀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며, 월임대료 및 공과금 등 생활비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 시킨다. 5. 신용회복 : 시설 이용자 중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사업 추진하여 신속한 자활 자립 기반성을 마련한다. 6. 교육 및 문화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에 필요한 생활정보(주택,저축,신용회복 등) 및 감성과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 7. 퇴소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 동안 아침을여는집을 운영하면서 100여분의 퇴소인들이 쉼터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경우 다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회전문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단법인 나눔과미래</td> </tr> <tr> <td>시설명</td> <td>아침을여는집</td> <td>시설장</td> <td>추형선</td> </tr> <tr> <td>입소정원</td> <td>23명</td> <td>종사자수</td> <td>4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www.yesnanum.org</td> <td>전화번호</td> <td>02-924-1010</td> </tr> <tr> <td>E-mail</td> <td>plain1010@hanmail.net</td> <td>FAX번호</td> <td>02-924-1018</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0길 19 301호,401호(영훈주택) (우)02717</td> </tr> </table>	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시설명	아침을여는집	시설장	추형선	입소정원	23명	종사자수	4명	홈페이지	www.yesnanum.org	전화번호	02-924-1010	E-mail	plain1010@hanmail.net	FAX번호	02-924-1018	주소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0길 19 301호,401호(영훈주택) (우)02717	
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시설명	아침을여는집	시설장	추형선																					
입소정원	23명	종사자수	4명																					
홈페이지	www.yesnanum.org	전화번호	02-924-1010																					
E-mail	plain1010@hanmail.net	FAX번호	02-924-1018																					
주소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0길 19 301호,401호(영훈주택) (우)02717																							



애원희망홀

표 어	“따뜻한 서비스, 건강한 공동체”
설 립 목 적	노숙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노숙인의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요 업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98. 09. 28. - 신내노숙인쉼터(신내종합사회복지관부설) 개원 - 정원 12명 ① 1999. 01. 01. - 자활쉼터 프로그램 공모 / 지원. ① 2000. 01. 01. - 일자리 상담 지원. ① 2001. 02. 01. - 자활프로그램 지원. ① 2002. 01. 01. - 기능보강사업 지원. ① 2003. 04. 01. - 무료 의료 서비스 지원. ① 2004. 07. 01. -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복원 사업 지원. ① 2005. 03. 01. - 신용회복 서비스 지원. ① 2006. 01. 01. - 서울시 일자리 지원. ① 2007. 05. 01. - 신내노숙인쉼터 시설·운영 신고. ① 2008. 07. 01. - 상담원 도입. ① 2009. 12. 28. - 2009년 저축왕 포상 및 희망플러스통장 지원. ① 2010. 01. 01. -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① 2011. 01. 01. - 신용회복사업 지원. ① 2012. 02. 02. - 신내노숙인쉼터 시설등록. ① 2012. 12. 31. - 2012년 저축왕 저축관리 우수시설 종사자 포상. ① 2013. 05. 29. - 신내노숙인쉼터 시설·운영 재신고.(아웃리치사업운영) ① 2013. 06. 2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나눔 선정. ① 2014. 12. 31. - 제1대 김택구 원장 퇴임 ① 2015. 01. 01. - 제2대 양형모 원장 취임 ① 2016. 12. 31. - 제2대 양형모 원장 퇴임 ① 2017. 03. 01. - 제3대 우경연 원장 취임 ① 2017. 12. 21. - 애원희망홀 시설명칭변경
시 설 사 진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상담 : 상담 일정에 따른 상담(근로활동, 금전관리, 건강문제 등)을 진행 - 저축관리 : 통장관리를 통한 입·출금 금전 관리 서비스 -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가정법률상담소) 교육 및 대상자 상담 진행 - 사후관리 : 문제점, 욕구 등을 파악하여 유관 단체 및 전문가연계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및 조치 - 특별자활근로사업 : 입소 후 취업 전까지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통한 자활 의지 고취 및 경제적 지원 - 공공근로사업 : 일반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의 대상자에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경제적인 독립지원 - 취업박람회 : 구직 정보 및 시스템 경험을 통해 취업에 따른 문제점 확인 및 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 근로활동 유지를 통한 자활 의지 고취 및 자립 기반 형성 2. 문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대회 :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체육활동 진행 근로와 여가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삶의 질 향상 - 정서지지 : 분기 1회 진행 노숙인 권리, 노숙인 인권교육 2회 성공사례 2회 - 문화생활 : 나들이, 공연, 체육활동, 영화관람 프로그램 지원 - 명절차례상 : 연 2회 민속 명절 공동 차례상 진행 및 행사(민속놀이, 영화상영, 체육 활동) 등 가족과의 단절에서 올 수 있는 무력감 회복 3. 이미지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천사봉사단 : 희망천사 + 외부자원봉사자 봉사 및 활동 사전교육 진행 - 봉사자간담회 : 자원봉사자와 생활인들의 소통을 통한 친밀감 형성 4.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서비스 : 수시로 발생하는 환자에 따라 진료의뢰서 발급지원 보건소, 서울시립병원 진료 및 건강검진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신청 - 건강검진 : 연 1회 건강검진 진행 신규입소자 (입소10일 이내 검진 진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회복지법인애원복지재단</td> </tr> <tr> <td>시 설 명</td> <td>애원희망홀</td> <td>시 설 장</td> <td>우 경 연</td> </tr> <tr> <td>입소정원</td> <td>12명</td> <td>종사자수</td> <td>5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cafe.daum.net/3400sin</td> <td>전화번호</td> <td>02)3421-2707</td> </tr> <tr> <td>E-mail</td> <td>3400sin@hanmail.net</td> <td>FAX번호</td> <td>02)3421-2703</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우) 02044</td> </tr> </table>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애원복지재단			시 설 명	애원희망홀	시 설 장	우 경 연	입소정원	12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cafe.daum.net/3400sin	전화번호	02)3421-2707	E-mail	3400sin@hanmail.net	FAX번호	02)3421-2703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우) 02044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애원복지재단																							
시 설 명	애원희망홀	시 설 장	우 경 연																					
입소정원	12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cafe.daum.net/3400sin	전화번호	02)3421-2707																					
E-mail	3400sin@hanmail.net	FAX번호	02)3421-2703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우) 02044																							
시 설 분 보																								

표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보금자리
설립목적	위기상황에서 거리로 나선 여성노숙인과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벗어나 갈 곳 없는 아동을 동반한 모자가족을 보호하여 회복을 지원하고, 재활·자활지원을 통해 노숙을 이탈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 - 열린여성센터(용산구 서계동 33-276) 개소 2005. - 열린여성센터 2관 '우리들의좋은집'개소(용산구 서계동 247-44) : 여성노숙인 응급보호와 상담(2009. 5월 이후 기능 중단) 200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2012년 종료) - 「여성노숙인 주간센터 '일·문화카페'(공동작업장)운영 (2016년 종료) 2007. - 자활의집 운영 시작 (총 3호운영, 2018년 종료) 2008. -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2009. - 열린여성센터 신축이전 (서대문구 홍제동 334-70) - 자원봉사 인증기관 지정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10. - 여성응급보호시설 '우리들의좋은집' 재개소 (2012년 종료) 2011. - 2010년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 2015. - '장도리사업·장애인활동보조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참여 - 'MBC 라디오-지금은 라디오시대'공모 지원-'여성노숙인 가판대' 3개소 운영 - 여성노숙인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운영(민간 유코카캐리어스 지원) '성지하우스(서대문구 홍은동)' 개소 2016. - 서울특별시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 시범사업 선정 '씨드하우스(서대문구 증가로)' 개소 2018. - 한일 거주빈곤 실천 교류회 2019. - 일한 거주빈곤 실천교류 심포지움 (동경) "한국의 여성노숙인 문제와 지원정책, 서울시를 중심으로"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서비스제공기관 협약 (서울시)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여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례관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입소 초기 기본상담 진행) - 사례관리 (기본상담, 행정지원상담, 법률상담, 주거상담, 취업상담, 건강상담) - 사례회의 (주간 사례회의, 정신과 사례회의) 2. 심리재활 및 건강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지원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 정신건강관리 (증상 및 약물관리, 정신건강교육, 정신과치료지원) 3. 자활·자립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지원사업 (취업상담 및 교육, 특별자활근로, 서울시일자리맞기 사업, 공공근로, 지역 사회연계취업, 직업능력향상지원) - 신용회복지원 및 저축관리 4. 문화·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문화활동, 야유회, 지역사회활동 지원) - 교육프로그램(열린특강, 일자리 및 신용회복교육, 건강교육, 주거지원교육, 소방안전교육, 자격증취득교육,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부모교육) - 관계형성프로그램(신규입소인관계형성, 홀커밍데이) - 기타프로그램(생일잔치 프로그램, 인권지킴이단사업) 5.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숙인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지원사업(국고매칭) - 홀리스여성의 자립성공을 위한 심리·정서치유 및 자활역량강화지원사업(서울시) 6. 매입임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안정지원(일상 및 심리상담, 경제적 안정도모, 초기 정착지원) - 공동체성향상 (친목모임지원) - 주거유지지원 (주택관리, 임대료 및 공과금관리, 공적서비스연계) 7. 후원 및 자원활동가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관리 (집단 및 개별 후원자 모집 및 관리) - 홍보사업(홈페이지 운영관리, 소식지 발송 등) - 자원활동가 관리(자원활동가 모집 및 관리, 관계 유지) 8. 직원교육 훈련 및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교육 (직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전문 분야별 교육지원) 9. 특별사업 : 지원주택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자립생활지원, 건강관리지원, 심리정서지원, 교육지원, 경제생활지원, 지역연계 활동 등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단법인 열린복지</td> </tr> <tr> <td>시설명</td> <td>열린여성센터</td> <td>시설장</td> <td>서정화</td> </tr> <tr> <td>입소정원</td> <td>30명</td> <td>종사자수</td> <td>7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www.homelessness.or.kr</td> <td>전화번호</td> <td>02)704-5395</td> </tr> <tr> <td>E-mail</td> <td>goodwhouse@daum.net</td> <td>FAX번호</td> <td>02)704-5514</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td> </tr> </table>	운영법인	사단법인 열린복지			시설명	열린여성센터	시설장	서정화	입소정원	30명	종사자수	7명	홈페이지	www.homelessness.or.kr	전화번호	02)704-5395	E-mail	goodwhouse@daum.net	FAX번호	02)704-5514	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운영법인	사단법인 열린복지																							
시설명	열린여성센터	시설장	서정화																					
입소정원	30명	종사자수	7명																					
홈페이지	www.homelessness.or.kr	전화번호	02)704-5395																					
E-mail	goodwhouse@daum.net	FAX번호	02)704-5514																					
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시설정보																								

표 어	장애노숙인의 자립과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행복한 공동체!
설 립 적	노숙인들 중에 특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장애노숙인의 손상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노숙인의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재사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 시설 개소 / 천애재활원 허 흥 원장 (희망의집 시설장 겸임) ▶ 2003. - 「공공근로 사업」 참여 ▶ 2004. - 「희망캠프」 실시 ▶ 2005. - 「특별자활근로사업」 참여 ▶ 2007. - 김규남 시설장 취임 ▶ 2008. - 「일자리갯기 사업」 참여 ▶ 2008. - 「신용회복 사업」 참여 ▶ 2009. - 「금전관리훈련 프로그램」 시행 ▶ 2010. - 하태선 시설장 취임 ▶ 2010. - 시설이전 / 은평구 녹번로 7-7 ▶ 2011. - 「대인관계훈련(분노조절)프로그램」 시행 ▶ 2014. - 안주석 시설장 취임 ▶ 2016. - 지역후원자 네트워크 조직 ▶ 2017. - 「자원활동가 프로그램(밀반찬 만들기 등)」 시행 ▶ 2018. - 「어울림 생활공예 프로그램」 시행
시 설 사 진	 

주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장애노숙인 특화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례관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행정지원, 법률상담, 주거상담 등 - 주간회의 및 생활인 간담회를 통한 사례관리 2. 심리재활 및 건강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 신규입소인의 기초건강검진 및 연 1회 정기건강검진 실시 - 의료서비스 : 보건소 및 국, 공립병원을 이용한 치료지원 3. 자활 및 자립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상담 및 교육 - 특별자활근로 - 공공근로 - 신용회복지원 - 저축관리 4. 문화및 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활동 :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 정서적 안정 및 친목도모 - 어울림 생활공예 : 지역주민, 봉사활동 참여 학생들과 함께하는 정서지원사업 - 일자리 및 신용회복 교육 - 주거지원, 소방안전, 인권, 성폭력 예방교육 5. 후원 및 자원활동가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관리 - 자원활동가 교육 및 관리 			
	시 설 기 본 정 보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천애원	
	시 설 명	천애원 희망의집	시 설 장	안 주 석
	입소정원	15명	종사자수	2명
	홈페이지	http://cafe.daum.net/hope-homeless	전화번호	02)952-4564
	E-mail	chunae2010@naver.com	FAX번호	02)6442-4568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7		

“함께하는 마음으로”
청담광명의집

표어	함께하는 마음으로
설립목적	청담광명의집은 실직,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오랫동안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실직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숙식제공과 의료서비스지원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 청담광명의집 시설 개소. (컨테이너 6동) ▶ 2004. - 청담광명의집 시설 이주 (청담종합사회복지관내 구관 1층) ▶ 2010. - 일자리 갖기 사업 진행, 신용회복사업 진행, 인문학강좌 실시 ▶ 2011. - 기능보강사업(방수공사)실시, 알콜중독 예방교육 실시 ▶ 2012. - 소규모생활시설 안전설비지원사업 실시 ▶ 2013. - 기능보강사업(소방설비)선정 - 금천구 지역사회 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금천구 보건소) ▶ 2017. - 청담광명의집 시설장 겸인에서 상근으로 시설장 변경 - 사회복지법인 “동행” 지원사업 선정 (화장실 공사 실시) - 기능보강사업 선정 (옷장 교체) ▶ 2019. - 서울시 지원으로 조리사 총원 (1명 → 2명)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식제공(매일, 점심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가족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 - 입소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2. 심리상담(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을 통한 개인의 문제와 욕구파악. - 심리·정서적 생활안정을 도모. 3. 의료서비스(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위치한 보건소나 국·시립병원을 통한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응급상황 대비. 4. 취업알선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안내(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및 공공근로 참여 안내 - 고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선. 5. 개인 신용회복 지원(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파산 면책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 신용불량상태로 과도한 채무 해결 방안마련.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신청 안내 및 지원(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 중 수급권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신청정보를 제공. - 퇴소 후 자립처 마련 및 수급권 취득의 기회 알림 및 제공. 7 문화생활지원(연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활(영화관람 등)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시설기본정보	시설명	청담광명의집	시설장	고순석	
	입소정원	15명	종사자수	4명	
	홈페이지	http://chungdam.or.kr/bbs/board.php?bo_table=b02_07_06		전화번호	02)803-1377
	E-mail	chungdamhome@hanmail.net		FAX번호	02)803-1376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7			

표어	여성노숙인의 인권존중과 자립지원을 통한 재사회화에 기여한다.
설립목적	1998년 11월 IMF 경제적 파탄으로 노숙인이 급증하던 때, 사단법인 우리는 선우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화엄동산의 문을 열고, 위기의 여성들이 위험한 길거리를 헤매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고 여럿이 함께하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도 희망을 복돋고 복을 나누는 인연처가 되도록 여성노숙인을 보호하여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심리적 재활·자활독립 지원을 통해 노숙 상태를 이탈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함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11. 01. - 여성노숙인 쉼터 화엄동산 개소(목동) 위탁법인 (사)우리는 선우 ▶ 1999. 12. 01. - 서울시 우수복지시설 선정 ▶ 2003. 05. 01. - 여성노숙인 자활프로그램 프로젝트 선정, 서울시 지원 500만원 미상작업장 마련 ▶ 2003. 08. 10. - 자활사업장 (의류수선) 개소 ▶ 2005. 03. 20. -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조계사) ▶ 2007. 04. 01. - 서울시 중구 동호로 17길 75 단독주택 마련 성공, 장소 이전 ▶ 2008 ~ 2011. - 경희대 실천인문학 프로그램 시행 (1차, 2차, 3차, 4차) ▶ 2013. 12. 30. - 공동생활가정 입주 자립 ▶ 2016. 12. 30. -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립 ▶ 2017. ~ 2018. - 지역사회 소통, 지역축제 자립지원 기금 부스 마련 ▶ 2018. ~ 2019. -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립 ▶ 2017. ~ 2019. -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지역사회 무료급식 참여, 경로당 행사 참여, 중구 어르신 문화여가프로그램 자원봉사 참여 ▶ 2019. 05. 13. -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부스참여 (천연비누만들기 체험부스 진행) ▶ 2019. 05.~11. - 흠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삶(도자기 만들기 10회기 진행) ▶ 2017.~2019. - 자립지원을 위한 천연비누사업,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중구 경로당, 남대문·황학동쪽방, 신당동 개미마을, 차상위계층 외)
시설사진	 

주요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여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양급식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공급으로 생활인의 건강향상에 기여 - 영양급식 지원사업으로 절기음식 및 과일, 육류의 균형 있는 식단 2. 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연계 및 저축관리로 계획성 있는 자립준비 -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보제공 상담 3. 지역사회 교류 및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관내 지역문화제 행사참여 및 나눔 - 중구관내 지역 행사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 4. 간담회 및 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의 고충처리 접수 및 개선방안 마련 - 시설, 이용인 상호 간 의견 나눔을 통한 소통의 시간 마련 - 이용인 스스로 문제해결과 조율의 기회를 제공 5. 자활 프로그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인문학을 통한 재사회화 프로그램 진행 - 옷 수선, 퀼트, 도자기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체험부스 및 지역사회 나눔) 6. 문화여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문화생활과 힐링을 위한 다양한 나들이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여가 활동 진행 - 설, 추석 명절 상차림 함께하기 및 민족고유 명절놀이 진행 7. 중구 및 서울시 건강 자활 체육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관내 노숙인 시설 교류 및 이용인의 건강 증진 - 서울시 노숙인 시설 교류, 이용인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단법인 우리는선우</td> </tr> <tr> <td>시설명</td> <td>화엄동산</td> <td>시설장</td> <td>임희선</td> </tr> <tr> <td>입소정원</td> <td>15명</td> <td>종사자수</td> <td>3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blog.naver.com/hwaum05</td> <td>전화번호</td> <td>02)2642-1363</td> </tr> <tr> <td>E-mail</td> <td>hwaums@naver.com</td> <td>FAX번호</td> <td>02)2642-7272</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75</td> </tr> </table>	운영법인	사단법인 우리는선우			시설명	화엄동산	시설장	임희선	입소정원	15명	종사자수	3명	홈페이지	blog.naver.com/hwaum05	전화번호	02)2642-1363	E-mail	hwaums@naver.com	FAX번호	02)2642-727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75	
운영법인	사단법인 우리는선우																							
시설명	화엄동산	시설장	임희선																					
입소정원	15명	종사자수	3명																					
홈페이지	blog.naver.com/hwaum05	전화번호	02)2642-1363																					
E-mail	hwaums@naver.com	FAX번호	02)2642-727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75																							
시설정보																								



표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
설립적 목적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운영 사업,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노숙인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운영사업, 그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노숙위기 계층과 빈곤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통해 제한적인 활동의 한계를 넘어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 '사랑과 자유의 집' 개소식 ▶ 2004. - 영등포지역 희망의집 '행복한우리집' 확장 개원함 ▶ 2010. - 대표자 변경(이범승 원장 취임) ▶ 2012. - 사단법인 '나눔은희망과행복' 법인 설립 ▶ 2013. - '희망나무'로 시설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제안사업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선정(총예산 7억) ▶ 2014. - 자존감 프로그램 진행(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민속촌) ▶ 2015. - 자원봉사를 통한 자존감 회복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렛츠런CCC! 나들이 행사(롯데월드) ▶ 2017.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으로 기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 자원봉사를 통한 자존감 회복 지원 사업(자원봉사 및 나들이 행사) - 자활프로그램 나를 알기 위한 '그림 여행' 진행 ▶ 2018. - 자활프로그램 '뮤직테라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프로그램 '그림 여행' 진행 ▶ 2019.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2019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 선정 (청년지원주택 사업)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 및 급식을 제공해 자활의지를 고취 - 다양한 상담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 및 자활의 기반 마련 - 노숙인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긍정적으로 전환 - 근로 및 저축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 - 시립 및 국공립병원, 개인병원을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2.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시설 퇴소자 또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 청년지원주택 운영(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2019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 - 공동생활가정 지원(그룹홈) 3. 노숙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 후 주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 응급지원(주거비, 의료비)이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각 지원 4. 노숙인 및 시설운영을 위한 기부금품 모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식지 발행 - CMS 모금 - 홈페이지 운영 5.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나무 영화동아리 - HOPE 등산동아리 - 한마음 봉사단 - 나를 알기 위한 '그림여행' - 뮤직테라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나눔은희망과행복</td> </tr> <tr> <td>시설명</td> <td>희망나무</td> <td>시설장</td> <td>이범승</td> </tr> <tr> <td>입소정원</td> <td>25명</td> <td>종사자수</td> <td>5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www.hopeoftree.org/</td> <td>전화번호</td> <td>02-846-3070</td> </tr> <tr> <td>E-mail</td> <td>ydphappy@naver.com</td> <td>FAX번호</td> <td>02-2675-0643</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시 은평구 통일로92길 37-4(불광동, 동산주택)</td> </tr> </table>	운영법인	나눔은희망과행복			시설명	희망나무	시설장	이범승	입소정원	25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www.hopeoftree.org/	전화번호	02-846-3070	E-mail	ydphappy@naver.com	FAX번호	02-2675-0643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92길 37-4(불광동, 동산주택)	
운영법인	나눔은희망과행복																							
시설명	희망나무	시설장	이범승																					
입소정원	25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www.hopeoftree.org/	전화번호	02-846-3070																					
E-mail	ydphappy@naver.com	FAX번호	02-2675-0643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92길 37-4(불광동, 동산주택)																							
시설정보																								

표 어	한 알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자가족의 행복과 자립을 돕는다.
설 립 목 적	가정경제의 어려움, 사업 실패, 배우자 사망,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노숙 직전에 처했거나 실제 노숙을 하고 있는 모자가족을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 노숙인 자활시설 인가. 1대 안진식 원장님 취임. ▶ 2006. - 단신계층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임대주택사업(7세대) 개시. ▶ 2008. - 매입임대주택 1개동(7세대) 추가 선정. - 2대 황성희 원장님 취임. ▶ 2009. - 매입임대주택 1개동(6세대) 추가 선정. ▶ 2010. - KT&G 복지재단 지원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 사업' 선정 ▶ 2012.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선정.(2012년~2014년) - 서울시 복지재단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생활실 10호 리모델링. ▶ 2013. - 로터리클럽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생활실 화장실 10호 리모델링. ▶ 2015. -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선정 ▶ 2019. - 3대 김현숙 원장님 취임.
시 설 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시설 전경 사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생활실(원룸형태) 사진</p> </div> </div>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모자가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립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시 정착지원 사업 - 상담 및 사례관리 -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신용회복, 이혼소송 등) -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 저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자활프로그램 운영(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 & 요리교실) - 매입임대주택 운영 - 퇴소시 정착지원 사업 2. 아동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방 운영을 통한 방과 후 학습 지도 및 학습지 지원 - 1:1 결연 후원금 및 장학금 지원 연계 - 문화체험활동 지원 3. 가족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양육코칭 프로그램 운영 - 가족여행 및 나들이 행사 - 명절 행사 - 가정의 달 행사 및 송년 행사 4. 각종 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인권 교육 및 생활인 인권교육 - 각종 안전 교육 및 생활관련 교육 등 -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해외연수, 보수교육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운영법인</td> <td colspan="3">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td> </tr> <tr> <td>시설명</td> <td>원동회</td> <td>시설장</td> <td>김 현 숙</td> </tr> <tr> <td>입소정원</td> <td>24명</td> <td>종사자수</td> <td>4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www.angelsheaven.or.kr</td> <td>전화번호</td> <td>02)372-5905</td> </tr> <tr> <td>E-mail</td> <td>heendolhwoi@naver.com</td> <td>FAX번호</td> <td>02)372-59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12(응암동) (우)03481</td> </tr> </table>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시설명	원동회	시설장	김 현 숙	입소정원	24명	종사자수	4명	홈페이지	www.angelsheaven.or.kr	전화번호	02)372-5905	E-mail	heendolhwoi@naver.com	FAX번호	02)372-5915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12(응암동) (우)03481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시설명	원동회	시설장	김 현 숙																					
입소정원	24명	종사자수	4명																					
홈페이지	www.angelsheaven.or.kr	전화번호	02)372-5905																					
E-mail	heendolhwoi@naver.com	FAX번호	02)372-5915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12(응암동) (우)03481																							

· 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수도회
늘푸른자활의집

표어	(미션) 회복으로 가는 나침반
설립목적	노숙인에 대한 각종 자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구성원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통합 및 인간적인 삶의 영위를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11. - 녹색농원 개원 2003.10. -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DAYTOP) 도입 2004.02. - 늘푸른자활의집으로 기관명 변경 2004.05. - 중간의집 개소 2005.04. - 자립지원센터 증축 2006.09. - 우수부랑인복지시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2007.04. - 무료직업소개소 등록 2007.06. - 사회복지 윤리경영 선도기관 선정(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8.12. - 최우수부랑인복지시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2010.11. - 경기도박중독치유센터 업무협력협약 체결 2011.12. - 최우수부랑인복지시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2012.06.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재활시설로 변경 2015.03. -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A'등급 2017.08. - 제6대 시설장 조창운 부임 2018.01. -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A'등급 2020.08. - 2020년 사회복지의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주요사업	<p>· 시설 유형: 노숙인 재활시설</p> <p>· 주요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회복과 자립의 과정</th> <th>주요사업</th> </tr> </thead> <tbody> <tr> <td>탐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등 각종 중독 치료와 근로활동을 통한 재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 대상 · 거리상담, 체험가족관리 </td> </tr> <tr> <td rowspan="5">회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행동·사고·감정 유형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 아침모임, 마우리모임, 도움주기세미나, 하우스미팅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행동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 · 정규집단, 일요모임, 세로미모임, 초기상담, 인성교육, 서예치료, 생일잔치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탐색하고 개인적인 성장 · 세미나(직업치료, 자기평가, 주제토론 등), 중독회복교육, 안문학강의, AA메시지, GA메시지, 동기강화집단상담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고 대인관계기술을 습득 · 전체 자치회의, 상위거주자 자치회의, 여가활동, 생활체육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돕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건강증진 · 건강검진, 외래진료, 간호사정, 왕진 및 외래진료, 이동무료진료, 보건교육 </td> </tr> <tr> <td rowspan="5">자립준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회복과 공동체 생활의 적응을 위해 정기 개인상담, 사례경도회의를 실시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개인정기상담, 사례경도회의, 슈퍼비전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 단계 · 취업준비 단계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라는 삶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함 · 희망기금, 신용회복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 단계별 목표수립, 취업환경경험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생활의 안정과 유지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사회복귀 준비 · 디디이신화교육, 친교모임, 격려 프로그램, 수요모임, 직장생활세미나, 법률지원, 취업향 방문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중간의 집, 주거지원(전세임대주택), 직업능력개발, 자기평가서, 자립축하식 </td> </tr> <tr> <td>사회복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의 고립감을 극복하고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지지망을 통해 원만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 · 늘푸름터, 자립가족 방문, 자립자 행사 </td> </tr> </tbody> </table>	회복과 자립의 과정	주요사업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등 각종 중독 치료와 근로활동을 통한 재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 대상 · 거리상담, 체험가족관리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행동·사고·감정 유형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 아침모임, 마우리모임, 도움주기세미나, 하우스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행동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 · 정규집단, 일요모임, 세로미모임, 초기상담, 인성교육, 서예치료, 생일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탐색하고 개인적인 성장 · 세미나(직업치료, 자기평가, 주제토론 등), 중독회복교육, 안문학강의, AA메시지, GA메시지, 동기강화집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고 대인관계기술을 습득 · 전체 자치회의, 상위거주자 자치회의, 여가활동,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돕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건강증진 · 건강검진, 외래진료, 간호사정, 왕진 및 외래진료, 이동무료진료, 보건교육 	자립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회복과 공동체 생활의 적응을 위해 정기 개인상담, 사례경도회의를 실시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개인정기상담, 사례경도회의, 슈퍼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 단계 · 취업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라는 삶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함 · 희망기금, 신용회복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 단계별 목표수립, 취업환경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생활의 안정과 유지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사회복귀 준비 · 디디이신화교육, 친교모임, 격려 프로그램, 수요모임, 직장생활세미나, 법률지원, 취업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중간의 집, 주거지원(전세임대주택), 직업능력개발, 자기평가서, 자립축하식 	사회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의 고립감을 극복하고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지지망을 통해 원만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 · 늘푸름터, 자립가족 방문, 자립자 행사 						
	회복과 자립의 과정	주요사업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등 각종 중독 치료와 근로활동을 통한 재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 대상 · 거리상담, 체험가족관리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행동·사고·감정 유형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 아침모임, 마우리모임, 도움주기세미나, 하우스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행동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 · 정규집단, 일요모임, 세로미모임, 초기상담, 인성교육, 서예치료, 생일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탐색하고 개인적인 성장 · 세미나(직업치료, 자기평가, 주제토론 등), 중독회복교육, 안문학강의, AA메시지, GA메시지, 동기강화집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고 대인관계기술을 습득 · 전체 자치회의, 상위거주자 자치회의, 여가활동,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돕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건강증진 · 건강검진, 외래진료, 간호사정, 왕진 및 외래진료, 이동무료진료, 보건교육 																								
자립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회복과 공동체 생활의 적응을 위해 정기 개인상담, 사례경도회의를 실시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개인정기상담, 사례경도회의, 슈퍼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 단계 · 취업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라는 삶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함 · 희망기금, 신용회복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 단계별 목표수립, 취업환경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생활의 안정과 유지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사회복귀 준비 · 디디이신화교육, 친교모임, 격려 프로그램, 수요모임, 직장생활세미나, 법률지원, 취업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중간의 집, 주거지원(전세임대주택), 직업능력개발, 자기평가서, 자립축하식 																								
사회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의 고립감을 극복하고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지지망을 통해 원만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 · 늘푸름터, 자립가족 방문, 자립자 행사 																								
시기정보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수도회</td> </tr> <tr> <td>시설명</td> <td>늘푸른자활의집</td> <td>시설장</td> <td>조창운</td> </tr> <tr> <td>입소정원</td> <td>60명</td> <td>종사자수</td> <td>15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s://evergreentc.modoo.at/</td> <td>전화번호</td> <td>031-953-3492</td> </tr> <tr> <td>E-mail</td> <td>green-1130@hanmail.net</td> <td>FAX번호</td> <td>031-953-3490</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td> </tr> </table>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수도회			시설명	늘푸른자활의집	시설장	조창운	입소정원	60명	종사자수	15명	홈페이지	https://evergreentc.modoo.at/	전화번호	031-953-3492	E-mail	green-1130@hanmail.net	FAX번호	031-953-3490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수도회																								
시설명	늘푸른자활의집	시설장	조창운																						
입소정원	60명	종사자수	15명																						
홈페이지	https://evergreentc.modoo.at/	전화번호	031-953-3492																						
E-mail	green-1130@hanmail.net	FAX번호	031-953-3490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표 어	(미션) 다시서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회복 베이스 캠프 (비전) 회복과 탈노숙의 길을 만드는 공동체의 모델이 되자
설 립 적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함.
주 요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99. - 노숙인 응급쉼터 서울 자유의 집 개소(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45) ② 2000. - 재노숙방지를 위한 2차 재활프로그램 실시 ③ 2001. - 치과진료소 개소(열린치과의사회) ④ 2002. - 자활영리단 발대식 ⑤ 2004. -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개소(알코올/정신건강 노숙인 전문재활 쉼터) ⑥ 2005. - 자활의 집 운영 시작 ⑦ 2006. - 정신장애 노숙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비전새움터' 설치 및 개소 ⑧ 2007. - 거리건강상담 사업 실시 - 「노숙인 음주문제해결을 위한 단일사례연구」 발제 및 워크샵 ⑨ 2008. - 매입임대주택 운영(서울 성동구 성수동 24실, 48명) ⑩ 2012. - 「노숙인알코올의존 회복을 위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전문재활시설 이용 정신장애 노숙인의 특성에 대한 추이분석 연구」 - 제2회 서울시 노숙인자활체육대회 주관(1,300명) ⑪ 2013.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으로 위탁법인 변경 - 녹색자금공모사업, 건물벽화 그리기 - 비전인권위원회 구성(현 비전인권지킴이단) ⑫ 2014. - 「장애인활동보조인 파견사업」 선정(공동모금회 사업) ⑬ 2015.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재수탁 운영 ⑭ 2016. - 「서울특별시 알코올중독 노숙인 지원주택 20호」 운영기관 선정 - 「알코올의존을 지닌 노숙인의 중독인식 및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⑮ 2017. - 「음주문제를 지닌 노숙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성과지표 개발 연구」 - 비전나눔봉사회 서울시 자원봉사상 서울시장상 수상 ⑯ 2018.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네트워크지원사업」 선정(3년간 약 3억원) ⑰ 2019.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주택모델화 사업」 선정(3년간 약 6억원)
시 설 사 진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여성 자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동절기 산재지역 4개구(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거리상담 - 무더위 쉼터, 서울시 위기대응콜(강북동부권역) 2. 알코올 해독센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알코올 의존 노숙인 입소 유도 및 초기 적응 - 알코올 금단증상 해소를 통한 재음주, 재거리노숙 방지 - 정신과 전문의(촉탁의사) 진료 3. 알코올 회복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알코올 재활프로그램(알코올 중독의 이해, 인문학 - 정서지원프로그램, 간담회, 여행 등), 자립지원 4. 정신건강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자조적 동아리활동 지원, 동료생명지킴이활동, 자립지원 - 정신건강회복지원 프로그램(정신건강교육, 정서지원프로그램, 자치회의, 여가지원 등) 5. 취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공공일자리(공공근로, 특별자활 근로 등) - 민간일자리 연계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6. 주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임대주택 주거 운영기관(매입임대 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입주 지원 및 사례관리 등) 7. 지역사회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2년차 진행(동거동락 : 성동구)/ 3억 - 용답도서관 협약 : 인문학(500만원), 작은도서관(도서대여) - 용답동마을축제 참여 : 2019년 6월1일(난타동아리 공연, 체험학습 8개) - 이웃살피미(성수복지관) 사업 : 용답동 고독사 위험군(중장년) 1인 가구 5명 방문, 목공체험 및 정기회의 - 성동구 협치사업 선정 : 2020년 용답동 목공동호회 7,600만원 예산 확보 			
	시 설 정 보	운영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시 설 명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시 설 장	한 명 섭
	입소정원	189명	종사자수	34명
	홈페이지	www.vtc.or.kr	전화번호	02)2243-9183
	E-mail	vtc@hanmail.net	FAX번호	02)2243-9188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십자가 심터

표어	입소자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
설립목적	십자가심터는 노숙인들의 자활 및 재활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 분들은 술, 마약, 도박 등의 중독으로 본인의 몸과 인격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에 이르러 사회에 범죄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십자가심터는 이러한 중독자들을 치유하여 사회의 필요한 일원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목적으로 함.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98. - 십자가심터 시작 (30명) ① 1999. - LA에서 제1회 마약 및 중독자 치유 상담 지도자 세미나 개최 - 십자가 상담 치유, 중독자 치유 생활 센터 설립 ① 2000. - 치유 재활 프로그램 워크숍 실시 - 치유원 부지 및 건물매입 - 2000년 제1차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 1회 신나는 CEO 영어캠프 실시 (3박4일), 51명 참가 - “십자가 치유원” 이전(강원도 횡성군 석원면 석화3리719-1) - 2000년 제2차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 실시 ① 2001. - 십자가 심터 이전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6가길 24-1) - 2001년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거듭나기” 실시 - 노숙인 특별 보호사업 보조금 지원 시설 인정 (서울특별시) ① 2008. - 시설장 임명 (안일권) ① 2009. - 성북정신보건센터 노숙인 점검 설문 조사 ① 2010. - 치유 재활프로그램 졸업식 “사랑의 잔치” ① 2011. - 시설장 변경 (안치영) ① 2013. - 노숙인 법 개정으로 인한 시설 재신고(정원30명 → 정원6명) 자활시설에서 재활 시설로 변경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남성 노숙인 재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자활 관련 교육, 경제교육, 사회기술 훈련 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생활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 함. - 목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인으로 필요한 일반 생활지식 습득 다양한 자활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및 자립 의지 고취 - 프로그램: 내적치유프로그램, 생활 지원사업(급식 및 숙박 제공), 입소인 상담(초기, 생활입소, 신앙, 취업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문화사업(나들이 프로그램 및 인권 안전교육), 자립 지원사업(신분복원, 신용회복), 운동 프로그램(배드민턴, 등산), 봉사활동 프로그램 2. 자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입소인의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자활서비스를 통해 욕구를 해소하고 자립하도록 지원 - 목적: 기초생활 지원을 통한 신체적 건강회복, 재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한 십자가심터 입소인 중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접하게 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함. - 분야: 반일제 근무, 서울시 일자리, 공공근로, 취업 성공 패키지 3. 의료 및 건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입소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연계 - 목표: 노숙인의 무너진 건강체계를 바로 잡는다 4. 목공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나무를 이용해 직접 생활하는 용품과 시설에 생활하는 곳에 보수를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직접 만들어 성취감을 높인다. - 지원처 : 서울시 자활지원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세계 십자가 선 교회</td> </tr> <tr> <td>시설명</td> <td>십자가심터</td> <td>시설장</td> <td>안치영</td> </tr> <tr> <td>입소정원</td> <td>6명</td> <td>종사자수</td> <td>2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www.wcrossm.org/</td> <td>전화번호</td> <td>02-941-2503</td> </tr> <tr> <td>E-mail</td> <td>scrossm@hanmail.net</td> <td>FAX번호</td> <td>02-941-2510</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6가길 24-1</td> </tr> </table>	운영법인	세계 십자가 선 교회			시설명	십자가심터	시설장	안치영	입소정원	6명	종사자수	2명	홈페이지	http://www.wcrossm.org/	전화번호	02-941-2503	E-mail	scrossm@hanmail.net	FAX번호	02-941-2510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6가길 24-1	
운영법인	세계 십자가 선 교회																							
시설명	십자가심터	시설장	안치영																					
입소정원	6명	종사자수	2명																					
홈페이지	http://www.wcrossm.org/	전화번호	02-941-2503																					
E-mail	scrossm@hanmail.net	FAX번호	02-941-2510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6가길 24-1																							





표어	(미션) 여성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한다.
설립목적	알코올-정신질환을 가진 여성 노숙인들이 생활안정을 되찾고 의료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 의식을 고취시키고 최종적으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함.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7. - 서울시 여성재활쉼터 공모선정(서울복지재단) ① 2007. - 여성재활쉼터 “아가페의 집” 개관, 제1대 이종욱 원장 취임 ① 2008. - 성북구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협약 ① 2009. - 월계 푸드뱅크와 협약 ① 2009. - 서울시 재수탁 체결 ① 2009. - 서울시 노숙인저숙왕선발대회 시설부분 장려상 ① 2010. - 제2대 엄원숙 원장 취임 ① 2010. - 서울시 노숙인저숙왕선발대회 시설부분 우수상, 입소자 2명 저숙왕 개인부분 서울시장상 수여 ① 2011. - '백주년기념교회' 프로그램 운영 후원 ① 2011. - 매입임대주택운영기관선정 ① 2011. - 서울시 노숙인저숙왕선발대회 시설부분 우수상, 장려장 수상 ① 2011. - '사랑의 복지재단' 프로그램 운영 후원 ① 2012. - 아가페의집 리모델링 공사-(재) 서울디자인센터 후원 ① 2013. - 서울시 노숙인저숙왕선발대회 시설부분 2개부분 수상 -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운영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 ① 2014. - '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 지원사업 선정 ① 2015.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문화활동지원사업' 선정 ① 2016.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① 2017. - 성북구 장위동으로 시설 이전 ① 2017. - 운영법인 사단법인 아가페복지로 변경 ① 2018. - 보건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에서 우수등급 선정
시설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여성 노숙인 재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서비스 : 균형적인 영양섭취와 안정된 잠자리로 건강 및 안정 유지 - 일상생활훈련 : 협동과 책임감을 익히고 일상생활 능력 회복 2. 의료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의료서비스/활력증상 - 보건소 및 병원연계 건강검진/정신과, 타과 진료/혈압, 몸무게, 복부둘레 등 체크 - 재활방지도육 - 알코올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약물복용 등 교육 3. 상담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상담/심층상담/생활상담 - 상담을 통해 생활인의 욕구파악, 안정적이며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사례관리/사후관리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사례회의를 통해 변화된 상황 파악 및 관리 4. 심리정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요법 : 만다라,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자신에 대한 느낌표현 및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 - 음악요법 : 악기, 노래, 연주 등 그룹활동으로 긴장완화 및 타인과의 교류 향상 - 문화활동 : 영화 및 공연 등의 관람을 통한 심리정서 회복 5. 신체인지활동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레크리에이션 : 다양한 게임 및 놀이, 요가 등으로 자기표현의 기회제공 - 생활체육 : 소근육-대근육 운동으로 신체적 근육위축 예방 및 신체기능 증진 - 종이접기 : 색종이, 도화지, 기타 재료 등을 이용하여 작품만들기 6. 사회적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술훈련 :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 및 교육, 현장실습 - 직업재활훈련(쇼핑백접기)/직업재활(일자리연계) - 금전관리 : 저축 및 용돈관리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7. 공동체문화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모임/아가페공동체 8. 제도권내보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복원/국민기초수급/신용회복 등 9. 주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주택 지원 10. 지역사회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사업/자원봉사활동사업/지역네트워크/후원사업/인권지킴이단 			
	운영법인	사단법인 아가페복지		
시설정보	시설명	아가페의 집	시설장	엄원숙
	입소정원	30명	종사자수	8명
	홈페이지	http://www.agapebokji.or.kr	전화번호	02)942-9193
	E-mail	agape-0702@hanmail.net	FAX번호	02)942-9194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17길 6(장위동, 예담빌) (우)02755		

표어	노숙인의 별세를 별처럼 밝게! 빛나게! 아름답게!
설립목적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노숙인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평안한 처소를 제공하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임종시 가족처럼 슬프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환송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10. - 서울특별시로부터 '노숙인보호시설(쉼터)'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 ▶ 2011.05.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개원 ▶ 2011.08. - 다일작은천국 입소자 중 첫 사망신고 발생 ▶ 2011.11. - 서울특별시 지원 "제1회 다시한번일어서기" 노숙인영성수련회 개최 ▶ 2012.01. - 다일작은천국 제1회 천국환송식 진행 ▶ 2012.06. - 서울특별시 지원 "제2회 다시한번일어서기" 노숙인영성수련회 개최 ▶ 2013.05. - 시설 유형 '노숙인요양시설'로 변경 ▶ 2013.09. - 서울특별시 지원 "제3회 다시한번일어서기" 노숙인심신수련회 개최 ▶ 2017.01. - SBS 일요스페셜 "마지막 날들" 방영 (입소자 3년간 밀착 다큐멘터리 영상) ▶ 2017.10. - 특정 암말기환자를 위한 "내 생애 마지막 아내와 함께 하는 특별한 하루" 진행 ▶ 2018.03. - 동대문구 민관 협치 "다일문화대학" 제1학기 및 제2학기 운영 ▶ 2019.11. - 현재까지 다일작은천국 입소자 사망신고 총50건 중 총31회 천국환송식 진행
시설사진	 

주요사업	· 시설 유형: 노숙인요양시설 (남성)																								
	· 주요사업 1. 간호 및 요양 케어 사업 2. 호스피스케어 사업 3. 천국환송식 사업 4. 가족간 재회 및 화해 도모 사업 5. 각종 정서지원 사업 6. 자립자활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연계 사업 8. 자원봉사 활동 장려 사업																								
시설정보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td> </tr> <tr> <td>시설명</td> <td>다일작은천국</td> <td>시설장</td> <td>이명현</td> </tr> <tr> <td>입소정원</td> <td>43명</td> <td>종사자수</td> <td>8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www.dail.org</td> <td>전화번호</td> <td>02)2213-8004</td> </tr> <tr> <td>E-mail</td> <td>lh1004@dail.org</td> <td>FAX번호</td> <td>02)2242-7004</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td> </tr> </table>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시설명	다일작은천국	시설장	이명현	입소정원	43명	종사자수	8명	홈페이지	www.dail.org	전화번호	02)2213-8004	E-mail	lh1004@dail.org	FAX번호	02)2242-7004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시설명	다일작은천국	시설장	이명현																					
	입소정원	43명	종사자수	8명																					
	홈페이지	www.dail.org	전화번호	02)2213-8004																					
	E-mail	lh1004@dail.org	FAX번호	02)2242-7004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표어	사랑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여성 노숙인을 위한 힐링센터로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설립 목적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여성 노숙인들의 의식주 및 의료적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가족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 06.19 - 서울시부녀보호소(서울 중구 주자동 41) ▶ 1963. 05.10 - 시설 이전(서울 동작구 대방동 345-1) ▶ 1998. 11.21 - 현 위치로 이전(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 4-1) ▶ 2001. 06.11 - 서울시여성보호센터로 명칭 변경 ▶ 2008. 02.01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민간위탁 ▶ 2011. 02.26 - EBM포럼 후원 “사랑의 샘터” (치과진료) 의무실 내 개소 ▶ 2012. 01.01 - 센터 전 거주인 KOMI chart system 실시 ▶ 2012. 07.27 - 자활작업장 「들국화 꿈터」개소식 ▶ 2012. 12.19 - 제 18대 대통령 선거 (거주인 113명 참정권 행사) ▶ 2013. 01.31 - 스프링클러 설치완료 (준공) ▶ 2013. 05.17 - 설립 52주년 (민간위탁 5주년) 기념식 ▶ 2015. 03. - 2014년도 보건복지부 노숙인분야 사회복지시설평가 최우수기관 선정(A등급) ▶ 2016. 11.08 - 노숙인시설 인권관련 전수조사 ▶ 2018. 06.19 - 20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 2019. 01.31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위탁 종료 ▶ 2019. 02.01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시설 운영 수탁 ▶ 2019. 02.24 - 개원행사 및 개원예배
시설 사진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여성노숙인 요양생활시설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노숙인의 인권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무연고 여성노숙인 보호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입소의뢰 - 주민등록, 장애등록, 기초연금 신청 및 관리 - 거주인 중심의 고충처리위원회, 거주인자치회의,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2. 섬김의 요양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일상생활 관리 - 대상자별 케어를 위한 코미차트시스템 운영 -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재할 의지 고취 3. 신체적 정서적 건강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내부 촉탁의 진료와 외부 기관 연계 진료 및 치료 - 체계적인 질병관리 및 건강 교육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4. 지역사회와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 - 지역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사업 - 자원봉사 활성화 			
	시 설 정	운영법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시 설 정	시설명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시설장	서 정 옥
	입소정원	180명	종사자수	41명
	홈페이지	http://www.sswomen.or.kr	전화번호	02)3412-4502
	E-mail	sfwomen@hanmail.net	FAX번호	02)3412-451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표어	변화된 내일을 꿈꾸는 '은혜'와 '평화' 공동체
목적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이 담긴 시립은평의마을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성인남성노숙인요양시설입니다. 생활인의 거주보호, 전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내 환자의 케어 및 전문 의료시설로의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며, 아울러 노숙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 - 서울특별시립 갯생원 설립 ▶ 1981. - 재단법인마리아수녀회 시설운영 수탁 ▶ 1984. - 제1생활관 완공 (지하1층, 지상5층) ▶ 1993. - 제2생활관 완공 (지하1층, 지상5층) ▶ 1995. - 결핵환자 요양동 완공 (지하1층, 지상3층) ▶ 1996. -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로 시설명 변경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 ▶ 2001. - 행려인 자활교육센터 '늘푸른 자활의집' 개원 (경기도 파주) ▶ 2005.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시립평화로운집' 기능분화 (개원) ▶ 2007. - 정신요양시설 '시립은혜로운집' 개원 기능분화 (개원) ▶ 2010. - 제1생활관 리모델링 완공 ▶ 2011. - 사회복지법인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시설운영 수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 - 전문 사례관리 'KOMI Chart System' 도입 ▶ 2012. - 입퇴소실 및 일시보호실 완공 ▶ 2013. - 시설유형 변경 (노숙인요양시설) ▶ 2014. - 인문대학 개강 (한국연구재단 연계) ▶ 2015. - 인문도서관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생활관 1층 생활인 공동식당 운영 ▶ 2016. - 제11회 전국장애인 도예공모전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 ▶ 2017. - 제3생활관 완공 (지상2층) ▶ 2018. - 제2생활관 3,4층 환경개선 및 생활체육시설 완공 ▶ 2019. - 재단법인구세군유지재단 시설운영 수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전국장애인 도예공모전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
시설사진	 

주요사업

· 시설 유형: 성인남성요양시설

· 주요사업

1. 입소 및 퇴소 관리서비스

- 입소의뢰자 상담, 입소자보고 및 소명자료제출, 일시보호실 운영,
- 사망자처리업무
(연고자조회, 내용증명서 발송, 사체 및 유품 인수인계,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등)
- 주민등록 신고업무
(전입신고,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신고, 거주불명말소신고)

2. 요양 환자 돌봄 서비스

- 경증·중증환자 돌봄 생활관 지정하여, 돌봄 종사자 집중배치
- 서울의료원, 시립동부병원, 시립서남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고양정신병원 등과 MOU 체결활동
- 전체 생활인 대상 건강검진, 암 검진, 결핵검진, 구강검진, 독감예방접종, 구충제복용
- 상비약 관리, 의료소모품 관리, 의료폐기물 및 폐의약품 관리
- 물리치료, 장애등록 및 재등록, 복지카드 발급 및 재발급, 보장구 구입관리

3. 시설거주 생활인 지원사업

- 건강증진, 교육, 여가지원, 정서지원, 심리재활, 지역사회연계, 직업재활 프로그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나눔, 기업체 사회공헌관련 지원사업 운영
- 영양급식 및 위생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시설홍보 및 후원·자원봉사 관리, 거주(일시) 보호, 사무행정 지원 서비스 지원
- 운영위원회, 생활인자치위원회, 인권지킴이단, 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홍보위원회 운영

4.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법정 의무교육(소방교육 및 훈련, 인권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정신질환교육 및 사례토의, KOMI 사례발표회의, 제안사업발표회, 분야별 TF팀 운영 (시설기능보강, 생활관 배동위원회 등)

5. 생활인 환경개선사업

- 제3생활관 증축공사, 제2생활관 호실 분리공사 및 휴게실 구축공사, 대형 식기세척기 설치 및 설비공사, 제1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주방 노후시설 교체공사, 제1생활관 LED 교체공사, 제2생활관 전기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

6.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관련 연대사업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은평구장애인체육회, 구연초등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연대활동
- 은평구청, 구산동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연대활동 확대 (불광천 걷기대회 개최, 구산동 자매결연지역 김장행사 참여, 은평구복지박람회 참여,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구산동 환경미화 활동 등)
- 시립서북병원 연계사업 지속 (음악 및 미술치료) - 지역사회 공방 등록활동 (제11회 / 제14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대상 수상)

7. 노숙인 인권보호사업

- 영등포역인근 야간거리상담, 전체 생활인 인권교육(인권지킴이단장-변호사)
- 인권지킴이단 운영 (생활인 당사자, 변호사,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교수, 사회복지기관 현장전문가, 시설종사자로 구성)
- 생활인 장례(운구,장례예배,산골등)지원 활동 : 하늘배웅 봉사단

8. 서울시 협력 사업

-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운영법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시설명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시설장	홍 봉 식
입소정원	1,170명	종사자수	123명
홈페이지	http://www.eunpyong.or.kr/	전화번호	02)3156-6300
E-mail	eunpyong@eunpyong.or.kr	FAX번호	02)354-4205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 우)03428		



표어	“안전하고 활기찬 희망의 쪽방마을 만들기”		
설립목적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는 중구 쪽방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역량강화와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조직화 및 자원의 연계로 지역복지 공동체로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 03.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개소(중구청 운영수탁) 2003. 11. - 민간지역 병원 단체 지역의료 네트워크 MOU체결 2003. 11. - 쪽방주민 창업대출자금 지원 사업실시 2005. 06. - 자원봉사인증센터 기관 선정 2009. 07. -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주거복지재단) 2014. 07. - 쪽방주민 공동작업장 “꽃피우다” 개소 2015. 04. - 쪽방주민 주거자금 소액대출 협약(서민주택금융재단) 2016. 07. - 쪽방주민 자활지원 업무협약(중구지역자활센터) 2016. 09. - 쪽방주민 건강지원 업무협약(쥬이트네이처) 2017. 02. - 쪽방주민 의료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간호사 배치 2017. 06. - 쪽방주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센터 설치 운영 2017. 07. - 디딤돌하우스(저렴쪽방) 3호점 개소(현대엔지니어링) 2018. 02.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으로 수탁법인 변경 - 서울특별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개소(서울시 위탁) 2018. 08. - 중구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선정 - 쪽방마을추진단 활동 2018. 12. - 쪽방주민 생활편의시설 새희망사랑방 설치(신한금융지주) 2019. 05. - 쪽방주민 공동작업장 “새희망+작업장” 개소(그랜드코리아레저) 2019. 12. - 쪽방주민 생활지원 업무협약(지파운데이션) 		
시설사진	 		

• 시설 유형: 쪽방상담소
 건물 33개동 / 쪽방 수 842개 / 쪽방주민 640명

• 주요사업

1. 상담사업 - 상담, 주민실태조사, 사례관리
2. 의료지원 - 방문간호, 무료진료, 건강지원, 의료기관 연계
3. 급식지원 - 밑반찬지원, 주부식지원, 간식지원
4. 정서지원 - 주민나들이, 명절행사, 송년잔치, 문화체험
5. 주민조직 - 주민회의, 관리인간담회, 소모임(동아리) 활동, 쪽빛추진단
6. 생활지원 - 생필품지원, 생계지원, 의류지원
7. 주거지원 - SH, LH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8. 취업지원 - 취업지원, 신용회복, 특별자활근로사업
9. 외부지원 - 희망은돌사업, 드림하티사업, 소액대출사업, 모금회사업
10. 안전점검 - 전기, 가스 안전점검, 화재예방교육, 소화기지원
11. 특화사업 - 꽃피우다(착한꽃집), 저렴쪽방임대지원사업, 새희망+공동작업장

주요사업

시설정보	운영법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시설장	정수현
	입소정원	-	종사자수	6명
	홈페이지	http://cafe.daum.net/ndccenter	전화번호	02)778-1290
	E-mail	ndmcenter@hanmail.net	FAX번호	02)757-4136
	주소	우)0432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9 1층		

표어	『더불어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
설립목적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는 돈의동103번지 쪽방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상자 스스로 당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개별 역량강화 및 주민조직화, 복지운동을 결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고, 대상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함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03. 15 - 종로쪽방상담소 개관 사단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 수탁운영 Ⓛ 2004. 07 - 돈의동사랑의심터 기관명 변경 Ⓛ 2005. 06. 23 - 서울특별시립 동부병원 의료지원 업무 협약체결 MOU Ⓛ 2006. 06. 01 - 돈의동사랑의심터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수탁운영 변경 Ⓛ 2008. 06 - 주거복지재단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 2009. 01. 01 - 돈의동사랑의심터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수탁운영 변경 Ⓛ 2009. 12. 11 - 서울시복지재단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참여 협약체결 MOU Ⓛ 2010. 03 - 희망디딤돌 자유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 2011. 12. 02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난방연료지원 협약체결 MOU Ⓛ 2012. 01 - 서울시복지재단 희망온돌 프로젝트사업 추진 Ⓛ 2013. 04. 05 - 종로소방서 소방안전 협약체결 MOU Ⓛ 2013. 05 - 서울직접자병원 의료지원 협약체결 MOU Ⓛ 2013. 06. 13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자매결연 협약체결 MOU Ⓛ 2015. 03.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돈의동103번지 쪽방지역 선정 Ⓛ 2015. 04. 10 - (재)서민주택금융재단 주거생활안정지원 업무 협약체결 MOU Ⓛ 2015. 09 -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 행복마을학교 사업 전개 Ⓛ 2016. 01. 21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장례서비스지원 업무 협약체결 MOU Ⓛ 2016. 05 - 쪽방주민 장례서비스지원사업 “마을합동추모식” 전개 Ⓛ 2016. 08 -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 Ⓛ 2016. 10. 26 - 서울시 자활프로그램 “자기분화수준높이기PG” 장려상 수상 Ⓛ 2016. 12. 15 - 새뜰마을 돈의동지역주민 “오락잔치” Ⓛ 2017. 06 - 2017년 종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돈의동감” 선정 Ⓛ 2017. 11. 03 - 새뜰마을 돈의동지역주민 “오락잔치” Ⓛ 2017. 12. 01 - 구세군디딤돌 한부모가정 자립생활지원 업무 협약체결 MOU Ⓛ 2017. 12. 15 - 2017년 우리마을지원사업 “돈의동감” 행복이웃상 수상 Ⓛ 2018. 02. 01 - 서울시 위탁전환 “서울특별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개관 Ⓛ 2018. 03 - 2018년 종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돈의동감” 선정 Ⓛ 2019. 04. 22 - 새뜰집(쪽방주민 공동이용시설) 개관식

시
설
사
진



주
요
사
업

- 시설 유형: 쪽방상담소
- 주요사업
 1. 돈의동새뜰마을
 - 요리교실“희망밥상”, 문화체험“흥겨운 문화 나들이”, EM생활용품 만들기 : EM활용 비누, 샴푸 등
 - 돈의동 한글교실, 종로 건강체조, 전통 떡 만들기, 노래교실“마을합창단”
 - 마을조경사업“새뜰에서 피어난 꽃”: 쪽방지역 녹화재료 식재 및 관리 / 수시
 - 지역주민 화합행사“오락잔치”: 레크레이션, 지역주민 작품 전시, 음식 나눔 등 / 연 1회
 2. 장례지원사업
 - 합동추모식“마을작은장례”: 사망자 장례지원 및 지역주민 합동추모 / 연 4회
 3. 자조모임
 - 자조모임“돈의동희망동지”, “돈의동사랑방”: 암환자, 중증질환자, 알코올의존 / 월 1회
 4. 우리마을지원사업
 - 마을공동체“돈의동감”: 지역주민 원예치료, 마을조경 등 / 총 8회
 5. 시설물 안전점검
 - 상·하반기 쪽방시설물 점검: 전기·가스 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 연 2회
 6. 명절지원사업
 - 추석·설날 명절지원: 지역주민 공동차례상, 명절전통놀이 / 연 2회
 7. 편의시설
 - 목욕·세탁시설: 순번에 따라 목욕 및 세탁시설 무료이용
 - 휴게실: TV, 인터넷, 바둑, 장기 등 연가선용 등

주
요
사
업

8. 소방·안전
 - 상·하반기 소방시설물 점검: 취약지구 설정 및 집중점검, 소방시설물 점검(소화기/안전 등/경보기)
 - 소방·안전 훈련: 소방·안전계획 수립, 소방안전매뉴얼교육, 모의반복훈련
 -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 간소화된 안전매뉴얼 스티커 제작, 소방·안전 인식교육 및 캠페인
 - 동절기·하절기 지역주민 특별보호: 요보호대상자 집중관리, 응급구호 운영
9. 보건·의료
 - 방문간호: 건강확인, 건강관리카드(혈압, 당뇨 등)
 - 건강검진: 결핵검진 및 치료(보건소, 결핵협회), 예방접종(시립병원)
 - 의료연계: 종로보건소(결핵 등), 의료기관(의료사회사업팀), 병원동행
 - 동절기·하절기 의료서비스: 특별보호 기간 요보호대상자 건강 확인, 응급이송
 - 무료진료: 행동하는의사회 무료진료소 운영, 월2회
 - 의약품 지원: 영양제, 파스 등 상비약품 지원
10. 상담서비스(사례관리)
 - 개별·집단상담: 기초(intake)상담, 방문상담, 유선상담, 정서·심리상담, 생활 및 욕구 상담
 - 사례관리: 자살, 알코올, 약물, 장애인, 홀로어르신 사례관리 ※월1회 사례관리 컨퍼런스
 - 지역주민 욕구조사: 프로그램욕구, 생활상황 등 조사 ※연 2회 전수조사
 - 결연후원 연계: 지역주민 영리법인 결원연계 및 사례관리 등
11. 행정지원
 - 주민등록복원: 쪽방거주사실확인, 복원비용 일부지원
 - 일반·법률행정지원: 확인증발급, 취업정보 검색, 행정동행, 연계기관 정보제공 등
 - 임대주택 입주지원: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12. 기초생활지원
 - 물품지원: 생활필수품, 피복, 특별후원물품
 - 급식지원: 주·부식(반조리 식품), 밑반찬, 도시락, 사랑의쌀나눔
 - 위생관리: 목욕·세탁(편의시설), 이·미용(재능기부)
13. 자립·자활지원
 - 신용회복: 개인회생(워크아웃), 파산·면책
 - 구직지원: 직업상담, 직업교육, 구직프로그램개발, 취업연계,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 자격증취득지원: 유망직종 자격교육, 교육기관 연계

주요 사업

14. 주거지원(환경개선)

- 집수리지원 : LED등교체, 벽지보수, 핸드레일, 파손 콘센트 등 경미한 수리지원
- 다세대매입임대주택(운영기관) : 입주자 사례관리, 간담회 연 4회, 공동입주(5~10명)
- 단기주택지원“노숙인지원주택” : 쪽방주민(알코올의존) 공동생활가정 단기적 주거지원 (2년간)

15. 자원개발(홍보/캠페인)

- 물적자원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후원제안서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행, 사용내역 보고
- 인적자원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조직화, 지역사회봉사자 교육, 주민봉사자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 ※자원봉사365포털, VMS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홍보 및 인식개선“캠페인” : 쪽방인식개선활동, 복지박람회, 사회공헌사업교육, 홍보책자 제작

16. 지역사회조직화

- 주민조직화“임차인” : 정서·심리프로그램, 문화나들이, 동아리 활동, 연 4회 간담회
- 집주인·관리인 조직화 : 연 4회 간담회
- 마을조직화(임차인 + 임대인) : 마을축제·잔치(화합), 주민발전위원회(상생발전)
- 지역사회(유관기관) : 종로구새뜰마을사업, 서노협체육대회, 전쪽협연합행사, 법인산하 시설연합행사
- 시설운영위원회 : 연 4회 진행

시 기 본 보	운영법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시설장	최영민
	입소정원	쪽방 거주민 577명	종사자수	6명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jongno1004	전화번호	02)747-9074/5
	E-mail	jongno1004@naver.com	FAX번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번지		

표어	주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설립목적	존중, 소통, 나눔, 성장이 있는 행복한 공동체 주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 안정지원 추진, 지역 사회와의 협업 쪽방 지역 취약계층 주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 및 자립, 자활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 04. 01. - 용산구쪽방상담센터 개소 2014. 06. 28. - KT후원 전국 최초 쪽방촌 복합커뮤니티 시설 "동자희망나눔센터" 건립 <p><서울시지원 저렴쪽방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02. 01. -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서울역쪽방상담소 수탁(시설장 : 김갑록 소장) 2018. 02. 07. -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명칭 변경 2018. 07. 18. - 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협력기관 선정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물 없는 세차' 사업) 2018. 07. 31. - 하이트진로 차량지원사업 선정 2018. 08. 07. - KT, 서울시 지원 돌다리길 빨래터 제막 2019. 03. 21. - 사단법인 해피피플, 남영동주민센터 업무협약 2019. 07. 03. - (주)클린씨 물없는 세차사업 업무협약

시설 사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쪽방상담소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상담: 초기상담, 이용안내, 전화상담 - 전문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민등록 복원사업, 신용회복 2. 사례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 내 거주자 중 긴급 또는 위기개입 사례관리 필요자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사업, 주거환경점검 및 개선사업, 정서지원사업) (기업연계사업, 긴급생계비지원사업, 후원사업) 3. 교육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과목: 냅킨아트, 손작업교실, 아로마테라피, 원예교실, 캘리그래피, 영화인문학 - 건강증진: 건강교육프로그램, 이미용서비스, 단주모임(용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AA프로그램) - 취미여가: 노래교실 - 정보화교실: 스마트폰 교육 - 현장민원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남영동주민센터) - 등산클럽, 족구클럽: 정기 활동을 통한 건강과 친목 도모(월 1회) 4. 의료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건강관리, 내방 건강관리, 병원연계, 용산구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질병 예방사업,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일반의약품 지원, 한파, 폭염 특별 보호대책에 따른 주민건강상태 파악 - 무료진료: 서울대학교병원 드림의료봉사단, 명성교회 의료선교회, 한국기독교 한의사협회 무료한방진료 5. 주거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쪽방사업, 임대주택상담 6. 취업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일자리: 특별자활근로, 쪽방상담소 자체일자리 - 민간일자리: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시설정보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시설장	김갑록
	입소정원	일평균 (200)명	종사자수	8명(계약직 1명 포함)
	홈페이지	www.ssjbc5119.org	전화번호	02)3789-5119
	E-mail	ssjbc5119@hanmail.net	FAX번호	02)3789-5991
	주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35-15		

표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세워 가는 영등포쪽방상담소
설립목적	대도시 변화가 뒤에 숨겨진 도시 빈민가 거주민의 삶과 육체적인 고통을 복지와 성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가용 가능한 자원(인적·물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파트너의식 아래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
주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 영등포쪽방상담소 설립(설치) 광야교회&산업선교회 공동 운영 ▶ 2004. - 광야교회 단독 운영 ▶ 2007. - 광야홀리스센터 내 영등포쪽방상담소 이전 ▶ 2009. - 매입임대 운영기관 지정 ▶ 2010. - 영등포쪽방상담소 차량(스타렉스, 서울 모금회) 취득(2016년 폐차) ▶ 2012. - 영등포쪽방리모델링 사업 협력기관(3년간 진행) ▶ 2015. - 영등포쪽방상담소 카페 설치(현대ENG 후원) ▶ 2015. - 영등포쪽방상담소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사)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설립) ▶ 2015. - 영등포쪽방상담소 차량(경차) 취득(인천 모금회) ▶ 2018. - 상담소 이전(광야홀리스센터 → 현 위치)영등포쪽방상담소 시립 전환과 운영수탁 ((사)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 2019. - 찾아가는 주거복지 홍보 및 주거실태조사 참여(LH-주거복지재단)
시설사진	 

서울특별시립 창신동쪽방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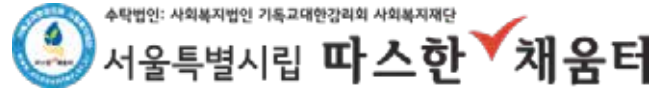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쪽방상담소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욕구조사 사업(상담&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기본업무: 업무의 시발점(기초조사&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 집중 사례관리 - 주택정보 제공 - 화재예방교육 등 2. 생활안정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결연: 자매결연 - 생필품 및 식료품지원 - 난방연료지원(연탄 70%, 기름 25%, 기타 5%) - 행정민원 등 지원: 수급자 발굴과 장애등록 상담 등 - 법률지원(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3. 의료 및 건강증진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등 지원(긴급지원과 개인후원 연계) - 알코올프로그램(심리검사 및 자조모임) 4. 주거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주택 지원(월세): 매입임대주택 상담, 알선과 주택지원 및 관리 - 도배 및 장판교체 지원 - 보일러 점검, 수리 및 교체지원 - 벽화(이미지 개선) 5. 편의시설기능 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키호테(카페) 시설 개보수→Book Cafe로 기능 활성화 6. 정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생일잔치(매년 5월, 한국마사회) - 합동차례(추석, 설, 서울시와 현대ENG 연계) - 사물놀이(현대ENG) - 등산(조민조직화, KB국민은행) 7. 기관 간 네트워크구축사업 			
	시 설 본 보	운영법인	(사)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시 설 명	서울특별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시 설 장	김 형 옥
	입소정원	영등포쪽방거주민 495명	종사자수	4명
	홈페이지	법인 / www.sagilsa.org 카페(다음): 영등포쪽방사람들	전화번호	02)2068-4353
	E-mail	ydp4353@daum.net	FAX번호	070)4771-5979
	주 소	(07305)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23-2, 2층		

표 어	꿈이 있는 이웃사랑 공동체, 실천하는 우리모두
설 립 목 적	취약계층인 쪽방 거주자들의 복지서비스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노숙자 전락을 방지하고 이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특히 지역사회 내 간과되고 있는 은둔형 주민, 일시적 취약계층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든 지역사회와 소통과 화합을 이룬다.
주 요 현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3. 04. - 상담소 개소 ① 2003. 07. - 무료진료 시작(삼일교회 진료팀) ① 2007. 07. - 늘품약대동아리 약품지원 시작 ① 2008. 03. - 구청지원 건강문화프로그램 사업 시작 ① 2008. 10. - 공동작업장 시작 ① 2008. 10. -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시작 ① 2009. 02. - 설명절 공동차례 지내기 ① 2009. 06. - 창일노인정 1층 상담소전용 휴게실 마련 ① 2010. 06. - 서울디딤돌 참여협약 체결 ① 2010. 12. - 매입임대사업 45명 입주 ① 2011. 12. - 서울시 희망온돌거점관 선정 ① 2012. 06. - 쪽방벽화그리기 진행 ① 2013. 03. - 서울시 희망온돌우수기관 선정 ① 2013. 04. - 종로 소방서 업무 협약(소방안전복지서비스) ① 2013. 06. - 나눔이웃공모사업 거점기관 선정 ① 2013. 06. - 상담센터 종로구 창신동 410-6으로 이전(구 창천치안센터) ① 2013. 06.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무료진료 시작 ① 2013. 08. - 임대주택사업 운영기관 선정 ① 2014. 05. - 종로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 협약 체결 ① 2015. 06. - 한국마사회 차량지원 사업(기아프라이드 차량) ① 2015. 12. - 디딤돌하우스 오픈 ① 2016. 10. - 자활작업장(너나들이 커피방)개소 ① 2017. 11. -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인증(지역형)/자활작업장 ① 2018. 02. - 서울특별시립화(서울특별시립 창신동쪽방상담소 명칭 변경)

시 설 사 진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 쪽방상담소 ·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지원서비스 - 내방 및 원외상담/ 사례관리, 주민실태조사 2. 정서지원서비스 - 주민나들이, 명절행사, 문화체험, 고구마체험, 어버이날 행사 3. 의료지원서비스 - 결핵예방검진, 독감접종, B형간염접종, 혈액검사 등 4.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생필품지원(동절기응급구호비), 대상자병원, 관공서동행서비스 5. 특별보호사업 - 혹서기, 혹한기 주민보호사업 6. 주거환경개선사업 - 쪽방지역 건물도색, 도배, 장판등 7. 직원교육 - 워크숍(전쪽협/재단/리더십), 외부교육 8. 주민조직화 및 교육 - 주민사랑방 모임, 운영위원회, 사진동아리, 향기나느 우리집, 음악치료, 행복한밥상, 정 보화교실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 자원봉사자 관리 10. 특별자활사업 - 쪽방지킴이 11. 공동모금회사업 - 지정기탁사업, 추석명절지원사업, 두산인프라코어사업 12. 나눔이웃사업 - 독거어르신 생일축하, 마을잔치 13. 화재예방안전점검 - 전기점검, 가스점검, 소화기점검 14. 저가쪽방사업 - 디딤돌하우스운영 15. 공동자활작업장 - 너나들이커피방 																								
시 설 기 본 정 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운영법인</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우리모두복지재단</td> </tr> <tr> <td>시 설 명</td> <td>서울특별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td> <td>시 설 장</td> <td>이 도 희</td> </tr> <tr> <td>입소정원</td> <td>지역 주민 330명</td> <td>종사자수</td> <td>5명</td> </tr> <tr> <td>홈페이지</td> <td>https://cafe.naver.com/ddm2003</td> <td>전화번호</td> <td>02)3672-1264</td> </tr> <tr> <td>E-mail</td> <td>ddm_2003@naver.com</td> <td>FAX번호</td> <td>02)3672-1266</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서울시 종로구 종로 50가길 31</td> </tr> </table>	운영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			시 설 명	서울특별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시 설 장	이 도 희	입소정원	지역 주민 330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ddm2003	전화번호	02)3672-1264	E-mail	ddm_2003@naver.com	FAX번호	02)3672-1266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50가길 31		
운영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																								
시 설 명	서울특별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시 설 장	이 도 희																						
입소정원	지역 주민 330명	종사자수	5명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ddm2003	전화번호	02)3672-1264																						
E-mail	ddm_2003@naver.com	FAX번호	02)3672-1266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50가길 31																								

· 무료급식소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서울특별시립 따스한 채움터

표어	당신의 지친마음까지 따스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	<p>서울역주변노숙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무료급식의 위생 및 주변환경 매연, 소음, 먼지등에 노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절별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대상자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하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실내무료급식장의 설치운영으로 급식환경 개선. 하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의 이미지 개선 및 자아존중감 향상 도모</p>
주요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05. -서울역주변 거리급식 환경개선 계획 확정(행정1부시장 방침 제235호) ▶ 2010. 04. -수탁법인 사단법인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 2010. 05. -따스한채움터 개소 ▶ 2012. 12.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2013. 02. -운영법인 재위탁 공모 ▶ 2013. 03.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위탁기관 선정) ▶ 2013. 04.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 2015. 08. -신임소장 박광빈 부임 ▶ 2016. 04.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수탁 ▶ 2019. 04.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수탁
시설사진	 

주요사업	· 시설 유형: 무료급식시설																				
	· 주요사업																				
	1. 따스한채움터 무료급식지원 사업.																				
	2. 다목적 이용공간 운영 및 관리(3층 영화, 도서, TV, 컴퓨터, 샤워실, 의류지원등).																				
	3. 노숙인등 취약계층 겨울나기 독감예방 접종 사업.																				
4. 계절별 지원사업(무더위쉼터, 폭염 및 한파 대피소 운영).																					
5. 자활 및 재활지원 부속사업(채움예술학교, 교육지원센터).																					
시설기본정보	<table border="1"> <tr> <td>운영법인</td> <td colspan="3">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td> </tr> <tr> <td>시설명</td> <td>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td> <td>시설장</td> <td>박 광 빈</td> </tr> <tr> <td>홈페이지</td> <td>www.chaumteo.or.kr</td> <td>전화번호</td> <td>02)1666-7995 (친구구호)</td> </tr> <tr> <td>E-mail</td> <td>chaumteo@naver.com</td> <td>FAX번호</td> <td>02)714-799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7 (우)04320</td> </tr> </table>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시설장	박 광 빈	홈페이지	www.chaumteo.or.kr	전화번호	02)1666-7995 (친구구호)	E-mail	chaumteo@naver.com	FAX번호	02)714-7995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7 (우)04320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시설명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시설장	박 광 빈																	
	홈페이지	www.chaumteo.or.kr	전화번호	02)1666-7995 (친구구호)																	
	E-mail	chaumteo@naver.com	FAX번호	02)714-7995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7 (우)04320																				

표어	노숙인,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설립목적	'노숙인들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서울지역 노숙인 복지시설 및 쪽방 상담소 등을 지원하고 협력하여 시설 및 거리노숙인, 쪽방주민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함.
조직 및 주요 연혁	<p>[조직체계]</p> <pre> graph TD A((총회)) --- B((이사회)) B --- C((회장)) C --- D((사무국)) D --- E((기획사업팀)) D --- F((운영지원팀)) D --- G((총무팀)) H[집행위원회] --- I[교육위원회] H --- J[정책위원회] H --- K[조직위원회] H --- L[주거복지위원회] M((감사)) </pre>

[역대 협회장]		
초대 협회장		- 이름 : 정윤열(법명, 지거) - 재직기간 : 2005. 09 ~ 2008. 02 - 재직시설 : 영등포보현의집 시설장
2대 협회장		- 이름 : 정윤열(법명, 지거) - 재직기간 : 2008. 02 ~ 2008. 09 - 재직시설 : 영등포보현의집 시설장
3대 협회장		- 이름 : 임영인 - 재직기간 : 2008. 09 ~ 2009. 09 - 재직시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설장
4대 협회장		- 이름 : 손명식 - 재직기간 : 2009. 09 ~ 2011. 06 - 재직시설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시설장
5대 협회장		- 이름 : 정호택 - 재직기간 : 2011. 06 ~ 2011. 08 - 재직시설 : 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장
6대 협회장		- 이름 : 서정화 - 재직기간 : 2011. 08 ~ 2014. 02 - 재직시설 : 열린여성센터 시설장
7대 협회장		- 이름 : 여재훈 - 재직기간 : 2014. 02 ~ 2018. 02 - 재직시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설장
8대 협회장		- 이름 : 최성남 - 재직기간 : 2018. 02 ~ 2019.02 - 재직시설 : 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장
9대 협회장		- 이름 : 배명희 - 재직기간 : 2019.02 ~ 현재 - 재직시설 : 길가온혜명 시설장

조직
및
주요
역

- ▶ 2005. -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창립(비영리민간단체)
- ▶ 2009. - 사단법인 설립 인가 취득
- ▶ 2010. - 「추석명절 지원사업」,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시작 (사랑의열매 지원)
 -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시작 (서울시 지원)
- ▶ 2012.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로 명칭변경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취득
 - 「희망 옷 나눔 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시작 (서울시 지원)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지원사업」 시작 (사랑의열매 지원)
- ▶ 2014. -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사업」 시작 (서울시 지원)
 - 「서울시 건강자활체육대회」 주관 시작 (서울시 지원)
- ▶ 2015. - 「서울시 노숙인 정책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2016.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지원사업」 시작 (서울시 지원)
 -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제공 매뉴얼」 발간
 - 「노숙인 서비스 전달체계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 2017. -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노숙인 문화제 및 문화주간 사업 주관 (서울시 지원)
- ▶ 2018.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내 손으로 그리는 희망 그라피' 시작 (서울시 지원)
 - 서울시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개최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 모금 사업 추진
- ▶ 2019. - 찾아가는 주거복지 홍보 및 주거실태조사 참여 (LH-주거복지재단)
 - 서울시 노숙인정책 20년 기록물조사 용역 수탁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희망광고 공모사업 선정

시
설
진



주
요
사
업

· 시설 유형: 협회

· 주요사업

1. 회원시설 네트워크 사업

- 전문 위원회 운영 (정책, 교육, 주거복지, 조직 위원회)
-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인권교육, 종사자 단체 연수 등)
- 회원시설 연합 사업 (서울시 건강자활 체육대회, 종사자 워크숍 등)

2. 정책 및 교육사업

- 노숙인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
- 노숙인 정책 간담회·토론회 개최
-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등)

3. 회원시설 지원 사업

- 물품 배분 사업 (의류 및 생필품 등)
- 설, 추석, 하절기 난방비,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 사업
- 기타 (모금회 등을 통한 회원 지원 사업)

4. 서울시 지원 주요 사업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 운영사업
 - 목 적: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및 재 노숙 방지
 - 지 원 처: 서울시 자활지원과
 - 운영현황: 사례관리자 10명 파견 시설 및 사례관리 주택 현황
- 희망 옷 나눔사업
 - 목 적: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 유지를 위한 의류 및 생필품 지원
 - 지 원 처: 서울시 자활지원과

5. 서울시 협력 사업

-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년 4회 // 분기별 정기실행)
- 프로그램 사업 (노숙인 문화제,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시
설
정
보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협회장	배 명 희
홈페이지	www.homeless-seoul.or.kr	전화번호	02)713-3698
E-mail	master@homeless-seoul.or.kr	FAX번호	02)711-3698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25 (우)04806		

편집위원 후기

김진미 편집위원장 (디딤센터 시설장)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지하도에 빼곡하게 박스를 깔고 누워있던 노숙인들을 보고 놀랐던 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쏠살같이 지나갔다. 그 사이 어떤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노숙인 복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노숙이라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정책과 사업은 좀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며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시 노숙인 복지 2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어쩌면 그날그날에 충실하려다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작업을 통해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의 헌신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모아진 우리들의 바람이 하루아침에 결실로 나타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는 건 지난 20여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현장에서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과외로 시간을 내어 힘든 노동에 동참한 편집위원들께 감사하다. 이 책의 편집위원들은 편집활동은 물론 연구위원으로 2019년 여름부터 거의 반년동안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으고, 읽고, 압축해내야 했다. 모두 힘들었지만, 그러나 서로를 격려하고 채찍질하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김남영 편집위원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과장)

‘돌도 십 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십 년 적공이면 한 가지 성공을 한다.’라는 속담들에서 보듯 10진법을 사용하는 문명에게 10은 하나의 숫자라기보다 완성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완성의 단락을 막 지나온 노숙인 복지의 20년사를 돌이켜보며 백서를 제작하는 데 일말의 손길을 보태게 된 것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였다.

부족함이 많은지라 도움은커녕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안고 노숙인 복지 20년 백서 작업에 뒤늦게 합류하였다. 노숙인 복지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지는 않았으나 물리적인 시간과 비례하여 현명함이 쌓이는 것은 아님을 항상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백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차곡차곡 정리되어 가는 글과 사진 너머로 각 현장에서의 치열했던 열정과 역사가 느껴졌다. 그 속에서 내가 일상이라 느끼며 흘러보냈던 지난 시간들도 함께 돌이켜보며 정리해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노숙인 복지의 내실을 다져왔던 모습을 돌이켜보며 적지 않은 시간을 즐기게 지나 온 인내와 지치지 않은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많은 분들의 지혜와 수고가 담긴 백서가 앞으로도 노숙인 복지 종사자들과 노숙인들에게 소중한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서정화 편집위원 (열린여성센터 시설장)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1999년 1월, 매일 밤 새벽 1~2시까지 주요 역사와 지하도를 돌아다니면서 아웃리치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을 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때만 해도 30대 후반의 청춘이었다.

지난 20여 년간의 실적을 정리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백서’ 연구진에 동참했다. 무리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인터뷰하고, 녹취록을 풀고, 원고를 쓰는 일이 쉽지 않았다. 정해진 기일에 맞춰서 일정을 진행하느라 낮에는 시설에서 요구되는 일을 하고 밤이면 책상에 앉아서 녹취록을 정리하고 원고를 수정하느라 밤을 새워야 하는 날들이 계속됐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엔 정말 무리였다.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 노숙인 복지사업 초창기부터 정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학계에서, 서울시 행정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발전 과정, 현장의 실천 과정들을 정리해낼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 20년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다.

노숙인 사업 초창기는 고민할 시간도 없이 응급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IMF 외환 위기로 갑자기 들이닥친 노숙인 문제, 수천 명이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에 대해 학계도, 사회복지 현장도, 서울시와 정부도 매일 매일 새로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에 바빴다.

이런 응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와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노숙인 복지 분야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가 잘 실현된 분야이다. 노숙인 사업 초기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와 서울시 행정의 협력으로 초기 노숙인 응급구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냈고,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발전 되었다.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거리노숙인 희망옷 나눔사업, 거리노숙인 정신건강전문가 아웃리치 시범사업, 임대주택사례관리자 지원사업, 지원주택 시범사업 등이 민간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서울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민관 협력의 대표적 사업들이다.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은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정책들이 많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어디에 내놓아도 높게 평가할 만한 정책이다. 향간에서는 노숙인 복지 서비스 수준이 높으면 역유입이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노숙인 복지는 우리사회의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 복지 수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숙인 복지 증진은 우리 사회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낳는다. 물은 밑에서부터 차오른다.

이제 백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30주년, 40주년 정책백서의 내용을 채워갈 후배들에게 멈추지 않는 실천을 부탁한다.

 **오기철 편집위원 (비전트레이닝센터 팀장)**

“유무상생(有無相生)”

1999년 6월 24일, 2호선 문래역에서 내려 채소가 버려져 냄새나는 거리에 자리잡은 자유의 집 직원으로 면접을 보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그해 6월 28일 첫출근을 시작하여 벌써 20여년을 노숙인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25세의 75kg, 험담하지만 철없는 청년이 45세의 87kg, 성숙한 아저씨가 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

이번 백서발간 연구진이 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 백서를 위해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청년시절에 아저씨들과 목욕탕을 가고, 족구를 하고, 음주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죽음을 목격하는 등 많은 일들이 4배속 재생 영화처럼 스쳐지나가기도 하였다. 그 많은 일들 중에는 기억 속에서 없어져버렸으면 하는 것도 있었고,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들을 뒤적이다 보니,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들이 한 장소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두 장면은 서로를 설명해 주었고,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없었으면 하는 기억들이 정말 없었더라면, 기억하고 싶은 것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후회가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누구는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름이라고 한다. 20년 노숙인 복지 정책에는 실수와 거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보다 나은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20년도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들이 서로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20년이 지나면 내가 65세가 되는데 그때는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노숙인 선생님들을 만나고,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20년 백서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연구위원님들, 특별히 김진미 연구위원장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노숙인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신 서울시장님 이하 관계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년 후 ‘서울시 40년 노숙인 정책 백서’ 발간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때는 노숙인 복지 사업이 없어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복지정책 백서 발간 위원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수범 편집위원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서노협에서 노숙인 복지 20년 백서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반가웠다. 노숙인 복지 역사가 20년을 지났고,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데에도 지난 역사에 대한 아무런 정리작업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숙인 복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텍스트가 없어

노숙인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로서 나침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목마름이 늘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년 백서를 제작한다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다가왔고, 그래서 바쁜 현장일이 쌓여있음에도 제작과정에 적극적으로 자원했고 참여하게 되었다.

7월 중순부터 4개월에 걸쳐 거의 매주 회의를 가졌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책임지기 위해 평일 저녁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찾고 작성하기를 수십 번 반복하였지만, 노숙인시설 근무경력이 15년밖에 되지 않은 나로서는 2005년 이전의 노숙인 복지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회의와 논의 속에서 안개 속에 가려졌던 과거 역사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노숙인 복지 역사 전반을 한 줄에 꿰는 기회를 가진 점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였다.

이번 백서 제작을 통해 노숙인 복지 종사자들도 이제 노숙인 복지 역사가 오롯이 담긴 텍스트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다. 그간 노숙인 복지 역사 전반에 대한 통합된 자료집이 없었고 대부분의 자료는 노숙인 복지 초창기 시절에 편중되어 있어 노숙인 복지 사업을 파편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에 그쳤다. 노숙인 복지 역사 전체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에서라도 만들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백서가 앞으로 노숙인 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후배종사자들에게도 나침반이 되어 홈리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힘든 노숙인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갖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간 수고한 보람이 있겠다. 백서를 제작하는 4개월 동안 바쁜 현장에서 나의 일까지 도맡아 수고해준 다시서기센터 종사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감사합니다!

 **이은상 편집위원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장)**

2019년 5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노숙인정책 20년 기록물 조사용역”이 공고되었을 당시 이 용역 만큼은 현장 단체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가 수행해야 할 과업이라고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난다. 공모를 거쳐 사업을 수탁받을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산고에 산고를 거쳐 “20년 백서”가 만들어질 줄 예상치 못했다.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무려 1년하고 반을 넘겨 결과물을 매듭짓게 될 줄은 상상치도... 그만큼 편집위원님들의 노고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제 결과물 인쇄를 목전에 두니 또 다른 걱정이 앞선다. 미처 담지 못한 현장의 소중한 활동과 발자취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마음이 쓰이고, 각 시설에서 보내 주신 자료 모두를 반영할 수 없었기에 더욱 마음이 쓰인다. 20년의 노숙인 복지 현장의 고군분투를 책 한 권에 모두 담는 건 애초 욕심이었다고,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그렇게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작업을 경험삼아 못다한 기록은 또 다른 기회에 더욱 충실히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1998 - 2018 서울, 노숙인 지원사업 20년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인 : 배명희
- 발행처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25
- 홈페이지 : www.homeless-seoul.or.kr
- 대표전화 : 02-713-3698

• 디자인·인쇄 : **Pan.design** 팬디자인 (02-6713-2785)



1998-2018

서울, 노숙인 지원사업 20년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SEOUL ASSOCIATION OF INSTITUTES FOR THE HOMELESS

